
민선 제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백서

－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 －

2026. 8.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발 간 사

2026. 7. 1. 한득수 임실군 민선 제9기 군수가 취임했습니다.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임실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산업기반의 취약성, 농업의 구조적 변화 요구, 생활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옥정호와 치즈산업, 농생명 자원, 공동체 역량, 생활밀착형 복지 기반 등 임실만의 잠재력 또한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의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백서는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서가 아니라, 임실군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비전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군정혁신의 설계도입니다. 특히 ‘현황 진단-문제 도출-전환 방향-실행 과제’의 구조 아래,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선 제9기 군정은 군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농업·관광·복지·정주여건·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원회는 10대 핵심 현안과 10대 우선과제를 도출하고,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군정 비전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 백서가 향후 군정 운영의 나침반이 되어, 임실군이 군민과 함께 더 따뜻하고 더 활력 있는 지역으로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지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인 사 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 제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제9기 임실군정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신 송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수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와 소중한 의견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선 제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백서」는 지난 군정을 돌아보고, 임실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정리한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민선 제9기 임실군정은 이 백서에 담긴 진단과 제안을 면밀히 살펴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이라는 군정 목표 아래, 군민의 삶을 가장 먼저 살피겠습니다. 농업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지고, 관광의 성과가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돌아오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임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꼭 필요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군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임실의 미래는 행정만의 힘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더욱 따뜻하고 활력 넘치는 임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선 제9기 임실군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수 한 득 수

목 차

제1장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개요 / 구성원 현황 주요 활동 내용 / 예산사용 내역	1
제2장 총 괄	핵심 진단 요약 / 10대 핵심 현안 10대 우선 과제 / 재정운영 기본방향	6
	진단의 배경과 기본 인식	11
	국가정책 환경 변화와 군정 전환 요구	12
	인구감소·초고령화·청년유출의 구조적 심화	15
	산업구조의 한계와 지역경제의 취약성	18
	농업 수익성 정체와 농정 전환 필요	20
제3장 군정 여건 및 종합 진단	정주·생활 SOC 및 생활인프라 격차	22
	관광의 양적 성장과 체류형 전환 과제	24
	복지·보건·의료의 분절화와 통합돌봄 필요	27
	4대 진단축 중심 종합진단	28
	SWOT 분석	30
	종합결론: 왜 지금 군정 전환이 필요한가	31
	최근 10년 재정 운영 흐름	34
	세입 구조 분석	37
	세출 구조 분석	38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채무·기금 분석	39
	국·도비 확보 실적(2017~2026)	40
제4장 재정 운영 및 전략	대형 투자사업 현황(2017~2026)	40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40
	주요 정책지표 변화(2017~2026)	41
	군정 운영 방향에 주는 시사점	41
	소결론: 정책 KPI 및 재정지표 설정·관리	43
	가용재원 분석	44
	진단의 배경과 문제의식	49
제5장 조직 진단	최근 조직 변화의 흐름과 구조적 특징	50
	정량지표로 본 조직의 실체	51

제5장 조직 진단	재정과 조직의 관계	54
	현장배치와 읍·면 전달체계	56
	부서 요구 분석이 보여주는 구조적 한계	57
	TF 운영 실태와 상시기능 제도화 과제	58
	공약이행 관점에서 본 조직 재설계 필요성	58
	종합 판단	59
	민선 제9기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	61
	조직진단의 정책과제	61
	조직개편 시 참고 의견	63
제6장 분야별 성과와 한계 진단	기획·행정·재정 및 현안사업 평가	67
	복지·환경·보건 및 현안사업 평가	81
	농업·경제·산업·안전 및 현안사업 평가	97
	문화·관광·체육·산림 및 현안사업 평가	113
제7장 민선 제9기 군정 목표와 방침	목표 설정의 배경과 문제의식	140
	민선 제9기 군정 목표의 기본 방향	141
	민선 제9기 군정 목표의 의미	142
	민선 제9기 군정 방침	143
	군정 방침별 정책 방향	144
	정책목표의 통합 구조 및 선순환 체계	148
	종합 결론	148
제8장 공약 및 중점 추진 사업	분야별 공약과제 검토	150
	분야별 공약과제 우선 추진 항목	173
제9장 자문위원회 의견	재정·조직·행정 / 청년·인구·교육 / 농업·관광·경제 등	179
제10장 종합 결론	종합 평가 및 구조적 진단에 대한 분야별 결론	190
	민선 제9기 군정의 핵심 정책 방향	196
	향후 군정 운영에 대한 제언	197
	<참고> 초기 6개월 및 4개년 역점과제 추진 전략	199
부록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활동 보도자료	206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활동 사진	219

제1장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장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개요

- (활동기간) 2026년 6월 15일(월) ~ 2026년 7월 10일(금) (총 26일간)
- (설립근거) 「지방자치법」 및 「임실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설립목적)
 - 민선 제9기 임실군정의 공백 없는 안정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
 - 민선 제9기 임실군의 군정 비전과 목표 구체화와 주요 현안 파악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4년간 추진할 핵심 군정과제 체계화

② 위원회 구성원 현황

- (구성인력) 32명 (인수위원회 13, 자문위원회 13, 파견공무원 6)
 - 인수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명	소속(원소속)
총 괄	위 원 장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위원장	이원섭	前 임실군청 산업건설국장
	간 사	최강익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
기획조정분과	위 원	한병삼	前 덕진구청장
	위 원	윤재선	前 임실군청 공무원
환경복지분과	위 원	이혜숙	한일장신대 교수
	위 원	강인숙	前 임실군청 공무원
산업건설분과	위 원	조재영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위 원	조석현	前 대통령직속 농촌특별위원회 위원
	위 원	이창원	우석대 교수, 창업지원단장
문화관광분과	위 원	정정숙	한국문화기획평가연구소장
	위 원	이현우	전주대 겸임교수, 반려동식물, 조경 전문가
	위 원	이선희	(사)문화연구창 연구소장

－ 자문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명	소속(원소속)
총 괄	위 원 장	신대용	前 임실군 군의회 의장
	부위원장	하태욱	前 남원시 부시장
	간 사	최인창	現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부회장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	김현곤	現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조직위원장
환경복지분과	자문위원	설경열	前 임실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자문위원	황호운	現 임실군 주민수당운동본부 대표
산업건설분과	자문위원	황의민	前 강진면 체육회장
	자문위원	최용하	前 임실군 4-H연합회 회장
	자문위원	박정재	現 축협 이사
문화관광분과	자문위원	정세량	現 이성계리더십센터장
	자문위원	김우연	現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자문위원	김수종	(주)로보랜드 대표이사
	자문위원	정원형	現 제이피엔씨주식회사 이사

－ 실무직원

구 분	부 서	성 명	분장업무
기획조정 총괄분과	기획감사실	강 경 수	- 인수위원회 지원 총괄 - 회의 운영, 언론 홍보 등
	행정지원실	최 은 실	- 기획조정분과 지원 - 자료 수집 총괄
	지사면	이 지 은	인수위원회 사무지원 전반
환경복지분과	문화체육과	강 내 연	- 환경복지 분과 지원 - 분과별 자료 수집
산업건설분과	농업축산과	이 윤 미	- 산업건설분과 지원 - 분과별 자료 수집 - 백서 편찬 지원
문화관광분과	문화체육과	강 내 연	- 문화관광 분과 지원 - 분과별 자료 수집
자문위원회	주민복지과	장 도 웅	자문위원회 지원 총괄

③ 주요 활동 내용

구분	핵심성과 및 활동
기획 조정 분과	- 민선 제9기 군정 비전, 공약, 조직, 재정, 인구정책 등 군정 전반 검토 - 농촌기본소득, 임실미래발전 기획단, KTX임실역 정차 추진 등 공약 검토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농촌유학, 진로진학센터 등 정주·교육정책 연계방안 제시
환경 복지 분과	- 초고령화, 의료접근성, 돌봄수요 증가 등 임실군 복지현안 집중 점검 - 개별 지원사업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 통합복지 체계로의 전환 방향 제시 - 경로당 지원, 어르신 일자리, 다문화가정, 장애인 복지시설 등 생활밀착형 복지과제 검토 - 임실의료원 기능 강화, 전문 재활·요양 시스템 등 보건의료 기반 확충 필요성 검토
산업 건설 분과	- 농업·축산, 지역개발, 교통, 안전, 상권 활성화 분야 공약 검토 - 농업을 단순 지원대상이 아닌 지역경제 핵심산업으로 재정립하는 방향 제안 - 택시 공영제, 버스터미널 복합화 등 교통·생활권 개선과제 검토 - 생활안전 IoT망, 기반시설 정비 등 군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방안 검토
문화 관광 분과	- 임실N치즈, 옥정호, 오수, 사선대, 성수산 등 주요 관광자원 연계방안 검토 - 점 단위 관광에서 권역별 관광벨트와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전환하는 방향 제안 - 치즈테마파크-임실을 상생 관광벨트, 사선대 오감정원 등 주요 과제 정리 - 체류형 숙박, 미식관광, 지역상권 연계 등 관광소비 환류 구조 마련 필요성 제시 등

일 자	주요 활동내용
6.15.(월)	- 임실군수직 인수위원 위촉식 및 현판식 개최 - 제1차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회의
6.16.(화)	제2차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회의
6.17.(수)	- 제3차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회의 * 업무보고 1일차 (기획감사실, 행정지원실, 재무과, 종합민원과, 홍보담당관)
6.18.(목)	- 제4차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회의 * 업무보고 2일차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산림녹지과)
6.19.(금)	- 제5차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회의 * 임실군청 노조 간담회, 분과 회의 등
6.22.(월)	- 제6차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 * 업무보고 3일차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 * 취임식, 군정목표, 백서발간 등 논의
6.23.(화)	- 제7차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회의 * 업무보고 4일차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 시설사업소) * 군정목표 및 방침 선정 논의, 오수 반려문화도시 추진협의회 간담회

6.24.(수)	- 제8차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회의 * 업무보고 5일차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문화체육과, 관광치즈과,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재)임실치즈테마파크)
6.25.(목)	- 제9차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회의 * 업무보고 6일차 (반려산업과, 옥정호힐링과, 읍·면)
6.26.(금)	- 제10차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회의 (내부 간담 등) - 관내 주요기관 현장방문
6.29.(월)	제11차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회의 (청년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
6.30.(화)	제12차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회의 (임실군수 취임식 행사 관련 협의 등)
7.1.(수)	- 제48대 한득수 임실군수 취임식 - 제13차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회의 (공약 및 백서발간 논의 등)
7.2.(목)	공약사항, 백서 검토 및 분과별 회의
7.3.(금)	제14차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회의 (공약점검 및 백서발간 논의 등)
7.6.(월)	공약사항, 백서 검토 및 분과별 회의
7.7.(화)	제15차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회의 (공약점검 및 백서발간 논의 등)
7.8.(수)	공약사항, 백서 검토 및 분과별 회의
7.9.(목)	공약사항, 백서 검토 및 분과별 회의
7.10.(금)	- 제16차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회의 (인수위원회 활동 보고 등) - 민선 제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해단

④ 인수위원회 예산사용 내역

구분	소요액(원)	비고
합 계	61,381,200	
인수위원회 회의 수당	33,900,000	
인수위원회 운영비	5,811,200	사무 용품 구입 및 임차 등
사무실 대관	7,779,000	대관, 통신, 전기 설치
홍보물, 제작	3,891,000	현판, 현수막 등
백서 제작	10,000,000	편찬,디자인 및 제작비

* 위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은 군(예비) 보유 물품을 사용한 후 반납

* 사무용품(집기류 등)은 인수위원회 해산 후 임실군에 반납하여 활용

제2장 총괄

제2장 총괄

핵심 진단 요약

【진단】

임실군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산업구조의 한계, 생활서비스 수요의 다변화 등 복합적 구조변화에 직면해 있음.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는 농업·산업·관광·복지·정주 여건·재정운영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이며, 민선 제9기 군정은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구분	핵심진단	주요내용
1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인구 자연감소 지속 - 청년층·생산 가능인구 유출로 지역활력 저하 - 읍·면 간 인구 차이 확대 - 일부 지역의 공동화 우려 심화
2	농업 중심 지역경제의 한계 노출	- 영세농 비중이 높고 고령농 중심의 구조 지속 - 유통·브랜드·가공·판로 연계가 부족한 생산 중심 농정 - 임실형 지역특화작목 개발의 선제적 대응 미흡 - 대단위 스마트팜 농업 확산 부족 - 기후변화와 농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 불안정 확대
3	산업·일자리 기반의 취약성	- 제조·서비스 등 비농업 일자리 기반 부족 -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창업 생태계 미흡 - 지역 내 소비와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약함
4	관광자원의 잠재력 대비 경제효과 제한	- 옥정호·치즈테마파크 등 대표자원 보유 - 방문객의 체류시간·소비지출·재방문율을 높이는 전략 부족 - 관광과 상권·숙박·로컬콘텐츠의 연계성 미흡
5	복지·의료·돌봄 수요 증가	-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돌봄 수요 급증 - 면 단위 생활권에서 서비스 접근성 차이 존재 - 취약계층·독거노인·아동·장애인 대상 통합지원 체계 고도화 필요
6	정주여건과 생활서비스의 지역 격차	- 교통·주거·문화·교육·체육·돌봄 서비스의 편차 존재 - 청년·귀농귀촌인의 정착 여건 개선 필요 - 생활 SOC의 양적 확충뿐 아니라 운영의 질 관리 필요
7	재정운영의 전략성 요구	- 재정 여건의 제약 속에서 신규 수요는 지속 확대 - 단년도 분산투자 방식으로는 체감 성과 창출 한계 - 선택과 집중·사전 성과관리·국·도비 확보 역량 강화 필요

【종합】 임실군이 직면한 현안은 인구·산업·관광·복지·정주·재정이 상호 연결된 구조전환 과제임. 앞으로의 군정은 시설 확충과 분산적 예산투입에서 벗어나 인구활력 회복, 지역산업 고도화, 체류형 관광경제 구축, 생활 밀착형 복지체계 강화, 정주 여건 개선, 성과 중심 재정운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함.

10대 핵심 현안

【진단】

임실군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 농업구조 전환 지연, 지역경제 활력 저하, 복지·의료 수요 확대 등 복합적 변화에 직면해 있고, 이는 군민 삶의 질, 지역의 지속가능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임. 단편적·분산적 대응을 넘어 군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시각에서 핵심 현안을 정리하고 우선순위와 실행력을 갖춘 종합 대응전략 필요.

구분	핵심진단	주요내용
1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 출생 감소·청년 유출·고령화 가속 - 인구정책의 군정 총괄전략화
2	청년 정착 기반 부족	- 일자리·주거·문화·돌봄·창업지원 미흡 - 청년층 유입·정착·성장 선순환 체계 구축
3	농업 소득 정체와 구조 전환 지연	- 생산 위주 정책의 한계 - 고소득 작목·스마트농업·가공·유통 연계 강화
4	고령사회 대응 복지·돌봄체계 재편	- 노인 맞춤형 건강관리·재가돌봄·이동지원 강화 - 전달체계 통합성과 현장성 제고
5	지역의료·보건 안전망 강화	- 면 단위 의료접근성과 응급 대응 보완 - 예방 중심 건강관리체계 전환
6	관광자원의 체류형 산업화 미흡	- 관광과 상권·숙박·콘텐츠 소비 연결 취약 - 사계절 전략과 브랜드 고도화
7	생활 SOC 및 정주환경 개선 요구 확대	- 군민 삶과 직결되는 생활서비스 개선 요구 증가 - 읍·면 생활권 맞춤형 접근 필요
8	지역경제 활력 저하와 소상공인 지원 한계	- 내수 취약·소비 유출·경영 부담 심화 - 로컬경제 순환구조 구축
9	기후위기·재난 대응체계 강화 필요	- 이상기후·집중호우·가뭄 위험 증가 - 농업·환경·안전 통합 대응
10	재정건전성과 투자 효율성 제고	- 한정 자원 대비 수요 급증 - 성과 중심 재정운영과 중기 투자전략 고도화 필요

【종합】 10대 현안은 인구·청년·농업·복지·보건·의료·관광·정주·지역경제·재난안전·재정이 긴밀히 연결된 과제이며, 향후 군정은 개별 사업의 나열이나 단기적 대응에 머무르지 말고, 정책 연계와 선택과 집중, 현장 실행력, 성과 중심 재정운영으로 임실 고유의 강점과 지역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노력 필요.

10대 우선 과제

【진단】

임실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군정 역량을 핵심 분야에 집중해야 함. 인구·농업·지역경제·복지·보건·정주를 상호 연계하여 군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이라는 목표 아래, 전략성과 실행력을 갖춘 10대 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군정운영의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구분	핵심진단	주요내용
1	지방소멸 대응 종합전략 수립	- 인구·청년·일자리·주거·돌봄 통합계획 수립 - 읍·면별 인구위기 진단과 맞춤형 대응체계 마련 - 기본소득 재정·연계사업 대응
2	청년·신혼부부 정착 패키지 추진	- 뉴타운사업 등 주거·창업·일 경험·문화공간·보육 통합 제공 - 귀향·귀촌 청년 유입 프로그램 체계화
3	농업 고부가가치화 및 소득중심 농정 전환	- 농정부서 통합 배치와 기획력 강화 - 스마트농업·특화품목·로컬푸드·가공·유통 강화
4	임실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 노인·장애인·아동·취약계층 지역밀착형 돌봄체계 강화 - 보건·복지·의료 연계 서비스 구축
5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 및 예방행정 강화	- 거점의료기관 고도화 및 방문건강관리·이동지원·응급연계체계 보완 - 만성질환·정신건강·치매 예방 등 예방중심 관리 확대
6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 옥정호·치즈·농촌체험·먹거리·숙박 관광벨트 조성 - 야간관광·계절축제·로컬브랜드 콘텐츠 개발
7	읍·면 생활권 중심 정주환경 개선	- 교통·문화·체육·돌봄·생활편의 균형 확충 - 군민 체감형 생활 SOC 운영 혁신
8	소상공인·골목상권 회복 지원	- 경영안정·판로확대·디지털 전환·지역상품 소비촉진 강화 - 관광소비와 지역상권 연계 구조 마련
9	재난·환경·기후대응 기반 확충	- 재해취약지역 선제 정비 - 농업재해 대응 - 물관리·탄소중립 실천사업 확대
10	책임재정 및 성과관리체계 정착	- 핵심사업 중심 자원배분 - 공약·현안 통합관리와 성과평가 체계 구축

【종합】 10대 우선 과제는 위기관리 수준을 넘어 구조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행전략이며, 민선 제9기 임실군정의 중심축으로 핵심사업 중심 자원배분과 공약·현안의 성과관리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함.

재정운영 기본방향

【진단】

민선 제9기 임실군정의 재정운영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함. 따라서 단순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넘어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전략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재정관리, 국·도비 확보 역량강화, 성과 중심 예산체계 정착을 통해 군정 목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함.

구분	핵심진단	주요내용
1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전략재정	- 모든 사업을 균등 배분하는 방식에서 탈피 - 인구·농업·복지·정주·관광 등 핵심분야 중심 투자 - 군민 체감도·파급효과가 큰 사업 우선 배치
2	경직성 경비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	- 의무지출과 반복사업 구조를 점검하여 재정 탄력성 확보 - 관행적 예산편성을 개선하고 사업 일몰제 강화 -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투자 우선순위 관리
3	국·도비 확보 역량 강화	- 중앙부처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제 대응 - 지역 현안과 국가정책을 연계한 자원 확보 논리 강화 - 부서별 대응이 아닌 군 차원의 통합 자원전략 운영
4	성과 중심 예산관리 정착	- 투입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예산 편성·평가 전환 - 사업별 KPI 설정과 사후평가 강화 - 예산 대비 군민 체감성과를 정책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
5	생활밀착형 투자 확대	- 대규모 시설투자와 함께 군민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에 집중 - 교통, 돌봄, 보건, 주거, 안전 등 체감형 분야 우선 투자 - 읍·면별 생활격차 완화에 재정운영의 초점 설정
6	민간·지역사회와의 협력재정 확대	- 주민참여, 민관협력, 지역공동체 기반 사업 확대 - 행정 단독이 아닌 협업형 재정사업 모델 발굴 -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한 사업구조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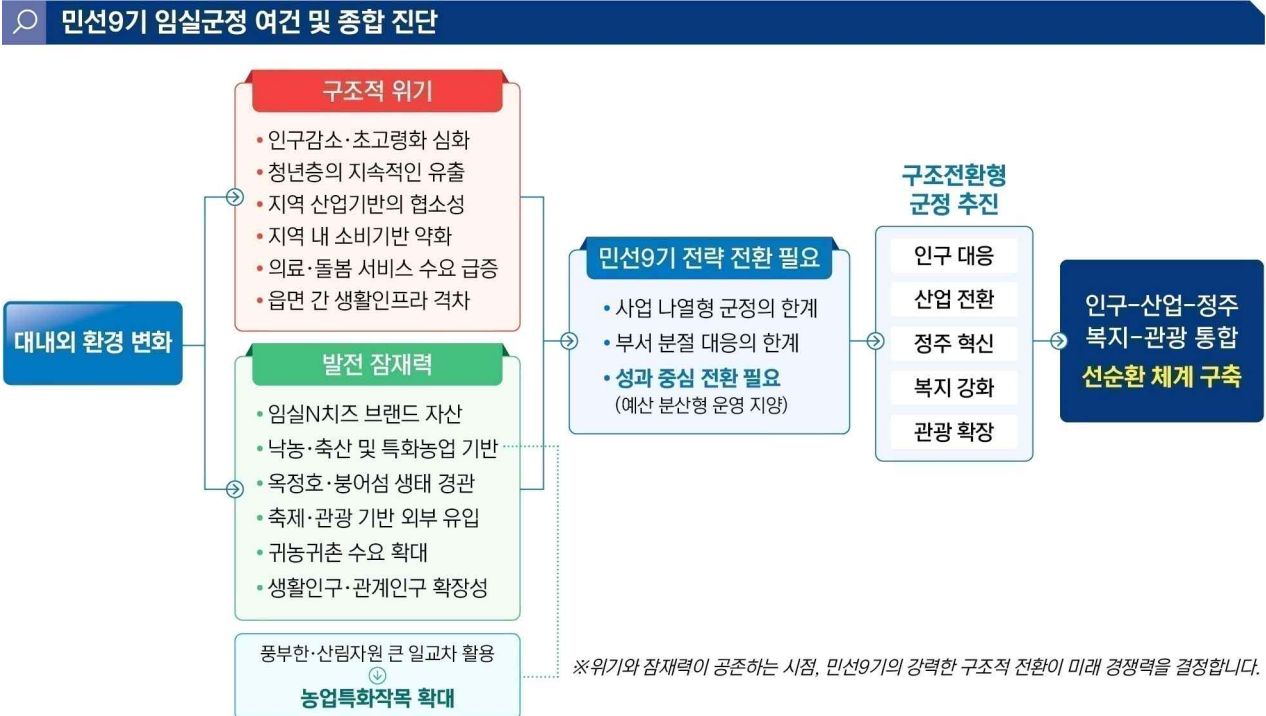
【종합】 재정운영의 핵심은 단순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넘어, 임실군의 미래전략과 군민 삶의 질 개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책임재정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음. 한정된 재원을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경직성 경비와 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며, 국·도비 확보와 민관협력 재정모델을 적극 확대해야 함. 또한 군민 체감효과를 높이고, 읍·면 간 생활격차 완화와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재정운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함.

제3장 군정 여건 및 종합 진단

제3장 군정 여건 및 종합 진단

2-1. 진단의 배경과 기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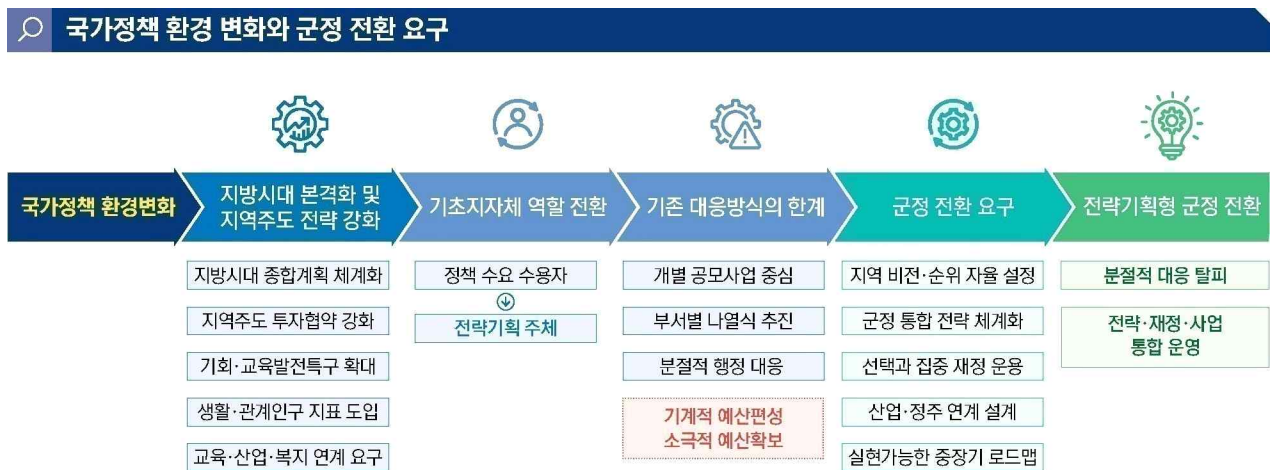
- 민선 제9기 임실군정은 단순히 기존 사업을 점검하고, 일부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수준의 행정 운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하였음.(2026.7.1.)



- 현재 임실군은 인구구조, 산업기반, 생활서비스, 복지수요, 지역활력 등 군정 전반의 기초 조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별 부서 단위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음.
- 특히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이 직면한 공통 과제인 인구감소, 초고령화, 청년층 유출, 산업기반 협소, 지역 내 소비기반 약화, 의료·돌봄 수요 증가, 읍·면 간 생활인프라 격차 등을 동시에 겪고 있음.
- 반면, 다른 농산어촌지역과 차별화되는 다음과 같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임실N치즈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 브랜드 자산, 옥정호·붕어섬·왕의숲·사선대 등 생태·경관 자원, 축제와 관광을 통한 외부 유입 기반, 귀농귀촌과 농촌형 삶에 대한 수요 확대,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장 가능성
 - 특히, 낙농·축산 및 특화농업 기반과 풍부한 산림자원, 큰 일교차 등은 농업 특화작목 확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지역 잠재력으로 작용

- 즉, 임실군은 위험과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이며, 향후 군정의 성패는 이러한 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군정 운영방식에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음.
- 민선 제9기 군정은 더 이상 단편적 사업 확대나 예산 분산식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인구-산업-정주-복지-관광을 통합적으로 묶는 구조전환형 군정으로 발전해야 함.
- 따라서 제2장(군정 여건 및 종합 진단)은 이러한 인식 아래, 임실군이 직면한 대내외 정책환경을 점검하고, 지역 내부의 구조적 여건을 분석하며, 민선 제9기 군정이 왜 새로운 전략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지 설명하는 장으로 구성하였음.

2-2. 국가정책 환경 변화와 군정 전환 요구



1) 지방시대 본격화와 지역 주도 발전 전략 강화

- 최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설계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하는 지방시대형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
- 이는 단순한 정책 명칭의 변화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정책 수요 수용자에서 전략 기획 주체로 역할이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화
 - 지역주도 발전전략 및 투자협약 강화
 - 기회발전·교육발전특구 등 지역특화정책 확대
 - 생활인구, 관계인구 등 새로운 지역활력 지표 도입
 - 교육, 산업, 정주, 문화, 복지를 연계한 정책 요구 증가

-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는 임실군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기함.
 - 개별 공모사업 중심의 대응을 넘어 포괄적 연계 검토에 따른 전략 대응 필요
 - 지역의 비전과 자원, 정책 우선순위 정리
 - 부서별 사업 나열이 아니라 군정 전체를 하나의 전략으로 체계화
 - 한정된 재정과 조직을 선택과 집종의 원칙에 따라 운용
- 특히 앞으로는 단순히 "몇 개 사업을 따왔는가"보다, 지역의 미래상이 분명한가, 산업과 정주가 연결되어 있는가, 주민이 체감할 변화가 설계되어 있는가, 중장기 로드맵이 실현 가능한가가 기초지자체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임실군 역시 그간의 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분절적 대응 행정에서 전략기획형 군정으로 전환할 시점임.

2)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심화와 인구정책 패러다임 변화

- 국가 차원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단순 인구증가 장려에서 벗어나, 삶의 기반 회복과 지역활력 유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생활인구 기반 정책평가, 청년정착 지원, 주거·교통·돌봄 등 정주여건 개선, 관계인구 확대 정책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인구감소 문제는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군정 전체의 최상위 정책과제임.
 -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포함한 새로운 인구개념을 군정에 반영 필요
 -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단기간 내 상주인구 급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구정책은 정주인구 유지 + 생활인구 확대 + 관계인구 축적의 3중 전략으로 전환
 - 임실군은 관광과 농촌체험, 브랜드 자산을 바탕으로 생활인구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상주인구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 필요
- 결국 임실군의 인구정책은 "몇 명이 늘었는가"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이 머물고, 다시 찾고, 결국 연결되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함.

3) 농정 패러다임 변화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요구

- 농업정책 또한 단순 생산증대 중심에서 벗어나, 농촌 공간의 재편과 삶의 질 개선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

○ 최근 농정의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 농촌협약을 통한 생활권 기반 개선
- 청년농·후계농 육성, 스마트농업 도입
- 농산물 가공·유통·브랜드화 강화
- 농촌 돌봄과 생활서비스 확충

○ 이러한 변화는 임실군 농정에도 분명한 전환을 요구함.

- 생산량 중심 지원 → 농가소득 중심 지원
- 단위 보조사업 → 품목·가공·유통 통합전략
- 고령농 유지 중심 → 청년농 세대교체 병행
- 농업 단독정책 → 농업·정주·관광 연계 정책
- 고전적인 농업 작목 중심 → 기후변화 적응형 신 소득작목 개발

○ 또한 임실군은 낙농(축산)과 치즈, 농촌 체험, 로컬푸드, 귀농·귀촌 가능성을 함께 갖고 있기에, 국가 농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농업 중심의 지역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보유함.

○ 따라서 향후 임실군은 농업을 단순 보호의 대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소득·산업·정주를 연결하는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4) 초고령사회에 따른 복지·의료·돌봄 통합 요구

○ 초고령사회 진입은 임실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현상이 아니라, 의료 수요 증가, 돌봄 부담 확대, 이동권 약화, 1인가구 증가, 만성질환 및 치매 관리 필요성 증대, 응급상황 대응 취약성 확대 등 복합적 문제를 수반함.

○ 특히 농촌에서는 보건, 복지, 돌봄, 이동지원, 주거안전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영역만 강화해서는 군민 체감도를 높이기 어려움.

○ 따라서 민선 제9기 임실군정은 단순 수당지원금 중심 복지를 넘어, 예방 - 건강관리 - 돌봄 - 의료접근 - 생활지원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통합형 복지·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함.

○ 이는 고령층 정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청년·가족·중장년까지 포괄하는 전 생애 안전망 구축의 문제이기도 함.

2-3. 인구감소·초고령화·청년유출의 구조적 심화



1) 인구감소는 임실군의 최상위 구조문제

- 임실군의 인구감소는 단순한 행정 통계상의 감소가 아니라, 지역의 생산, 소비, 정주, 교육, 복지, 재정 운영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임.
- 인구가 줄어들면 다음과 같은 연쇄효과가 발생함.
 - － 지역 내 소비시장 축소
 - － 학교·보육·문화시설 수요 감소
 - － 노동력 부족, 마을 단위 공동체 유지 곤란
 - － 공공서비스 유지비용 증가
 - － 읍·면 간 서비스 공급 불균형 심화
- 특히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지역은 "축소에 적응하는 행정"을 요구받게 되며, 단순한 확장형 예산 편성과 시설투자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게 됨.
- 따라서 인구정책은 별도 부문 정책이 아니라, 재정운영, 도시·농촌공간계획, 교육, 복지, 관광, 산업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최상위 정책 프레임이 되어야 함.
- 향후 군정은 모든 정책을 평가할 때 "이 사업이 인구유지와 정주여건 개선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라는 기준을 보다 분명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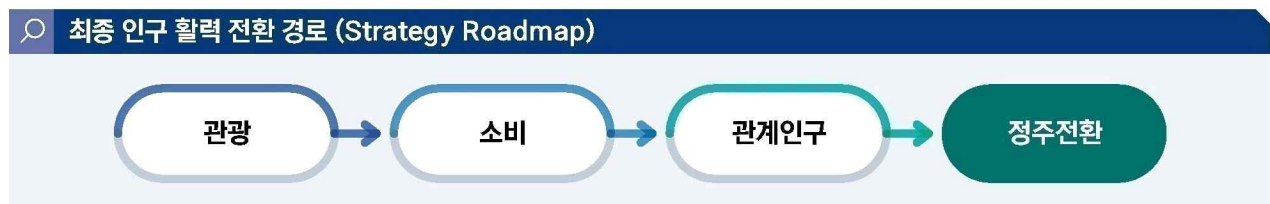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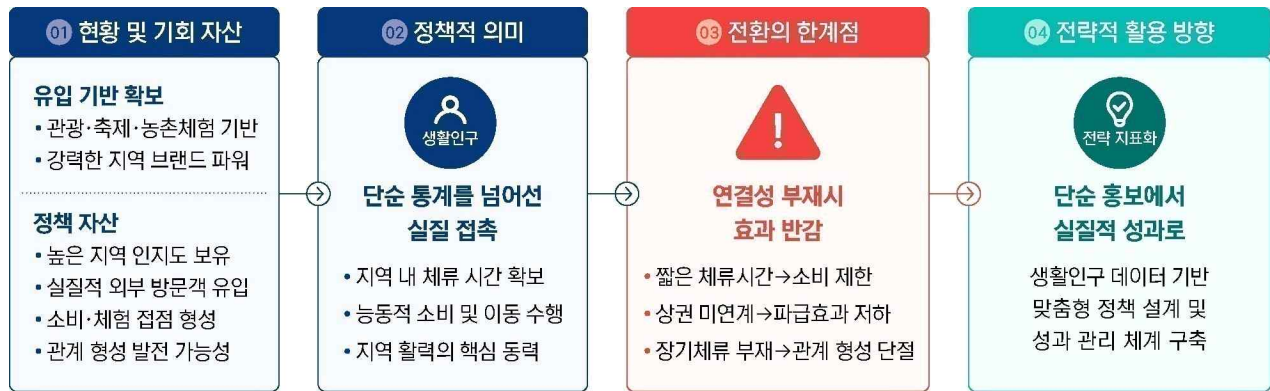
2) 초고령화 심화로 인한 군정 부담 확대

- 임실군은 초고령 농촌지역으로서, 인구구조 변화가 군정 전반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음.
- 초고령화는 다음과 같은 부담을 심화시킴.
 - － 보건·의료·돌봄 재정 수요 증가
 - － 응급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 확대
 - － 이동약자 증가에 따른 교통복지 수요 증가
 - － 농업생산의 고령인력 의존 심화
 - － 지역 일상서비스 공급체계의 약화
 - － 고독사, 치매, 돌봄 사각지대 등 사회문제 증가 가능성
- 초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기존의 "시설 중심 공급"보다 찾아가는 서비스, 예방 중심 건강관리, 읍·면 단위 생활 안전망이 중요해짐.
- 또한 초고령화는 단순 복지 문제가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성, 상권 유지, 교통 체계, 마을공동체 유지, 공공서비스 재편과 직결되는 군정 전반의 구조 문제임.
- 따라서 임실군은 고령 친화형 군정 운영 기반을 조기에 정립할 필요가 있음.

3) 청년유출과 지역재생산 기반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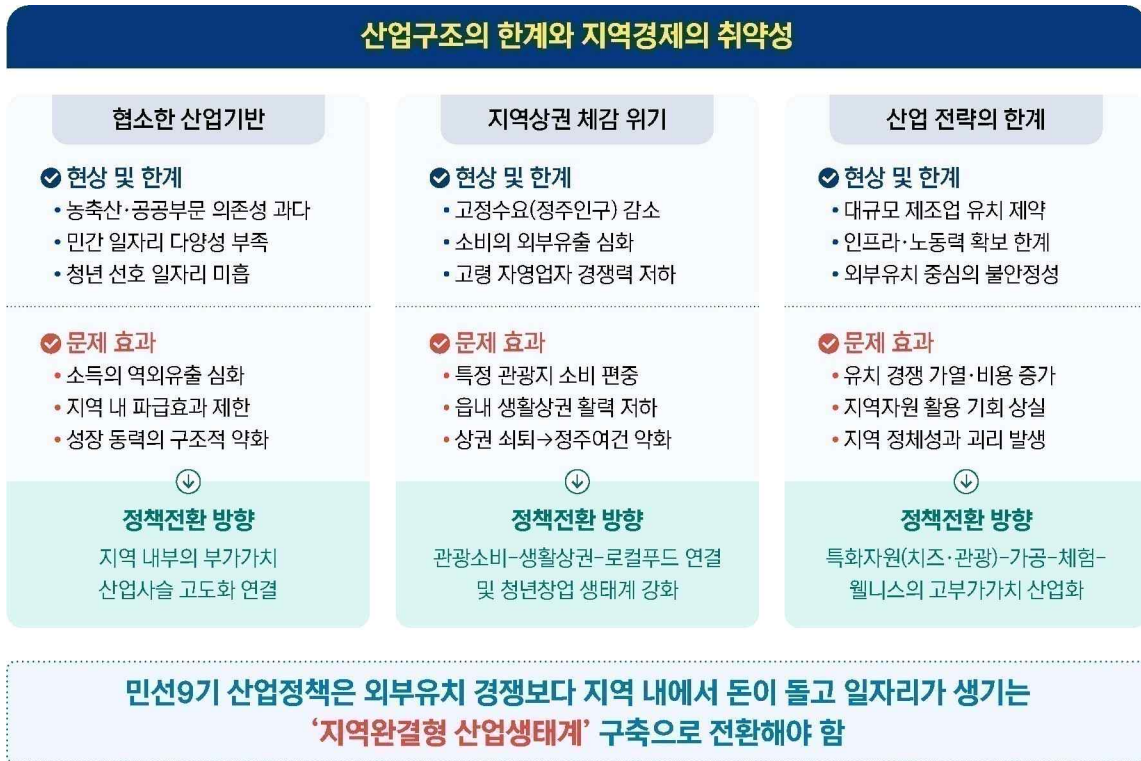
- 지역 소멸의 핵심은 전체 인구 규모보다 청년층의 지속적 유출과 정착 실패에 있음.
- 청년층의 이동은 단순 전출입의 문제가 아니라, 학업 기회, 취업 기회, 미래소득 기대, 주거 여건, 문화·관계망, 결혼·양육 가능성 등 복합 요인이 결합된 결과임.
- 임실군도 청년층 유출이 지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
 - － 출산가능 인구 감소,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 약화
 - － 청년 창업 및 혁신주체 부족
 - － 지역 리더층 세대교체 지연
- 청년정책은 단순히 장려금이나 단기성 사업을 확대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주거-일자리-창업-교육-문화-돌봄이 결합된 정착 생태계가 필요함.
- 특히 임실군은 농업, 관광, 로컬브랜드, 귀농귀촌과 연계해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실형 청년정착 모델을 만들어야 함.

4)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가능성은 새로운 기회



- 상주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은 관광, 축제, 농촌체험, 지역브랜드를 매개로 외부 인구 유입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정책 자산임.
 - 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존재함
 - 외부 방문객이 실제로 유입되고 있음
 - 지역소비와 체험활동의 접점이 형성되고 있음
 - 재방문과 관계형성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음
- 생활인구는 단순 방문객 통계와 달리, 지역과 실제로 접촉하고 일정 시간 머무르며 소비·체험·이동을 수행하는 인구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큼.
- 다만 생활인구 확대가 곧바로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체류시간이 짧으면 소비효과가 제한됨
 - 지역상권과 연결되지 않으면 파급효과가 작음
 - 숙박과 장기체류가 없으면 관계인구로 발전하기 어려움
- 따라서 임실군은 생활인구를 단순 홍보지표가 아니라, 관광-소비-관계인구-정주전환으로 이어지는 전략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4. 산업구조의 한계와 지역경제의 취약성



1) 협소한 산업기반과 낮은 일자리 다양성

- 임실군 지역경제는 농업·축산업, 소규모 자영업, 공공부문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로 판단됨.
- 이러한 산업구조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내포함.
 - 산업 다변화 부족 및 민간 일자리 선택지 부족
 - 청년층 선호 일자리 미흡
 - 경기변동 및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 및 부가가치 창출 구조 협소
-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생산기반 유지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부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 사슬을 만들어야 하나, 현재는 그 연계성이 충분히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결과적으로 지역 내에서 소득이 창출되더라도 외부로 유출되기 쉽고, 지역에 남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 따라서 산업정책은 단순한 기업 유치 홍보가 아니라, 임실의 자원과 수요 구조에 맞는 실질적 산업생태계 형성을 목표로 해야 함.

2) 소상공인·지역상권의 체감경기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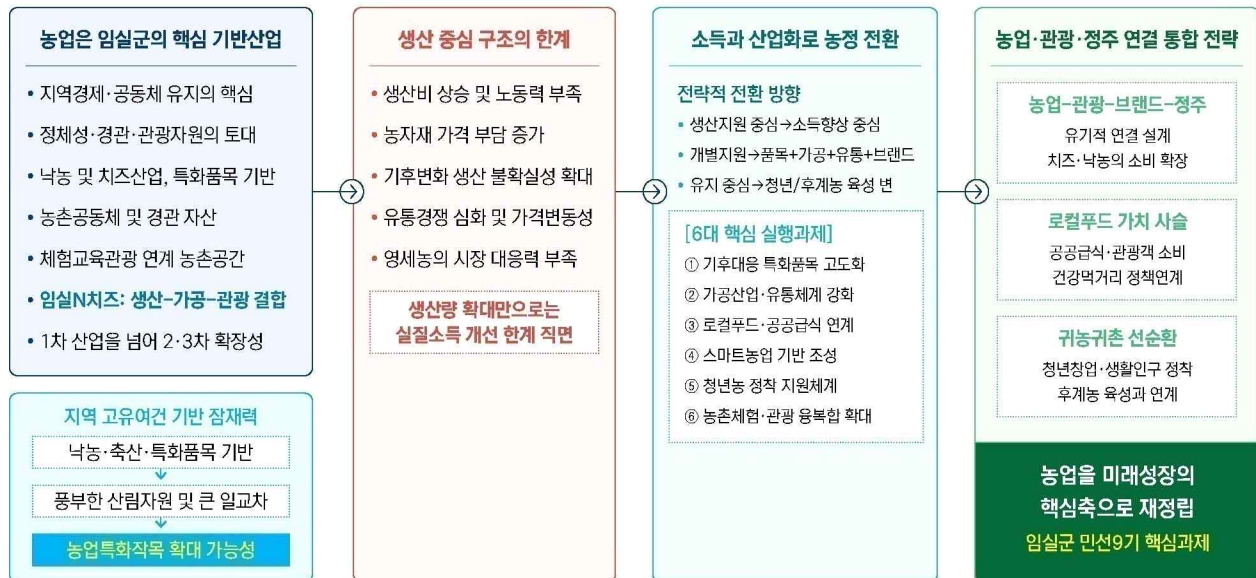
- 임실군의 상권은 인구 규모 감소와 소비시장 축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임.
- 특히 농촌지역 상권은 고정수요 감소, 소비의 외부 유출, 관광객 소비의 특정 지점 편중, 고령 자영업자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나타남.
- 이 경우 상권 활성화 정책은 단순 시설 정비나 일회성 이벤트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임실군은 다음 관점에서 지역 상권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
 - － 생활상권의 유지와 회복
 - － 관광소비의 읍내 및 주변 상권 환류
 - － 로컬푸드·특산품·체험소비 연계
 - － 청년창업 및 소규모 창업 기반 확대
- 결국 상권정책은 경제정책이자 정주정책이며, 주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방문객이 실제로 지갑을 여는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임.

3) 산업정책은 '기업유치'만으로 한계

- 임실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 외부 대기업 또는 대규모 제조업 유치만을 산업정책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큼.
- 중요한 것은 지역 내부 자원을 활용해 작지만 강한 산업모델을 만드는 것임.
- 임실군에 적합한 산업모델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상할 수 있음.
 - － 농업 기반 식품가공산업
 - － 치즈·낙농 연계 체험·교육·소비 산업
 - － 지역브랜드 상품화 산업
 - － 관광 연계 서비스산업
 - － 농촌형 웰니스·치유·체험산업
- 이러한 산업은 대규모 공장형 모델과 달리, 지역 자원 활용도와 지역경제 환류 효과가 높고 지역 정체성에도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민선 제9기 산업정책은 "대규모 유치" 중심 프레임에 머물지 말고, 지역특화 자원 기반의 중소규모 고부가가치 산업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2-5. 농업 수익성 정체와 농정 전환 필요

농업 수익성 정체와 농정 전환



1) 농업은 임실군의 핵심 기반산업

- 농업은 임실군 경제와 지역공동체 유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지역 정체성과 생활양식, 경관, 관광자원의 토대이기도 함.
- 임실군 농업의 핵심 자산은 다음과 같음.
 - 낙농 및 치즈산업
 - 특화 품목 기반
 - 농촌공동체 및 경관 자산
 - 체험·교육·관광과 연계 가능한 농촌공간
- 특히 임실N치즈는 단순한 특산품 수준을 넘어, 생산, 가공, 체험, 관광, 축제, 지역브랜드를 결합할 수 있는 상징적 자산임.
- 이는 임실군 농업이 단순한 1차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2차·3차 산업과 결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함.

2) 생산 중심 구조만으로는 농가소득 개선 한계

- 농업이 지역의 핵심 기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실제 체감하는 소득 안정성은 별개의 문제임.

○ 농가가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은 다음과 같음.

- 생산비·인건비 상승 및 노동력 부족
- 농자재 가격 부담 증가
-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 확대
- 유통경쟁 심화, 가격변동성 확대
- 임실군 영세농의 시장 대응력 부족

○ 이러한 조건에서는 생산량 확대만으로 실질소득을 개선하기 어렵고, 오히려 생산비 증가가 농가 경영부담으로 전가될 위험이 큼.

○ 따라서 향후 농정은 "얼마나 생산했는가"보다 얼마나 소득으로 연결되었는가, 부가가치가 지역 안에서 얼마나 축적되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함.

3) 농정의 중심축을 소득과 산업화로 이동해야 함

○ 민선 제9기 임실군 농정은 단순 생산기반 유지정책에서 벗어나, 소득 향상과 산업화 중심의 농정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함.

○ 주요 전환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생산지원 중심 → 소득향상 중심
- 품목 개별지원 → 품목+가공+유통+브랜드 연계
- 고령농 유지 중심 → 청년농·후계농 육성 병행
- 단년도 사업 중심 → 중장기 경쟁력 강화 중심

○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기후변화 대응 특화품목 고도화 전략 수립
- 가공산업과 유통체계 강화
-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연계 확대
-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 청년농 정착 지원체계 강화
- 농촌체험 및 관광과의 융복합 확대

○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 농업은 단순 보조금 대상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성장산업으로 기능할 수 있음.

4) 농업·관광·정주를 연결하는 통합전략 필요

- 임실군 농업의 가장 큰 강점은 농업이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관광, 지역브랜드, 체험, 귀농귀촌, 정주환경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있음.
- 예컨대 치즈와 낙농은 특산물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교육·체험·관광·축제·숙박 소비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함.
- 로컬푸드는 농가소득 증대뿐 아니라 관광객 소비, 공공급식, 지역 건강먹거리 정책과도 결합될 수 있음.
- 귀농귀촌 정책 역시 단순 인구유입이 아니라, 후계농 육성, 청년창업, 농촌형 생활인구 정착과 연계될 수 있음.
- 따라서 민선 제9기 농정은 농업-관광-정주-인구정책의 연결고리를 분명히 설계해야 하며, 이를 통해 농업을 임실군 미래성장의 핵심축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2-6. 정주·생활 SOC 및 생활인프라 격차



1) 정주여건은 모든 정책의 기반

- 지역이 지속가능하려면 결국 사람이 살고 싶은 환경,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함.
- 임실군의 정주문제는 단순히 주택이나 도로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일상 전반을 구성하는 생활환경의 질의 문제임.

- 현재 임실군이 안고 있는 정주 관련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읍·면 간 생활서비스 편차
 - 교통취약지역 존재
 - 고령층 중심 이동 불편
 - 청년·가족 단위가 원하는 생활편의 부족
 - 문화·체육·교육·돌봄 접근성 차이
- 이러한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구감소 대응정책도 실질 성과를 내기 어려움. 즉, 정주여건 개선은 인구정책의 하위과제가 아니라, 인구정책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음.

2) 생활 SOC는 시설 수보다 접근성과 연결성이 중요

- 농촌지역에서 생활 SOC 정책은 단순히 시설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
- 중요한 것은 주민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거리와 동선인가, 교통약자가 접근 가능한가, 여러 기능이 복합화되어 있는가, 유지관리와 운영이 가능한가 여부임.
- 같은 시설이라도 접근성이 낮으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기능이 분산되면 군민 체감도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향후 임실군은 생활 SOC 정책을 다음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생활권 거점 중심 재편
 - 이동지원 강화
 - 보건·복지·문화·돌봄의 복합거점 조성
 - 유흥시설 재활용, 고령친화형 공간 조성
- 이는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효율적 서비스 공급체계 재편의 의미를 가짐.

3) 청년·가족 정착을 위한 생활기반 보강 필요

- 청년과 가족 단위 인구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 일자리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이들이 실제로 고려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주거의 안정성과 비용 및 보육과 교육의 접근성
 - 의료와 돌봄의 안정성
 - 문화·여가·커뮤니티 공간의 존재

- 따라서 임실군의 정주정책은, 주거정책, 청년정책, 보육·교육정책, 생활 SOC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해야 함.
- 특히 청년층과 자녀양육 가구는 "정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군정이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주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주기반이 강화되어야만 귀농귀촌 정책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고, 생활인구가 관계인구로 발전하는 선순환도 가능해짐.

2-7. 관광의 양적 성장과 체류형 전환 과제

🔍 관광의 양적 성장과 체류형 전환 과제

01 임실군 관광은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

핵심 관광자원	주요 성과	미래 가치	전략적 의미
치즈테마파크, 옥정호 봉어섬, 계절축제	외부 인지도 급증 생활인구 유입 확대	농촌도시 발전모델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활력 플랫폼 및 관계인구 형성의 핵심

02 방문객 증가만으로 지역발전 완성에 한계

구조적 한계점	행정 평가기준 전환
• 명소·시기에 편중된 단시간 방문 • 숙박·야간 소비 부족(역외유출) • 지역 상권·농가 소득 연계 부족	AS-IS 단순 방문객 수 중심 TO-BE 체류시간·소비액·재방문을

03 체류형 관광으로의 질적 전환 방향

전략적 방향	주요 실행과제
• 명소 중심 → 체류형·경험형 • 행사 중심 → 사계절 상시형 • 단순 관람 → 소비·숙박 연계 • 일회 방문 → 재방문·관계인구	• 숙박시설 확충 및 야간 콘텐츠 보강 • 가족·치유·반려동물 친화 콘텐츠 • 로컬푸드 소비 및 농촌체험 융합 • 관광 거점 간 이동·동선 연계 강화 ※농업·상권·문화 부서 간 통합 과제

“관광은 지역경제와 인구전략을 잇는 활력 플랫폼”

민선9기 관광행정은 ‘숫자 중심’에서 ‘지역경제 환류형’으로 전환해야 함

1) 임실군 관광은 이미 중요한 성장축으로 부상

- 최근 임실군은 관광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외부 인지도를 높이고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확대해가고 있음.
- 주요 관광 자원은 다음과 같음.
 - 임실N치즈테마파크
 - 옥정호 및 봉어섬
 - 성수산 왕의숲
 - 사선대
 - 축제 및 계절형 콘텐츠
- 생태·경관 기반 관광자원은 임실군이 전통적 농업지역을 넘어, 관광과 지역 브랜드가 결합된 복합형 농촌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줌.
- 관광은 단순한 유입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인지도 제고, 소비 확대, 농특산물 판매, 생활인구 확대, 관계인구 형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전략 부문임.

2) 방문객 증가만으로는 지역발전이 완성되지 않음

-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기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점검해야 할 핵심 지점은 다음과 같음.
 - 체류시간이 충분한가
 - 숙박이 발생하는가
 - 지역 식당·카페·상점 소비로 이어지는가
 - 농특산물 구매로 연결되는가
 - 재방문과 관계형성으로 이어지는가
 - (임실군민) 자체의 수용태세는 어떠한가
 - (임실군민)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태도는 어떠한가
- 만약 관광이 특정 명소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짧은 시간 방문 후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임실군은 이제 관광정책의 평가기준을, 방문객 수 중심에서, 체류시간, 소비액, 숙박률, 재방문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3) 체류형 관광으로의 질적 전환 필요

- 향후 임실군 관광정책의 핵심과제는 "많이 오는 관광지"를 넘어서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는 것임.
-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명소 중심 관광 → 임실 가치·정신·이야기 중심 관광+체류형 관광
 - 행사 중심 관광 → 사계절 분산형 관광
 - 관람 중심 관광 → 체험·소비·숙박 연계형 관광
 - 일회성 방문 → 재방문·관계인구형 관광
 - 경제효과 중심 관광 → 감동 중심 관광
- 구체적으로는 숙박 인프라 확충, 야간 콘텐츠 보강, 가족형·치유형·반려형 콘텐츠 개발, 농촌체험 및 로컬푸드 소비 연계, 관광객 동선의 읍·면 확산 전략이 필요함.
- 관광의 질적 전환은 단순 관광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농업·상권·교통·문화·환경 정책이 함께 결합되어야 가능한 영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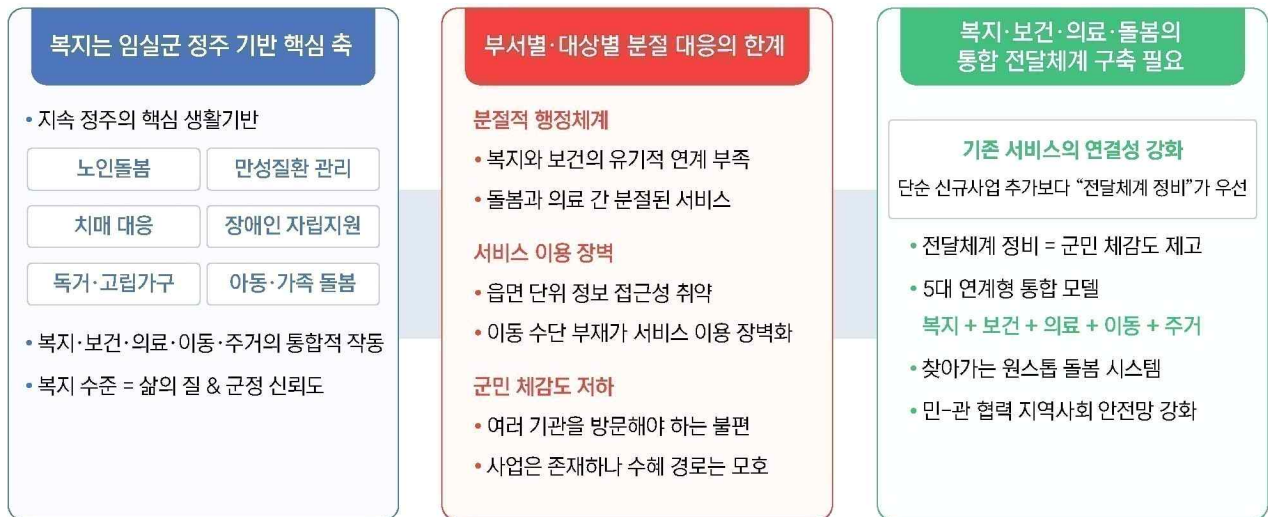
4) 관광은 지역경제·인구전략과 연결되어야 함

- 임실군에서 관광은 별도 산업이 아니라, 농업소득 확대, 지역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기회 창출, 생활인구 확대, 관계인구 축적과 연결되는 지역활력 플랫폼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관광객이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역식당을 이용하고, 특산품을 구매하고, 숙박하고, 다시 방문하고, 결국 임실과 지속적 관계를 맺게 될 때 관광은 인구정책과 산업정책의 중요한 연결축이 됨
- 따라서 민선 제9기 관광정책은 "숫자 중심 관광행정"에서 "지역경제 환류형 관광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함.
- 예를 들면 1111관광프로젝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핵심 성과지표 ▶ 재방문을·체류시간·지역상권 매출·숙박 점유율의 동반 상승

2-8. 복지·보건·의료의 분절화와 통합돌봄 필요



1) 복지는 임실군 정주 기반의 핵심 축

- 초고령 농촌지역에서 복지는 단순 취약계층 지원정책이 아니라, 군민이 계속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핵심 생활 기반임.
- 특히 임실군은 다음과 같은 복지·돌봄 수요가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큼.
 - 노인돌봄, 만성질환 관리, 치매 대응, 장애인 이동 및 자립지원, 독거·고립가구 생활안 전망, 아동·가족 돌봄 수요는 단일 서비스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며, 복지와 보건, 의료, 돌봄, 이동, 주거가 통합적으로 작동해야 실질 효과를 낼 수 있음
- 결국 복지의 수준은 군민의 삶의 질을 좌우할 뿐 아니라, 지역 정주 지속성과 군정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됨.

2) 부서별·대상별 분절 대응의 한계

- 일반적으로 농촌지역 복지 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질 수 있음.
 - 복지와 보건의 따로 움직임, 돌봄과 의료 연계가 약함, 읍·면 단위 정보 접근성이 낮음, 이동문제가 서비스 이용장벽이 됨, 사업은 있으나 군민 체감도는 낮음
 -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은 제도가 있어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이동이 어려워 이용하지 못하거나, 여러 기관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음
 -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의 단순 추가보다, 기존 서비스의 연결성과 전달체계 정비임
- 군민 입장에서는 복지사업의 숫자보다 "실제로 도움을 받았는가"가 더 중요하므로, 향후 군정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재설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생애주기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필요

- 임실군 복지정책은 앞으로 노인 중심 사후대응형 지원에서 전 생애 예방·관리·돌봄 연계형 체계로 확대되어야 함.
- 주요 전환 방향은 다음과 같음.
 - － 대상별 분리사업 → 생애주기별 통합지원
 - － 예산·시설 중심 → 생활현장 중심
 - － 사후지원 중심 → 예방·건강관리·조기개입 중심
-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 돌봄 기반 강화, 청년·중장년 생활안정 지원, 노인 방문건강관리 및 통합돌봄 확대, 장애인·취약계층 이동 및 생활지원 연계, 복지-보건-의료-주거 연계체계 정비가 중요함.
- 이러한 전환은 단순 복지확대가 아니라, 임실군 전체의 정주품질을 높이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2-9. 4대 진단축 중심 종합진단



1) 정주·생활 SOC 재건

- 임실군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활기반을 얼마나 촘촘히 갖추느냐에 달려 있음.
- 정주정책은 시설물 확충보다, 생활권 거점 재편, 교통과 이동권 보장, 주거·문화·복지·교육의 복합화, 청년·가족 친화 환경 조성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함.
- 정주정책은 인구정책, 복지정책, 생활 SOC 정책을 통합하는 핵심 축이 되어야 함.

2) 농업소득 및 산업 고도화

- 임실군 농업은 단순 유지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성장 자산임.
- 그러나 생산 중심 지원 구조만으로는 농가소득 개선과 청년 유입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농정은 소득 중심, 가공·유통·브랜드 중심, 청년농 육성 중심, 관광·체험 연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
-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저탄소축산 등 환경 및 새로운 지역특화 브랜드 창출에도 전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농업의 산업적 고도화를 실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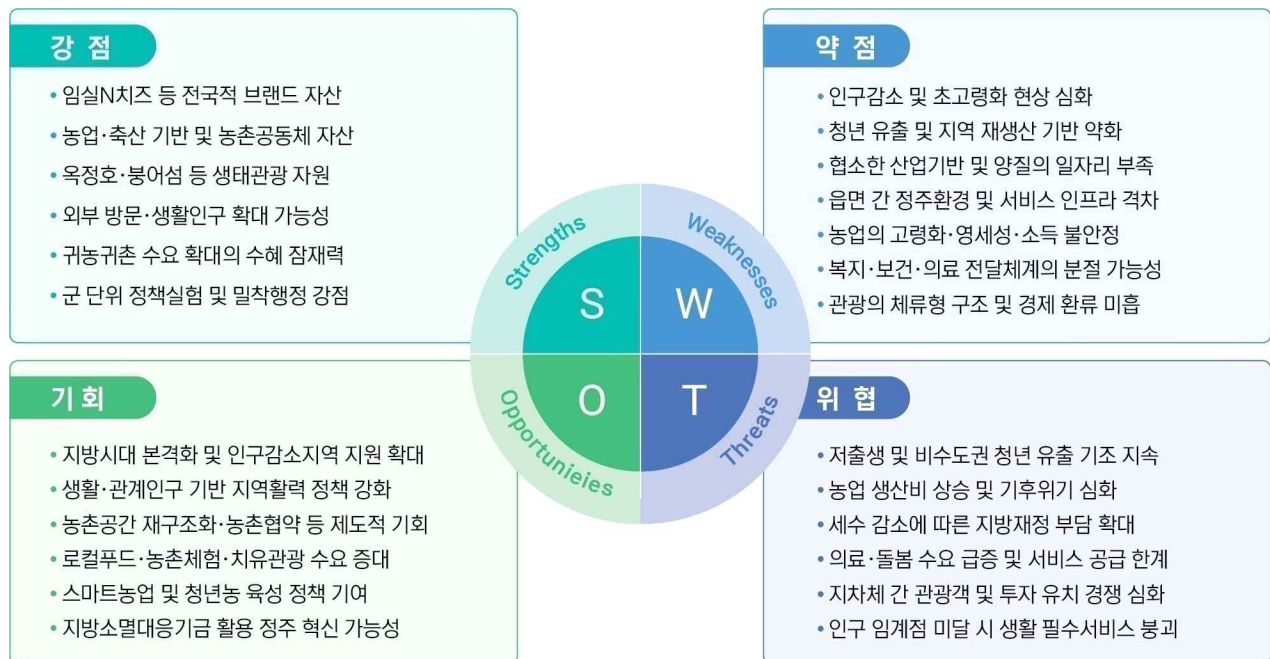
3) 전 생애 복지·돌봄 체계

- 초고령 농촌지역인 임실군은 복지, 보건, 의료, 돌봄의 통합적 운영이 필수적임.
-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접근성, 현장성, 연계성, 예방성을 강화해야 함.
- 이는 고령층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삶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군정의 핵심 조건임.

4) 체류형 관광·관계인구 확대

- 임실군은 방문객 유입 기반이 뚜렷한 지역이며, 이를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전략으로 발전시킬 여지가 큼.
- 관광정책은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뿐 아니라, 체류시간 확대, 숙박 및 소비 확대, 지역상권 환류, 재방문과 관계형성 중심으로 고도화되어야 함.
- 이를 통해 관광을 지역경제와 인구 전략의 연결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2-10.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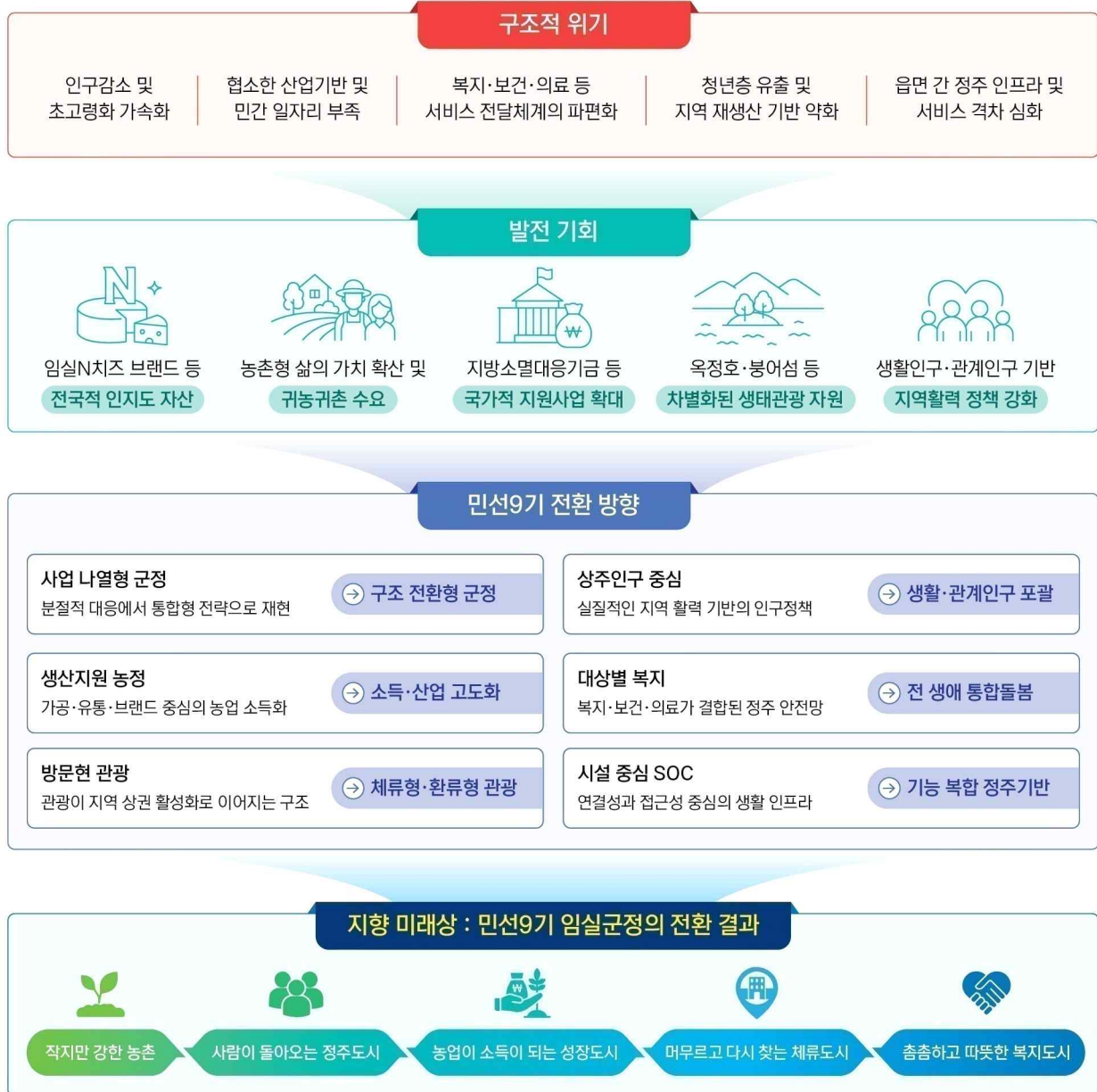


5) 종합 분석

- 임실군은 강한 자원과 약한 구조가 공존하는 지역임
- 다시 말해 활용 가능한 자원은 분명하나, 이를 인구·산업·정주·복지의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는 데는 아직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민선 제9기 군정의 핵심은 이러한 자원을 단순 홍보하거나 개별사업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전환의 동력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음.

2-11. 종합결론: 왜 지금 군정 전환이 필요한가

○ 왜 지금 군정 전환이 필요한가



민선9기 임실군정은 개별사업 대응을 넘어,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구조전환형 전략군정’을 지향함

- 임실군은 현재 인구감소, 초고령화, 청년유출, 산업기반 취약, 정주서비스 격차라는 구조적 위기와 농업·치즈산업, 생태·관광자원, 생활인구 확대 가능성, 농촌형 삶의 가치 확산이라는 발전 기회를 동시에 갖고 있음.
- 결국 민선 제9기 임실군정은 "작지만 강한 농촌", "사람이 돌아오는 정주도시", "농업이 소득이 되는 성장도시", "머무르고 다시 찾는 체류도시", "춤춤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로의 전환전략을 분명히 해야 함.

제4장 재정 운영 및 전략

제4장 재정 운영 및 전략

임실군의 2026년 재정구조는 자체재원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의존재원 비중은 높은 구조로 나타남.

지방세 비중은 4.8%로 전국 군 단위 평균(7~10%)과 전북 군 단위 평균(5~8%)보다 모두 낮아, 자체 과세기반이 매우 약한 수준임.

자체수입 비중도 7.8%에 그쳐 전국 및 전북 군 단위 평균보다 낮아,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도 재정 자립성이 취약한 편임.

반면 보조금 비중은 37%로 전북 군 단위 평균과 유사하여, 중앙 및 광역 보조사업 의존 구조는 일반적 수준으로 볼 수 있음.

교부세 비중은 47%로 전북 군 단위 평균보다 다소 낮지만, 이는 보조금 비중과 기타 이전재원 비중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가장 큰 문제는 2017년 채무가 없던 임실군이 2018년 30억 원 발행 이후 2020년까지 30억 원 수준의 안정적 잔액을 유지하였으나, 2021년 190억 원의 대규모 발행으로 채무잔액이 220억 원으로 급증하였고,

2022년에는 134억 원 상환을 통해 잔액이 126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나, 2024년 140억 원, 2025년 49억 원의 추가 발행으로 2026년 현재 채무잔액은 304.4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임.

결국 임실군은 자체재원은 약하고, 전체적으로는 의존재원 비중이 75%에 이르는 고도의 이전재원 의존형 재정구조로 볼 수 있고, 비정상적으로 키워온 부채는 9기 군정 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임실군은 높은 의존재원 구조와 취약한 자체수입 기반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운영의 중심을 외형적 예산확대에서 재정구조 개선으로 전환해야 함.

이를 위해 첫째, 관광·농업·공공자산을 연계한 세외수입 확충과 체납관리 강화 등 자체수입 기반을 보완하고,

둘째, 국·도비 확보는 총액 확대보다 군비 부담과 재정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선별 확보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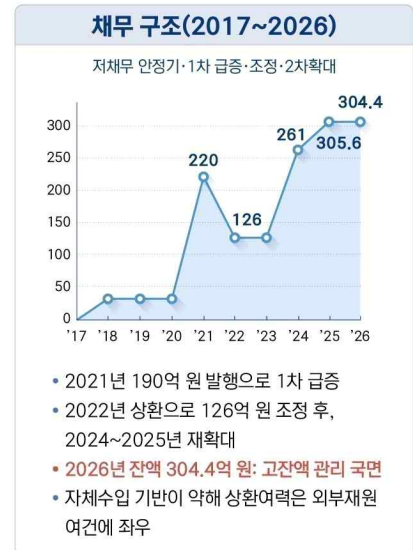
셋째, 분산형 투자와 저성과 사업을 정비하고, 복지·정주·지역산업 등 군정 핵심 과제 중심으로 재정을 재배분해야 함.

궁극적으로는 재정투자의 기준을 "사업 수"가 아니라 "재정지속가능성과 지역환류 효과"에 두는 방향으로 행정운영체계를 재설계해야 함.

3-1. 최근 10년 재정 운영 흐름

임실군 재정구조 종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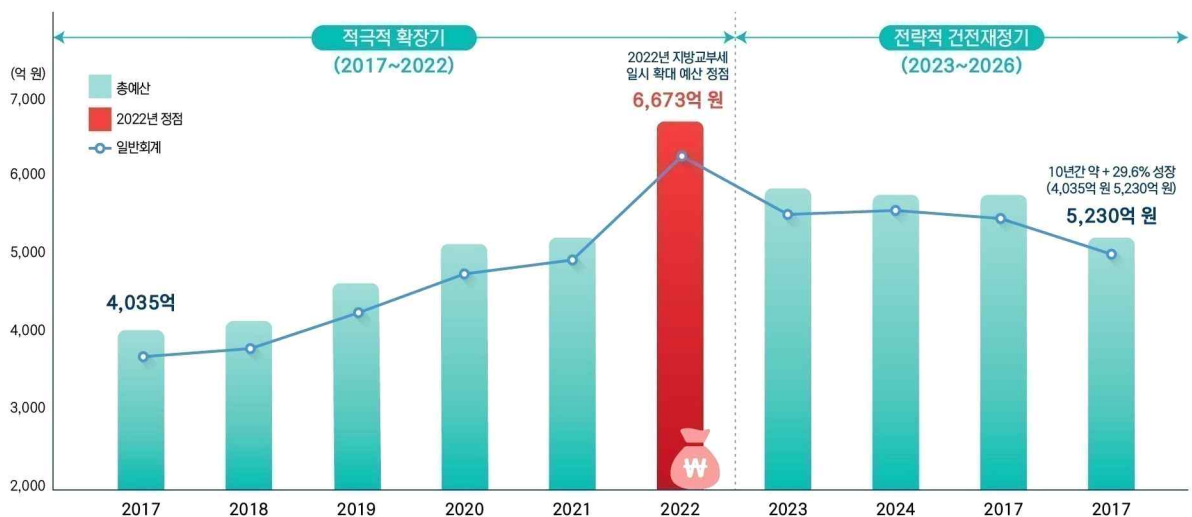
핵심 진단 자체수입은 취약(7.8%)하고 의존재원은 높으며(75%), 세출은 복지·농림 중심으로 경직되고, 채무는 2021년 이후 300억 원대로 상승



종합 결론 임실군 재정은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고, 복지·농림 중심 지출구조와 누적 SOC 부담, 확대된 채무가 결합된 구조이므로 향후에는 자체 수입 보완·선택과 집중·중장기 감채전략이 병행되어야 함

1) 예산 규모 변화(2017~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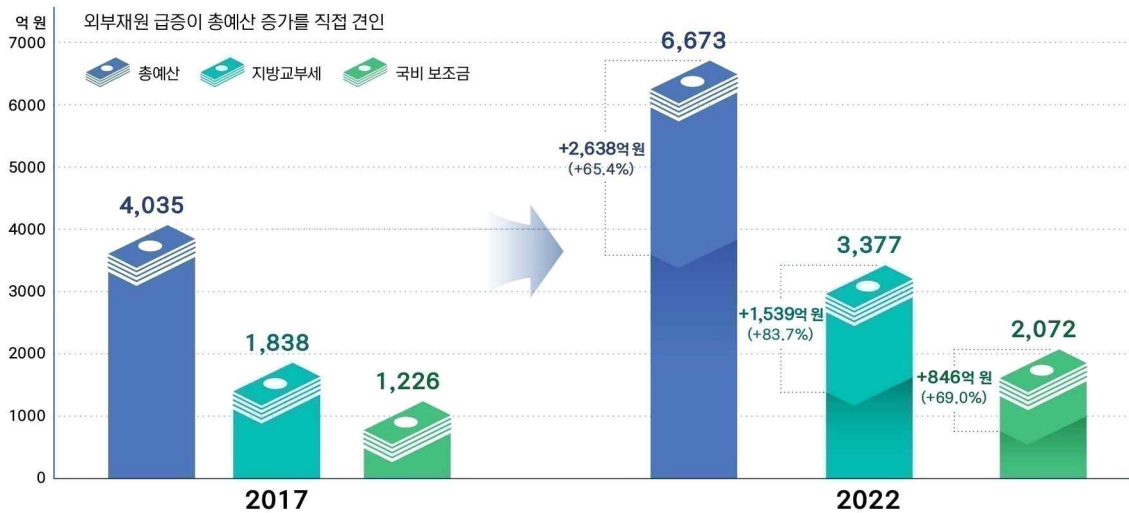
임실군 예산 규모 변화(2017~2026)



- 최근 10년 동안 임실군 예산 4,035억 원(2017) → 5,230억 원(2026)으로 약 30% 성장함.
- 2022년 지방교부세의 일시적 확대(6,243억 원 → 6,673억 원)가 예산 증가를 견인했으나, 이후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함.

2) 2017~2022년 재정 세부 특징

임실군 재정확장(2017~2022)의 핵심 구조



※해석: 지방세·세외수입이 아닌 지방교부세·국비보조금 증가가 예산 확대의 주된 원인이었음

※배경: 농촌 SOC 확충, 하천재해예방, 상하수도 현대화, 관광·정주 인프라 투자 집중

○ 외부재원의 급격한 유입이 임실군 재정확장의 직접적 원인이 됨.

– 지방교부세: 1,838억 원(2017) → 3,377억 원(2022), +1,539억 원 증가(83.7%)

– 국비 보조금: 1,226억 원(2017) → 2,072억 원(2022), +846억 원 증가(69%)

○ 이는 임실군의 자체 역량보다 중앙정부의 농촌 SOC 확충 재해예방 등 정책기조 강화 때문임.

– 풍수해위험지구 정비, 하천재해예방, 상하수도 현대화 등 필수 국비 사업 집중 확장

○ 2017~2022년은 관광·정주 분야의 대규모 SOC 사업이 집중된 시기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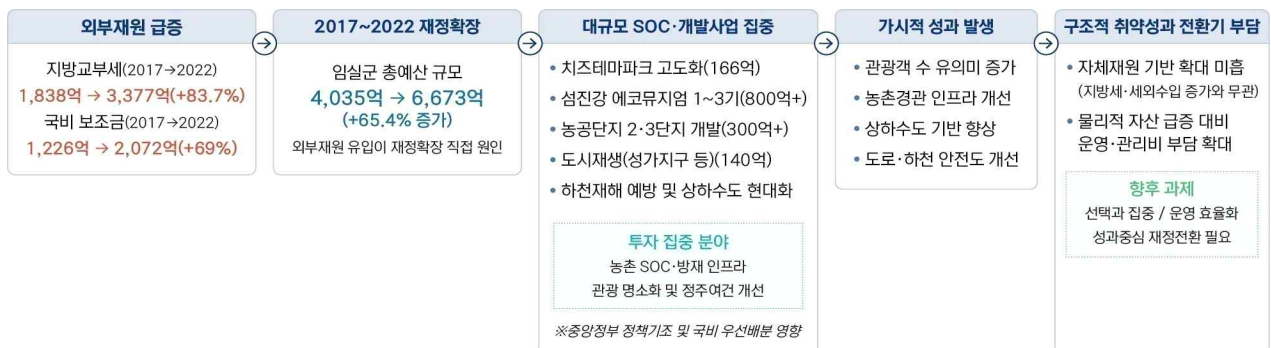
– 치즈테마파크 고도화(166.85억 원), 삼진강 에코뮤지엄 1~3기(800억 원), 임실읍 상가지구 도시재생(140억 원) 등

○ 이 시기 임실군의 총예산은 4,035억 원(2017) → 6,673억 원(2022)로 65.4% 증가함.

○ 이러한 예산 증가는 지방세·세외수입 증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

○ 정책 파급효과는 관광객 수 증가, 농촌 인프라·도로·하천 안전도 개선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군정은 성과보다 '물리적 자산(시설)'만 빠르게 증가했고, 그로 인한 운영비·관리비 증가가 전환기의 큰 부담으로 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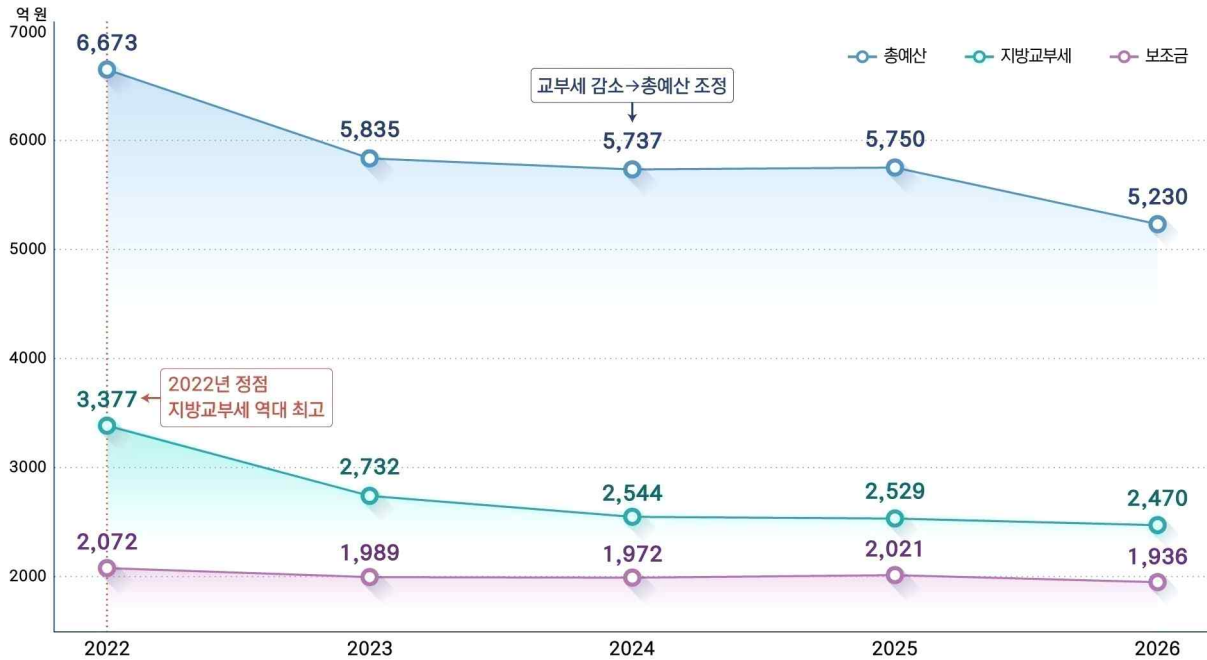


3) 2023~2026년 재정 세부 특징

○ 2017~2022년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확대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확장기였다면, 2023~2026년은 그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재정건전성과 우선순위 조정이 핵심이 되는 전환기임.

– 지방교부세 1,838억 원(2017) → 3,377억 원(2022), +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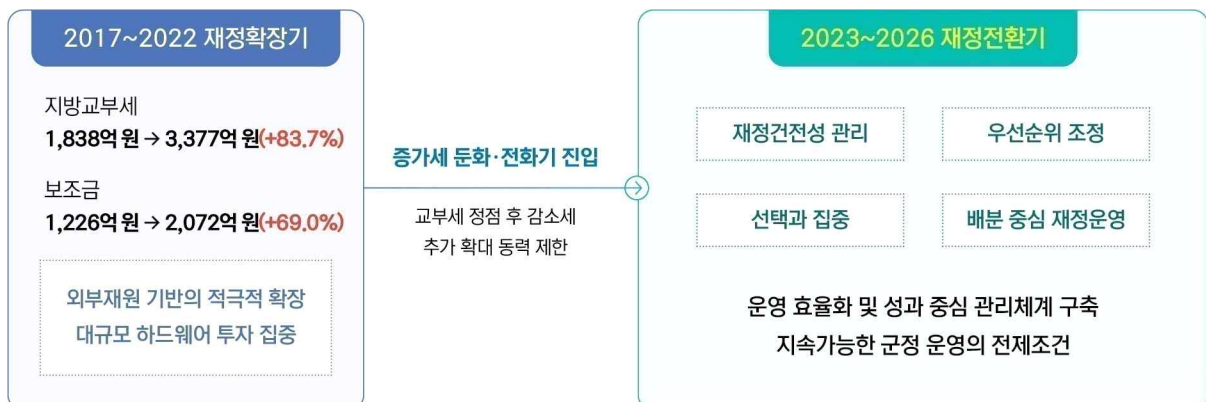
– 보조금 1,226억 원(2017) → 2,072억 원(2022), +69.0%



○ 특히 지방교부세는 2022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총 예산 축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보조금은 2,000억 원 안팎을 유지하며 외형상 안정성을 보였으나, 추가적 재정 확대의 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결국 전환기의 본질은 "더 가져오는 재정"을 넘어 "줄어든 여건 속에서 그냥 배분하는 정도의 아쉬운 재정"에 있음.



3-2. 세입 구조 분석

- 세입 구조는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전체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적 농촌지역형 재정구조임.
- 자체수입(세입 중 지방세+세외수입)이 400억 원대에 머물러 재정구조의 자율성은 제한적임.
-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변동이 군정 전체 재정운영의 방향을 좌우하는 구조적 특성을 유지함.



- 2026년 기준 세입 구성은 아래와 같음.

－ 지방세 252억 원(전체의 4.8%), 세외수입 239억 원(4.5%)

* 자체수입 합계 408억 원(전체 세입 5,230억 원 대비 7.8%에 불과)

－ 지방교부세 2,470억 원(47.2%), 국고보조금 1,936억 원(37%), 조정교부금 120억 원(2.3%)

* 모든 농촌 군 단위 중에서도 '의존재원 비율 최상위 그룹'에 해당



<전국 군 단위 vs 전북 군 단위 vs 임실군 (비교표)>

항목	전국 군 단위 평균	전북 군 단위 평균	임실군 2026	임실군 수준
지방세 비중	7~10%	5~8%	4.8%	매우 낮음
자체수입 비중	12~15%	8~12%	7.8%	가장 취약
교부세 비중	50~60%	55~65%	47%	상대적 낮음(2026년 기준)
보조금 비중	30~35%	35~40%	37%	전북 평균과 유사
의존재원 비중	65~70%	60~70%	75%	전국 상위권(높음)

3-3. 세출 구조 분석

○ 세출 구조는 최근 10년간 다음 2개 영역이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함.

－ ‘26년 기준 사회복지(1,063억 원), 농림해양수산(934억 원)



1) 세출 구조

○ 고령인구, 재가돌봄·요양·치매·장애인 지원 수요, 기초연금·수당 연계 지출, 기초생활 보장·아동·보육 분야 증가(초고령화 군 단위 대표 특징)로 사회복지비의 구조적 증가.

* 전국 군 단위 사회복지비 증가 수준과 비교하면, 전국 증가율 평균은 약 40~50%인 반면 임실군 증가율은 약 95%로 전국 최고 수준임

2)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고비중 구조

○ 2026년 934억 원(17.8%)으로 전국 군 평균(18~22%) 내에서 안정적이나, 문제는 투자 대비 소득·부가가치 창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임.

－ 즉, "투자 많음 → 소득 증가로 연결되지 않음"이라는 구조적 문제(장수군의 5.3프로젝트처럼 소득목표형 프로젝트 필요)

3) 관광·문화 분야의 추세 변화

○ 2018~2022 확장 → 2023 이후 변화 없고, 임실의 관광지·콘텐츠는 전국적 인지도 있으나 체류형 소비구조는 약함.(관광지-상권-숙박-체험 연계 부족)

○ 따라서 앞서 제시된 “임실군 1111관광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환경·국토개발

○ 10년간 지속적 증가, SOC 유지관리비 증가가 장기적 압박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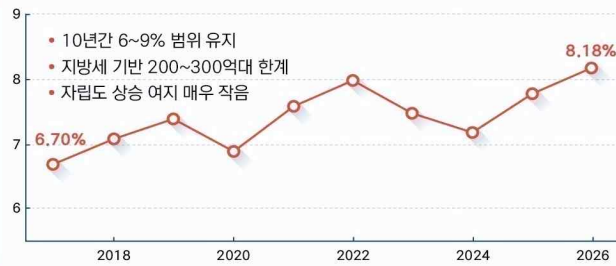
○ 사업 유형별 비중 세분화하면, 하천·풍수해: 35%, 관광·문화·경관: 23%, 산업·농공단지: 15%, 정주·주택·복합센터: 17%, 환경·상하수도: 10%임.

○ SOC 중심 사업 비중 매우 높으나 '지역경제 환류형'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음.(공약 중 공공발주 의무소비제 검토)

3-4.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채무·기금 분석

임실군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채무·기금 분석

재정자립도: 구조적 저수준 고착



재정자주도: 평균적 안정 수준

2026년 재정자주도



- 의존재원 규모는 크지만 교부세·조정교부금에 비교적 안정적
- 자율 통제력은 완전 취약 수준은 아니며 평균적 수준
- 다만 자체재원 기반 확대 없이는 구조적 개선 한계

채무: 저채무 안정기→2차례 계단식 확대



재정자주도: 평균적 안정 수준

재정변동 대응력 확대

- 고향사랑기금의 빠른 확대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35억 조성
- 재정안정·복지·지역활력 대응의 보완장치



종합 진단

임실군은 재정자립도는 낮고 재정자주도는 평균적 수준에 머무르며, 채무는 2021년 이후 구조적으로 확대됨
반면 기금은 재정변동 대응능력을 보완하는 안전판으로 기능하고 있어, 향후에는 차입관리와 기금운용을 결합한 재정안정 전략이 필요함

1) 재정자립도(2026년 8.18%)

- 10년간 6~9% 사이를 유지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지방세 기반이 200~300억 원대에 제한되어 자립도 상승 여지는 매우 작음.

2) 재정자주도(2026년 60.08%)

- 의존재원이 크지만 교부세·조정교부금이 안정적 수준 유지하여 자율 통제력 양호.

3) 채무

- '18년 30억 원 발행 이후 '20년까지 30억 원 수준의 안정적 잔액을 유지.
- '21년 190억 원의 대규모 발행으로 채무잔액이 220억 원으로 급증하였고, '22년에는 134억 원 상환을 통해 잔액이 126억 원으로 조정되었음.
- '24년 140억 원, '25년 49억 원의 추가 발행으로 '26년 현재 채무잔액은 304.4억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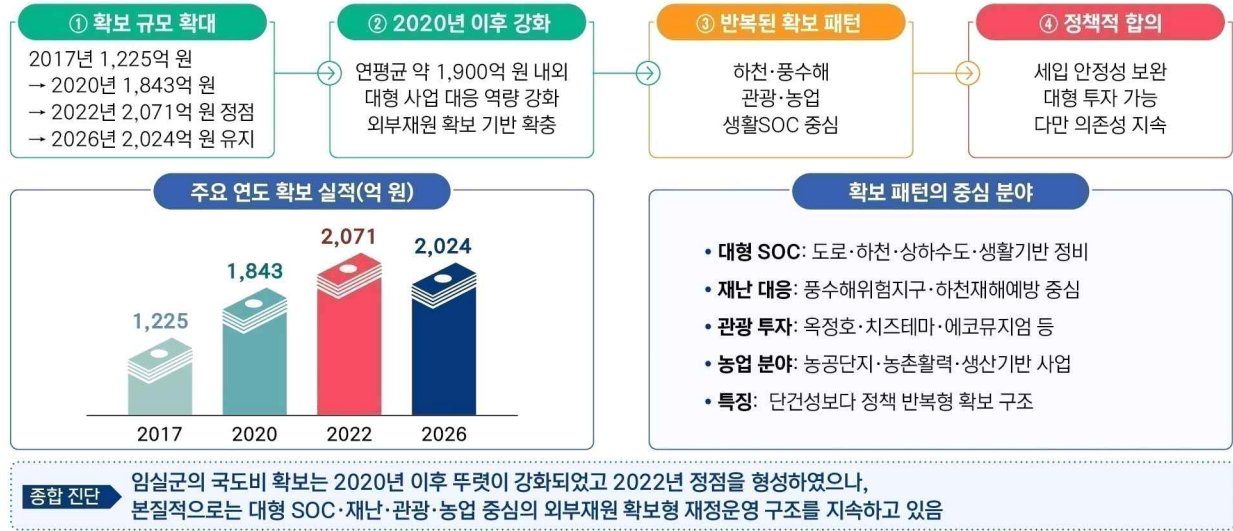
4) 기금 조성

- 고향사랑기금의(2025년 약 21억 원) 빠른 확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억 원(2026년) 등, 재정변동 대응 능력 확대.
- 기금은 재정안정과 복지·지역활력 대응의 보완적 안전판 역할.

3-5. 국·도비 확보 실적(2017~2026)

임실군 국도비 확보 구조와 변화(2017~2026)

국도비는 2020년 이후 확보력이 강화되었으며, 재난·SOC·관광·농업 분야 중심 패턴이 반복됨



3-6. 대형 투자사업 현황(2017~2026)

○ 총 60여 개 이상의 대형 투자사업(100억 원 이상)이 진행,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음.

- 관광·치즈·에코뮤지엄
- 농공단지·도시재생
- 하천재해 예방 및 기반시설
-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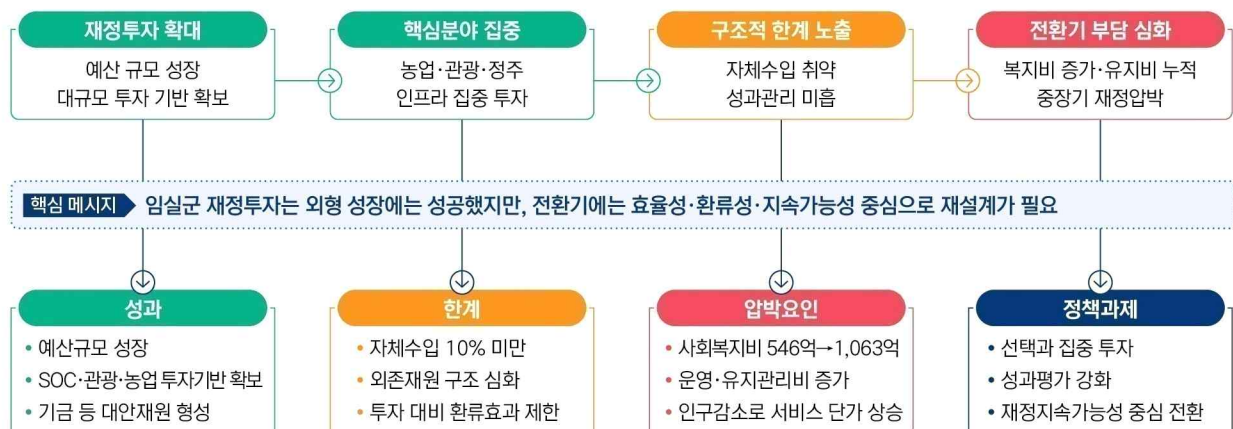
○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2017~2022년: SOC·관광·농공단지 중심의 대규모 사업 집중
- 2023~2026년: 생활 SOC·정주여건 정비 및 관광 고도화 중심

3-7.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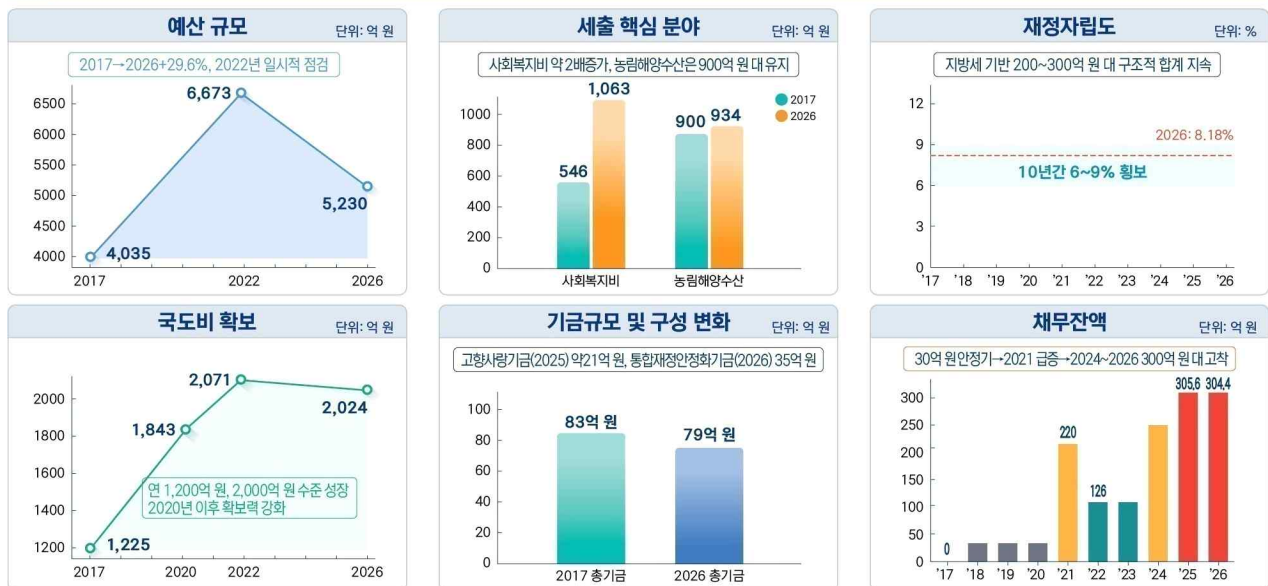
확장기 투자 성과가 전환기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



3-8. 주요 정책지표 변화(2017~2026)

- 예산규모: 4,035억 원 → 5,230억 원
- 사회복지비 비중: 546억 원 → 1,063억 원(2배 증가)
- 농림해양수산 비중: 900억 원대 유지
- 재정자립도: 6~9% 수준의 회복
- 국·도비 확보: 연 1,200억 원 → 2,000억 원 수준으로 성장
- 기금규모: 83억 원(2017) → 79억 원(2026)
 - 중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고향사랑기금 등 구성 변화 영향
- 채무: 30억 원 수준에서 300억 원대

임실군 주요 정책지표 변화(2017~2026)



종합 진단 ▶ 예산과 국·도비는 확대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복지지출과 채무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즉, 임실군 재정은 외형 성장과 내부 자립성의 괴리가 심화된 구조로 평가됨

3-9. 군정 운영 방향에 주는 시사점

- 임실군 재정은 성장 잠재력과 구조적 제약이 공존하는 이중 구조임.
- 예산은 크게 증가했으나, 고령화와 복지 확대에 재정 탄력성은 감소하였음.
- 확장기에서 안정·관리기로 전환된 지금, 민선 제9기 군정은 다음 전략이 필요함.

- | | |
|------------------------------|---------------------------------|
| ✓ 선택과 집중 기반의 재정 운용 | ✓ 투자사업의 실질효과·성과관리 체계 강화 |
| ✓ 생활 SOC와 정주여건 중심의 체감형 투자 확대 | ✓ 농업관광정주복지의 통합 구도 속 재정 우선순위 재설계 |
| ✓ 국·도비 확보의 체계적 기획과 장기 로드맵 구축 | ✓ 고령화인구감소에 대응한 구조조정형 재정정책 필요 |
| ✓ "임실형 재정개혁 프로젝트" 작동 필요 | |

임실형 재정혁신(안)



1) 혁신의 배경

- 초고령화 → 복지지출 구조적 증가
- SOC 확장기 종료 → 유지관리비 증가
- 인구유출 → 공공서비스 공급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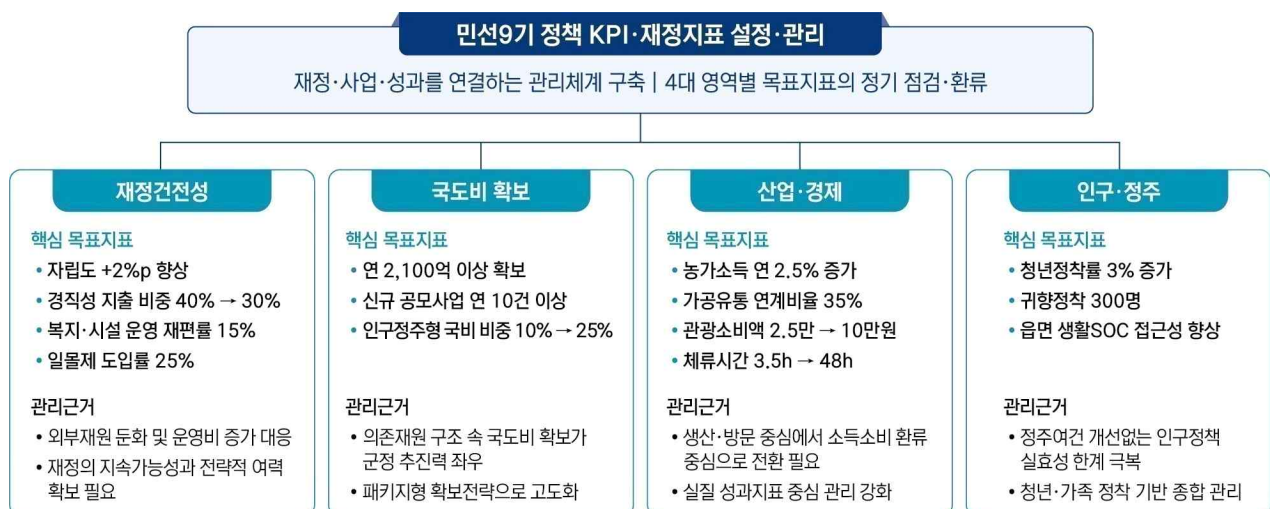
2) 혁신의 방향(3대 축)

- 구조조정 재정
 - 경직성 지출 구조 진단 및 단계적 축소, 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 운영비 절감 계획 수립, 읍·면 생활권 단위 투자 혁신, 저효율사업 재편 및 일몰제 확대, 중기지출구조조정
- 환류형 재정
 - 농업→가공→체험→관광→상권의 일원화 모델, 관광 소비의 지역환류를 제고, 귀향·정착이 산업·일자리와 연결되는 모델, 농업·관광·정주 정책을 통합한 예산 프레임 구축
- 전략적 재정
 - 국·도비 패키지 로드맵 상시 운영, 핵심 20대 전략사업 중심 집중투자, KPI 기반 성과예산체계, 중기재정계획 기반 예산편성, 국비 대응 조직 구축

3-10. 소결론: 정책KPI 및 재정지표 설정·관리

- 임실군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선 제9기 한득수 군수는 ‘정책 KPI·재정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 정책 KPI·재정지표는 1) 재정건전성, 2) 국·도비 확보, 3) 산업·경제, 4) 인구·정주 부문으로 나누어 관리하여야 함

분야	관리지표	목표
재정건전성	재정자립도	2%p 향상
	경직성 지출 비중	40% → 35%
	복지·시설 운영 재편률	15%
	일몰제 도입률	25%
국·도비 확보	국·도비 확보액	연 2,100억 원 이상
	신규 공모사업	연 10건 이상
	인구·정주형 국비 비중	10% → 25%
산업·경제	농가소득	연 2.5% 증가
	가공·유통 연계비율	35%
	관광객 1인당 소비액	2.5만 원 → 10만 원
인구·정주	관광 체류시간	3.5시간 → 48시간
	청년정착률	3% 증가
	귀향 정착인구	300명
	읍·면 생활 SOC 접근성	향상



3-11. 가용재원 분석

- 임실군의 2026년 가용재원 분석은 단순히 추가로 활용 가능한 예산 규모를 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서 살펴본 임실군 재정구조의 특성이 실제 예산운용에 어떠한 제약으로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자 함.
- 기존 재정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임실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기반이 취약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전형적인 농촌형 재정구조를 갖고 있음.
- 2026년 기준 자체수입 비중은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체 재정의 상당부분이 외부 재원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적 특성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구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정확장기에는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었음. 당시 임실군은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의 큰 폭 증가를 바탕으로 예산 규모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었고, 관광·농업·정주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23년 이후에는 교부세 증가세가 둔화되고 총예산 규모도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재정운용의 중심축이 '확장'에서 '건전성 관리와 우선순위 조정'으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 이번 가용재원 분석은 바로 이러한 전환기의 실질적 재정여건을 검토하고자 함.
- 2026년 세입추계상 가용재원은 총 470억 1,200만 원 수준으로 제시되었음.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53억 1,900만 원, 보통교부세 239억 400만 원, 부동산교부세 57억 8,900만 원, 전환사업 보전분 20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표면적으로 보면 일정 규모의 추가 재정여력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곧바로 신규정책 재원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우선 이 재원 자체가 지역의 자체적인 세수 확충 결과라기보다, 결산상 잉여금과 교부세 증액 등 외부재원 및 회계상 여유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분명함.
- 이는 기존 분석에서 지적한 '자체재원 기반 취약, 이전재원 의존 심화'라는 임실군 재정의 기본 성격과 정확히 맞닿아 있음.
- 더욱 중요한 것은 세출 측면에서 이미 반영이 필요한 필요경비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임.
- 2026년 기준 필요경비는 총 337억 7,000만 원으로 추계되며, 이 가운데 국·도비 매칭사업의 군비 미부담금이 212억 2,800만 원, 자체사업 군비 미부담금이 125억 4,2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임실군이 확보한 외부재원을 실제 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 군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함.

- 특히 국·도비 확보 실적이 높아질수록 지방비 매칭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는, 기존 재정분석에서 지적했던 '확보 실적과 재정자율성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줌.
- 이러한 세입·세출 구조를 종합하면, 2026년 실제로 현안사업이나 공약사업 등에 활용 가능한 실 가용재원은 약 132억 4,200만 원 수준으로 축소됨.
- 즉, 총가용재원 470억 원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모두 정책재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필수 반영경비를 우선 제외하면 실제 신규사업 추진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임.
- 이는 앞서 재정구조 분석에서 확인된 경직성 확대, 의존재원 중심 구조, 채무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단지 구조적 진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산편성 단계에서 군정의 선택 폭을 좁히는 현실적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이 같은 상황은 기존 세출구조 분석과도 긴밀히 연결됨. 임실군은 최근 10년간 사회복지비가 크게 증가하여 재정경직성이 강화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역시 높은 비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여기에 과거 확장기에 집중 투자한 관광·정주·SOC 사업들의 유지관리 부담이 누적되면서, 재정의 고정지출 성격이 점차 강해지고 있음.
- 따라서 가용재원 규모가 일정 수준 확보되더라도, 이를 자유롭게 재배분할 수 있는 폭은 크지 않음.
- 다시 말해, 재정운용의 핵심은 '얼마를 더 확보했는가'보다 '이미 정해진 지출 구조 속에서 얼마만큼 재량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존 채무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러한 진단은 더욱 분명해짐. 임실군은 2017년 사실상 무채무 상태에서 출발했으나, 2021년 이후 지방채 발행이 크게 확대되면서 2026년 현재 채무잔액은 304억 4,000만 원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채무는 이번 가용재원 산정표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환 부담과 재정운용의 유연성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재정구조의 기본 전제	2026년 총가용재원	필수 반영 필요경비	실제 활용 가능한 실가용재원	재정운용의 제약
• 자체수입 기반 취약(10% 미만) • 이전재원(교부세·보조금) 의존 • 2023년 이후 재정전환기 진입 • 확장재정기 구조적 취약성 은폐 [진단] 양적 확보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자율성과 전략적 배분 여력	470억 1,200만원 • 순세계잉여금: 153.19억 원 • 보통교부세: 239.04억 원 • 부동산교부세: 57.89억 원 • 전환사업 보전: 20.00억 원 ※ 외부재원 및 회계상 여유분 중심 ※ 자체 세수 확충 결과와는 거리	337억 7,000만원 • 국·도비 매칭 군비 미부담금 : 212억 2,800만원 • 자체사업 군비 미부담금 : 125억 4,200만원 확보 실적과 재정자율성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음	132.42억 원 • 총가용재원 전체를 정책재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음 • 현안공약사업 추진 여력 제한적	• 복지비 증대 → 경직성 확대 • 농림수산 구조적 비중 유지 • 관광·정주 유지관리비 누적 • 채무잔액: 304.4억 원(2026) (중장기 재정 유연성 제약) [결론] 추가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재량적 배분 가능폭의 확보

- 결국 임실군 재정은 세입 측면에서는 외부재원 의존성이 높고, 세출 측면에서는 복지·농업·기존 투자사업 유지비 부담이 크며, 재무 측면에서는 채무잔액도 확대된 상황 속에서 제한적 재량재원을 운용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2026년 가용재원 분석은 임실군 재정이 겉보기보다 훨씬 제약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자료로 해석할 수 있음.

구분	이전 재정분석	이번 가용재원 분석	종합 해석
재정구조	자체수입 취약, 의존재원 75%	가용재원도 교부세·잉여금 중심	구조적으로 외부재원 의존
재정국면	확장기, 전환기	실 가용재원 132억 원으로 제한	확장보다 배분 중심 국면
국·도비	확보력은 강화	매칭 미부담금 212억 원 발생	확보 실적이 곧 재정여유는 아님
세출구조	복지·농림 중심, 경직성 확대	필요경비 337억 원 선차감	신규정책 재량공간 축소
채 무	2026년 304.4억 원	직접 반영은 없지만 부담 배경 존재	중장기 유연성 제약
정책의미	체질개선 필요	2026년 선택과 집중 불가피	단계적 공약이행 필요

- 즉, 표면상 가용재원 규모만으로는 재정여력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으며, 실제 정책판단의 기준은 반드시 '실 가용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는 곧 민선 제9기 군정이 재정운용에 있어 대규모 신규사업의 동시다발적 추진보다는, 우선순위에 기반한 단계적 공약 이행과 전략적 자원배분 방식을 취해야 함을 의미함.
- 향후 재정운용 방향도 이러한 현실 인식 위에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의존재원 확보 전략은 유지하되, 단순한 사업 건수 확대가 아니라 군비 부담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선별적 확보 전략으로 전환
- 둘째, 자체수입 기반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더라도, 관광수입의 세외수입화, 공공시설 사용료 체계 정비, 공유재산 수익화, 지역특화산업의 부가가치 확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충
- 셋째, 세출 측면에서는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저효율 사업의 재편, 유지관리비 절감, 투자 우선순위의 명확화 등을 통해 경직성을 완화하는 노력 병행
- 넷째, 공약사업은 2026년 추경에서 착수 가능한 사업과 2027년 본예산에 본격 반영할 사업을 구분하여 연차별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따라서 민선 제9기 재정전략의 핵심은 총재정 규모의 단순 확대가 아니라, 제한된 실 가용재원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구조개선, 그리고 단계적 공약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데 두어야 함.

제5장 조직 진단

제5장 조직 진단

민선 제9기 임실군정은 지방소멸 대응, 초고령사회 대응, 농업·관광 구조전환, 생활서비스 재편, 재정건전성 확보, 공약이행의 현실화라는 복합 과제를 동시에 안고 출범함.

따라서 조직은 단순한 행정 수행체계가 아니라, 한정된 재정과 인력 안에서 공약과 핵심정책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실행체계여야 함.

민선9기 출범과 과제	조직 확대와 누적 구조	현재 조직의 구조적 특징	핵심 문제 진단	민선9기 조직개편 방향
- 지방소멸/초고령사회 대응 - 농업·관광 구조전환 - 생활 서비스 재편 - 재정건전성 확보 - 공약이행의 현실화 조직은 성과를 창출하는 실행체계로 작동해야 함	기능 통합 < 기능 누적 19년 : 2국 2실 18과 142팀 22년 : 3국 1실 22과 152팀 25년 : 3국 2실 17과 95팀(본청) - 정원 689~690명 수준 업무 발생 시 '더하는' 구조, '줄이거나 통합'하는 원리 약함	- 주민 37명당 공무원 1명(고밀도) - 실·국 수 3개(평균 이상) - 상위직 비율 6.7%(높음) - 인건비 비율 13.2%(높음) - 본청 과 평균정원 19.5명 - 과소팀 비율 11.4%(정비 필요) 두터운 관리구조와 영세한 실무단위의 병존	절대적 인력 부족보다 "기능 분산" 문제가 핵심 - 기구는 세분화, 실무단위는 과소 - 인건비 부담 지속 확대 - 공약과 조직설계 간 불일치 - TF의 무분별한 상시 기능화 재정계약 속 선택과 집중, 조직 재배열 요구 증대	증원보다 "구조 재배열" - 핵심 정책축 중심 통합 (인구·정주·복지·농업·관광) - 유사기능 대과·대팀화 - 과소팀 정비 및 실무 인력 보강 - 공약군 단위 조정체계 구축 - TF 일몰제·정규화 기준 확립 통합·조정·재배열을 통한 강력한 실행체계 구축

그러나 최근 임실군 조직은 국가정책 변화와 지역현안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서·팀·TF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기능 통합보다 기능 누적 방식으로 대응한 측면이 큼.

2019년 이후 조직은 2국 2실 18과 142팀에서 2022년 3국 1실 22과 152팀(TF 6) 수준까지 확대되었고, 2025년에는 본청 기준 3국 2실 1담당관 17과 95팀, 공무원 정원 689~690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조직정보 공개 지표를 보면 임실군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7명으로 비교군보다 낮아 주민 대비 인력밀도는 높은 편이며, 본청 현장공무원 비율 57.0%, 읍·면 정원 비율 23.2%로 현장배치 수준도 크게 낮지 않음.

반면 실·국 수는 3개로 평균보다 많고, 과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은 6.7%로 평균보다 높으며,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13.2%로 비교군보다 높게 나타남.

최근 조직진단에서도 과단위 설치 수는 2023년 18개, 2025년 19개로 많았고, 본청 과단위 평균정원은 각각 19.8명, 19.5명으로 낮았으며, 과소팀 비율은 13.1%, 11.4%로 높게 나타남.

이는 임실군 조직이 단순히 사람이 적은 조직이 아니라, 기구는 세분화되어 있으나 실질 운영단위는 작은 구조, 다시 말해 두터운 관리구조와 영세한 실무단위가 병존하는 구조임을 의미함.

또한 인건비 비율과 무기계약직 비율이 높다는 점은, 향후 조직운영이 재정제약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줌.

특히 제3장 재정진단에서 공약사업의 전면 이행이 실가용재원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고 분석된 점을 고려하면, 공약은 예산사업일 뿐 아니라 조직사업이라는 점에서 조직 역시 선택과 집종의 원칙 아래 재설계되어야 함.

실제로 2019년 54명, 2020년 40명, 2021년 39명의 증원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후에도 다수 부서가 기능 보강과 전담조직 신설을 요청하였으나 감원 요구는 거의 없었음.

이는 현재 조직운영 방식이 업무가 생길 때마다 더하는 구조로 작동해 왔으며, 줄이거나 통합하는 원리는 상대적으로 약했음을 보여줌.

TF 운영 역시 인구정책, 관광지 운영, 개발행위 등 상시화된 기능을 임시조직으로 관리해 온 측면이 있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면 향후 정규화 또는 종료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종합하면 임실군 조직의 문제는 절대적 인력 부족보다 기능분산, 과소팀 구조, 상위직 비중, 인건비 부담, 공약이행과 조직설계 간 불일치에 더 가까움.

따라서 민선 제9기 조직개편의 핵심은 증원 중심 개편이 아니라, 인구·정주·복지·농업·관광·재난 대응 등 핵심 정책축 중심으로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과소팀을 정비하며, 공약군 단위 조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음.

결국 임실군 조직의 과제는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현재의 조직과 인력을 어떤 구조로 재배열해야 공약과 현안을 지속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있음.

4-1. 진단의 배경과 문제의식

- 민선 제9기 임실군정은 단순한 행정 연속선상에서 출범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 초고령사회 대응, 농업·관광 구조전환, 생활서비스 재편, 재정건전성 확보, 공약이행의 현실화라는 복합 과제를 동시에 안고 출범하고 있음.
- 이러한 여건에서 조직은 단순한 행정 수행체계가 아니라, 공약과 핵심정책을 실제로 집행하고 성과로 연결하는 실행 플랫폼이어야 함.
-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직운영은 국가정책 변화와 지역현안 증가에 따라 기능을 추가·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조직은 확대되었지만 기능 간 연결성, 우선순위 중심의 자원배분, 성과 중심 집행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재정구조
 - 자체재원 기반 제한적

- 복지지출과 경직성 경비는 확대
- 공약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경우 실가용재원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 높음
- 따라서 민선 제9기 조직진단은 "인력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부족한가"를 묻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한정된 재정과 행정역량 안에서 어떤 조직이 가장 높은 실행력을 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 다시 말해, 제4장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음.
 - 현재의 임실군 조직은 민선 제9기 공약과 중점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가?
 - 공약 이행에 필요한 기능은 어디에 있고, 어디가 비효율적으로 분산되어 있는가?
 -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계속 증원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가?
 - 재정 제약 하에서 조직개편의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장은 조직의 양적 규모뿐 아니라, 기구 구조, 직급 구조, 현장배치, 인건비 부담, 기능 중복, TF 운영, 공약이행 적합성까지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함.

4-2. 최근 조직 변화의 흐름과 구조적 특징

1) 조직은 지속적으로 확대·분화되어 왔음

- 최근 임실군 조직은 국가정책 대응과 지역현안 추진을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2022년 조직진단 자료에 따르면 조직 규모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음.

연도	조직 현황	정원	주요 변화
2019	2국 2실 18과 1사업소 1읍 11면 142팀	-	기존 체계 운영
2020	3국 1담당관 21과 1읍 11면 143팀	-	복지환경국 신설, 기능 분화 확대
2021	3국 1실 22과 1읍 11면 148팀	-	옥정호힐링과 신설, 관광 운영기능 보강
2022	3국 1실 22과 1읍 11면 152팀(TF 6)	684명	TF 확대, 현안대응형 조직 강화
2023	본청 3국 1실 18과 87팀	690명	정량진단 본격화, 본청 조직 효율성 점검
2025	본청 3국 2실 1담당관 17과 95팀	690명	2실 체계 운영, 팀 확대 지속
2025.12말	정원 기준	689명	임실군 조직정보 공개 기준 정원 공표

- 이를 종합하면 최근 임실군 조직은 총정원 자체를 급격히 늘렸다고보다, 부서 분화, 팀 신설, TF 운영, 기능 세분화를 통해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음.
- 임실군 조직은 최근 수년간 총정원의 급격한 확대보다는 기구 분화, 팀 확대, TF 운영을 통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외형 확대에 비해 기능 통합과 집행 효율화가 충분히 병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민선 제9기에는 구조적 재정비가 요구됨.

2) 그러나 확대는 곧바로 효율을 의미하지 않음

- 단순 필요에 따른 조직 확대는 단기적으로 현안 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동반할 수 있음.
 - 기구 수 증가에 따른 관리 비용 상승
 - 부서 간 경계 확대와 협의 부담 증가
 - 유사기능 분산
 - 소규모 팀 다수 운영
 - 성과관리보다 사업관리 중심 조직 고착
- 실제 조직진단 결과는 임실군이 바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줌.
- 즉, 임실군은 "조직이 부족해서 못하는 상태"라기보다, 조직은 늘어났지만 그 증가가 공약 이행과 군정 성과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정렬되지 못한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함.

4-3. 정량지표로 본 조직의 실체

정량지표로 본 조직의 실체		2023~2025 조직진단 핵심지표	
작은 군에 비해 두터운 조직, 그러나 높은 실행효율은 미확인		구분 / 변화 추이	
공무원 정원 689명 (유사군 평균 703명/589명 대비 중간)	1인당 주민수 37명 (군평균 56/40명 대비 인력밀도 높음)	과단위 설치 수	18개 → 19개 유사군 대비 많은 편
상위직(과장급+) 비율 6.7% (군평균 6.1% 대비 높음)	본청 현장직 비율 57.0% (평균 52.6% 대비 높은 편)	과단위 평균정원	19.8명 → 19.5명 기구 세분화로 실무단위 영세
재정대비 인건비 비율 13.2% (유사군 평균 10.6% 대비 높음)	실·국·본부 수 3개 (유사군 2개 대비 상부 비대)	과소팀(3인 이하) 비율	13.1% → 11.4% 과소팀 구조 지속
		인건비 비율(결산대비)	12.4% → 12.7% 재정 부담 지속 증가
		무기계약직 비율	40.6% → 43.7% 인력운영 이중구조 심화
		재정자주도 대비 인건비	26.4% → 24.2% 자체재원 대비 부담 매우 높음
		총정원 증감률	0.4% → 0.0% 정원 자체는 최근 급팽창 없음

○ '작은 군'에 비해 두터운 조직, 그러나 실행효율이 높은지는 확인되지 않음.

<주요 조직운영 지표 비교>

지표	임실군	3만~5만 미만 군평균	3만 미만 군평균	진단
공무원 정원	689명	703명	589명	절대규모는 중간 수준
공무원 1인당 주민수	37명	56명	40명	주민 대비 인력밀도 높음
과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	6.7%	6.1%	6.1%	상위직 비율 다소 높음
본청 현장공무원 비율	57.0%	52.6%	54.1%	본청 현장배치 비율 높음
읍·면 정원 비율	23.2%	23.1%	21.2%	읍·면 비중은 평균 수준 이상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13.2%	10.6%	12.4%	인건비 부담 높음
실·국·본부 수	3	2	2	상부 관리체계 두터움

- 임실군은 주민 대비 인력규모나 현장배치 비율만 보면 결코 취약한 조직이 아님
- 반면 상위직 비율, 실·국 수, 인건비 비율은 평균보다 높아, 조직문제의 핵심이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니라 배치 구조와 운영 효율성에 있음을 보여줌

<2023~2025 조직진단 핵심지표 비교>

구분	2023년	2025년	해석
과단위 설치 수	18개	19개	유사 지자체 대비 많은 편
본청 과단위 평균정원	19.8명	19.5명	기구 수 대비 평균정원 낮음
과소팀 비율	13.1%	11.4%	과소팀 구조 지속
총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	12.4%	12.7%	재정대비 인건비 부담 지속
재정자주도 대비 인건비 비율	26.4%	24.2%	재정여건 대비 부담 높음
무기계약직 비율	40.6%	43.7%	인력운영 이중구조 심화
상위직 비율	6.3%	6.4%	평균보다 소폭 높음
총정원 증감률	0.4%	0.0%	정원 자체는 급팽창 아님

- 최근 조직진단 결과는 임실군이 정원을 급격히 늘리는 방식보다, 기존 정원 범위 안에서 기구와 기능을 세분화해 대응해 왔음을 보여줌
- 그러나 과단위 기구 확대, 낮은 평균정원, 높은 과소팀 비율, 높은 인건비·무기계약직 비율은 조직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개편 필요성을 분명히 시사함

1) 주민 대비 공무원 수는 적지 않음

- 2025년 12월말 기준 조직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임실군의 공무원 정원은 689명이며, 주민수는 25,754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7명임.
- 이는 3만~5만 미만 군 평균 56명, 3만 미만 군 평균 40명보다 낮은 수준임.
- 즉, 임실군은 비교군에 비해 주민 대비 공무원 수가 더 많은 편이며, 인력밀도 자체는 낮지 않음.

- 따라서 임실군 조직의 핵심 문제가 단순한 절대적 인력 부족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확보된 인력이 군민 체감형 성과로 연결되고 있는가, 공약 이행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치되어 있는가, 부서 간 중복 없이 핵심 기능에 집중되고 있는가에 있음.

2) 실·국 체계와 상위 관리구조는 비교적 두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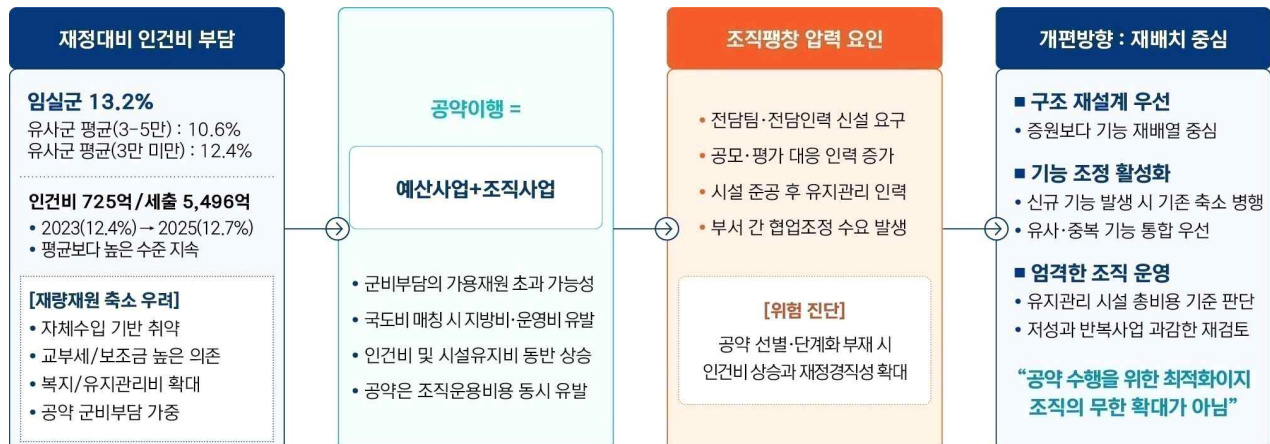
- 조직정보 공개 자료에서 임실군의 실·국·본부 수는 3개로 나타나며, 이는 3만~5만 미만 군 평균 2개, 3만 미만 군 평균 2개보다 많음.
- 또한 과장급 이상 상위직은 46명, 전체 정원 대비 6.7%로 3만~5만 미만 군 평균 6.1% 3만 미만 군 평균 6.1% 보다 높음.
- 2023년 조직진단에서도 상위직 비율은 6.3%, 2025년 조직진단에서는 6.4%로 유사 지자체보다 다소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임실군 조직이 인구 규모에 비해 상층 관리구조가 다소 두터운 형태를 갖고 있음을 의미함.
- 상위직과 관리단위가 많아지는 것은 정책조정 기능 강화라는 장점도 있으나, 실제 실무인력 규모가 함께 충분하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관리단위는 많은데 집행단위는 약한 구조
 - 보고·결재·협의를 많으나 추진속도는 느린 구조
 - 부서 간 업무소관 다툼 증가
 - 정책 총괄은 있으나 실행책임은 분산되는 구조
- 결국 상위직 비율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구조 확대가 실제 집행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의 문제임.

3) 기구 수는 많은데 평균정원은 낮고 과소팀 비율은 높음

- 2023년 조직진단 기준 임실군의 본청 과단위 설치 수는 18개, 2025년에는 19개였음.
 - 이는 유사 군 단위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반면 본청 과단위 평균 정원은 2023년 19.8명, 2025년 19.5명으로 나타나 비교군 평균보다 낮았음.
- 과소팀 비율은 2023년 13.1%, 2025년 11.4%로, 군 평균 대비 크게 높은 수준임.

- 이 조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즉, 임실군 조직은 부서와 팀은 많은데, 각 부서·팀이 충분한 인력 규모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이 경우 조직은 겉으로 보기에 세분화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규모 팀의 상시적 업무과부하, 특정 담당자 의존형 운영, 휴직·전보·결원 시 업무중단 위험, 정책 기획과 현장집행의 동시 수행에 따른 과부하, 성과관리·평가·협업 기능의 약화라는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큼.
- 결국 임실군 조직은 “작은 팀을 많이 둔 구조”에 가까우며, 이는 민선 제9기처럼 복합 공약과 구조전환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

4-4. 재정과 조직의 관계



1)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음

- 조직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임실군의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13.2%이며, 3만~5만 미만 군 평균 10.6%, 3만 미만 군 평균 12.4%보다 높음.
- 인건비는 72,484백만 원, 세출결산액은 549,586백만 원임
- 2023년 조직진단에서도 총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2.4%, 2025년 조직진단에서는 12.7%로 제시되어, 일관되게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 수치는 단순 인건비 비중 이상의 의미를 가짐.
- 왜냐하면 앞선 제3장 재정진단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임실군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자체수입 기반은 약하며, 복지비와 유지관리비 부담은 커지고 있고, 공약사업의 연차별 군비부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기 때문임.
- 이 상황에서 인건비 비중이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향후 공약이행과 정책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재량재원이 더 좁아질 수 있음을 의미함.

2) 공약이행 관점에서 보면 조직의 추가 확대는 매우 신중해야 함

- 제3장 공약재정 분석에서는 공약사업을 구조조정 없이 전면 추진할 경우, 연차별 군비 부담이 실가용재원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은 외형상 유리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지방비 부담, 운영비, 인건비, 시설유지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압박을 확대시킬 수 있음.
- 이 점을 조직운영과 연결하면, 공약사업은 단지 예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정운영비용을 함께 유발함.
 - 전담팀 또는 전담인력 신설 요구
 - 사업관리·공모관리·평가 대응 인력 증가
 - 시설 준공 이후 운영·유지관리 인력 증가
 - 사업 간 협업조정 인력 수요 증가
- 즉, 공약은 예산사업인 동시에 조직사업이기도 함.
- 따라서 민선 제9기 공약을 재정 여건에 맞게 선별·단계화하지 않으면, 조직 또한 계속 팽창 압력을 받게 되고 이는 다시 인건비 상승과 재정경직성 확대로 연결될 수 있음.
- 결국 공약이행의 현실화 = 재정 우선순위 조정 + 조직 우선순위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3) 조직개편은 '더하기'가 아니라 '재배치'를 중심으로 가야 함

- 재정여건상 민선 제9기 조직개편은 전면적 증원이나 대규모 신설 중심으로 접근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칙은 분명해야 함.
 - 신규 기능 발생 시 기존 기능 중 축소·종료·위탁 가능한 분야를 함께 점검
 - 공약 신규사업 추진 시 전담조직 신설보다 기존 조직 내 기능 통합 가능성을 우선 검토
 - 유지관리형 시설사업은 운영인력까지 포함한 총비용 기준으로 판단
 - 성과가 낮은 반복사업과 지원사업은 조직관점에서도 재검토
- 즉, 민선 제9기 조직개편은 공약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조직 재설계이지, 공약 때문에 조직이 무한정 확대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됨.

4-5. 현장배치와 읍·면 전달체계



1) 현장공무원 비율은 낮지 않음

- 조직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임실군의 본청 현장공무원 비율은 57.0%로 3만~5만 미만 군 평균 52.6%, 3만 미만 군 평균 54.1% 보다 높음.
- 소속기관 현장공무원 비율은 47.4%로 비교군과 유사한 수준임.
- 이는 임실군이 현장기능을 전혀 외면하고 있는 조직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줌.
- 즉, 문제는 현장인력 자체의 절대 부족이라기보다, 현장기능이 여러 부서에 쪼개져 있고, 군정의 핵심목표와 일관되게 연결되지 못하는 데 있을 가능성이 큼

2) 읍·면 정원 비율도 평균 수준임

- 읍면동 정원 비율에서 임실군은 160명(23.2%)으로, 3만~5만 미만 군 평균 23.1%와 유사하고 3만 미만 군 평균 21.2%보다 다소 높음.
- 따라서 읍·면 조직도 숫자 자체만 보면 크게 뒤처진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임실군은 초고령 농촌지역으로서 면 단위 서비스 접근성, 이동권, 돌봄 전달, 보건·복지 연계, 생활불편 해소가 매우 중요한 지역 특성을 가짐.
- 이 때문에 읍·면조직은 단순 정원 수보다도 다음이 더 중요함.
 - 읍·면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와 본청이 총괄할 사무의 구분
 - 찾아가는 복지·돌봄·건강관리 기능의 통합성
 - 민원처리와 생활안전 대응의 현장성
 - 본청-읍·면-직속기관 간 정보연계와 책임체계
- 즉, 민선 제9기 조직개편에서 읍·면은 단순한 행정말단이 아니라, 군민 체감성과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전선 조직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

4-6. 부서 요구 분석이 보여주는 구조적 한계

1) 매년 반복된 증원 요구는 구조적 과부하의 징후임

- 조직진단 자료를 보면 2019년 인력증원 요청 54명, 2020년 40명, 2021년 39명 수준의 요구가 있었음.
- 이후에도 관광, 농업, 다문화, 감염대응, 기후환경, 체육시설 운영, 상하수도, 복지전달체계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원 요구가 제기됨.
- 반면 감원 요구는 극히 제한적이었음.
- 이는 개별 부서 입장에서는 모두 타당한 요구일 수 있으나, 군 전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신호임.
- 즉, 현재 조직운영 방식이 업무가 생길 때마다 더하는 방식으로 누적되어 왔고, 줄이거나 통합하는 메커니즘은 약했다는 의미임.
- 이 구조가 지속되면 모든 부서는 항상 부족하고, 군 전체는 항상 팽창 압력을 받는 상태가 됨.

2) 기능 중복과 경계 불명확이 누적됨

-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기능 조정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남.
 - － 인구정책, 청년, 저출산, 다문화, 외국인 계절근로 기능
 - － 관광개발, 관광지 운영, 시설관리, 테마자원 관리 기능
 - － 농업생산, 유통, 가공, 푸드플랜, 로컬푸드 기능
 - － 개발행위, 복합민원, 건축·환경 협의 기능
 - － 보건·복지·돌봄·감염대응 기능
 - － 성수산·옥정호·붕어섬 등 권역별 관리기능
- 이는 조직이 정책영역별로 깔끔하게 설계되기보다, 사업과 현안 중심으로 누적되어 왔음을 보여줌.
- 결과적으로 군민 입장에서는 행정창구가 복잡해지고, 내부적으로는 협업비용과 책임 불명확성이 커질 가능성이 큼.

4-7. TF 운영 실태와 상시기능 제도화 과제

- 2022년 조직진단에서는 존속 검토가 필요한 TF가 6개로 제시되었음.
- 인구정책TF, 의견관광지TF, 장미원관리TF, 봉어섬운영TF, 개발행위TF, 감염 대응TF 등이 대표적임.
- TF는 본래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이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도 존속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다면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함.
 - 해당 업무가 더 이상 임시과제가 아니라 상시업무가 되었거나
 - 기존 정규조직이 그 기능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임
- 민선 제9기 군정의 핵심영역인 인구, 돌봄, 생활권 정비, 관광거점 운영, 재난 대응, 기후대응은 대부분 일회성 과제가 아니라 상시 기능에 해당함.
- 따라서 TF 운영은 계속 연장하는 방식보다, 상시업무는 정규 조직에 편입하고, 종료 가능한 업무는 종료하며, 유사 기능은 통합 정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TF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은 단기 대응에는 유리하나, 장기적으로는 책임체계와 성과관리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음.

4-8. 공약이행 관점에서 본 조직 재설계 필요성

1) 공약은 조직의 실행구조를 전제로 할 때만 의미가 있음

- 민선 제9기 공약은 지방소멸 대응, 청년정착, 통합돌봄, 체류형 관광, 농업 고부가가치화, 생활권 정주환경 개선, 재난·기후 대응, 책임재정 등 복합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공약은 단순 예산편성만으로 이행되지 않으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직 역량을 필요로 함.
 - 정책 총괄기획 기능 및 부서 간 조정 기능
 - 단계별 사업관리 기능
 - 자원조달과 공모 대응 기능
 - 읍·면 전달체계 연계 기능
 - 성과평가와 환류 기능
- 현재 조직은 현안대응과 기능분화에는 일정 부분 대응해 왔으나, 공약 전체를 하나의 전략체계로 묶어 추진하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으로 판단됨.
- 따라서 민선 제9기에는 부서별 사업 나열이 아니라 공약군(群) 단위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함.

2) 향후 조직개편은 '공약 이행조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인구정책은 청년·주거·일자리·관계인구·정주여건과 연결되어야 하고,
- 통합돌봄은 복지·보건·의료·읍·면 전달체계와 연결되어야 하며,
- 체류형 관광은 관광지 운영·숙박·상권·로컬콘텐츠·교통과 연계되어야 함.
- 농업 고부가가치화는 생산·가공·유통·브랜드·귀농귀촌과 연결되어야 함.
- 즉,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기존 부서별 분절 구조를 일부 넘어서는 횡단형 조정 체계가 필요함.
- 이 체계는 반드시 별도 대규모 신설조직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부군수 또는 기획 총괄라인 중심 조정, 핵심 공약군별 책임부서 지정, 분기별 성과점검 체계, 재정·조직·사업 연계 검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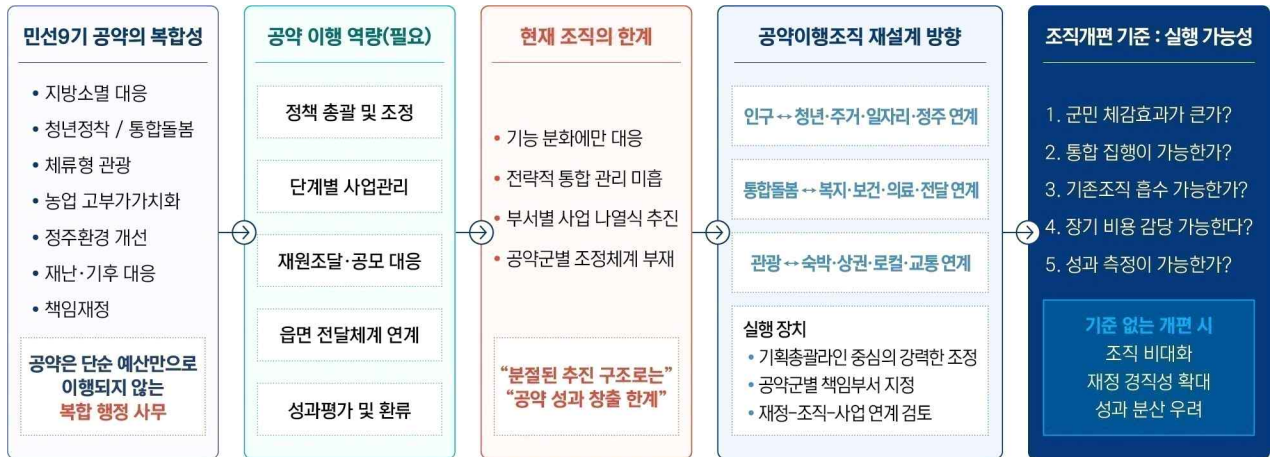
3) 결국 조직개편의 기준은 '공약 개수'가 아니라 '실행 가능성'이어야 함

- 민선 제9기 조직운영은 공약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조직과 인력을 계속 더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음.
- 재정진단상 실가용재원이 제한되어 있고, 인건비 부담도 평균보다 높기 때문임.
- 따라서 조직개편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함.
 - － 실제 군민 체감효과가 큰가?
 - － 공약 간 중복을 줄이고 통합 집행이 가능한가?
 - － 기존 조직으로 흡수·재배치 가능한가?
 - －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장기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 － 성과를 측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가?
- 이 기준 없이 추진되는 공약조직화는 장기적으로 조직 비대화, 재정경직성, 성과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4-9. 종합 판단

- 임실군 조직은 인구 규모에 비해 공무원 수가 적지 않고, 읍·면 비율과 현장공무원 비율도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음.
- 반면 실·국 수, 과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 과단위 기구 수, 인건비 비율은 비교군보다 높은 편이며, 평균정원은 낮고 과소팀 비율은 높아 기구는 세분화되어 있으나 운영단위는 영세한 구조라는 특징을 보임.

- 또한 매년 반복되는 증원 요구, TF 상시화, 유사기능 분산은 임실군 조직이 단순한 인력부족 조직이 아니라, 기능 누적형·현안 대응형 구조로 굳어져 왔음을 보여줌.
- 이러한 구조는 평상시 행정운영에는 대응 가능할 수 있으나, 민선 제9기처럼 공약사업의 선택과 집중, 재정제약 하의 우선순위 조정, 부서 간 통합 집행이 요구되는 시기에는 한계가 뚜렷함.



- 결국 민선 제9기 조직개편 핵심은 증원 중심 개편이 아니라 기능 중심 재설계에 있음.
- 즉, 조직의 과제는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현재의 조직과 인력을 어떤 구조로 다시 배열해야 공약과 현안을 지속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있음.

4-10. 민선 제9기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

- 임실군 조직은 주민 대비 인력밀도는 낮지 않지만, 기구 다층화·과소팀 구조·상위직 비중·인건비 부담·기능분산이 함께 존재하는 구조이며, 민선 제9기 공약과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조직개편은 증원보다 기능 통합, 실행체계 정비, 공약군 중심 조정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어야 함.

첫째, 기구 신설보다 기능 통합과 재배치를 우선해야 함.

둘째, 과소팀 정비와 유사기능 통합을 통해 실질 운영단위를 강화해야 함.

셋째, 인구·통합돌봄·농업소득·체류형 관광·정주환경·재난기후 대응 등 군정 핵심축 중심으로 조직을 정렬해야 함.

넷째, TF는 상시기능 여부를 기준으로 정규화 또는 종료해야 함.

다섯째, 읍·면은 단순 집행창구가 아니라 군민 체감형 전달체계의 핵심 거점으로 재설계해야 함.

여섯째, 공약 이행조직은 팽창보다 총괄조정·성과관리 체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함.

일곱째, 조직개편은 재정전략과 분리하지 않고 인건비·운영비·유지비를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

여덟째, 민선 제9기 조직운영의 최종 목표는 큰 조직이 아니라 작지만 연결되고, 분산되지 않으며, 실제 성과를 내는 조직이어야 함.

4-11. 조직진단의 정책과제

- 이상의 조직진단 결과는 임실군 조직이 단순히 인력 부족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재정제약·행정수요 증가가 중첩된 조건 속에서 기능 누적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줌.
- 특히 주민 대비 공무원 규모는 결코 작은 편이 아님에도, 실·국 수, 과단위 기구 수, 상위직 비율, 과소팀 비율, 인건비 부담이 함께 높게 나타나는 점은, 향후 조직운영의 초점을 양적 확대보다 기능 재설계와 집행체계 정비에 두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임실군은 공약사업을 전면적으로 동시 추진하기 어려운 재정여건에 놓여 있으므로, 조직 또한 모든 신규 수요를 별도 조직과 인력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함.
- 따라서 민선 제9기 조직운영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공약이행과 조직운영의 일체화

- 공약은 예산사업인 동시에 조직사업이므로, 공약군별 책임부서·총괄조정체계·성과관리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함.

2) 기능 중심 조직 재설계

- 부서 명칭이나 직제 확대보다, 인구·정주·복지·농업·관광·재난 등 핵심 기능을 기준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야 함.

3) 과소팀 정비와 실무집행단위 강화

- 기구 수를 유지한 채 소규모 팀을 계속 늘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과소팀 정비를 통해 실질 집행역량을 강화해야 함.

4) TF의 제도화 또는 종료 원칙 확립

- 상시업무화된 TF는 정규조직으로 편입하고, 일시과제는 종료함으로써 임시조직의 상시화를 방지해야 함.

5) 재정제약형 조직운영 원칙 확립

- 신규 기능은 기존 기능의 축소·위탁·통폐합과 연계해 검토하고, 인건비·운영비·유지비를 포함한 총비용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6) 읍·면 전달체계의 재설계

- 읍·면은 단순 집행조직이 아니라 군민 체감성과를 만드는 현장거점이므로, 복지·돌봄·생활민원·이동지원 등 생활밀착형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종합】

결국 조직진단의 결론은 "조직을 더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민선 제9기 핵심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행체계로 어떻게 재배열할 것인가에 있음.

이러한 과제는 곧바로 다음 장에서 다룰 분야별 성과와 한계 진단, 그리고 분야별 정책 재설계 방향과 직결됨.

4-12. 조직개편 시 참고 의견

- 민선 제9기 조직개편은 단순한 부서 명칭 변경이나 기구 증설이 아니라, 공약과 핵심정책을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문화·관광 분야는 임실군의 지역브랜드, 체류형 관광, 생활인구 확대, 지역 경제 환류와 직결되는 전략영역이므로, 기능의 명확화와 정책 추진체계 강화, 대외 브랜드 자산 보존을 함께 고려한 조직개편이 필요함.
- 문화관광국의 국명은 현재 임실군의 정책 방향과 대외 인지도 측면에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하위 과 단위에서는 기능 성격이 상이한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보다 전문성과 책임성이 분명한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
- 이에 따라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분야는 지역문화 진흥, 예술복지, 문화향유 확대 등과 관련된 정책영역이고, 체육 분야는 생활체육 진흥, 체육복지, 시설 운영, 스포츠마케팅 등 별도의 정책체계를 필요로 하므로, 현행처럼 병립시키기보다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편이 정책 효과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더 적절함
- 관광치즈과와 옥정호힐링과의 명칭은 일반 행정원리만 보면 기능 중심 명칭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임실군의 경우 '치즈'와 '옥정호'는 일반 행정기능을 넘어서는 고유 브랜드 자산이라는 점에서 명칭 존치가 타당함.
- 이를 일반적 기능명으로 변경할 경우 축적된 대외 브랜드 인지도와 관광 마케팅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
-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는 현재 명칭상 시설 관리조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치즈축제와 문화관광 콘텐츠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의 역할 확대를 고려할 때 재단법인 임실치즈문화관광재단으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함.
- 이는 치즈·문화·관광의 결합을 명확히 드러내고, 임실군 전체 문화관광자산의 연계·확산을 이끄는 전문 실행기관으로의 위상 전환에도 부합
- 관광치즈과 내 관광개발TF는 이미 한시적 현안대응 수준을 넘어 상시적 정책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더 이상 임시조직 형태로 둘 것이 아니라 정규조직인 관광개발팀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 이는 임시조직의 상시화를 방지하고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에도 큰 의미
- 문화관광국에 속한 재무과와 종합민원과는 기능 적합성 측면에서 현행 편제가 부적절하므로 이동 조정이 필요함.
- 재무과는 예산·회계·재정운영과 연계된 기획·예산 총괄축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종합민원과는 군민 접점 서비스와 원스톱 대응 기능을 고려할 때 행정지원 기

능 또는 군수 직속 원스톱 서비스체계와의 연계가 더 적절함

- 이는 과거의 조직 연혁과 편의주의적 편제를 유지하기보다 군민의 상식과 기능 중심 원칙에 맞게 바로잡는 차원의 조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현재 도서관 운영체계는 시설 중심으로 분절되어 있으나, 향후 도서관은 생활 문화, 교육, 돌봄,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정책영역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청 차원의 도서관정책팀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개별 도서관 운영을 넘어 도서관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기능을 군정 내부에 상설화하는 의미를 가짐
 - 체육 분야 역시 개별 시설 운영 중심 구조를 넘어 정책 중심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 현재 체육진흥팀과 사격장운영팀, 양궁장운영팀 등이 병립되어 있는 체계는 시설별 관리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생활체육 확대, 스포츠마케팅, 지역활력 연계라는 민선 제9기 군정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 따라서 체육정책팀, 체육시설팀, 스포츠마케팅팀 등 기능 중심 구조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반려산업과는 현재 일부 팀의 직무 성격과 정책 정체성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민선 제9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국가적 선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인 직무 재설계가 필요함.
- 반려정책팀은 총괄 기획과 거버넌스 구축을, 반려산업팀은 연관산업과 비즈니스 육성을, 반려관광팀은 오수 의견관광지 활성화와 관광콘텐츠 개발을, 반려복지팀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과 주민 상생 기반 조성을 맡는 구조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단순 시설관리에서 벗어나 정책·산업·관광·복지가 융합된 전략조직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짐
 - 이와 함께 민선 제9기 군정이 복합적 구조전환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별 부서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이 필요함.
- 지방소멸 대응, 정주혁신, 농업·관광 구조전환, 통합돌봄, 재정혁신 등은 모두 부서 간 연계와 우선순위 조정, 성과관리 기능을 필요로 하므로, 군수 또는 부군수 직속의 정책조정 기능이나 기획총괄라인 내 전략정책 기능을 상설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별도 대규모 조직 신설보다는 핵심 공약군을 통합 관리하고 부서 간 조정과 환류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조정 체계를 두는 방향이 현실적임
 - 또한 군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정책기획 역량 못지않게 군민 소통을 전담하는 조직 기능 강화도 필요함.
- 민원, 정책안내, 홍보, 주민참여, 갈등조정 기능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군민 입장에서는 행정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책 체감도도 낮아질 수 있음
- 따라서 군민소통팀 또는 이에 준하는 기능을 설치하거나 강화하여, 군정 핵심정책 설명, 공약 이행상황 공유, 현장 민원 및 생활불편의 정책 환류, 읍·면 현장 의견수렴과 본청 정책조정의 연결, 디지털 기반 소통체계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농업기술센터와 농업부서 체계도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임실군의 핵심 산업축이 여전히 농업·축산·농촌경제에 있음에도 정책기획, 기술보급, 산업화, 유통, 브랜드, 귀농귀촌 기능이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민선 제9기 농정이 단순 생산지원이 아니라 소득향상, 가공·유통·브랜드화, 청년농 육성, 관광 연계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부서 간 기능을 재정렬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는 통합 관리하거나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업의 산업화, 브랜드화, 유통고도화, 반려산업 육성,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은 전통적 행정 경험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민간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 계약직, 정책 PM, 자문형 관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단순 자문 수준을 넘어 실제 정책기획과 사업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이어야 함
- 홍보담당관 조직의 존치 필요성도 실질 기능성과를 기준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홍보 기능이 군정브랜드 관리,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정책 전달, 관광 마케팅, 주민소통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지 못하고 단순히 결재 단계만 늘리는 역할에 머문다면 독립기구로 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반대로 군정브랜드와 관광브랜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기반 전략홍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다면 존치 논리도 가능하므로, 핵심은 조직 존치 자체가 아니라 기능성과 실효성에 있음
- 아울러 현재의 3국 체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임실군 규모에서 3국 체계가 실질적인 정책조정력을 높이는지, 아니면 결재 단계와 관리구조만 두텁게 만드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상위직 비율, 과단위 세분화, 과소팀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할 때, 국 단위 관리구조가 실제 집행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축소 또는 기능 중심 재편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종합하면 문화관광분과의 조직개편 의견은 단순한 명칭 변경 요구가 아니라, 브랜드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재설계 제안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민선 제9기 조직개편은 시설 중심 조직을 정책·성과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고, TF의 상시화를 줄이며,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정책강화를 위한 전략기획 기능과 군민 소통강화를 위한 상설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결국 민선 제9기 조직개편의 핵심은 무엇을 더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임실군의 브랜드 자산, 공약과제, 전략산업, 군민 체감성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에 있음.
- 따라서 이번 의견은 문화관광분야 조직 정비를 넘어 임실군 전체 조직체계를 기능·성과·재정효율성·군민소통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출발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제6장 분야별 성과와 한계 진단

제6장 분야별 성과와 한계 진단

5-1. 기획·예산·감사·인구정책 분야

소결 "관리 행정"에서 이제는 실행우선순위와 선택과 집종의 "전략 행정"이 핵심 과제

1) 성과와 의미

(1) 미래전략 수립 기반 확보

- 민선 8기 후반 임실군은 「2036 임실군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중장기 성장구상을 체계화하기 시작함.
- 8개 분야 59개 사업, 총 3조 8천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발굴은 단순 사업 나열을 넘어 임실군의 미래 먹거리와 공간·산업·관광·복지 재편 구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특히 농업·식품·반려산업·치유관광·생활 SOC·AI·스마트교통 등은 임실군이 기존 강점 자원을 기반으로 복합화·융합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는 민선 제9기가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처음부터 만드는 단계라기보다, 한득수 군수의 공약 등 이미 발굴된 정책 자산을 어떻게 선별·구체화할 것인가의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함.

(2) 국가예산 확보 체계의 정례화

- 국가예산 중점관리사업 선정, 예산편성 순기별 대응, 부처·기재부·국회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은 임실군 행정의 대외 자원 확보 역량이 상당 부분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자체 재정여력이 제한된 군 단위 지자체에서 국가예산 대응체계는 사실상 성장정책의 핵심 수단이며, 임실군은 이 점에서 일정 수준의 행정 루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 공모사업 선정 실적 역시 단순 보조금 확보가 아니라 부서별 정책기획과 대외 협상 능력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3) 성과관리와 군정 조정기능의 고도화

- 주요사업 로드맵 관리, 간부회의 중심 현안조정, 성과지표 설정 등은 군정 운영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함.

- 과거의 부서별 분절 대응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 총괄조정 기능을 가진 군정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나타남.
- 이는 민선 제9기에서 공약 이행과 핵심사업 관리체계를 설계할 때 활용 가능한 행정적 기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뜻함.

(4) 재정운영의 절차적 건전성 강화

- 본예산, 추경, 투자심사, 재정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심의 등 사전관리 기능이 강화되면서 재정운영의 절차적 통제 수준은 높아짐.
- 이는 대규모 신규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무분별한 사업 확장보다 재정 건전성과 정책 타당성을 병행 관리하는 구조를 어느 정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5) 감사·청렴·법무 기능의 안정적 유지

- 자체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자치법규 정비, 소송 대응, 청렴정책 운영 등은 군정 신뢰 유지의 최소 기반으로 작동함.
- 특히 민선 전환기에는 행정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 있는데, 이 시기에 감사·법무·청렴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은 향후 군정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6) 인구감소 및 청년정책 대응의 제도적 틀 마련

-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용역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 청년 정착지원 확대 등은 지역소멸 문제를 군정 핵심의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함.
- 특히 청년지원정책이 자산형성·주거지원 중심으로 다변화된 것은 민선 제9기 인구정책을 보다 실생활 중심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됨.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전략은 많아졌지만, 우선순위는 아직 불분명

- 59개 신규사업 발굴은 분명 성과이지만, 민선 제9기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임.
- 사업 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어려워지고, 모든 사업을 핵심사업 처럼 다루는 순간 전략은 흐려질 수 있음.
- 특히 민선 제9기 출범과 함께 공약 반영, 신규사업 추가, 지역 기대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 기존 발굴사업과 충돌하거나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현 단계의 한계는 사업 부재가 아니라 우선순위 부재라고 볼 수 있음.

(2) 국가예산 중심 구조의 취약성

- 임실군의 전략사업 상당수는 국비·도비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구조임.
- 이는 외부재원 확보가 필수라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중앙 정책기조나 공모 경쟁 결과에 지나치게 좌우되는 취약성도 내포함.
- 민선 제9기가 장기전략을 실현하려면 단순히 "국비를 많이 따오는 행정"을 넘어서, 국가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역 자체 실행모델도 함께 설계해야 함.
- '26년 제1회 추경 재원 반영 검토 결과 약 130억 원 규모로, 본예산 편성 시 필수 경비 미반영 사업비가 약 212억 원 규모로 확장적 재원 대책 강구.
- '25년도 일몰사업 중 '26년도 예산 반영은 총 25개 사업 중 미흡 3건을 제외하고 22건을 계속 반영하는 등 확실한 일몰사업 정비 필요.
- 민선 6~8기를 거치면서 예산추이는 지속적 감소와 특정분야(치즈, 옥정호, 반려)에 대한 집중투자로 농도인 임실의 특성상 농업경제 부문이 상대적으로 침체 가속화 현상.
- 재정자립도는 '26년 기준 8.18%, 재정자주도는 60.08%로 재정자립도는 낮은 수준이나 재정자주도는 매년 상승(매년 $\pm 2\%$ 내외)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군비 매칭 여력이 있으나, 공모사업 유치신청에 소극적인 현상으로 나타남.
- 지방채는 총 11건에 304억 원(예산 규모 대비 5.6% 내외)으로 '21년 이후 시작하여 확대되고 있으며, '24년도 차입선이 공공자금(재정경제부)으로 비교적 고이율 차입으로 이자부담 가중.
- '25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 전출입과정에서 누락된 56억 원의 경우 '26년도 결산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되어 정상화 조치를 취하였지만, 이는 예산회계의 중요성을 간과한 상황으로 정밀감사와 손실이 예상되는 이자 수입에 대한 대책도 추가 조사가 필요함.
- 민선6~8기 동안 각종 사업(공사, 용역 등)의 계약사항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부서 팀의 경우 1년에 70여 건을 특정업체가 1인 수의계약을 하는 구조로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차원에서 지양해야 함.
- '17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이후 특정감사는 수시로 있었으나 전라북도의 종합감사가 상당기간 부재한 상태로 '26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종합감사 시 회계부분에 대한 정밀감사가 필요함.

(3) 성과관리의 정량화 편중 우려

- 성과지표가 촘촘해질수록 관리의 형식성도 커질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의 설정 및 관리는 절대적 필요가 충분함.
- 부서별 실적관리 체계는 강화되었지만, 실제 주민 삶의 변화나 정책 파급력은 여전히 별도 분석이 필요함.
- 민선 제9기에서 성과관리가 공약관리 도구로만 작동할 경우, 보여주기식 성과가 늘고 본질적 구조개혁은 지연될 수 있음.
- 민선 6~8기 공약사업 중 옥정호 웰니스 치유 복합공간 조성 등 9개 사업은 미진한 상태로 마무리 되어 있는바, 공약 미이행 시 군민에 대한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평가에 반영되어 지자체 신뢰도 저하됨.
- '22년 이후 매년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왔으며, 치즈, 옥정호, 반려산업 등 특정 산업 위주의 조직개편을 실시, 이는 외지인 중심의 관광산업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왔으나, 임실군의 특성상 농업경제 부분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림.
- 민간단체 보조금 등은 지원 성격, 활동 상황 등에 대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며, 군의 미래지향적으로 활동하는 지속가능협의회 등은 운영경비의 현실화 필요.

(4) 인구·청년정책의 대응 수준이 아직 방어적

- 현재 인구정책은 계획수립, 기금관리, 청년지원사업 확대 등 제도적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인구감소 문제는 단일 사업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산업, 주거, 교육, 교통, 돌봄, 문화의 복합 문제임.
- 청년 월세나 수당 지원은 필요하지만, 일자리와 지역 내 성장경로가 없으면 정착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결국 지금까지의 정책은 "유출을 늦추는 대응"에 가깝고, 민선 제9기에서는 "유입과 정착을 만드는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함.

3) 민선 제9기 전략 시사점

(1) 민선 제9기 핵심전략은 "다수 사업 추진"이 아니라 "전략축 설정"이어야 함

- 민선 제9기는 기존 발굴사업을 전면 수용하는 방식보다, 군정 전체를 관통하는 3~5개의 전략축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예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축 설정이 가능함.
 - 생활인구·정주인구 확대 전략
 - 치즈·반려·치유 중심 체류형 관광산업 전략
 - 농업·식품 고도화 및 청년유입 전략
 - 읍·면 생활거점 재편과 생활 SOC 강화 전략
 - 재정선택과 집중 기반 실행행정 전략
- 이렇게 해야 사업 간 중복을 줄이고 예산·조직·홍보를 한 방향으로 집중시킬 수 있음.

(2) 공약은 "약속 목록"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패키지"로 설계해야 함

- 민선 제9기 공약은 개별사업 공약의 나열보다, 서로 연결되는 정책패키지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컨대 청년정책은 월세지원, 일자리, 창업공간, 농촌유학 가족 정착, 생활편의 인프라를 묶어 하나의 정주패키지로 구성해야 실효성이 높아짐.
- 관광정책도 축제, 옥정호, 치즈테마파크, 반려동물, 숙박·체류시설이 개별사업이 아니라 체류시간을 늘리는 관광소비 생태계 전략으로 통합되어야 함.

(3) 기획감사실은 민선 제9기의 "정책조정실"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앞으로 기획감사실의 역할은 예산·평가·업무보고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공약 간 정합성 조정, 핵심사업 선별, 부서 간 갈등 조정, 국비논리 개발까지 포괄하는 전략조정기능으로 확대되어야 함.
- 즉, 민선 제9기에서는 기획부서가 문서 총괄부서가 아니라 군정 설계와 실행을 연결하는 전략엔진 역할을 해야 함.

5-2. 행정지원·조직운영·교육·정보화 분야

소결 민선 제9기 성공의 관건은 신규사업 확대보다 "조직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

1) 성과와 의미

(1) 정책수요 변화에 맞춘 조직 조정

- 통합돌봄, 재난상황, 홍보마케팅, 관광개발TF 등 신규 기능 반영은 조직이 정체되지 않고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려 했음을 보여줌.
- 이는 민선 제9기에서 요구될 정책 변화에 대해 조직이 일정 수준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2) 행정 최일선 조직의 안정적 유지

- 이·반장 수당, 상해보험, 역량강화 지원은 기초행정 전달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함.
- 군 단위 지역에서 이·반장 조직은 단순 행정보조가 아니라 주민 접점, 여론 전달, 갈등 중재 기능까지 수행하므로, 민선 제9기에서도 이 조직은 여전히 핵심 기반임.

(3) 주민자치와 사회단체 운영 기반 유지

- 주민자치센터 운영,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은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유지하는 데 기여함.
- 이는 군정이 행정단독이 아닌 주민참여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 기반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4) 직원 복지·노사협력·교육체계 유지

- 맞춤형 복지, 건강검진, 심리상담, 자기계발비, 교육훈련 등은 공직사회의 기본동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 민선 전환기에도 노사협약과 복지제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조직 안정 운영의 기초가 됨.

(5) 지역인재 육성과 농촌유학 기반 확대

- 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 애향장학금, 서울장학숙, 농촌유학은 지역의 교육기회 보완과 인재유출 완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임.
- 특히 농촌유학은 교육정책을 넘어 인구유입과 생활인구 확대 수단으로서 전략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6) 정보화·보안·스마트 행정기반 확충

- 행정전산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강화,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행정 효율성과 주민 안전을 동시에 높이는 기반을 마련함.
- 민선 제9기에서 디지털 행정과 생활밀착형 스마트 서비스 확장이 가능한 출발점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조직은 늘었지만, 전략적 재배치는 부족

- 팀 신설과 정원 증원은 있었지만, 인력과 기능이 군정 핵심전략 중심으로 재배치되었는지는 별도 점검이 필요함.
- 일부는 신규수요 대응에 그치고, 조직 전체가 민선 제9기 핵심전략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구조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민선 제9기의 과제는 단순 증원이 아니라 전략사업 중심 조직재편임.
 - 본청의 경우 기획감사실, 행정지원실, 홍보담당관 등 지원부서 위주로 우수 부서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바, 공통지표, 성과지표, 이행과제 등 전 부서가 공히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필요
 - 최근 4년간의 문서 생산현황에 따르면 특정부서의 팀은 2만 건이 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매우 적은 문서를 생산하는 팀이 있는 경우가 있어 업무의 양과 질의 면밀히 분석하여 조직개편 시 반영할 필요성 제기, 다만 그동안 여러차례 조직개편을 시행했던 경험에 있는바, 내부 구성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조직개편 추진을 제안
 - 일하는 방식으로 민선 8기 군수의 결재 시스템은 대부분 비전자 결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단위 업무마저 군수의 결재를 직접함으로써 전결권의 무력화, 조직의 창의력 부재, 독단적 판단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필요 시 보고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메모 보고나, 스마트 전자결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보고보다는 현장위주의 업무에 집중해야 함
 - 민선6~8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시설의 운영 시 충분히 검토한 후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총액인건비 등의 영향 등으로 민간위탁의 과다로 별도 기간제 채용 등 인력 운영에 비효율성으로 나타남
 - 경영평가 대상인 임실치즈테마파크 및 치즈앤식품연구소의 경우 각각 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나 특정기관의 장은 최근 C등급으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2) 주민자치는 아직 행사·프로그램 중심

- 주민자치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제안하고 예산과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는 수준까지는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민선 제9기에서 주민자치는 단순 참여행사가 아니라, 읍·면단위 의제발굴과 생활문제 해결의 핵심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함.

(3) 교육정책은 유지형 성격이 강하고 구조전환성이 약함

- 현재 교육사업은 지역 학생 지원과 복지적 성격이 강하며, 지역정착과 미래산업 인재 양성까지 연결되는 구조는 아직 약함.
- 민선 제9기는 교육정책을 "지원사업"에서 "지역전략사업"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농촌유학, 중등교육 지원, 진로진학, 지역산업 연계 교육을 하나의 인재순환 구조로 엮을 필요가 있음

(4) 정보화는 유지관리 수준을 넘어야 함

- 지금까지는 장비교체, 보안강화, 시스템 유지가 중심이었다면, 민선 제9기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 주민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읍·면 단위 스마트 안전 서비스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즉, 정보통신 기능은 지원부서가 아니라 정책혁신의 기반부서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3) 민선 제9기 전략 시사점

(1) 조직개편은 "부서 중심"이 아니라 "전략 중심"으로 전환

- 민선 제9기 조직운영은 과 단위 균형보다 군정 핵심과제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구, 관광, 농업식품, 생활 SOC, 홍보마케팅, 공약관리 분야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TF나 협업체계의 상설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주민자치를 생활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전환

- 읍·면 주민자치를 문화프로그램 운영 수준에서 벗어나, 생활환경·돌봄·교통·고령자 지원·공동체경제 등 생활의제 해결 구조로 발전시켜야 함.
- 민선 제9기의 강점은 행정 주도보다 주민 체감형 현장정치에 있으므로, 주민자치의 실질화는 매우 중요함.

(3) 교육·인재정책을 인구전략과 결합

- 농촌유학, 장학사업, 봉황인재학당, 청년정책을 따로 보지 말고, "아이를 키우고 청년이 돌아오는 임실" 전략으로 통합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민선 제9기에서 교육은 복지의 하위영역이 아니라 정주전략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함.

5-3. 홍보·대외소통·고향사랑기부 분야

소결 민선 제9기는 '행사 홍보'의 시대를 넘어 '도시 브랜드 전략'의 시대로 가야 함

1) 성과와 의미

(1) 임실군의 대외 노출도와 확산력 증대

- 언론, SNS, 현장 홍보, 방송프로그램 유치를 통해 임실군의 대외 인지도는 분명히 확대됨.
- 특히 관광·축제 중심 홍보는 임실군을 외부에 각인시키는 데 일정한 성과를 냄.
- 이는 민선 제9기가 별도의 기반 없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대외 브랜드 자산 위에서 출발할 수 있음을 의미함.

(2) 관광홍보 방식의 다변화

- 전광판, 팸투어, 인플루언서, KBS 전국노래자랑, 방송프로그램 협업 등은 홍보 방식이 과거보다 다양해졌음을 보여줌.
- 이는 향후 민선 제9기에서 군정 비전 홍보와 관광도시 브랜딩을 더욱 공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

(3)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책재원화 가능성 확인

- 기부제 운영과 기금사업 집행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모금제도가 아니라 군정 전략사업의 보완재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청년월세, 농촌유학 빈집재생, 지역복지, 반려산업 지원 등과 연계된 점은 민선 제9기에서도 활용 여지가 큼.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홍보는 많아졌으나, 브랜드 메시지는 아직 분산

- 치즈, 벚꽃, 장미, 펫, 옥정호, 산타축제 등 다양한 소재가 홍보되었지만, 민선 제9기 관점에서 보면 "임실은 무엇의 도시인가"라는 핵심 메시지가 다소 분산될 수 있음.
- 축제가 많아지는 것과 도시브랜드가 강해지는 것은 동일하지 않음.
- 민선 제9기는 홍보대상을 늘리는 방식보다, 핵심 정체성을 압축하는 브랜드 전략이 필요함.

(2) 홍보와 정책의 연계성이 아직 약함

- 현재 홍보는 행사와 관광 중심이 강하며, 인구정책·농업전략·정주환경 개선 등 군정 핵심 어젠다와의 연결은 상대적으로 약함.
- 민선 제9기에서는 홍보가 단지 "알리는 기능"이 아니라, 군정 방향을 주민과 외부에 설득하는 전략 수단이 되어야 함.
- 군청 홍보비의 경우 홍보담당관에 710백만원을 편성하여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매년 동일한 수준의 홍보비를 책정 지원함으로써 지역 언론사와의 관계를 엮을 수 있음.

- 관광치즈과, 옥정호힐링과 등 주요 사업부서에 추가로 관련 홍보비를 편성 운영함으로써 임실군 재정을 감안하면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함.

(3)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가능성 과제

- 기부 건수와 별개로 총액 감소 가능성이 나타난 만큼, 초기 관심 이후 안정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함.
- 이제는 답례품 경쟁보다 "왜 임실에 기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감성적 설득력이 더 중요해질 것임.

3) 민선 제9기 전략 시사점

(1) 민선 제9기 브랜드를 하나의 메시지로 통합해야 함

- 치즈, 반려동물, 옥정호, 치유, 농촌유학, 천만관광 등 개별 키워드를 병렬로 두기 보다, 하나의 상위 브랜드 내에서 재배치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민선 제9기는 체류형 힐링관광도시, 반려친화·가족친화 도시, 아이 키우고 머무는 교육·정주도시 같은 상위 프레임을 정하고, 세부 축제를 그 안에 배치해야 함.

(2) 홍보부서는 '군정브랜드전략실'처럼 운영될 필요

- 민선 제9기의 홍보는 단순 기사 대응이나 행사 홍보를 넘어서, 군정비전·공약·핵심사업·대외투자 유치·기부 확산을 하나로 엮는 전략부서 기능을 가져야 함.
- 즉 홍보는 사업 뒤에 붙는 후행 기능이 아니라, 전략을 대중화하는 선행 기능이 되어야 함.

(3) 고향사랑기부제는 민선 제9기 특화정책의 실험재원으로 활용

- 모든 사업에 기금을 나누기보다, 민선 제9기 상징성이 높은 2~3개 사업에 집중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예컨대 청년정착, 농촌유학, 반려친화도시, 취약계층 돌봄 등 기부자의 공감을 끌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 제도 차별성이 강화될 수 있음.

(4) 언론 대응 및 위기관리 관련 공직자 교육 및 역량 강화 필요

-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군청과 언론 간 갈등이 형사 고소까지 확대된 사례.
- 사건의 내용과는 별개로 언론 관련 분쟁에 대해, 행정기관이 직접 형사 대응을 선택한 것은 일반 주민이 느끼는 감정과 공공기관의 신중성 측면에서 논란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잘잘못을 떠나 소통에 대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결국 문제 해결을 법적 대응 중심으로 접근함에 따라 정치적·행정적 리스크 관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 갈등 발생 시 사전 조정·중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절차 강화 및 언론 대응 및 위기관리 관련 공직자 공통 교육 및 역량 강화 필요함.

5-4. 재정·세정·회계·재산관리 분야

소결 민선 제9기 전략의 성패는 결국 '재정이 따라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1) 성과와 의미

(1) 기본 재정행정의 안정적 수행

- 지방세 부과, 체납징수, 계약, 결산, 자금관리, 공유재산 관리 등 기본 재정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됨.

(2) 체납징수와 자금운용을 통한 재정관리 노력

- 이월체납액 징수,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전략적 예치 운용은 열악한 재정구조 속에서 자체재원을 방어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됨.
- 재정여건이 어려워수록 세입관리의 중요성은 커지며, 민선 제9기에서도 이 기반은 더욱 중요해질 것임.

(3) 청사·공유재산·생활거점 관리의 기반 형성

- 행복누리원 건립, 청사기능보강, 공유재산 정비는 장기적으로 생활거점 재편과 자산 활용 전략의 기초가 될 수 있음.
- 민선 제9기가 읍·면거점 중심 발전전략을 채택할 경우, 이 분야 성과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지역세입 기반 자체의 한계

- 지방세 목표액 감소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규모와 인구구조의 한계를 반영함.
- 민선 제9기의 전략사업이 많아질수록 재정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음.
- 결국 임실군은 "하고 싶은 사업"보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우선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2) 대규모 투자수요와 유지관리비 부담 동시 증가

- 신규 거점시설 건립은 상징성과 편익이 있으나, 건립 이후 운영비·관리비 부담도 함께 증가함.
- 민선 제9기에서 시설중심 투자만 확대될 경우 중장기 재정 부담이 누적될 우려가 큼.
- 따라서 모든 투자사업은 건립 논리뿐 아니라 운영수지와 활용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함.

(3) 공유재산과 공공시설의 전략적 활용 구상이 아직 부족

- 단순 보유·정비·처분 수준을 넘어, 유희재산을 지역활성화·청년공간·정주지원과 연결하는 관점은 아직 강하지 않음.
- 민선 제9기는 재산관리도 단순 행정이 아니라 정책자산 활용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3) 민선 제9기 전략 시사점

(1) 민선 제9기 재정원칙을 먼저 선언해야 함

- 모든 것을 하겠다는 방식보다 1. 핵심사업 우선 투자, 2. 유지관리비 고려 투자, 3. 외부재원 연계형 사업 우선, 4. 소규모 분산사업 구조조정 같은 재정원칙을 분명히 해야 함.
- 전략 없는 예산은 단기 민원 대응에 소진되기 쉬우므로, 민선 제9기 초기에 재정 운영 원칙을 군민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함.

(2) 시설투자 중심에서 운영성과 중심으로 전환

- 앞으로는 "무엇을 더 지을 것인가"보다 "이미 있는 시설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큼.
- 읍·면 거점시설, 교육시설, 관광시설, 공공재산을 연결한 운영모델이 필요함.

(3) 공유재산은 정주전략 자산으로 재해석 필요

- 빈집, 유희시설, 공유재산은 청년주거, 귀촌지원, 농촌유학, 사회적경제, 창업공간 등과 연계될 수 있음.
- 민선 제9기는 재산관리를 수동적 관리행정이 아니라 공간전략 행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5-5. 민선 8기('25-'26년) 현안사업 평가 의견

번호	담당 부서	사업명	진단 평가	평가 의견
1	기획 감사실	2036 임실군 미래발전전략 수립	계속	▪ 농업경제 우선순위 선정 전략 방향 수정 필요
2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성장동력 강화	계속	▪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노력 필요
3		기획 조정 강화를 통한 군정 효율화 도모	계속	▪ 현장 중심으로 변화 모색
4		체계적인 성과관리 운영으로 군정 성과 극대화	계속	▪ 시스템 공개 등
5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적극행정 확산	계속	▪ 아이디어 공모제 시행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예산 편성	계속	▪ 일몰사업 정리, 재원의 합리적 배분 필요
7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로 지방재정 확충	계속	▪ 국·도비 등 외부이전재원 확보 노력
8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 심사 강화	계속	▪ 투자심사, 중기계획 등 예산시스템 정착 필요
9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 감사	계속	▪ 외부 감사 적극 수용
10		청렴하고 신뢰 받는 공직사회 실현	계속	
11		자치법규 정비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계속	▪ 법제 담당 조직강화
12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계속	▪ 적극적인 정책 전개
13		청년지원 정책 강화로 자립 정착 도모	계속	▪ 실효적인 정책 도입
1	행정 지원실	리의 하부조직 사기 진작	지속	▪ 직무교육 강화
2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	재정비	▪ 단체 지원 재정비 필요
3		주민자치 활성화	계속	▪ 주민 참여도 노력 필요
4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관리	계속	▪ 예측 가능한 시스템 구축
5		교육 및 역량 강화	계속	▪ 역량강화 필요
6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계속	▪ 근무 환경 개선 노력
7		근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	계속	▪ 실질적인 사기진작 대책 강구
8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계속	
9		체계적인 통계 관리	계속	▪ 통계의 전방위 활용 방안과 확산 노력
10		봉황인재학당 운영	계속	▪ 진로 프로그램 확대

번호	담당 부서	사업명	진단 평가	평가 의견
11		봉황인재학당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계속	▪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12		지역인재 장학사업 지원	계속	▪ 기금의 효율성 강화
13		농촌유학 지원사업	계속	▪ 정주여건 개선 등 세심한 여건 개선
14		행정전산시스템 운영	계속	
15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계속	▪ 정보보안 대책 마련 시행
16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계속	▪ 시범사업 조기 정착 노력
1	홍 보 담 당 관	대언론 홍보 강화	재정비	▪ 지역언론사와 관계 재정립
2		홍보마케팅 운영	계속	
3		군정 홍보를 위한 미디어 매체 활성화	계속	▪ SNS 등 변화된 미디어 구현
4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운영	계속	
5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업 추진	계속	▪ 실효성 있는 기금사업 발굴
1	재 무 과	지방세 목표액 달성	계속	▪ 자주세원 발굴 등 노력
2		지방세 납기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	계속	
3		개별 주택가격 조사 결정	계속	
4		세입 세출 결산	계속	▪ 회계공무원의 전문화 필요
5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	계속	▪ 공정한 계약 시스템 도입
6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	계속	
7		체납 세외수입 최소화	계속	
8		전략적 자금 관리 이자 수입 증대	계속	
9		청사 운영 기능 보강	계속	
10		관촌면 행복 누리원 건립 사업	계속	
11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 관리	계속	
12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계속	▪ 재산관리 경영마인드 도입

5-6. 주민복지·노인복지·통합돌봄 분야

소결 '위기가구 선제발굴·고령사회 대응·지역통합돌봄' 중심의 복지체계로의 전환

1) 성과와 의미

(1) 저소득층·취약계층 보호체계의 기본 기능은 안정적으로 작동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저소득·위기가구 지원체계가 비교적 촘촘하게 운영됨.
-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정부양곡 지원 등 기본급여가 안정적으로 집행되면서 최저생활 보장 기능은 일정 수준 유지됨.
- 긴급복지 185건,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은 위기 대응 기능이 단순 급여 행정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대응형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와 확인조사, 행복e음 변동 관리 등은 복지대상자 관리의 행정 정합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기능함.
- 농촌 중심 지역,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소멸 대응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 인구정책, 공동체, 돌봄을 결합한 복지 정책 실현.

(2) 장애인복지의 양적 기반은 확대

- 장애인연금·수당, 활동지원,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발달재활, 장애인일자리, 시설·단체 지원 등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가 비교적 다층적으로 운영됨.
- 장애인일자리 33명, 바우처 및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시설·단체 운영비 지원은 단순 생계보조를 넘어 사회참여·자립기반 지원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추진은 향후 분산된 장애인 복지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거점형 복지 인프라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큼.
- 자활사업 활성화, 장애인 복지 확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복지 체감도 향상,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로 생활 밀착형 복지의 강점 발휘.

(3) 노인복지 분야는 임실군 복지행정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음

- 임실군 노인인구 비중이 이미 44% 수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경로당 운영, 복지관 운영, 목욕·이미용 지원, 식사배달, 응급안전서비스 등 고령사회 대응정책이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음.
- 기초연금 8,852명, 노인일자리 2,624명, 경로당 349개소 운영 지원 등은 단순 수치 이상으로, 임실군 복지재정과 행정력의 상당 부분이 노인정책에 집중되는 구조를 보여줌.

- 이는 민선 제9기 복지전략에서 노인복지를 별도 영역이 아니라 군정 중심축으로 다뤄야 함을 시사함.
- 고령화, 농업과 복지, 복지와 보건, 건강과 지역 활력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임실형 복지 모델의 근간 마련.

(4) 통합돌봄은 민선 제9기 전략자산으로 발전 가능성 확인

- 신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통해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제공기관 협약, 현장 설명회, 서비스 연계 등이 본격 추진됨.
- 이는 기존의 분절적 복지서비스를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지원을 통합한 지역완결형 복지모델로 전환하려는 초기 기반으로 볼 수 있음.
- 고독·고립가구 지원, 가족요양세대 연계, 재가의료급여 사업과의 접점도 형성되고 있어, 향후 민선 제9기에서 임실형 지역통합돌봄 모델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큼.
-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반의 지속적 확대로 노인과 취약 계층의 재가 돌봄 확대와 지역사회 돌봄 역량 강화.

(5) 복지행정의 현장성·민관협력 기반 강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이장, 반찬지원·고독사 대응 등은 민관 네트워크 기반의 지역복지 실행구조를 확장하고 있음.
- 이는 복지행정이 군청 중심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읍·면 현장과 주민조직을 활용하는 생활밀착형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읍·면 맞춤형 복지와 근접성을 활용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중심 사례 관리 증진 효과.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복지정책이 여전히 '지원사업 병렬 나열형' 성격이 강함

- 주민복지와 업무는 촘촘하고 다양하지만, 민선 제9기 전략 관점에서 보면 개별 사업이 많고 상호 연계성이 충분히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음.
- 자활,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긴급복지, 통합돌봄이 모두 중요하지만, 군민 입장에서는 하나의 통합된 복지전략으로 체감되기보다 각각의 사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큼.
- 즉, 현재의 성과는 '사업의 성실한 집행'에는 강하나, '군정 차원의 복지전략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약함.
-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높은 고령화율로 대상자 수요증가와 돌봄 인력 부족.
- 복지 예산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재정 확충 과제.
-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관행화된 사회복지 서비스의 내용과 혁신 부족.

(2) 고령화 심화에 비해 노인정책은 여전히 분산형 대응

- 기초연금, 경로당, 노인일자리, 복지관, 맞춤형돌봄, 응급안전 등 다수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것이 하나의 초고령사회 대응 패키지로 설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현재 방식은 필요사업을 계속 덧붙이는 구조에 가까워, 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재정부담과 운영비가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경로당 개보수, 운영비, 목욕비·이미용비, 복지관 급식 등은 생활밀착형 만족도는 높지만 구조적으로 재정압박이 큰 분야임.

(3) 통합돌봄은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초기 정착 단계

- 통합돌봄은 민선 제9기 핵심 실험사업이 될 수 있으나, 현재는 추진체계·홍보·기관협약·초기 사례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읍·면 현장창구 인력 부족, 장기요양 가족요양세대 지원 인프라 부족,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 수용력 한계 등은 초기 정착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특히 '읍·면에서 발굴-군에서 조정-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구조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제도는 있어도 실제 체감성과는 약할 수 있음.

(4) 장애인복지 인프라는 확대 중이나 운영 기반은 아직 취약

-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은 상징성이 크지만, 건립 이후의 운영 프로그램, 인력, 예산, 시설 간 역할 조정까지 준비되어야 실질적 거점 기능을 할 수 있음.
- 장애인 보호작업장 차량, 수어통역센터 차량 노후화 사례처럼 기존 장애인복지 현장의 운영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한 측면이 존재함.
- 즉, 시설 신설만으로 복지의 질이 자동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운영체계가 함께 준비되어야 함.

(5)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여전히 사후 대응 성격이 강함

- 긴급복지, 고독사 대응,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위기 발생 후 개입하는 구조가 강함.
- 민선 제9기에서는 단순 발굴보다 위험예측-조기개입-생활관리의 예방복지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 안전망 정교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노인·의료복지 등 주요 분야를 정밀 점검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로 개선할 필요 있음.
- 기존 서비스와 중앙정부 중심 사업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임실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차별화된 복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민선 제9기 전략 시사점

(1) 민선 제9기 복지전략의 핵심은 "초고령사회 대응형 복지체계" 구축

- 임실군 복지정책의 중심축은 분명히 노인복지이며, 민선 제9기에서는 이를 단순 지원정책이 아니라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경로당, 돌봄, 식사, 건강관리, 장기요양, 응급안전서비스를 묶어 임실형 고령사회 종합대응체계를 설계해야 함.
- 앞으로는 "노인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돌봄공백과 건강위험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임.
- 고령화 심화에 대비한 중장기 복지 계획을 마련하여 의료 접근성 강화, 사회적 고립 예방, 돌봄 서비스 확대가 요구됨.

(2) 통합돌봄을 민선 제9기 대표 복지브랜드로 육성할 필요

- 의료·요양·주거·식사지원·방문의료·재가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돌봄은 민선 제9기에서 가장 전략성이 높은 복지정책임.
- 특히 임실처럼 고령화·분산거주·교통취약성이 큰 지역에서는 시설 중심 복지보다 살던 곳에서 버티게 하는 재가·지역완결형 모델이 훨씬 중요함.
- 민선 제9기는 이를 단순 시범사업으로 둘 것이 아니라, 읍·면 전담창구-보건 의료원-복지부서-민간기관을 묶는 군정 핵심과제로 키울 필요가 있음.
- 군민이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맞춤형 돌봄 정책 즉 통합 돌봄 내실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복지정책은 '급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 고독사, 가족돌봄, 장기요양, 탈수급, 장애인 자립은 모두 사후지원보다 사전 개입이 더 중요함.
- 민선 제9기 복지는 위험가구 데이터 관리, 현장방문, 주거환경 개선, 심리·건강·돌봄 통합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4) 장애인지원센터는 단순 건립사업이 아니라 운영모델까지 설계해야 함

- 건립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어떤 서비스를, 어떤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통합 제공할 것인가임.
- 민선 제9기는 장애인지원센터를 수어통역·이동지원·상담·자조모임·직업연계·문화 프로그램이 결합된 플랫폼으로 설계해야 함.
- 관광 인프라·지역기관과 연계한 자활사업 및 청년참여형 자활사업을 도입하여 지속성과 혁신성을 확보해야 함.

5-7. 여성·가족·아동·청소년 분야

소결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청년가족이 머무는 지역' 전략으로 확장해야 함

1) 성과와 의미

(1) 여성의 사회참여와 돌봄·보육 지원의 기본 틀 유지

- 여성취업 지원, 새일센터 운영, 한부모가족 지원,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여성·가정·영유아 지원체계의 기본 기능을 유지함.
- 특히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저출산 시대에도 지역 내 양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음.
-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직업연계 프로그램으로 일자리와 경제 활동 지원.

(2)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 가족지원 기능 강화

-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교육, 부부·부모자녀 관계 프로그램, 아이돌봄, 공동육아 나눔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이 가족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며 가족정책의 통합 플랫폼 기능을 보여줌.
- 이는 향후 민선 제9기에서 가족정책을 주민복지·보건·교육과 연결하는 거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임.
- 가족 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부모교육, 가족 상담, 다문화 가족 지원 등을 통해 가족기능강화에 기여.

(3) 다문화가족 지원의 생활밀착성 확대

-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통번역, 언어발달,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친정방문 사업 등은 정착 지원과 생활 지원이 결합된 사례로 의미가 있음.
- 특히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은 타 지역 대비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임실군의 차별적 정책자산이 될 수 있음.
- 다문화 가족 지원이 고향 방문, 육아지원 부모 교육 등의 통합지원으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적응을 지원함.

(4) 아동보호 및 청소년 지원 기반 유지

- 드림스타트, 아동수당, 아동급식,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 지원, 아동학대 대응,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은 취약아동 보호체계의 기본 안정성을 보여줌.

- 청소년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수련원 운영, 오수청소년센터 조성은 청소년 성장 기반 인프라를 넓히는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아이돌봄 및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정책 추진.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출산·보육 정책이 여전히 '지원금 중심' 인식에 머물 위험

- 부모급여, 육아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재정지원은 필요하지만, 민선 제9기 관점에서는 이것만으로 청년부부 정착과 출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함.
- 양육·보육의 문제는 주거, 일자리, 교육, 여가, 돌봄, 지역문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임.

(2)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른 시설 운영 효율성 문제

- 오수청소년센터 사례처럼 남부권 청소년 수 감소로 향후 이용률 저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청소년시설은 단순 설치보다 권역별 수요·프로그램 차별화·가족연계 기능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3) 보육·가족정책의 지역정착 전략화 부족

- 현재 여성가족과 사업은 잘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지원사업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임실'이라는 상위 전략으로 충분히 묶이지는 못한 상태임.
- 농촌지역의 특성과 한계로 여성의 좋은 일자리가 충분치 않고 청년여성의 유출로 이어짐.
- 홀로 사는 고령 여성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인 일자리, 여성노인의 건강과 사회 참여, 여가 등의 맞춤형 특화정책 부족.
- 자녀양육과 노인 돌봄 부담이 지속 증가되는 위기 지속 전망.
- 여성리더십과 정책 참여 확대 필요하나 현재 수준은 일회성 행사 중심 운영의 한계.
- 민선 제9기에서는 보육, 가족지원, 아동복지, 청소년공간을 하나의 정주정책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3) 민선 제9기 전략 시사점

(1) 민선 제9기는 '출산지원'보다 '정주형 가족정책'으로 전환

- 아이를 낳으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고 키우며 계속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어야 함.
- 출산·임산부 지원 강화 : 임신부 응급 수송 시스템, 병원 연계, 비상체계 구축 등 안전망을 마련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정책과 사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해야 함.
- 여성가족, 주민복지, 보건, 교육, 청소년정책을 연결한 가족 정주 패키지 전략이 필요함.

(2) 가족센터를 민선 제9기 가족정책 허브로 육성

- 가족센터는 단순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아니라, 다문화·돌봄·상담·가족관계·육아 정보를 연결하는 통합 가족플랫폼으로 키워야 함.
- 이를 통해 청년부부, 다문화가족, 1인가구, 조손가구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가족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직영과 전문기관 위탁 방식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사례의 조기 발굴과 신속한 판단·관리를 강화하고,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치료·보호·재발 방지까지 연계하는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3) 청소년시설은 '공간 운영'보다 '권역 거점화'가 중요

- 청소년문화의집, 오수청소년센터, 수련원을 단순 시설 운영이 아니라 권역별 청소년 성장·진로·문화 플랫폼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구감소 대응 차원에서 청소년시설은 지역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 단위 방문·체험 수요까지 끌어안는 방향이 바람직함.

5-8. 환경·기후·생태 분야

소결 환경행정을 규제행정의 보조영역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전략'의 핵심축으로 격상

1) 성과와 의미

(1) 수질·오염관리의 기본 행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

- 수질오염총량제 대응,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악취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기초 환경규제 행정은 일정 수준 작동하고 있음.
- 이는 임실군이 관광·농업·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함.

(2) 생태하천·생태복원·생태관광 기반 조성

-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 삼천리길, 성수산 왕의 숲길, 가시연꽃 자생지 복원, 봉황 생태공원, 평지천 유지관리 등은 환경행정이 단순 규제를 넘어 생태공간 조성과 지역 매력 자산화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환경사업이 관광, 치유, 체류형 자원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선 제9기 전략자산으로 활용 가능성이 큼.

(3)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체계의 정책 틀 형성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감축과제 점검체계 등은 기후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7개 부문 43개 세부과제 운영은 향후 민선 제9기에서 부서별 기후행정을 묶는 틀로 활용될 수 있음.

(4) 친환경차 보급과 미세먼지 대응 확장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차·전기화물차 보급, 미세먼지 대응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정책으로서 일정 성과를 냄.
- 이는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여주는 데 유용한 분야임.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수질오염총량제는 민선 제9기 최대 환경리스크 중 하나

-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초과와 축산계 배출부하량 문제는 단순 환경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개발사업·산업단지·관광단지 추진을 제약할 수 있는 전략적 리스크임.
- 즉, 환경문제가 곧 개발 가능성의 한계를 좌우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2) 생태사업이 많지만 전략브랜드는 아직 약함

- 생태하천, 숲길, 생태공원, 자생지 복원 등 개별사업은 많으나, 이를 하나의 '임실형 생태도시 전략'으로 통합하는 메시지는 아직 약함.
- 민선 제9기에서는 각각의 사업을 따로 보기보다, 관광·정주·힐링과 연계한 상위 전략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3) 탄소중립 정책의 행정계획은 있으나 생활체감은 아직 약함

- 계획과 평가체계는 갖춰졌으나, 군민 입장에서는 탄소중립이 아직 구체적 생활 변화로 체감되기 어려움.
- 민선 제9기에서는 탄소중립을 농업·축산·교통·건축·생활실천과 연결해 보여줘야 함.

3) 민선 제9기 전략 시사점

(1) 민선 제9기 환경전략의 핵심은 "생태·기후·관광 통합전략"

- 환경은 규제부서의 고유영역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수변공간·힐링도시·정주환경과 연결되는 전략축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2) 수질오염총량제 대응은 군정 최상위 리스크 관리과제로 격상

- 민선 제9기 핵심개발사업이 환경부하 규제로 제약받지 않도록, 축산·하수·비점오염시설·공공사업 입지 조정을 포함한 전군 차원의 대응체계가 필요함.

(3) 생태공간은 '관리'가 아니라 '활용'까지 연결해야 함

- 삼천리길, 성수산, 생태하천, 봉황생태공원은 단순 조성·유지관리에서 끝나지 않고, 체류형 관광코스·주민 이용공간·건강치유 프로그램과 결합되어야 함.

5-9. 청소·자원순환·위생 분야

소결 청소행정을 '민원 대응' 수준에서 벗어나 관광도시 품격과 자원순환도시 전략으로 끌

1) 성과와 의미

(1) 생활폐기물 처리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 소각, 음식물, 재활용, 매립, 대형폐기물 처리까지 기초 자원순환 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 영농폐비닐,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등 세부사업도 병행되어 자원순환 기반이 확장되고 있음.
 -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와 처리시스템 유지
 - 영농폐기물과 재활용품 분리 배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정비 사업 유지
 - 위생과 안전 점검 체계 유지와 식생활 안전체계 구축

(2) 청소인력 안전과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 청소차량 교체, 보호장구 지급, 예방접종, 휴게시설 개선 등은 청소행정을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노동·안전 행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3) 가로청소·하천정화·위생관리로 생활환경 품질 유지

- 가로청소, 하천하구 정화, 위생업소 점검, 맛집관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임실군의 생활환경과 관광환경의 기초 품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
- 특히 축제도시·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임실군에서 청소·위생 수준은 도시 이미지의 바닥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관광 증가에 비해 청소인력·장비 여력 부족

- 여름철, 축제기간, 낙엽수거 시기 청소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됨.
- 이는 민선 제9기에서 관광객 증가를 목표로 할수록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큼.
- 결국 관광도시 전략과 청소행정 역량은 함께 가야 함.

(2) 폐기물 분리배출과 재활용은 주민참여 한계 존재

- 영농폐비닐 분리배출 미흡, 생활폐기물 성상별 수거체계 한계, 거점배출시설 상시관리 인력 부족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임.

- 즉, 시설 설치만으로 자원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 행동변화와 현장관리 역량이 함께 필요함.
- 청소 행정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자원 순환 정책과 탄소중립 대응, 공모사업 발굴 등 역량이 요구되지만 현재 구조로는 취약함.
- 대부분 업무가 생활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재활용률 증가 정책 실현에 한계 있음.
- 환경과 청소기능이 분리 운영되어 정책 연계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임.

(3) 위생정책도 '관리'에서 '브랜드'로 발전할 필요

- 현재 위생업소 점검과 맛집 지원은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민선 제9기 관점에서는 이를 '안전한 먹거리 도시'와 '관광품질 전략'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3) 민선 제9기 전략 시사점

(1) 청소행정을 관광전략의 하위기반이 아니라 핵심 기반으로 인식해야 함

- '천만관광'이 목표라면, 쓰레기·청결·위생·하천환경은 곧 도시 경쟁력임.
- 민선 제9기는 관광지·축제장·시가지의 청결 유지체계를 전략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청소행정의 단순한 집행부가 아닌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을 높이는 정책부서의 위상 필요.
- 예산·계획 수립과 폐기물 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함.

(2) 자원순환정책을 주민참여형으로 전환

- 마을교육, 인센티브, 노인일자리·녹색지킴이 연계 등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해 관리비용을 줄이고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이 요구됨.
- 임실의 고령사회 특성을 고려할 때 고령자 대형 폐기물 지원 등 정책 기획 필요하고, 지역의 인구구조와 특성을 반영하여 국책 공모 사업 개발 필요.
- 현재 부서 명칭과 실제 수행 업무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칭과 기능, 업무 배치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팀과 가로청소팀 간 유사·중복 업무를 명확히 조정하고 업무 분장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위생정책은 '임실 맛·안심 브랜드'로 확장

- 맛집, 위생등급제, 축제위생관리를 묶어 민선 제9기에는 음식 안전과 지역브랜드를 동시에 살리는 전략이 필요함.

5-10. 보건·통합건강관리·방문건강·치매·정신건강·감염병 건강검진 방역 분야

소결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생애주기 건강도시' 전략으로 보건정책을 확장해야 함

1) 성과와 의미

(1) 공공보건의료 기본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

- 시설 개·보수, 장비 구입,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등은 농촌형 지역보건체계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함.
- 이는 고령화·분산거주 지역에서 필수적인 행정 기반임.

(2) 건강증진사업의 생활밀착성 확대

- 건강생활실천, 영양플러스, 모바일헬스케어, 금연지원, 구강보건, 암검진 등은 예방 중심 보건정책의 확대를 보여줌.
- 단순 진료 중심에서 군민의 건강행태를 바꾸려는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3)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출생지원정책의 다층화

- 방문건강관리, 한의약, 심뇌혈관 예방, 모자보건, 난임지원, 임신부 이송, 기저귀·분유, 출생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등은 생애주기별·취약계층별 건강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주민복지과의 통합돌봄과 보건사업과의 재택의료가 결합될 경우, 민선 제9기에서 상당한 정책적 상승효과가 기대됨.

(4) 정신건강·자살예방·치매 정책 기반 형성

- 정신건강 고위험군 관리, 우울증 선별검사, 생명지킴이 양성,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등은 농촌지역에서 증가하는 정신건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으로 의미가 큼.(치매안심센터 운영강화, 선별검사, 치매전담 인력 확충 등)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보건사업도 여전히 개별사업 중심

- 건강증진, 방문보건, 모자보건, 정신건강, 치매, 재택의료가 모두 운영되나, 민선 제9기 관점에서는 이를 한 사람의 생애주기 건강관리 체계로 재조직할 필요가 있음.

(2)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지속

- 금연클리닉, 영양플러스, 모자보건, 방문건강관리 등에서 공통적으로 신규 대상자 발굴 어려움이 제기됨.
- 이는 단순 홍보 부족 문제가 아니라, 인구감소·분산거주·서비스 접근성 한계가 함께 작용한 결과임.

(3) 재택의료·치매·정신건강은 민선 제9기 확장 필요 분야

- 현재는 기반 형성 단계이지만, 초고령사회에서는 재택의료와 정신건강이 보건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 아직은 사업 규모와 지역 연계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민선 제9기에서 의도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주변화될 수 있음.

3) 민선 제9기 전략 시사점

(1) 보건정책을 '생애주기 건강도시 전략'으로 재편

- 영유아-아동-청소년-성인-노인-고위험군을 잇는 전주기 건강관리 체계로 접근해야 함.

(2)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의 결합 강화

-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 보건사업과 재택의료는 분리 운영보다 하나의 지역완결형 건강돌봄 체계로 묶을 때 효과가 큼.

(3) 정신건강 및 치매는 민선 제9기 핵심 복지·보건 의제로 격상

- 우울, 자살, 고립, 중독, 노년 정신건강, 치매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음.
- 민선 제9기에서는 정신건강정책을 보조영역이 아니라 삶의 질과 공동체 안전의 핵심축으로 다뤄야 함.

(4) 감염병 등 전염병 및 재난 국가재난대비 전 직원 상시 교육

- 수해·대형산불·화재·감염병 등 각종 재난대비 시나리오 구축 및 보건·의료원 매 분기 상시 훈련 실시.

5-11. 민선 8기('25-'26년) 현안사업 평가 의견

번호	담당 부서	사업명	진단 평가	평가 의견
1	주 민 복지과	저소득층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계속	- 사업유형 다양성 제고 - 신규 사업단 개발 필요
2		장애인 복지 증진 강화	계속	- 장애인 현황 파악과 맞춤형 서비스 계획 마련 - 수어 통역 서비스 확대 방안 제고
3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계속	- 자원봉사단 활성화 방안 마련 - 서비스 중단 해소 예산 확보
4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	계속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계속	장기요양 기관 처우 개선 차후 검토
6		임실군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계속	장애인 자원사업에 적합한 시설 맞춤형 등 새로운 마무리 필요
7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계속	-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대상자 발굴 시스템 점검 - 위기 대상자 관리 체계 강화
8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계속	- 예산절감을 위한 다빈도 외래 진료자 관리 체계 강화 - 다만, 건강권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 필요
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계속	중복 및 부정수급 관리 실태 파악 필요
10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계속	긴급 지원을 위한 복지 기금 조성 필요성 검토
1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계속	성과 관리 실적 지역사회공유
1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강화	계속	
13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	계속 (수정)	- 어르신 목욕비 및 이용료 자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검토 - 하고 대안을 모색 반영하여 사업 내용 변경 요청
14		노인복지시설 단체 지원	계속	- 지방예산 부담률이 높으므로 공모사업 발굴이나 - 타부서 사업과 융합하는 방법 모색 필요
15		경로당 운영 및 기능 보장	계속	
16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	계속	-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역 활성화와 노인 건강 등에 매우 중요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관리와 사업 발굴 제고
17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운영	계속	보건 및 의료원 등과 협력, 연계 중요
18		그냥드림 사업	수정	- 그냥 드린다는 사업명칭에 대한 제고 - 수혜대상자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특정계층에게만 한정되는지 검토 요청
19		고독·고립가구 맞춤형 지원	계속	- 마을 공동체와 지역 밀착을 중요시하여 - 한사람도 지나치지 않는 행정 필요
20		장기요양 요양세대 통합돌봄 연계 강화	계속	
1	여 성 가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수정	- 일회성 사업이 많고,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합리적 예산 계획 제고 필요 - 양성평등 예산이나 여성 발전 기금 조성 계획 검토를 통해 - 임실군의 상인지 정책과 주류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
2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	계속	- 어린이집 영유아 원아 모집 어려움과 시설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마련 필요 - 최근 아이가 되고 있는 법인어린이집 현황분석과 대책마련 요청
3		가족지원 통합 서비스 활성화	수정	- 직영 운영하는 가족센터 사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효율성과 효과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하고 위탁 운영 등 발전 전략 필요
4		안전한 육아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계속	

번호	담당 부서	사업명	진단 평가	평가 의견
5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지원	계속	
6		아동이 행복하고 가정이 안심하는 복지	계속	-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과 연계 서비스 지속 강화 -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학교와 가정, 또래 관계 뿐 아니라 자아정체성 및 자아 존중감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질 유지 필요
7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지원	계속	- 사례수가 적다고 해서 학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학대 예방 체계 구축을 보다 촘촘하게!
8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속 (수정)	- 아동수당 지급이 신청주의 원칙으로 시행되는데, 2026년 60일 초과로 인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하며 대안이 없는지 검토 요청 - 출생신고 후 자동 지급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방안 검토 요청
9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계속	
10		오수청소년센터 운영	계속	
11		청소년육성 및 보호활동	계속	
12		청소년수련원 운영	계속	
13		청소년수련원 시설 보완사업	계속	시설 활용 활성화 계획 필요
1	환경 보호과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계속	
2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계속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계속	
4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계속	
5		가축분뇨배출시설 적정 관리	계속	
6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1단계)	계속	
7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2단계)	계속	
8		임실 삼천리길 조성사업	계속	
9		성수산 왕의 숲길 조성사업	계속	
10		대정저수지 가시연꽃 자생지 보전·복원	계속	
11		봉황생태공원 유지관리	계속	
12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유지관리	계속	
13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실행 강화	계속	
14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계속	
15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계속	
16		미세먼지 저감 대책 사업	계속	
1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	계속	
18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계속	
19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계속	
20		비점오염저감시설 개선사업	계속	
2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	
1	청 소 위생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계속	- 중도 포기로 인해 예산과 인력 낭비가 발생하기 않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 필요 - 석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자와 주민 안전대책 철저
2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계속	사업장 관리 폐기물 관리 철저와 부적정 관리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과 시행 요청
3		생활폐기물 쾌적하고 신속한 처리	계속	- 생활 폐기물 체계 점검과 부족한 장비와 인력 수급 계획 마련 - 관리체계 효율성에 대한 종합 검토와 행정 조직 검토 등 필요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원 안전체계	계속	

번호	담당 부서	사업명	진단 평가	평가 의견
5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안전 관리	계속	
6		생활폐기물 재활용 증대 및 자원순환	계속	▪ 노인일자리 등과 연계하고 마을 단위 홍보 등 계획 좋음
7		영농폐기물 신속한 수거로 생활환경 조성	계속	▪ 영농 폐기물 수거율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거 과정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도출 필요
8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계속	
9		섬진강수계 하천 하구 정화활동	계속	▪ 안전대책 집중 검토 후 철저한 대책 마련 요청
10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계속	
11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음식문화 조성	계속	
1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계속	
1	보 건 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계속	▪ 인구감소 및 응급시스템 구축(응급기기보급)으로 ▪ 민선 제9기 폐쇄대상 전담 보건지소 외 사업
2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	계속	
3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	계속	
4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계속	
5		구강보건사업	계속	
6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계속	
7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	계속	
8		모자보건사업	계속	
9		출생장려 지원사업	계속	
10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계속	
11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계속	
12		정신건강사업	계속	
13		정신재활시설 운영	계속	
14		자살예방사업	계속	
1	의 료 지원과	건강검진사업	계속	▪ 이동검진 폐지 내원검진 지속
2		맞춤형 환자진료	계속	
3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계속	
4		치매관리사업	계속	
5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속	
6		의약품무관리 및 마약류관리	계속	
7		방역소독사업	계속	
8		국가결핵예방사업	계속	
9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계속	
10		입원실 운영	계속	

5-12. 미래농업 전환 분야

소결 '청년유입형·고부가가치형·스마트 전환형 농정'으로 재편되어야 함

1) 성과와 의미

(1) 농업인 생활안정과 영농 지속 기반 유지

- 전북 농민 공익수당,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여성농업인 지원, 재해보험, 안전공제,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등 농업인 생활안정과 복지지원 체계가 비교적 촘촘하게 운영됨.
- 이는 임실군 농정이 단순 생산지원이 아니라 농업인의 생활 유지와 영농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농민공익수당 확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등은 농업 복지를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확장한 사례로 평가됨.

(2) 식량작물 구조조정과 전략작물 전환 기반 형성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전략작물 직불제, 논콩 재배단지,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등은 쌀 중심 농업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초기 전환 시도로 의미가 있음.
- 이는 단순 면적조정이 아니라, 향후 임실군 농업이 국가정책 연계형 전략작물 체계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3) 원예·과수·특용작물 중심의 소득작목 기반 확충

- 시설원예 생산기반, 시설하우스 개·보수, 과수 기자재, 고추 육묘·농자재·농기계 지원 등은 벼 중심 구조를 넘어 소득형 작목군을 유지·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동함.
- 고추, 딸기, 토마토, 오이, 과수, 조미채소, 약용작물 등은 민선 제9기에서 고부가가치 농업 전략작목군으로 육성 가능성이 큼.

(4) 스마트농업 기반과 청년농 유입 가능성 제시

- 오수 봉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ICT 연계 스마트팜 온실, 시설원예 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등은 스마트농업 전환의 초기 인프라를 형성함.
- 특히 오수 봉천 스마트팜은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단순 시설 지원을 넘어 청년농 정착과 기술농업 실험 거점으로 발전 가능성이 큼.

(5) 농촌인력 부족 대응체계의 제도화

-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공공형 계절근로 5년 연속 선정,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 및 운영 개시,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은 농업생산 유지의 핵심 병목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평가됨.
- 이는 민선 제9기 농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반정책 자산임.

(6) 농업기술·가공·현장지원 기능의 확대

- 농업인 교육, 농업인대학, 전략작목 상설교육, 농기계 임대·대행, 영농부산물 파쇄,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HACCP 컨설팅, 가공창업 교육 등은 생산-기술-가공을 연결하는 현장지원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농기계 임대와 대행은 고령영세농의 영농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 유지 인프라로 작동함.

(7) 기술보급과 과학영농 기반 확대

- 우량종자 보급, 병해충 공동방제, 복숭아·고추 실증재배, 자동관수·관비,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개시 등은 과학영농 기반과 지역특화 작목 경쟁력 강화의 기초를 형성함.
- 기술보급 기능이 단순 지원을 넘어 전략작목 경쟁력의 기술적 토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8) 축산 기반 유지와 방역체계 운영

- 한우, 양돈, 양봉, 염소, 가금 등 축종별 지원과 함께 조사료, 분뇨처리, 폭염대응, 방역약품,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공동방제단, CCTV 방역인프라 구축이 병행됨.
- 이는 축산을 단순 소득원이 아니라 산업안전망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줌.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농정이 여전히 개별 보조사업 병렬구조에 머무름

- 농민복지, 친환경, 전략작물, 원예, 스마트농업, 계절근로, 축산, 가공, 기술보급이 모두 중요하지만, 아직은 하나의 미래농업 전략으로 통합된 인상이 약함.
- 전북 농민공익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개편 필요. 개편 방향의 경우 재원 조달 방법을 중심으로 현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맞춰 큰 틀에서 기본사회 방향 및 사회연대 경제에 맞춰 개편이 필요하며, 임실군 전체적으로 관련 업무에 맞춘 조직개편도 필요한 상황임.
- 즉, 사업은 많으나 '민선 제9기 농업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아 보이므로 공약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2) 전략작물 전환의 농가 수용성과 산업화 기반 부족

- 논콩·가루쌀 등은 정책 방향상 필요하지만, 수익성, 판로, 기술, 저장·가공 기반이 충분히 받쳐주지 않으면 농가의 지속적 전환은 쉽지 않음.
- － 기후변화 대응 특화작목 개발 필요
- － 복숭아의 비가림 재배방법에 대한 실증시험 및 농가보급 필요
- － 임실군 기후특성에 맞는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작목 개발 필요
- － 다양한 과수와 아열대 채소작물 개발 필요

(3) 스마트농업은 설치보다 운영모델이 더 과제

- 스마트팜은 상징성이 크지만, 운영주체·품목·교육·유통·수익모델까지 종합적으로 설계된 단계는 아님. 스마트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 필요.
- 특히 청년농 유입과 정착으로 연결하려면 주거-실습-영농-판로를 묶는 모델 설계가 더 필요함.
- －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을 넘어 광역 임대형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필요.
- －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인 청년농 교육시스템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

(4) 농촌인력 정책은 유치 이후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 계절근로자 유치는 성과이나, 향후 생활관리, 안전사고, 인권보호, 문화갈등, 농가 만족도 관리가 함께 뒤따라야 함.
- 인력정책은 이제 유치 규모보다 관리 품질이 더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

(5) 가공·창업은 기반은 형성됐으나 시장경쟁력은 취약

- 가공센터 운영과 교육은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 개발과 브랜드 경쟁력 확보는 아직 미흡함. 사업성과가 도출되고 농가에 확산될 수 있는 농특산물 가공시스템 운영 필요.
- － '만드는 단계'에서 '팔리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유통·브랜딩 전략이 필요함.

(6) 축산은 경쟁력 지원과 환경규제의 긴장이 구조화

- 생산기반 지원은 필요하지만, 악취·분뇨·가축질병·탄소중립 압력은 더 커지고 있음.
- 민선 제9기 축산정책은 생산성만이 아니라 환경·방역·주민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 축산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7) 과학영농 선도 농촌지도자회 운영, 농촌여성 역량개발 지역리더 육성

- 매년 반복되는 교육 및 행사, 회원수 감소, 신규 회원 유입 저조로 인하여 교육 사업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필요.

(8)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

- 기후변화, 스마트농업, 정밀농업, 지역특화작목 등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편 필요.
-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에 대해 관습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최근 트렌드와 지역소멸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반영된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9) 임실군 친환경농업 활성화 필요

- 임실군 친환경농업 기반(재배면적, 재배농가수)이 전북특별자치도 최하위 순위에 위치하고 있음. 청정 임실 농특산물의 판로개척,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재배기술의 보급 및 활성화 필요.

(10) 농가 필수농자재 지원사업 전체적인 리모델링 필요

- 미량요소복합비료를 버 재배지에 시비하는 것은 과학적이라 보기 어려움. PE필름 보다는 생분해성 필름 농가 보급 필요.

(11) 농업인 보조사업 개선 필요

- 보조사업이 군비 100%로 특정 업체(농가)에 집중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3) 민선 제9기 전략 시사점

- 농업정책의 핵심은 생산지원 확대가 아니라 농업구조 전환에 있어야 함.
- 농업을 전략작물 전환, 고부가가치 원예특화, 청년 유입형 스마트농업, 노동력 대체 및 공동화 대응, 기술·가공·유통 연계형 농업으로 재정렬할 필요가 있음.
- 마트팜은 민선 제9기 대표 농정브랜드로 육성할 가치가 큼.
- 기술보급은 '시범'에서 '표준'으로, 가공센터는 '교육장'에서 '농식품 창업플랫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축산은 '생산지원'에서 '지속가능 축산'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함.

5-13. 농촌활력·먹거리·귀농귀촌 분야

소결 '개별 농촌사업 집행'에서 '정주·먹거리·공동체·귀촌이 결합된 농촌생활권 전략'으로

1) 성과와 의미

(1) 마을공동체와 주민주도형 농촌정책 기반 유지

- 행복마을, 생생마을, 농촌 왕진버스, 클린농촌 만들기, 시·군역량강화, 중간지원 조직 육성 등은 주민 참여형 농촌정책 기반을 유지한 성과임.
- 이는 농촌정책이 단순 시설투자보다 공동체 역량과 주민 주도성 강화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줌.

(2)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학교급식 체계의 정착

- 관내 학교 전품목 급식 공급, 무상급식·친환경급식·우수농산물 공급 통합지원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의 핵심 성과임.
- 이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와 먹거리 복지를 결합한 구조로, 민선 제9기 대표 체감정책 자산 중 하나임.

(3) 로컬푸드·유통·가공·브랜딩 체계의 확대

- 로컬푸드 행복장터, APC 출하, GAP 인증, 통합마케팅, 직거래장터, 포장재·택배비 지원, 농특산물 홍보 등은 생산 이후의 판로·유통·브랜드 체계를 다층화한 성과임.
- 임실군 농특산물 판촉에 대한 전략이 미비한 상황임. 농특산물 상품화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단순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이 아닌 다양한 판촉 프로모션이 필요한 상황임.
- 몇몇의 사업등의 경우 본 예산이 아닌 추경예산 편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성과가 좋고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의 경우 본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임.
-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 운영과 김장페스티벌 성과는 지역농산물 산업화의 가능성을 보여줌.

(4) 농촌개발과 생활거점 조성 축적

-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농촌협약 기본계획,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농촌공간정비 등은 농촌 정주기반 재편의 장기 인프라 축적으로 의미가 큼.

(5) 귀농귀촌 유치 기반 확대

- 정착지원, 임시거주시설, 상담·박람회·체험학교 운영 등은 인구유입 대응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이며, 임시거주시설 만실 운영은 실제 수요 존재를 보여줌.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마을사업이 많으나 생활권 전략으로의 통합은 미흡

- 개별 공모사업이 누적되었지만, 여전히 어떤 농촌생활권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상위 전략은 약한 편임.

(2) 먹거리정책은 생산-소비 연계 고도화 필요

- 학교급식 체계는 구축됐으나, 친환경·로컬푸드·공공급식과 지역농가의 기획생산 연계는 더 촘촘해질 필요가 있음.

(3) 귀농귀촌은 유치보다 정착이 더 큰 과제

- 임시거주시설 수요는 높지만 퇴거 후 정착률은 낮아, 현재는 유입은 있으나 안착은 약한 구조임.
-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역내 인구 유출 예방과 지역 소득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4) 농촌개발은 운영모델이 뒤따라야 함

- 생활거점과 중심지 사업은 준공 이후 운영주체, 프로그램, 유지관리 재원까지 설계되지 않으면 하드웨어 중심 사업으로 남을 우려가 있음.

3) 민선 제9기 전략 시사점

- 농촌활력정책은 "마을사업"이 아니라 생활권 재생 전략으로 전환해야 함.
-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농업-복지-교육을 잇는 허브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은 홍보정책이 아니라 인구정착정책으로 재편해야 하며, 주거·영농실습·농지정보·멘토링·생활적응을 묶은 정착 패키지가 필요함.
- 농식품 유통·가공은 농업 부속이 아니라 지역산업화의 핵심축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5-14. 민생경제·기업·에너지·교통 분야

소결

'지원행정 중심 경제정책'에서 '지역순환경제·투자유치·정주교통 혁신' 중심으로 전환

1) 성과와 의미

(1) 민생경제 방어와 지역상권 유지

- 전통시장 지원, 민생안정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임실사랑상품권,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카드수수료 지원 등은 경기침체기 지역경제 방어정책으로 기능함.
- 특히 임실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순환을 유지하는 핵심수단으로 자리잡음.

(2) 사회적경제와 지역일자리 기반 유지

-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 로컬JOB센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신중년 취업지원 등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역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여줌.

(3) 기업지원과 산업입지 관리

- 오수 제2농공단지, 임실 제2농공단지 투자협약, 중소기업 환경개선, 스마트 제조 혁신, 물류비 지원 등은 기업유치 기반을 지속 관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4) 에너지복지와 신재생에너지 확장

- LPG배관망 구축,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햇빛소득마을 대응은 에너지정책을 생활복지와 주민소득정책으로 연결하는 흐름을 보여줌.

(5) 교통복지와 생활교통 서비스 유지

- 농어촌버스, 행복콜버스·택시, 통학택시, 특별교통수단, 복지교통카드,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은 인구감소지역의 이동권 유지정책으로 기능함.
- 임실역 KTX정차 개량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중앙 부처 및 정치권에 대한 대응 전략이 미흡한 상황임. 도와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 방안 마련을 통해 중앙 부처 움직임에 대한 치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함.

(6) 기본사회에 대한 정책 마련 필요

- 국민주권 정부에서 추진중인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에 대한 정책 마련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즉,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 농어촌버스 운영, 농어촌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경영안정 뿐만 아니라 주택, 돌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본사회 서비스 영역을 명확히 검토하고,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와 중간지원조직 육성 방안 등에 대해서 민선 제9기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 지원 및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계층과 기업들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필요시 별도 업무 지원을 통한 사업 참여도 향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경제정책이 방어적 지원에 머물 우려

- 상품권, 보조금, 이차보전은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칫 지역경제 체질개선보다 보전성 지원정책에 머물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지역 내 경제 순환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공약사업인 공공발주 사업비 지역화폐 의무사용제 등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농공단지 분양과 기업유치는 외부 변수에 민감

- 산업입지 기반은 갖춰졌으나, 실제 투자와 고용창출은 경기상황과 외부기업의 사결정에 크게 좌우됨.

(3)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한계

- 공공형 일자리와 공모형 사회적경제는 사업 종료 후 자생력이 약할 수 있음.

(4) 교통복지의 비용 증가와 수요 감소 딜레마

- 버스 이용객 감소, 적자노선 보전 확대, 맞춤형 교통서비스 유지비 부담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음.

(5)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역량 의존도가 높음니 행정이 적극 뒷받침

- 주민동의, 조합 설립, 부지·계통 연계 문제 등으로 행정지원 없는 자생적 추진은 쉽지 않으므로 전 직원의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3) 민선 제9기 전략 시사점

- 경제정책은 민생지원 + 산업전환의 이중전략이어야 함.
- 임실사랑상품권은 단순 할인수단을 넘어 지역순환경제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교통정책은 복지교통을 넘어 정주권 보장형 교통체계로 재편해야 함.
- 햇빛소득마을은 민선 제9기 주민소득형 에너지 상징사업으로 키울 수 있음.
- KTX 정차는 교통상징사업에 그치지 않고 관광동선·환승체계·브랜딩 전략과 연결돼야 함.

5-15. 안전·재난·정주인프라 분야

소결 '사후복구형 행정'에서 '상시예방형 안전도시와 생활권 품질 전략'으로 전환

1) 성과와 의미

(1) 통합재난관리와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실,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관리감독자 교육, 시민 재해 대상시설 관리 등을 통해 재난대응의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함.
- 군수실에 재난상황실, 인구, 일자리, 농업농촌 등 민선 제9기 주요 지표 등을 모두 포함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방향 설정이 가능할 수 있는 AI 통합 모니터링 체계 필요.

(2) 풍수해·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축적

- 풍수해생활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소하천 정비, 급경사지 정비 등은 기후위기 대응형 재난예방 SOC 축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관련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그동안 지방하천(이운천, 백이천 등) 정비와 관련되어 도비는 확보되었는데, 군비가 확보되지 못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이도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중 주택편의시설과 편의시설 확충 등에 있어서 최근 LH, SH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건설 트렌드를 반영하여 원가 절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원가 절감된 예산을 기반 시설 확충에 더 투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하천정비와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 지방하천 정비, 배수로·세천·마을안길 정비, 군민안전보험, 취약계층 화재안전, CCTV 확대 등은 재난예방과 생활안전을 결합한 정책으로 평가됨.

(4) 도로·가로등·안전시설 등 생활 SOC 기본 유지

- 도로정비, 가로등 관리, 차선도색, 교차로 개선 등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정주 품질과 안전 체감도를 지탱하는 기초 행정임.

(5) 도시재생과 정주거점 조성 본격화

- 정주활력센터, 오수지구 도시재생, 이도지구 주거정비, 공공임대주택, 반다비체육센터 등은 인구소멸 대응형 정주거점 조성사업으로 의미가 큼.

(6) 농업기반시설과 재해예방 시설 확충

- 수리시설 개보수, 관정, 지표수 보강, 습답개선, 저수지 정비, 배수개선 등은 농업생산 유지와 기후적응의 기반시설로 기능함.

(7) 시설사업소 총괄 관리 필요

- 필요시 민선 제9기에 상하수도 시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통합적으로 지원 관리 할 수 있는 별도 조직 신설을 통한 장기적 재정 절감과 시설 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안전정책과 정주정책의 전략적 통합은 미흡

- 재난예방, 하천정비, 중대재해, CCTV, 정주거점 조성 등이 하나의 정주안전 전략으로 통합되어 보이지는 않음.

(2) 재난상황실 운영 인력과 전문성 취약

- 상시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말·야간 비전담 인력 중심 구조는 한계가 있음.
- 재난상황실을 예전 방식의 운영을 넘어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AI 재난상황실 운영시스템으로 전면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3) 대형사업의 절차 지연과 자원 부족

- 재해예방, 하천정비, 도시재생, 공공임대, 농업기반시설 모두 보상·심의·설계·자원매칭 문제를 안고 있어 공정관리 리스크가 큼.

(4) 건설사업은 준공보다 운영이 더 과제

- 정주활력센터, 도시재생 거점, 체육센터, 공공임대는 건설 이후 운영주체와 프로그램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5)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의 재정압박

- 재난예방과 농업기반 정비 수요는 늘어나지만 군 재정은 한정돼 있어 우선순위화가 필요함.

3) 민선 제9기 전략 시사점

- 안전전략은 재난예방 인프라 + 상시상황관리 + 생활안전서비스의 3축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재해예방 투자는 민선 제9기 핵심 SOC 전략으로 격상해야 함
- 건설행정은 시설확충보다 생활권 품질 향상 전략으로 전환해야 함
- 도시재생은 정주전략의 핵심축으로, 공공시설은 운영계획까지 동시에 설계해야 함
- 농업기반시설은 단순 토목이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형 생존 인프라로 인식해야 함

5-16. 상하수도·물환경·공공시설 운영 분야

소결

'시설 확충' 중심에서 '정주수요 대응형 물관리 체계'와 '운영가치 극대화' 중심으로

1) 성과와 의미

(1) 상수도 공급 안정성과 공급권역 확장

- 노후상수관망 정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유수율 제고,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등은 생활용수 공급 안정성과 정주기반 확충에 기여함.

(2) 하수도 보급률 확대와 개발수용력 확보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개량, 노후하수관로 정비는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보전, 개발수용력 확보를 동시에 뒷받침함.

(3) 운영 효율화와 기술집약적 관리 기반 형성

- 긴급보수, 원격검침단말기 교체, 정기안전점검, 관망도 작성, 유량계 검교정 등은 운영관리의 내실화를 보여줌.

(4) 공공체육·관광시설의 기본 운영 안정성 확보

- 군민회관, 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사선대관광지 등의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은 주민 삶의 질과 관광품질 유지의 기초로 기능함.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총사업비 부족과 설계 후 증액 문제

- 상하수도 사업은 설계 이후 사업비가 증가하는 구조가 빈번하여 재원협약이 핵심 리스크가 됨.

(2) 부지매입·민원·영향평가로 인한 지연 가능성

- 생활용수 개발, 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로정비 등은 부지와 주민수용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됨.

(3)물관리 행정의 전문성 요구 증가

- 자동제어 시스템, 통합운영실, 원격검침 확대로 인해 상하수도 분야는 더 이상 단순 시설행정이 아니라 기술집약형 운영행정이 되고 있음.

(4) 공공시설은 유지관리 중심, 운영전략은 상대적으로 약함

- 시설은 많아지는데 차별화와 이용활성화 전략은 아직 미흡하며, 유지관리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음.

(5) 임실군 유수율 및 상하수도 관리사업 리모델링 필요

- 임실군의 유수율 제고사업 역시 혁신적인 기술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행적인 관리에 집중되어 있음. 김해시 AI 스마트 물관리 본격화· '누수 제로 도시' 관망 유량·수압·수질 데이터를 실시간 AI 분석 → 누수·압력 변화·수질 이상 자동 감지, 즉시 경보 유수율 평균 85% 향상, 연간 누수 300만 톤 감소·예산 40억 원 절감 기대. 선진지 견학을 통해 고도의 유수율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선진지 견학 필요.
- 임실군 정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임실정수장 취정수시설 순찰 및 경비를 맡고 있는 청원경찰 대신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AI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3) 민선 제9기 전략 시사점

- 상하수도는 민선 제9기 정주전략의 핵심 기반 인프라로 재정립해야 함.
- 상수도는 공급확대와 유수율 개선의 이중전략이 필요함.
-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 아니라 관광·개발 수용력 관리수단으로 인식해야 함.
- 공공시설은 단순 유지관리 대상이 아니라 생활체육·문화·관광 복합 거점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운영성과를 이용률, 프로그램, 주민만족도, 관광연계 효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함.

5-17. 민선 8기('25-'26년) 현안사업 평가 의견

1) 농산업 분야

번호	담당 부서	사업명	진단 평가	평가 의견
1	농 촌 지원과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	계속	
2		현장 지도역량 강화 및 전문화	계속	
3		농업인 수요중심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계속	
4		찾아가는 영농지원 농작업 대행단 운영	계속	
5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지원	계속	
6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가공 경쟁력 강화	예산축소	- 농산물가공센터운영 및 교육사업비 1/2로 조정 - 임실형 특산작물 가공상품 개발 필요
7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계속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임실형 특산자원 개발 필요
8		농업인 안전관리 및 농촌체험 활성화	계속	
9		과학영농 선도 농촌지도자회 육성	예산축소	농촌지도자회 회원 해외연수사업 중단
10		농촌여성 역량개발 지역리더 육성	예산축소	생활개선회 해외연수, 식문화개선 교육, 향토음식관 운영사업 1/2로 조정
11		농업의 미래 영농 후계세대 양성	예산축소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사업비 1/2로 조정
1	기 술 보급과	주요 농작물(벼, 논콩, 고추) 병해충 공동방제	계속	
2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신기술 보급	예산축소	벼재배단지 노동력절감 시범사업 중단
3		식량작물 우량종자 및 신품종 농가보급	계속	
4		임실 과수 명품화 안정생산 기술보급	예산축소	과수 유해조류, 복숭아 적화, 복숭아재해, 배 개화기 사업 예산 1/2로 조정
5		원예 검역병해충 및 돌발해충 방제 지원	계속	
6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 특화작목 육성	예산 축소	- 고온기 대응, 냉난방 에너지, 도라지종근재배 사업 예산 1/2로 조정 - 임실형 특화작목 개발 필요
7		축사 환경개선 및 스마트 생력기술 보급	계속	
8		고추 안정생산 및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	예산축소	고추자동관수관비시스템(사업중단)
9		특화작목 육성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운영	예산 축소	과수실증시험포, 딸기 교육장, 딸기명품화사업 예산1/2로 조정
10		임실N치즈축제 전시용 국화/조화류 생산	계속	치즈관광과 사업부서 이동
11		옥정호 경관조성용 분화국/현애국 생산	계속	옥정호힐링과 사업부서 이동
12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운영	계속	
13		과학영농 현장지원 종합시설 운영	계속	
14		농산물 안전분석실 분석환경 구축	계속	
1	농 업 축산과	전북 농민 공익수당	계속	기본사회에 맞춰 조직업무개편 필요
2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	계속	
3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계속	
4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계속	
5		농업인 영농활동 지원	계속	
6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계속	
7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 (논콩 재배단지 육성)	계속	
8		쌀 경쟁력 제고사업	계속	
9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계속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재배능가 대폭 확대 필요
10		필수 농자재 지원·농업경쟁력 강화	예산축소	- 미량요소복합비료지원, PE필름 논두렁지원, 감자재배지 멀칭비닐지원 사업 중단 - 특정농가에 집중된 군비지원 지양

번호	담당 부서	사업명	진단 평가	평가 의견
11		농업기계 지원	계속	▪ 농촌지원과 사업부서 이동
12		오수 봉천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계속	▪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필요
13		ICT연계 스마트팜 온실 지원	예산축소	▪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중단
14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	예산 축소	▪ 노지채소생산기반 지원을 제외한 6개 사업예산 1/2로 조정
15		고품질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	예산 축소	▪ 5개사업 모두 사업예산 1/2로 조정 ▪ 임실형 특화과수 작목 개발 필요
16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	예산축소	▪ 3개사업 모두 사업예산 1/2로 조정
17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및 운영	계속	
18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계속	▪ 기본사회에 맞춰 조직 업무개편 필요
19		축산농가 사육여건 개선	예산확대	
20		가축 개량 지원	계속	
2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계속	
22		쾌적한 축산 환경조성	예산확대	
23		가축질병 예방 지원사업	계속	
24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구축사업	계속	
25		가축사육 환경개선 사업	계속	
26		농지전수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추진	계속	
27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예산 확대	▪ 기본사회에 맞춰 조직 업무개편 필요
1	농 촌 활 력 과	활력있는 행복 임실 마을 만들기	계속	
2		농촌관광 및 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계속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	계속	▪ 기본사회에 맞춰 조직 업무개편 필요
4		학교급식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예산확대	▪ 기본사회에 맞춰 조직 업무개편 필요
5		농촌융복합시설 유지 및 관리	계속	
6		농·특산물 상품화 및 유통 활성화	예산 확대	
7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	예산 축소	▪ 홍보마케팅 사업 예산 1/2로 조정 ▪ 홍보담당관으로 사업부서 이동
8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 활성화 지원	예산 축소	▪ 판촉활성화 사업예산 1/2로 조정
9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촌협약)	계속	
10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농촌협약)(하운암)	계속	
11		농촌협약 추진(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계속	
12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예산축소	▪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조성 사업예산 1/2로 조정
13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계속	
14		농촌크리에이티브 지원 사업	예산확대	
15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개최	예산축소	▪ 추경 50백만 원으로 조정 ▪ 임실 김장페스티벌 사업 중단
16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예산축소	▪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예산 1/2로 조정
17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	
18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계속	

2) 지역개발·도시·주거·교통 분야

번호	담당 부서	사업명	진단평가	평가 의견
1	안 전 관리과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	계속	
2		군민 안전보험 운영	계속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	계속	
4		임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계속	
5		오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계속	
6		금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계속	
7		관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속	
8		신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속	
9		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속	
10		산바소하천 정비사업	계속	
11		방길소하천 정비사업	계속	
12		이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속	
13		하천재해 예방복구	계속	
14		지역현안 숙원사업	계속	
15		이윤천 지방하천 정비	계속	
16		백이천 지방하천 정비	계속	
17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계속	
18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재난상황실 운영	계속	
1	상 하 수도과	상하수도 요금관리	계속	
2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계속	
3		유수율 제고사업	계속	
4		임실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계속	
5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강진, 임실, 운암)	계속	
6		관촌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계속	
7		운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속	
8		운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속	
9		황두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속	
10		하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속	
11		원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확장사업	계속	
12		임실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	
13		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	
14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계속	
15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계속	
16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속	
17		학당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확장사업	계속	
18		정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속	

번호	담당 부서	사업명	진단평가	평가 의견
1	경 제 교통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유지보수	계속	
2		임실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	계속	
3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계속	■ 기본사회에 맞춰 조직업무개편 필요 ■ ,중간지원조직 육성 필요
4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계속	
5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 지원	계속	
6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예산 축소	■ 40백만원(군비) ■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예산 1/2로 조정
7		임실군 읍·면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계속	
8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계속	
9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	계속	
10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	계속	
11		농어촌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계속	■ 기본사회에 맞춰 조직업무개편 필요
1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계속	
13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계속	
14		농공단지 분양·관리	계속	
15		신규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	계속	■ 기본사회에 맞춰 조직업무개편 필요
16		임실역 KTX정차 개량 사업	계속	
1	건설과	도로 및 가로환경 정비	계속	
2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계속	
3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	계속	
4		임실 정주활력센터 건립사업	계속	
5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계속	
6		신규 이도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속	
7		오수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계속	
8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계속	
9		위험도로 선형개선	계속	
10		그린 뉴딜 지중화사업	계속	
11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속	
12		교차로 개선사업	계속	
13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개발사업	계속	
14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	
15		습답개선사업	사업 중단	■ 100백만원(군비)
16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계속	
17		신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계속	
18		임실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계속	
19		개발행위허가 체계적 관리 및 신속처리	계속	
20		군계획도로 유지 보수	계속	

5-18.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생태계 분야

소결 '행사 지원형 문화정책'에서 '지역 문화생태계 구축형 정책'으로 전환 필요

1) 성과와 의미

(1)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접점 다변화

- 필봉정월대보름, 최갑석가요제, 필봉마을굿축제, 사선문화제, 임실도자기축제 등 지역 고유문화와 주민참여형 축제가 연중 분산 개최되면서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됨.
-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거리극축제, 상설공연 등은 문화정책이 특정 시설이나 특정 계층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권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줌.
- 작은별영화관 운영과 저가 관람 지원은 문화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실질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기능함.

(2) 지역 문화조직과 예술단체 기반 유지

- 임실문화원, 예총, 생활문화동호회, 농악단, 각종 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 활동의 조직 기반이 유지되고 있음.
- 문화원이 단순 보조금 수혜기관이 아니라 문화학교, 유적 답사, 향토사 발간, 오케스트라·무용단 등 세대 확장형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큼.
-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임실문화예술진흥회 운영은 주민 참여형 문화생태계의 바닥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3) 필봉농악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전승 기반 유지

-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운영, 전승활동비 지원, 취타대 운영, 전승학교, 거리극축제, 상설공연 등은 국가무형유산 보존을 생활문화와 공연관광으로 연결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필봉농악이 단순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상설공연과 퍼레이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적 콘텐츠로 재구성될 가능성을 확인시켜 줌.

(4) 폐교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문화 거점 실험

- 유휴 폐교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은 지역의 방치자산을 문화거점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큼.
- 학생·주민·예술인 공동 활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 건물 리모델링이 아니라 농촌형 복합문화기반 실험의 의미를 가짐.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문화정책이 여전히 '행사·보조사업 병렬형' 구조에 머무름

- 축제, 단체 지원, 공연, 체험, 전통문화 전승 등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이 하나의 임실형 문화정책 방향으로 통합되어 보이지는 않는 측면이 있음.
- 즉, 문화행정은 활발하지만 "임실군 문화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는 상대적으로 선명하지 않음.
- 기존의 문화행정 서비스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단절 없는 연속성에만 치중하여, 임실 공동체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정신을 발굴하는 데 소홀했다는 한계가 있음. 지역을 대표할 만한 고유의 서사(Storytelling)가 미흡했던바, 향후 단순 예산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임실만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복원하고 이를 브랜드화하는 '가치 중심형 문화 행정'으로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이 필요함.

(2) 문화단체 지원은 유지 기능은 강하나 자생력 강화는 제한적

- 다수 단체와 프로그램이 보조금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어, 자체 기획력·자생력·청년 참여 확대 측면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음.
- 문화단체 운영이 반복사업 중심으로 굳어질 경우, 새로운 기획과 콘텐츠 혁신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3) 전통문화 전승공간의 노후화와 활용도 간 격차

-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은 상징성과 역할이 크지만, 시설 노후화와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직접 제기되고 있음.
- 전승공간이 지속가능하려면 보존만이 아니라 관람·체험·교육·체류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공간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음.

(4) 폐교 활용 복합문화공간은 준공 이후 운영모델이 핵심 과제

- 시설 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가인데, 현재는 위탁·직영 여부와 활성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음.
- 즉, 하드웨어보다 운영 콘텐츠와 운영주체 설계가 관건임.

3) 민선 제9기 전략 시사점

- 민선 제9기 문화정책은 '행사 지원' 중심에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중심으로 이동해야 함.
- 핵심은 축제를 지역 정체성과 연결하고, 문화단체를 자생형 기획 주체로 키우며, 필봉농악 같은 전통자산을 현대적 상설콘텐츠로 전환하고, 폐교·유휴공간을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 재생하는 데 있음.
- 즉, 민선 제9기 문화전략은 '보여주는 행사'보다 '지역 안에 문화가 남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함.
- 새롭게 출범한 민선 제9기의 시작은 임실 문화예술 생태계의 온전한 활성화 기반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최적의 모멘텀으로 사료됨.
- 관성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임실 고유의 자산과 정신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종합적인 실태 진단과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함.
- 정신과 심미적 온기를 전하는 문화예술 생태계가 취약하면 내외부인 모두로부터 정주와 방문 매력 상실: 임실 문화예술생태계의 기초부터 제대로 점검할 전환기.
- '지역문화실태조사(2025)'에 따르면 임실은 문화사업의 숫자는 전국과 전북 지자체의 평균 이상이지만, 문화제도, 예술활동, 문화향유 부문에서 평균 이하의 낮은 수준임.
-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에 발맞추는 조례 제정과 개정 필수. 문화행정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비예산형 제도 구축 사업임.
- 취임사(7월 1일)의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존중 철학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문화제도 구비, 예술인 등록 지원 등에 집중 필요.

5-19. 문화유산 보존·활용·학술기반 분야

소결 '보존행정'을 넘어 '활용 가능한 역사문화 자산 전략'으로 고도화해야 함

1) 성과와 의미

(1) 문화유산 지정과 승격을 통한 상징자산 확대

-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지정,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 보물 지정예고, 신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대좌 도(道) 유형문화유산 지정 등은 임실의 역사문화 위상을 높이는 상징적 성과임.
- 하가유적, 의견비, 신흥사 목조문화유산 등 국가승격 추진은 임실군이 문화유산 행정을 수동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 발굴·승격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줌.

(2) 학술연구 기반 축적

- 국가·도 지정 및 승격을 위한 학술연구와 신청서 작성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은, 문화유산 행정이 단순 관리가 아니라 학술 근거에 기반한 정책행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함.
- 이는 향후 문화관광 자원화에도 연결되는 중요한 기반임.

(3) 문화유산 보수·보존 활동의 상시화

- 영천서원, 신안서원, 중기사 철조여래좌상, 진구사지, 오수리 석불 등 다수 자산에 대한 보수정비가 추진되고, 문화유산 주변정비·경미보수·화장실 정비·펜스 보수·안내판 정비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지정유산뿐 아니라 비지정 자산을 포함한 문화유산 현장관리 기능이 비교적 촘촘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4)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실험 확대

- 임실향교와 신안서원 중심의 향교·서원 활용사업은 문화유산을 단순 관람 대상이 아니라 체험·교육·지역경제 연계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흐름을 보여줌.
- 이는 민선 제9기 역사문화 정책에서 더 확장 가능한 가능성을 보여줌.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문화유산 정책이 여전히 보존행정 중심

- 지정, 보수, 정비, 연구 등 기본기능은 충실하나, 문화유산을 지역의 생활문화·관광·교육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장 여지가 큼.

(2) 행정절차 특성상 사업 속도에 구조적 제약

- 문화유산 보수정비는 설계승인, 자문, 변경협의 등으로 인해 사업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성과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음.

(3) 활용사업을 지속 수행할 지역 주체 부족

- 향교·서원 활용사업과 생생문화유산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내 운영 주체와 전문기획 인력이 필요하나, 현재는 이 기반이 충분히 두텁다고 보기 어려움.

3) 민선 제9기 전략 시사점

- 민선 제9기 문화유산 정책은 '지정-보수'에서 '보존-활용-브랜드화'로 확장되어야 함.
- 핵심은 지정유산의 국가승격 확대, 학술성과의 스토리화, 향교·서원·사찰·유적을 교육·관광·체험 자원으로 연결, 지역 운영주체 육성에 있음.
- 즉, 문화유산은 더 이상 관리대장이 아니라 임실의 역사 서사를 만드는 전략자산으로 다뤄져야 함.

5-20. 생활체육·전문체육·체육복지 분야

소결 '대회 지원형 체육행정'에서 '정주형 체육복지·스포츠도시 전략'으로 진화해야 함

1) 성과와 의미

(1) 군민 참여형 생활체육 기반 확충

- 생활체육지도자 10명 배치, 22개 종목 운영, 광장교실·생활체육교실·유소년축구교실·동호인리그 운영 등은 생활체육의 저변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성과임.
- 이는 체육행정이 경기단체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적 운동 참여를 확대하는 구조로 가고 있음을 보여줌.

(2) 체육대회와 관광·지역경제 연계 강화

- 자전거, 골프, 배드민턴, 양궁, 테니스, 탁구, 궁도, 패러글라이딩, 파크골프 등 다양한 전국·도 단위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체육이 단순 복지영역을 넘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임실N치즈축제와 체육대회를 연계한 구조 역시 임실형 스포츠관광의 기초모델로 볼 수 있음.

(3) 전문체육 경쟁력 유지

- 임실군청 사격팀의 국가대표 선발과 전국대회 입상은 군 단위 지자체 전문체육 운영의 상징성과 성과를 동시에 보여줌.
- 이는 체육정책의 외연을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까지 확장하는 기반이 됨.

(4) 사격장·양궁장의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효과

- 종합사격장과 국제양궁장은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기반으로 작동하며, 실제 이용 실적도 확인됨.
- 이는 임실군이 일부 종목에서 전지훈련형 체육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줌.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체육행정이 '대회 확대형'으로 흐를 가능성

- 신규 대회가 계속 늘어나면 군민 건강증진과 관광에는 도움이 되지만, 예산 효율성, 중복성, 지속가능성 검토가 뒤따르지 않으면 소모성 구조가 될 수 있음.

(2) 생활체육 수요 증가 대비 예산 부담 확대

- 주민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프로그램과 대회, 시설지원 요구도 함께 늘어나는데, 이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

(3) 전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비 누적

- 사격장과 양궁장은 운영성과가 있지만, 시설 노후화와 안정적 관리비 부담이 계속 누적될 수 있음.
- 즉, 대회 유치 자체보다 시설의 지속운영 가능성이 중요해지는 단계임.

3) 민선 제9기 시사점

- 민선 제9기 체육정책은 '많은 대회'보다 '전략종목과 군민체육의 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생활체육은 건강도시·정주복지 정책과 연결하고, 사격·양궁 등 강점 종목은 전지 훈련과 스포츠�관광 자산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체육정책은 행사성 지원이 아니라 군민 삶의 질과 체류형 경제효과를 함께 창출하는 체육복지 전략으로 재편돼야 함.
- 그동안의 체육 정책이 체육복지 구현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성과를 거두었다면, 민선 제9기는 군민이 일상에서 체육복지를 온전히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서비스 고도화'가 핵심 과제임.
- 기(既) 구축된 체육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주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전문 운영 시스템 도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할 때임.
- 특정 단체나 특정 공간의 군민만이 아니라 실제로 연령별, 세대별, 성별, 지역별 차별 없이 체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운영 방안 모색 필수.
- 임실형 체육복지로 군민 1인 1운동 프로젝트(One by One Project) 실현.

5-21. 체육시설 확충 및 스포츠 인프라 분야

소결 '건립 중심'에서 '운영·수요·기능 연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1) 성과와 의미

(1) 생애주기·대상별 맞춤형 체육시설 확충

- 시니어, 유아, 장애인, 일반 동호인 등 대상별 맞춤형 체육시설 공급 전략이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체육시설 정책이 단일 종합체육시설 중심이 아니라, 수요 분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2) 체육복지 기반의 공간적 확장

- 반다비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야구장 등은 군민 건강과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공간기반을 확대하는 역할을 함.
- 특히 파크골프와 시니어친화형 시설은 초고령화 지역인 임실군 현실과 맞닿아 있어 정책 적합성이 높음.

(3) 체육시설이 관광도시 이미지와 연계될 가능성

- 대회 개최와 시설 확충이 연결될 경우 체육시설은 주민복지뿐 아니라 외부 유입을 촉진하는 관광 자산이 될 수 있음.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시설 건립이 곧 이용 활성화를 보장하지는 않음

- 어떤 시설을 얼마나 짓는가보다 누가, 얼마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함.
- 수요 예측과 운영모델이 불충분하면 건립 이후 저활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운영비·관리비 부담 증가

- 시설이 늘수록 인건비, 유지관리비, 프로그램비도 함께 증가함.
- 민선 제9기에는 신규 시설 확대와 함께 운영 지속가능성이 핵심 평가기준이 되어야 함.

3) 민선 제9기 전략 시사점

- 체육시설 정책은 '시설 수'가 아니라 '이용성과' 중심으로 관리되어야 함.
- 시니어, 유아,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유치 기능을 각각 어떻게 차별화할지 기능별 설계가 필요함.
- 체육시설은 건설행정이 아니라 체육복지·정주복지·관광전략의 복합 인프라로 접근해야 함.

5-22. 도서관·독서문화·생활문화 인프라 분야

소결 '분관 운영'에서 '생활권 문화플랫폼'으로 역할을 더 넓혀야 함

1) 성과와 의미

(1) 도서관 기능의 복합문화화 진전

- 단순 대출·열람을 넘어 독서문화, 평생학습, 전시, 음악회, 인문학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되면서 복합지식문화관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

(2) 생애주기별 서비스 확대

- 북스타트, 어린이자료실, 전자책, 상호대차, 작은도서관 등은 생애주기와 생활권을 고려한 서비스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3) 오수 무인도서관과 반려동물 장서 특화의 실험성

- 오수 반려누리로 이전한 스마트 무인도서관과 특화장서 구성은 지역 특성과 도서관 기능을 결합하려는 실험적 사례로 볼 수 있음.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수장공간 부족과 시설 유지관리 부담

- 자료 증가에 비해 보존서고가 부족하고, 장비·시설 유지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 도서관의 생활권 거점 기능은 더 확장 가능

- 프로그램 운영은 활발하지만, 도서관이 마을·교육·관광·가족문화와 얼마나 더 연결될 수 있는지는 추가 과제로 남아 있음.

3) 민선 제9기 전략 시사점

- 도서관은 단순 문화복지시설이 아니라 생활권 문화플랫폼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음.
- 독서문화, 평생학습, 가족문화, 지역특화 콘텐츠를 결합한 작은 복합문화거점 전략이 가능함.
- 향후에는 도서관 분관체계를 주민 생활반경 중심으로 재편하고 특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23. 치즈산업·축제브랜드·치즈테마파크 분야

소결 치즈를 '축제'가 아니라 '산업-관광-체험-브랜드 체계'로 더 고도화해야 함

1) 성과와 의미

(1) '천만관광 임실시대' 구상의 중심축 형성

- 홍보마케팅, 박람회, 모객 지원, 시티투어, 열차관광, 관광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치즈테마파크 중심의 관광 외연을 넓히고 있음.
- 이는 관광정책이 단순 행사 홍보를 넘어 상시 유입 기반 구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2) 장미축제와 산타축제를 통한 계절 분산형 관광축제 체계 구축

- 장미축제와 산타축제는 치즈축제 일극 구조를 보완하며, 봄-가을-겨울로 확장되는 계절 관광축제 체계의 시작점이 됨.
- 특히 장미축제는 대규모 방문객 유입 실적을 통해 신규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줌.

(3) 치즈테마파크 기반시설과 체험 인프라 확충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치즈판매장, 플레이랜드, 치즈아이랜드, 장미원 경관 개선 등은 치즈테마파크의 체류형 공간화를 위한 연속사업으로 의미가 큼.
- 이는 단순 관람형 테마파크에서 체험·놀이·판매·숙박·이벤트가 결합된 복합 관광지로 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4) 치즈산업과 관광브랜드의 결합 유지

- 임실N치즈축제, 공동브랜드 평가, 출연기관 운영, 유제품 유통, 연구소 지원, 저지종 젖소 육성, 고품질 원유 생산 지원 등은 치즈를 단순 농산물이 아니라 지역 대표산업이자 대표브랜드로 유지하는 핵심 기반임.
- 특히 저지종 도입과 저지 요거트 판매는 치즈산업의 고급화·차별화 가능성을 보여줌.

(5) 학교급식을 통한 지역생산-지역소비 연결

-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은 치즈산업을 관광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내 소비 기반과 연결하는 중요한 정책임.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치즈 관련 사업이 많지만 통합 운영전략은 더 정교해져야 함

- 축제, 판매장, 체험시설, 놀이시설, 출연기관, 낙농지원, 학교급식이 각각 추진되는데, 이를 하나의 치즈산업 생태계로 통합 운영하는 체계는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2) 테마파크 기반사업은 건설보다 운영콘텐츠가 핵심

- 판매장, 아이랜드, 플레이랜드 등은 건립 이후 어떤 콘텐츠와 운영주체로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릴지가 더 중요함.
- 하드웨어 공급은 빨라지고 있으나, 운영기획은 후행될 위험이 있음.

(3) 치즈산업 고도화의 생산 기반은 아직 제한적

- 저지종 생축 확보 부족, 시설환경 개선, 신제품 개발 수요 등은 치즈산업이 브랜드 강도에 비해 생산기반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4) 축제 확대에 따른 교통·편의·안전 부담

- 치즈축제와 신규 장미축제는 방문객 확대 효과가 크지만, 교통혼잡·주차·보행·편의시설 문제는 함께 확대되고 있음.

3) 민선 제9기 전략 시사점

- 민선 제9기 치즈전략은 축제 중심 홍보를 넘어 '치즈산업 복합생태계'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함.
- 즉, 치즈 생산, 유제품 유통, 학교급식, 체험관광, 테마파크 체류, 계절축제,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야 함.
- 치즈테마파크는 단순 방문지가 아니라 임실형 체류형 관광경제의 핵심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임실 관광은 치즈산업을 필두로 한 단일 거점 중심의 집중형 전략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그 역할과 몫을 다했음.
- 다만, 치즈에 편중된 관광 구조는 장기적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선 제9기는 성수산의 산림휴양과 옥정호의 생태웰니스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다변화된 권역별 체류형 관광 구조'로 확장해야 함.
- 이제 치즈는 산업주체로서 다른 주체(생태, 공간, 예술, 휴양 등)와 협업 기획 필요.

- 치즈판매장, 테마파크 장미원, 플레이랜드 플랫폼 등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종합 고도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진척되고 있음.
- 향후 시설 완공에 따른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미래 운영 주체 및 중장기 활성화 전략을 안착시키기 위해, 실행력을 갖춘 ‘운영 전략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 회의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음.
- 산하 출연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의 자율적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조를 보강해야 함.
- 단순 행정 대행적 성격에서 벗어나 경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성과 중심 체계를 확립하고, 전문 인력 확보 및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연구소 리더의 지속성 및 축제 센터(계약직 센터장) 설치, 혹은 임실N치즈문화 관광재단으로 명칭 변경, 조직 구성(문화예술팀, 축제관광팀 설치) 할 필요.
- 임실치즈테마파크는 근본적으로 ‘치즈’를 매개로 한 비일상적 놀이공간으로,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감동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임.
- 인프라의 양적 확장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해당 목적이 현장에서 온전히 달성되고 있는지 콘텐츠와 서비스 전반의 만족도 및 매력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시점임.
- 치즈테마파크의 핵심 가치인 ‘방문객 감동’을 현장에서 직접 실현하는 주체는 잘 조성된 공간 인프라와 관내 13개 민간 위탁업체임.
- 향후 테마파크 운영 전략은 단순한 민간업체 관리·감독 위주의 규제 행정에서 탈피하여, 이들의 현장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하는 ‘상생 협력 전략’을 최우선으로 수립해야 함.
- (재)임실치즈엔식품연구소 관련하여서는 임실을 대표하는 국가적 브랜드인 ‘임실 치즈’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 브랜드의 원동력인 치즈 자체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임.
- 치즈 축제, 학교 급식, 식품 개발, 연구 네트워크 등 모든 외연 확장 사업은 결국 치즈의 본질적 가치에서 비롯되는바, ‘치즈의 질적 고도화 및 신소재 개발’이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브랜드의 가치 하락과 소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함.
- 현재 연구 분석 장비와 공간의 노후화 및 적합성 진단 선행과 최첨단 장비 정비 필수.
- 특히 실험 연구 등 성과의 연쇄 반응을 위해 전문적인 연구 인력 충원 시급.
- 비예산 사업을 통해 관내 유가공업체와 상호 신뢰도를 탄탄히 축적해 온 행정적 성과는 매우 바람직하며, 향후에는 이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재정적 인센티브와 예산 배당을 뒷받침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와 상생 효과를 대폭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5-24. 반려산업·오수권 특화관광 분야

소결 '개별 사업군'이 아니라 '오수 반려문화도시 전략'으로 통합해야 함

1) 성과와 의미

(1) 반려관광이 단일 이벤트를 넘어 전략영역으로 부상

-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 팻투어, 댕댕트레인, 음악회, 체류형 콘텐츠 등은 반려관광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인구 확대형 전략관광정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축제와 연동한 반려 프로그램 운영은 임실이 반려친화 관광도시 이미지 형성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2) 오수의견 관광지의 기능 확장

- 관광지 유지관리 수준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 문화체험, 교육 프로그램, 반려동물 행사, 홍보마케팅이 결합되면서 오수의견 관광지는 반려관광 거점화를 향해 가고 있음.

(3) 반려누리·캠핑장·추모공원 등 체류 인프라의 축적

- 반려누리, 캠핑장, 추모공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머무르고, 배우고, 추모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 관광지를 넘어 반려생활 복합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음.

(4) 세계명견 테마랜드와 펫토피아 파크를 통한 대형 프로젝트 축적

- 세계명견 테마랜드, 펫토피아 파크, 교감혁신센터, 펫 프렌들리 관광거점 등은 임실이 반려산업을 단순 부대사업이 아니라 도시 브랜드화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5) 오수개 육성과 천연기념물 추진을 통한 고유성 확보

- 오수개 육성, FAO 고유종 등재, 천연기념물 추진은 임실 반려전략이 단순한 유행산업이 아니라 지역 고유 서사와 연결된 전략임을 보여줌.

(6) 반려산업과 교육·인재양성 접점 형성

- 반려누리 학습센터와 기숙사, RISE 연계 교육 프로그램은 반려산업이 관광뿐 아니라 교육·인재양성·정주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줌.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사업은 많으나 통합운영 전략은 아직 미완성

- 오수권에 반려 관련 사업이 다수 집적되고 있지만, 전체 공간구조와 운영체계, 브랜드 동선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님.
- 개별 시설은 늘고 있으나, 방문객 입장에서 하나의 완성된 반려도시 경험으로 체감되기까지는 추가 정교화가 필요함.

(2) 기반시설 대비 민간 수용태세 부족

- 반려동물 동반 식당·카페·숙박시설 부족이 직접 지적되는 것처럼, 공공시설 확충만으로 체류형 관광이 완성되지는 않음.
- 민간 수용태세와 지역 상권 협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체류시간 확대에 한계가 있음.

(3) 주민민원과 안전관리 이슈 상존

- 축제기간 비반려인 민원, 반려견 동반 안전사고, 유기견 문제, 동물 스트레스, 사육시설 인접 민원 등은 반려정책이 커질수록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은 갈등 요인임.

(4) 대규모 반려사업은 재원·운영 모두 부담

- 테마랜드, 펫토피아, 교감혁신센터, 보호센터, 연구소 등은 모두 건립 이후 운영비와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한 구조이며, 운영모델이 약하면 재정부담이 크게 누적될 수 있음.

3) 민선 제9기 시사점

- 민선 제9기에는 오수권 반려사업을 '오수 반려문화도시 전략'으로 통합해야 함.
- 핵심은 관광, 교육, 체험, 숙박, 보호복지, 오수개 고유서사, 민간상권 협력을 하나의 공간전략으로 묶는 것임.
- 반려산업은 임실의 차세대 대표브랜드가 될 잠재력이 크지만, 성공 여부는 사업 숫자보다 통합 운영 완성도에 달려 있음.
- 행정절차의 과감한 조기 이행과 잔여 부지 매입 속도전을 전개하여 동물보호센터 및 학습센터·기숙사 등 핵심 하드웨어 사업의 착공 지연을 만회해야 함.
- 오수개 연구소 사육시설의 소음·악취 민원 차단 대책을 설계 단계부터 전면 반영하고, 학습센터 건립 시 경사지 토목공사비 절감을 위한 경제적 대안 공법을 도입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초대형 투자 리스크를 분산할 단계별 모듈화 건립 방안을 도입하고, 테마랜드 및 펫토피아 등 주변 연계 사업들을 총괄하는 통합 운영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함.
- K-반려문화 교감혁신센터 및 펫 프렌들리 관광거점 등 중장기 대형 현안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정부 상위 계획 및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의 조기 반영에 총력을 추진해야 함.
- 반려견 동반 축제·행사 시 비반려인과의 마찰 및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일반 구역과의 동선을 완벽히 분리하고, 현장 안전 요원 및 전문 훈련사 배치를 대폭 확대해야 함.
- 반려동물 동반 여행 상품 및 캠핑장 활성화를 견인할 관내 수용태세(동반 가능 식당, 숙박시설 등) 개선 지원책을 마련하고, 인근 공사 소음 민원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함.
- 유전자 분석과 품종 고정화 연구를 고도화하여 오수개의 천연기념물 등재를 전격 추진함으로써, 대외적 브랜드 가치를 선점하고 정량화된 자치 성과지표를 확보해야 함.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등 수요 폭주로 조기 소진되는 동물복지 예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타 부서 유사 사업과의 연계 및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5-25. 옥정호 관광·생태·체류형 관광거점 분야

소결 '명소 운영'에서 '체류형 권역전략'으로 확장해야 함

1) 성과와 의미

(1) 옥정호 관광거점의 대외 인지도와 방문 기반 확대

- 붕어섬 운영, 홍보, 벚꽃가요제, 붕어섬 재개장, 방문객 급증 등은 옥정호가 임실군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줌.

(2) 붕어섬·물안개길·탐방로를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자산 축적

- 물안개길, 생태탐방로, 경관조성, 붕어섬 사계절 식재, 생태축 복원, 인공습지, 하늘바우 생태공원 등은 옥정호를 단순 호수 조망지가 아니라 체험·걷기·생태치유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기반임.

(3)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의 본격화

- 에코누리캠퍼스, 명품관광지 조성, 스카이워크, 테마광장, 모노레일, 숙박시설, 민간투자용지 등은 옥정호 관광이 체류형 소비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줌.

(4) 수질관리와 환경관리 기능 병행

- 지도점검, 상수원 지킴이, 부유물 수거,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등은 관광객 증가와 함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5) 관광개발과 지역생계 대책의 병행

- 쌍암지구 앞들 개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폐천부지 운영 등은 옥정호 개발이 지역주민 삶과 분리되지 않고 생활기반 보완과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옥정호 사업군이 많아질수록 공간전략 정합성이 중요

- 홍보, 운영, 경관, 생태, 개발, 지원사업이 병행되면서 개별사업 간 정합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
- 잘 연결되지 않으면 권역 전체가 하나의 명확한 체류형 관광 서사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2) 민간투자 유치가 핵심 변수

- 에코누리캠퍼스 등 체류형 관광의 완성은 민간사업자 유치에 크게 좌우되며, 이는 군의 단독 추진만으로 한계가 있음.

(3) 방문객 증가가 환경부담과 관리비용 증가로 연결

- 봉어섬, 물안개길, 경관조성지는 유지관리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드는 구조이며, 관광객 증가가 곧 운영부담 증가로 이어짐.

(4) 순환체계 구축사업은 실효성 검토 필요

- 추가 교량 설치 필요성 논란처럼, 일부 사업은 상징성보다 실제 이용성과 유지관리성 검토가 더 중요해지고 있음.

3) 민선 제9기 시사점

- 민선 제9기 옥정호 전략은 '명소 운영'이 아니라 '권역 체류전략'이어야 함.
- 핵심은 봉어섬, 물안개길, 생태탐방로, 숙박, 먹거리, 생태공원, 주민생계 보완을 하나의 동선과 체류경제 구조로 연결하는 데 있음.
- 옥정호는 임실 관광정책의 핵심이지만, 성공 여부는 관광과 환경, 개발과 주민수용성, 상징성과 운영효율을 얼마나 균형 있게 묶느냐에 달려 있음.
- 옥정호 권역의 생태 자원을 극대화하여 호남권을 대표하는 친환경·체류형 웰니스 관광 벨트를 조속히 완성하기 위한 최적의 실행 전략임 .
- 물안개길과 생태탐방로를 연계해 단절 없는 광역 도보 관광망을 구축하고, 봉어섬 생태공원의 사계절 경관 식재와 마케팅 다각화를 통해 콘텐츠의 내실을 기해야 함.
- 에코누리캠퍼스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은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확장안을 검토하고 연차별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함.
- 옥정호의 청정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운암 인공습지의 정화 효율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쌍암지구 배후지 인프라(하수처리시설 등)를 유기적으로 증설하는 한편, 주민 설명회를 통한 선제적 민원 예방 체계를 확립하여 사업의 추진력을 가속화해야 함.

5-26. 산림경관·휴양·생태자원 활용 분야

소결 '산림행정'에서 '산림관광자산 전략'으로 확장해야 함

1) 성과와 의미

(1) 산림의 기본 기능 유지와 재해대응 기반 확보

- 조림, 숲가꾸기,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 임도 정비는 전통적 산림행정의 기본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영역임.
- 특히 산불대응과 재선충 방제는 기후변화 시대 산림안전망으로서 의미가 큼.

(2) 산림경관과 생활권 녹지의 확장

- 도시숲, 학교숲, 가로수, 생활밀착형 숲, 경관조성지 관리는 산림정책이 산지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권 녹지와 관광경관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줌.

(3) 성수산을 중심으로 한 산림휴양자원 고도화

- 왕의숲,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캠핑장, 무궁화동산 등은 성수산이 단순 산림 보호구역이 아니라 체류형 산림휴양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4) 숲길·등산로와 휴양시설의 결합

- 등산로 정비, 숲길 관리, 휴양시설 운영은 건강·힐링·체험 수요와 연결되며, 임실군의 관광자원을 다층화하는 역할을 함.

(5) 산림소득작물 지원을 통한 임업 부가가치 확장

- 독활, 복분자, 작약, 곱감 포장재 지원 등은 산림정책이 순수 보호행정에 머물지 않고 소득형 임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줌.

2) 한계와 구조적 문제

(1) 산림정책이 관광전략과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는 못함

- 성수산과 녹지경관 사업이 관광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산림행정과 관광행정이 부분적으로만 연결된 상태임.

(2) 유지관리와 인력부담 증가

- 왕의숲, 휴양림, 레포츠시설, 경관조성지 등은 조성 이후 유지관리와 운영인력이 많이 필요한 구조이며, 예산부담이 커질 수 있음.

(3) 직영·위탁 운영모델의 안정성 과제

- 산림레포츠시설처럼 민간위탁자 선정이 쉽지 않은 사례는 향후 운영주체 확보가 주요 변수임을 보여줌.

3) 민선 제9기 시사점

- 민선 제9기 산림정책은 '보호-조성' 중심에서 '산림휴양-경관-체류관광'으로 확장해야 함.
- 특히 성수산은 민선 제9기에서 옥정호, 치즈, 반려관광과는 다른 결의 산림힐링 축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도시숲, 생활밀착형 숲, 숲길은 정주환경 개선 전략과 연결하고, 성수산 휴양시설은 체류형 산림관광 자산으로 재브랜딩할 필요가 있음.
- 혹서기·장마철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및 등산로 정비는 대민 신뢰도를 높이는 기본 과제임.
- 임도 개설 과정에서 산주 수용성을 선제적으로 제고하여 민원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부서 간 소통 부재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야 함.
- 이를 위해 사유지 동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타 부서 연계 공사 간 상시 협의 메커니즘을 제도화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공정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산불 취약 수종 조림 지양 및 재선충병 피해지의 선제적 수종 갱신, 임실천변 침수지의 다년생 초화류 식재 전환은 예산 낭비를 막고 자연 복원력을 극대화하는 시의적절한 치수·치산(治水·治山) 전략임.
- 가용 인력 부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임차 헬기 등 항공 방제 자원의 고도화를 전격 추진함으로써, 관내 전역을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임.
- 대규모 산림 자원 개발과 임도 확충 사업의 성공적 안착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철저한 리스크 시뮬레이션에 달려 있음.
- 성수산 왕의 숲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숙박, 휴양, 교육 기능이 집약된 산림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것은 임실군의 관광 영토를 산림 레저 영역으로 확장하는 시의 적절한 전략임.
- 대규모 단체 수요를 견인할 세미나실 등 연수 인프라의 확충은 기 구축된 시설의 가동률을 극대화할 핵심 열쇠로 판단됨.
- 재정적 안정을 위해 예산의 연차별 분산 집행 및 국비·기금 등 외부 재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치즈테마파크 및 옥정호 권역과의 광역적 연계 서사(스토리텔링)를 구축하여 영속적인 방문 모멘텀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성수산 휴양시설의 위탁 유찰 리스크에 대응해 직영 체제 전환 기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병행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임실군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것임.

5-27. 민선 8기('25-'26년) 현안사업 평가 의견

번호	담당 부서	사업명	진단 평가	평가 의견
1	문화체육과	지역축제 활성화	계속	▪ 작은 축제라도 군민의 삶의 질 증가와 문화 향유를 위해 지속하되, 사전 축제 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수반 필수
2		폐교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속	▪ 운영 주체 및 프로그램 필수
3		임실문화원 육성 지원	계속	▪ '문화원 가족'으로 한정된 유적지 답사, 폐쇄성 탈피해 일반 군민에게 문호 개방 요망
4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지원	계속	▪ 교육관 지원이 아닌 프로그램 지원임. 명칭 조정 필요
5		다채로운 문화활동 지원	계속	▪ 진흥회 등 예술계 연합형 공개 포럼으로 임실 문화예술의 생태계 확산 방향 공유 우선 필요
6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	계속	▪ 문화유산 야행사업에서 청년 중심의 '이야기' 향유할 프로그램 기획 요망
7		문화유산 지정 및 학술연구 추진	계속	▪ 향토문화유산 위원회의 활동을 학술 분야에 한정하지 말고, 대중적 확산 방안 모색에 참여토록 유도
8		문화유산 보수 및 보존 관리	계속	
9		문화유산 보호 활동 추진	계속	
10		임실군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검토	▪ 각종 대회 중 임실체육회장 배 체육 대회 개최의 필요성 재검토
11		임실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검토	▪ 장애인 도민체전과 비장애인 도민체전 참여 예산 비율 차이 조정 필요
12		임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속	▪ 유아형 대비 '놀이형' 프로그램의 기획 미흡
13		임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계속	▪ 36홀 타당
14		임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속	
15		임실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계속	
16		복합문화도서관 운영으로 독서문화 진흥	계속	
17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관리	계속	▪ 전북도의 자산이므로 임실군의 적극적 활용에 한계. 다만, 지금까지 임실군에 설립되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 그 브랜드 가치에 집중 필요
18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및 전지훈련센터 운영관리	계속	

번호	담당 부서	사업명	진단 평가	평가 의견
1	관 광 치 즈 과	임실관광 홍보 및 마케팅	계속	▪ 홍보담당관의 홍보 업무와의 중복성 여부 확인하여 통합 혹은 계속 추진
2		관광객 유치 및 모객 지원	계속	▪ 유치와 모객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전문가 회의 필수
3		계절 특화 관광축제 육성	보완 계속	▪ 신규 축제로 대표 축제인 임실치즈 축제 추진팀과 축제 전략 공유 선행
4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보완 계속	▪ 대규모 계속 사업으로 완료된 브랜딩 용역에 따른 디자인 적용 전문가 회의 필요
5		임실치즈테마파크 치즈판매장 조성사업	계속	▪ 기존 소규모 치즈 판매장의 장점을 융합 하고 주변 경관을 고려한 특성 있는 구성
6		민관상생 플레이랜드 플랫폼 구축 사업	계속	▪ 플레이랜드의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
7		옥정호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계속	▪ 수변공원 지정과 관련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의 추진
8		임실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	계속	▪ 실내 인테리어의 중요성을 고려한 예산 부족분에 대한 확보 필수
9		2026 임실N치즈 축제	계속	▪ 군민과 방문객의 대표 축제에 대한 기대를 충족할 서비스 제공 및 참여 형 종합계획 수립
10		제4기 동부권 식품 클러스터 육성 사업(치즈분야)	계속	▪ 저지종 생축 구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긴급 대응책 수립
11		출연기관 운영지원	계속	▪ 임실 대표브랜드 치즈의 질적 출처인 연구소의 장비 및 시설, 공간 지원 필수
12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운영관리	보완 계속	▪ 산책로의 일상적 관리(낙하 부착물 정리) 강화 방안 수립 후 추진
13		저지종 젖소 도입 및 육성 사업	계속	▪ 자부담 증액에 앞선 도 추가예산 확보 중점
14		고품질 원유 생산을 위한 낙농기반 지원	계속	▪ 낙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이 유명무실 해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체품목 선정
15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 사업	계속	▪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16		임실 치유관광 기반 조성 사업	계속	▪ 중앙재정투자심사에 대응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 필수

번호	담당 부서	사업명	진단 평가	평가 의견
1	반 려 산 업 과	2026~2030 임실군 반려 산업 및 관광 전략(안)	계속	
2		임실N펫스타(의견문화제) 개최	계속	▪ 일반 축제 구역과의 공간 분리 및 체류형 콘텐츠 확대 필요
3		임실 국제도그쇼[어질리티] 개최	계속	▪ 타 지자체 도그쇼 일정 중복 조율 및 우천 대비 시설 보완 필요
4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	계속	▪ 비반려인 민원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요원 배치 강화
5		반려동물 동반 체류형 콘텐츠 운영	계속	▪ 관내 동반 인프라 부족 보완을 위한 수용태세 개선 지원
6		오수의견 관광지 활성화	계속	▪ 관광객 유입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한 참여형 콘텐츠 발굴 필요
7		오수 반려누리 운영	계속	▪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관내외 학교 견학 연계 활성화
8		오수의견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	계속	▪ 테마랜드 공사 소음 민원에 따른 주말 공사 최소화 및 사이트 관리
9		오수 펫 추모공원 운영	계속	▪ 시설 노후화에 따른 단계별 보수·교체 및 안전·위생관리 강화
10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	계속	▪ 주변 연계사업 통합 운영 방안 및 물놀이 시설 도입 검토 필요
11		세계명견 테마랜드 주변지역 지원 사업	계속	▪ 주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추경 예산(5억 원) 확보 추진
12		펫토피아 파크(Petopia Park) 명소화 사업	계속	▪ 주변 시설 연계 건축 설계 및 안정적 도비 확보 필요
13		오수개 연구소 이전 신축	계속	▪ 사육시설 운영에 따른 인접 농가 소음·악취 민원 방지 대책 설계 반영
14		동물보호센터 건립	보완 후 계속	▪ 부지확보(무상귀속)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비 부족에 따른 단계별 확장 검토 ▪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착공 만회 대책 수립 필요
15		반려누리 학습센터 및 기숙사 건립	보완 후 계속	▪ 경사지 부지 조성으로 인한 토목공사비 증가 우려, 경제적 공법 검토 필요 ▪ 부지 매입 잔여분(8%) 조속히 완료 필요
16		오수의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계속	▪ 관광지 내 사업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17		오수개 육성 및 천연기념물 등재	계속	▪ 품종 고정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천연기념물 정량화 지표 확보
18		반려동물 교감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속	▪ 동물 스트레스 최소화 운영시간 관리 및 안전 요원 배치
19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	보완 후 계속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예산 조기소진에 따른 타 사업 연계대책 마련
20		K-반려문화 교감혁신센터 건립사업	계속	▪ 기본구상 및 타당성 보완을 통한 농림부·문체부·도 협의 추진
21		펫 프렌들리(Pet-Friendly) 관광거점 조성사업	계속	▪ 문체부 혁신형 광역관광계획 및 전북도 지역개발계획 반영 추진
22		반려동물 동반 힐링·공존 관광거점 조성	계속	▪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반영 및 공모 대응을 통한 자원 확보 필요
23		반려동물 치유·AI 스마트관광 거점 조성	계속	▪ AI 기술 접목 스마트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전북권 계획 반영 추진

번호	담당 부서	사업명	진단 평가	평가 의견
1	옥 정 호 힐 링 과	옥정호 홍보 및 봉어섬 운영 지원	계속	▪ 연간 축제 구상 및 홍보 콘텐츠 다각화 필요
2		봉어섬 및 요산공원 운영 관리	계속	▪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람객 편의성 제고 ▪ 노후 데크 및 안전 시설물 선제적 보수 추진
3		옥정호 환경관리 및 수생태계 보호	계속	▪ 수질 보전 및 주변 환경 정비 철저 ▪ 수생태계 모니터링 강화 및 민원 방지 대책
4		에코누리캠퍼스 조성	보완 후 계속	▪ 부지 및 사업비 부족에 따른 단계별 확장 검토 필요 ▪ 기반 시설 공사 및 건축 설계 신속 추진
5		옥정호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	▪ 주변 연계사업 통합 운영 방안 및 콘텐츠 도입 검토 필요 ▪ 대형 인프라 구축에 따른 연차별 예산 확보
6		옥정호 물안개길 조성(국가생태탐방로)	계속	▪ 국가생태탐방로 기준 부합 조치 필요 ▪ 단절 구간 연결을 위한 데크 공사 조기 추진
7		옥정호 생태탐방로 순환체계 구축	계속	▪ 순환 도보 코스 완성을 위한 잔여지 확보
8		옥정호 물안개길 유지관리 및 활성화	계속	▪ 노후 구간 증가에 따른 상시 보수 필요 ▪ 탐방객 유치, 걷기 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9		옥정호 권역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	계속	▪ 계절별 식재 및 수목 관리 강화 ▪ 도로변 및 조망 지점 경관 다변화 추진
10		봉어섬 생태공원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	계속	▪ 사계절 경관작물식재를 통한 퀄리티 향상 ▪ 관광객 증가, 효율적 토지이용 체계 재정비
11		임실 국사봉 생태축 복원사업	계속	▪ 토목·식생 공사 공정 관리 철저 ▪ 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 및 산림 생태계 복원
12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	계속	▪ 주변 시설 연계 건축 설계 및 안정적 도비 확보 필요 ▪ 배후지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기 착공
14		쌍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한우특화거리)	계속	▪ '26년 1월 공사착공 완료에 따른 공정관리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공사 추진 및 민원 대응
15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속	▪ 주민 소득 및 복지 증진 사업 발굴 필요 ▪ 주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예산 집행
16		도유 폐천부지 매각운영	계속	▪ 행정자산의 효율적 처분을 위한 매각 절차 준수 ▪ 폐천부지 정밀 조사 및 조속한 매각 처리 진행
17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	보완 후 계속	▪ 유입 오염물질 정화 효율성 검토 및 민원 방지 대책 반영 ▪ 친환경 인공습지 설계를 통한 생태 휴식 공간 조성

번호	담당 부서	사업명	진단 평가	평가 의견
1	중 민 원 과	군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계속	우수직원 분기별 3명(마일리지제-신속 민원 처리) 인센티브 바람직
2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계속	
3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속	준공(27.12)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공실 발생하지 않을 사전 대응책 수립과 실시
4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계속	그린리모델링의 만족도 조사 및 낙인 효과에 대한 민원 등 최소화 방안 마련
5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계속	임차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임대인 불만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6		주거급여사업	계속	대상자 면밀한 파악으로 주거유형 변경신고 사전 권유
7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속	주거 환경 개선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지원과 관리 수준 강화
8		건축행정 건실화 강화	보완 계속	행정 처분 이전의 사전 통지와 안내에 대면방식 계획 수립과 적극 도입
9		건축 민원 신속 정확 처리	계속	복합민원(21개 법률) 접수 즉시 관련 부서 협의와 결과 통보 등 신속 매뉴얼 마련
10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질검사 강화	계속	
11		지적(임야)도면 정비사업	계속	
12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계속	적극적인 사전 설명회나 홍보로 민원 발생 사전 예방 필수
13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강화	계속	조사 완료된 안내시설물의 확대 설치 지연 없이 적시 실시
14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의 투명성 확보	계속	국토교통부 지가정책 변동 내용과 사유의 정확한 홍보 수행
15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보완 계속	13개 업소의 분기별 지도 단속 결과 분석과 연도별 편차 확인 선행
16		신규)오수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계속	재해예방을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의 신속성과 동시에 작업 완성도 점검 필수
17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속	

번호	담당 부서	사업명	진단 평가	평가 의견
1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보완 후 계속	▪ 산불 취약종(편백 등) 조림 지양, 활엽수종 식재 유도
2		조림지가꾸기 사업	계속	
3		숲가꾸기사업	계속	
4		산불방지대책	보완 후 계속	▪ 감시·진화인력 노령화 보완 위해 임차 헬기 고도화
5		산림병해충 방제	보완 후 계속	▪ 재선충병 기후 확산 대비 피해극심지 수종전환
6		임도신설 및 유지보수	보완 후 계속	▪ 사유지 통과 동의율 제고 위한 산주 대상 공익성 홍보
7		산림소득작물 생산지원	계속	
8		숲길(등산로) 조성 및 관리	보완 후 계속	▪ 안전사고 방지 위한 관내 등산로 전수 실태조사
9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	계속	
10		경관조성지 유지관리	보완 후 계속	▪ 임실천변 상습 침수 구역 다년생 초화류 식재 전환
11		생활밀착형 숲 조성	보완 후 계속	▪ 부서(도시재생 등) 공사와 일정 차질 방지 협의
12		무궁화동산 조성	보완 후 계속	▪ 초기 병충해 피해 방지 위한 상시 방제 계획 수립
13		성수산 왕의숲 운영 및 관리	계속	
14	산림 녹지과	성수산 산림 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	보완 후 계속	▪ 민선 제9기 군수 지시사항의 핵심인 '하드웨어적 기능 보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기존의 가족 단위 중심 시설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기업·학교·기관 등 대규모 단체 연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복합 교육장을 갖춘 다기능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단체 수용 기능 확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15		성수산 자연휴양림 2단계 보완사업	보완 후 계속	▪ 도·군비 50% 매칭 기조(산림녹지과 군수 지시사항 6번)에 의거하여 총 91억 원의 연차별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군 재정 부담을 대폭 분산함과 동시에 산림청 공모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외 추가 자원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함 ▪ 행정절차 및 인허가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선제적 사전협의 체계(군수 지시사항 5번 협업체계)를 견고히 구축하는 한편, 임실치즈테마파크 및 옥정호 봉어섬 등 관내 핵심 관광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 스토리텔링을 구축하여 관광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함

번호	담당 부서	사업명	진단 평가	평가 의견
1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조화로운 경관 조성 및 환경 관리	보완 계속	▪ 계절별 경관조성 예산 증가분 원인 검토 후 추진
2		긴급 시설물 장비 수선	계속	▪ 기 긴급보수 수선비 상반기 소요로 하반기 예산 추가 필수
3		전력 설비 및 승강기 점검	계속	
4		예비자재 및 소모품	계속	
5		2026년 민간 위탁업체 운영 계획	계속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위탁업체 자체의 민원 해결 및 최소화 방안 마련
6		문화예술공연 및 이벤트 운영	보완 계속	▪ 사업 계획에 앞서 모니터링과 자체 평가 결과 재단 직원 공유 선행 필요
7		체험형 이벤트 운영 지원	보완 계속	▪ 체험형 이벤트의 프로그램 효과성 검토 후 추진
8		임실 산타축제 추진	보완 계속	▪ 임실형 산타축제의 차별화된 대표 콘텐츠 설계 후 추진
9		임실N치즈 축제	보완 계속	▪ 가족형 외 기존 어린이 중심 프로그램 분석과 강화 계획 수립
10		법정 교육 및 친절 교육	계속	▪ 법정교육 중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누락 여부 확인
11		임실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방안	계속	▪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구축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 방안 모색
12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	계속	
13		공공급식 농수산물 안전관리 지원 사업	계속	▪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연구소 업무로 조정 및 이관 검토
14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물류비 지원 사업	계속	▪ 운영 투명성의 정도 검토 필수
1	재)임실치즈연구소	임실치즈 역사문화관 운영	보완 계속	▪ 문화관광해설사 혹은 도슨트의 상주 및 해설 서비스로 개인 고객 만족도 증진
2		임실치즈체험연구소 운영 사업	계속	
3		농촌자원 소재 가공 제품 판매 사업	보완 계속	▪ 사업의 효과 홍보 및 사업의 효과 증진 계획 수립
4		유가공제품 안전성 강화 사업	보완 계속	▪ 9개 업체로 한정된 현장점검의 충분성 검토 및 추진
5		숙성치즈 이용 신제품 개발	계속	▪ 축제 시식 홍보 바람직
6		2026년 특화품목 6차 산업화 지원사업	계속	▪ 1-3 농촌자원 소재 가공 제품 판매 사업과 관계 확인 필요
7		2026년 약용작물 상품화 생산시설 운영	보완 계속	▪ 사업의 효과에 대한 자체 진단
8		동부권 그린바이오 미생물소재 실증지원 사업	계속	▪ 동부권 연계 사업의 효과 및 임실군 3개 업소의 협력 및 만족도 조사 실시
9		전북대 글로벌대학 30 지역상생사업(부산물)	계속	
10		전국지자체연구기관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업	계속	▪ 비예산사업으로 연구기관의 대표성 확보로 바람직
11		지역특화산업분야 연구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계속	▪ 지역상생사업을 선도하는 연구소의 네트워크 동력 강화 바람직
12		치즈산업운영 역량강화 사업 (치즈아카데미교육)	계속	▪ 교육전문강사 외부 섭외와 병행, 연구소 내부 직원의 전문강사 활용비율 제고
13		핵심인재 육성사업 (한국치즈과학고 기초치즈캠프교육)	계속	▪ 기초치즈캠프 교육의 전국적인 확산 효과 기대
14		민간자격증 유제품 가공사 검정시험 실시	계속	▪ 아카데미 교육과의 연계 사업으로 실효성 기대

제7장 민선 제9기 군정 목표와 방침

제7장 민선 제9기 군정 목표와 방침

6-1. 목표 설정의 배경과 문제의식

◇ 왜 새로운 군정 목표가 필요한가

- 임실군은 민선 8기 후반까지 농업, 농촌활력, 문화관광, 체육, 안전, 정주기반, 상하수도, 공공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기반을 축적해 왔음.
- 농업은 생산지원과 복지, 전략작물 전환, 스마트농업 기반을 다져왔고, 농촌활력은 먹거리, 공동체, 귀농귀촌, 생활거점의 기반을 축적했으며, 문화·관광은 치즈, 옥정호, 반려, 산림, 체육, 생활문화 자산을 다층적으로 확보해 왔음.
- 안전·건설·상하수도 분야 역시 정주기반과 기후위기 대응형 생활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자산 축적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음.

1) 인구구조의 지속적 약화

-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지역의 재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 청년층 유출과 생활권 축소는 산업, 교육, 복지, 상권, 교통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산업과 일자리의 협소성

- 농업·축산업, 소규모 자영업, 공공부문 의존성이 큰 구조 속에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와 산업 다변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지역 내에서 창출된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기 쉬운 구조 역시 지속가능성의 제약 요인임.

3) 정주여건과 생활서비스의 구조적 불균형

- 의료, 복지, 돌봄, 교육, 교통, 문화 등 생활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으나, 군민 입장에서 여전히 접근성과 연계성의 한계가 존재함.
- 읍·면 간 생활권 격차와 이동권 문제는 군민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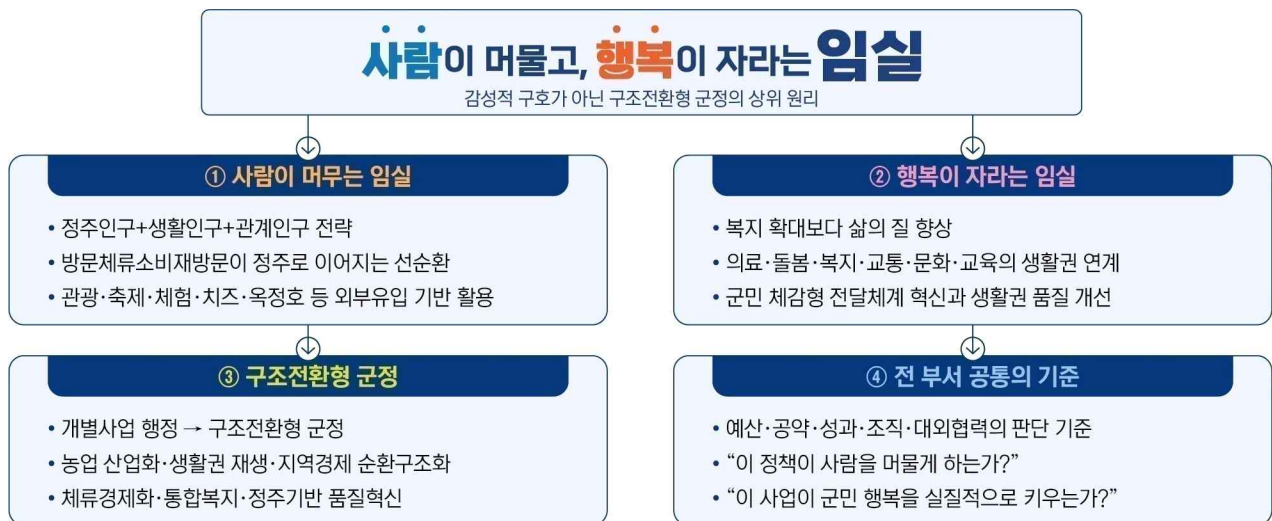
4) 자산은 많지만 연결전략은 아직 미완성

- 치즈, 반려, 옥정호, 성수산, 생활체육,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 자산은 이미 다층적으로 축적되어 있음.

- 그러나 각 자산이 하나의 상위 브랜드와 체류경제 구조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음.
- 결국 민선 제9기의 과제는 새로운 사업을 무한히 추가하는 데 있지 않고, 이미 축적된 자산을 선택·연결·통합하여 구조전환의 성과로 만드는 데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민선 제9기 비전은 '사람이 머무는 구조', '행복이 자라는 구조'를 실제 군정체제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6-2. 민선 제9기 군정 목표의 기본 방향

- 인수 과정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 제안을 받고, 인수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로 최종 결정됨.



- 이는 단순한 정주 슬로건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산업기반 취약, 생활 서비스 분산, 체류형 소비구조 미흡 등 임실군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군정의 상위 목표임.
- 특히 '사람이 머문다'는 것은 단지 주민 수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만들고, 외부 방문객이 체류하고 소비하며, 관계인구가 생활인구로, 다시 정주인구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 구조를 설계한다는 뜻을 가짐.
- 또한 '행복이 자란다'는 것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농업과 산업에서 소득이 만들어지고, 교육·복지·문화가 일상 속에서 체감되며,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미래 가능성이 함께 높아지는 상태를 의미함.
- 따라서 민선 제9기 군정 목표는 정주가능성의 회복,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 생활밀착형 복지와 교육 강화, 문화관광의 체류형 고도화, 군민 중심 행정혁신을 함께 포괄하는 종합 비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6-3. 민선 제9기 군정 목표의 의미

◇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의 정책적 해석

○ 민선 제9기 목표는 감성적 표현을 넘어 다음 네 가지 정책 의미를 가짐.

1) 첫째, '사람이 머무는 임실'은 정주인구 확대만이 아니라 생활인구·관계인구 전략을 포함

○ 임실군의 미래는 상주인구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

○ 관광, 축제, 농촌체험, 스포츠, 반려관광, 치즈테마파크, 옥정호, 성수산 등은 외부 인구를 실제로 유입시킬 수 있는 기반임.

○ 따라서 민선 제9기 인구전략은, 정주인구 유지·확대, 생활인구 확대, 관계인구 형성, 체류형 소비 확대, 정주 전환 가능성 제고를 하나의 선순환 구조로 설계해야 함.

2) 둘째, '행복이 자라는 임실'은 복지의 양적 확대보다 삶의 질 향상을 의미

○ 군민 행복은 단순히 복지사업 수의 증가로 달성되지 않음.

○ 의료·돌봄·복지·교통·문화·교육이 군민의 생활권 안에서 실제로 연결되고 체감될 때 비로소 삶의 질로 이어짐.

○ 따라서 민선 제9기의 행복정책은 공급자 중심 사업 확대가 아니라 군민 체감형 전달체계 혁신과 생활권 품질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

3) 셋째, 목표의 핵심은 '개별사업 행정'에서 '구조전환형 군정'으로의 전환

○ 민선 8기 후반까지의 성과가 개별 분야의 기반 축적에 있었다면, 민선 제9기는 이를, 농업의 미래산업화, 농촌의 생활권 재생, 지역경제의 순환구조화, 문화관광의 체류경제화, 복지의 통합전달체계화, 정주기반의 품질혁신으로 재구성하는 단계여야 함.

4) 넷째, 군정 목표는 군정 전 부서가 공유하는 상위 작동원리

○ 군정 목표는 선언문이 아니라 예산편성, 공약실행, 성과관리, 조직운영, 대외협력의 기준이 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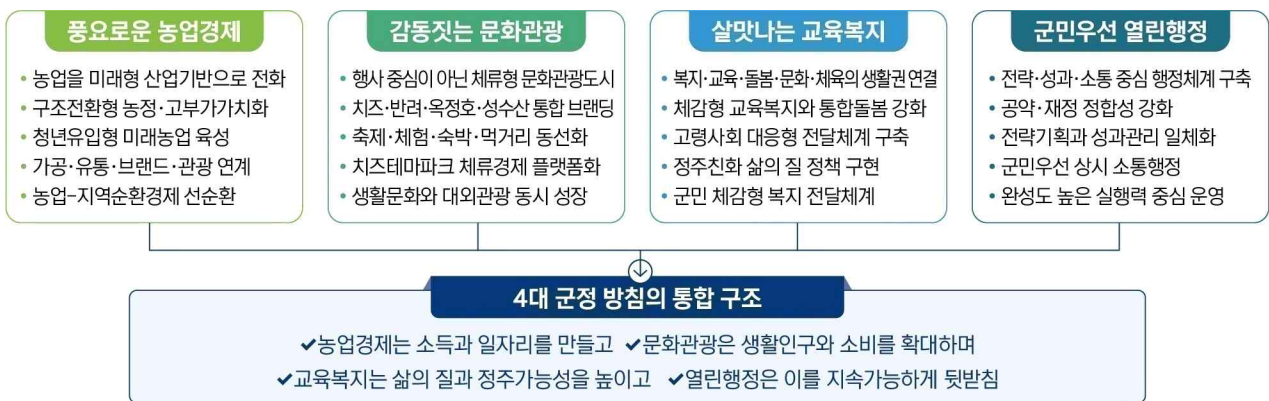
○ 따라서 민선 제9기 군정 목표는 모든 부서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질문, "이 정책이 사람을 머물게 하는가, 이 사업이 군민 행복을 실질적으로 키우는가"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6-4. 민선 제9기 군정 방침

◇ 민선 제9기 군정은 다음의 4대 방침 아래 추진할 것이 확정

- 풍요로운 농업경제
- 감동짓는 문화관광
- 살맛나는 교육복지
- 군민우선 열린행정

○ 이 4대 방침은 각각 독립된 부문정책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비전 실현을 뒷받침하는 전략축으로 작동해야 함.



6-5. 군정 방침별 정책 방향

I. 풍요로운 농업경제

◇ 농업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임실의 미래형 산업기반으로 전환

1) 정책목표

-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고부가가치형 농업경제 구조 구축.
- 생산 중심 농정에서 벗어나 가공·유통·브랜드·관광·청년유입이 결합된 농업산업 생태계 조성.
- 농업을 지역경제의 방어수단이 아니라 청년정착과 생활인구 유입을 견인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2) 추진 방향

(1) 생산지원 농정에서 구조전환형 농정으로 재편

- 전략작물 전환, 고부가가치 원예특화, 스마트농업, 청년농 육성, 농촌인력 대응을 하나의 구조전환 패키지로 재구성.
- 단순 보조금 병렬 지원을 넘어, 민선 제9기 농업의 대표모델을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업소득 중심의 산업 고도화

- 농정의 평가지표를 생산량보다 소득, 부가가치, 판로, 브랜드력 중심으로 재설계.
- 농산물 가공,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통합마케팅, 온라인·직거래 유통을 연계해 지역 내 환류구조 강화.

(3) 청년유입형 미래농업 육성

- 스마트팜, 임대형 영농기반, 주거, 실습, 멘토링, 판로를 묶은 청년정착형 농업모델 구축.
- 귀농귀촌을 단순 유치가 아니라 영농 정착과 소득창출로 연결하는 체계 필요.

(4) 지역순환경제와 농업경제의 연계 강화

- 치즈, 농식품, 로컬브랜드, 관광소비, 체험산업을 농업과 연결해 농업이 지역 전체 경제를 견인하는 구조 형성.
- 특히 임실형 1111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방문→소비→관계형성→재방문으로 이어지는 농촌경제 선순환 설계.

3) 기대효과

- 농가소득 안정 및 고부가가치화
- 청년농 유입과 영농 지속성 강화
- 농업-가공-관광-유통의 연계산업 확대
- 농업의 미래산업화와 지역경제 환류구조 강화

II. 감동짓는 문화관광

◇ '행사 중심 관광'이 아니라 브랜드가 분명하고 머무름이 가능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구현

1) 정책목표

- 치즈, 반려, 옥정호, 성수산, 생활문화, 문화유산 등 임실의 핵심 자산을 상위 브랜드 체계로 통합.
- 임실의 정신·가치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야기 발굴과 공유체계 수립과 실현
- '방문하는 도시'를 넘어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여 체류형 소비경제 구조 형성
- 문화정책 역시 행사 지원 수준을 넘어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형 정책으로 고도화

2) 추진 방향

(1) 문화관광 자산의 전략적 연결

- 치즈, 반려, 옥정호, 성수산, 체육, 생활문화, 문화유산을 분절된 사업군이 아니라 하나의 임실형 관광서사로 연결.
- 축제·거점·체험·숙박·먹거리·브랜드·상권 환류를 하나의 동선 구조로 설계해야 함.

(2) 치즈를 산업-관광-체험-브랜드 체계로 고도화

- 치즈 생산, 유제품 유통, 학교급식, 축제, 테마파크, 체험콘텐츠,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통합한 복합생태계 전략 추진.
- 치즈테마파크는 단순 방문지가 아니라 체류형 관광경제의 핵심 플랫폼으로 재정립.

(3) 반려산업의 오수권 통합 브랜드

- 오수권 반려정책은 개별 시설 조성에서 벗어나 오수 반려문화도시 전략으로 통합.
- 관광, 교육, 체험, 숙박, 보호복지, 오수개 고유서사, 민간상권을 연결하는 공간전략 필요.

(4) 옥정호·성수산의 권역형 체류전략

- 옥정호는 붕어섬, 물안개길, 숙박, 상권, 주민생계를 묶는 체류형 권역전략으로 전환.
- 성수산은 산림휴양·힐링·체험 중심의 차별화된 산림관광축으로 육성.

(5) 지역문화 생태계 기반 강화

- 문화단체, 전통문화,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생활체육, 문화유산 활용정책을 연계하여 지역 안에 문화가 남는 구조를 조성.
- 문화는 외부관광만이 아니라 군민 정주민족도를 높이는 핵심 생활자산으로 접근해야 함.

3) 기대효과

- 임실 문화관광 브랜드의 선명화
- 체류시간 확대와 관광소비 증대
- 문화와 관광의 지역상권 환류 강화
- 생활문화와 대외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복합 문화관광도시 실현

Ⅲ. 살맛나는 교육복지

◇ 복지·교육·돌봄·문화·체육이 생활권 안에서 연결되는 군민 체감형 삶의 질 정책 구현

1) 정책목표

- 군민의 삶을 실제로 지탱하는 전 생애 교육복지·돌봄 체계 구축
-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복지·보건·의료·돌봄의 통합적 전달체계 강화
- 아동·청소년·청년·가족·노년층까지 포괄하는 생활권 기반 복합서비스 확대

2) 추진 방향

(1) 공급 확대형 복지에서 체감형 복지로 전환

- 복지정책의 성과를 사업 수가 아니라 실제 접근성, 연계성, 현장성, 예방성 중심으로 평가.
- 군민이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가 분명한 전달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복지·문화·체육의 생활권 연계

- 도서관, 생활문화공간, 체육시설, 돌봄공간, 학교·평생학습 자원을 연결해 군민의 생활환경 안에서 복합적 서비스가 작동하도록 설계.
- 교육복지는 단순 교육비 지원이 아니라 정주친화 환경과 미래세대 기반 조성정책으로 접근해야 함.

(3) 고령사회 대응형 통합돌봄 강화

- 임실군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노인복지, 방문보건, 재택의료, 이동지원, 일상돌봄, 마을 돌봄체계를 긴밀히 연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읍·면 단위에서 접근 가능한 돌봄거점과 서비스 연계모델을 강화해야 함.

(4) 체육복지와 생활문화의 일상화

- 생활체육, 시니어 친화형 시설, 도서관·문화공간,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정주복지 정책과 연결.
- 체육과 문화는 이벤트성 행정이 아니라 삶의 질과 건강도시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전환되어야 함.

3) 기대효과

- 군민 체감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교육·복지 서비스 질 향상
- 고령사회 대응력 강화와 돌봄 사각지대 축소
- 살기 좋은 정주도시 이미지 제고

IV. 군민우선 열린행정

◇ 관리행정을 넘어 전략·성과·소통 중심의 군민 체감형 행정체계 구축

1) 정책목표

- 군민 관점에서 작동하는 투명하고 유능한 성과행정 구현
- 공약, 재정, 조직, 정책조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전략형 군정운영체계 구축
- 행정 내부의 효율성뿐 아니라 군민 신뢰와 참여를 높이는 열린 군정 실현

2) 추진 방향

(1) 공약과 재정의 정합성 강화

- 민선 제9기 공약은 선언적 확대보다 재정여건과 실행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별 이행체계로 관리해야 함.
- 실 가용재원, 국·도비 확보 가능성, 운영비 부담,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한 공약 포트폴리오 정비 필요.

(2) 전략기획과 성과관리의 일체화

- 이미 축적된 미래전략, 국가예산 대응체계, 성과관리 체계를 공약실행과 직접 연결.
- 부서별 사업 나열이 아니라 군정 비전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재배열해야 함.

(3) 군민우선 소통행정 강화

- 군민 수요를 사업 설계, 생활권 계획, 문화관광 운영, 복지 전달체계, 정주정책에 반영하는 상시 소통체계 구축.
- 열린행정은 정보공개만이 아니라 군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참여하고 체감하는 행정이어야 함.

(4) 실행력 있는 조직운영

- 대형사업, 장기사업, 공모사업, 공약사업이 누적되는 만큼 부서 간 조정, 일정관리, 자원관리, 운영주체 설계 역량이 중요해짐.
- 민선 제9기 행정은 "무엇을 새로 시작할 것인가"보다 "이미 시작한 것을 어떻게 완성도 있게 운영할 것인가"에 더 큰 무게를 둘 필요가 있음.

3) 기대효과

- 공약과 예산의 실효성 제고
- 전략 중심의 조직운영체계 정착
- 군민 신뢰와 정책 체감도 향상
- 지속가능한 군정 운영기반 확보

6-6. 민선 제9기 정책목표의 통합 구조

◇ 4대 군정 방침은 서로 분절된 부문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을 구현하는 상호 연계 구조

- 풍요로운 농업경제는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 감동짓는 문화관광은 생활인구와 소비를 확대하며,
- 살맛나는 교육복지는 군민의 삶의 질과 정주가능성을 높이고,
- 군민우선 열린행정은 이를 지속가능하게 뒷받침하는 운영체계를 구축

◇ 결국 민선 제9기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은 선순환 구조를 지향해야 함

- 농업·산업 기반 강화 → 문화관광과 체류경제 확대 → 정주여건과 교육복지 향상 → 사람의 유입과 정착 확대 → 지역활력과 재정기반 보강.
- 이 선순환이 작동할 때 비로소 임실군은 사람이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머무는 지역, 시설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 삶의 질이 높은 지역, 방문만 하는 지역이 아니라 관계가 형성되고 정착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음.

6-7. 종합 결론

- 민선 제9기 임실군정의 비전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산업 취약, 정주여건 약화, 생활서비스 분산, 관광의 체류구조 미흡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전환하기 위한 종합 전략으로 작동되어야 함.
-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은 정주·산업·관광·복지·행정이 각각 따로 가는 군정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구조전환형 군정을 의미함.
- 따라서 민선 제9기 군정은
 - 농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 문화관광을 체류형 경제로,
 - 교육복지를 정주친화 삶의 질 정책으로,
 - 행정을 군민우선 전략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함.
- 결국 민선 제9기의 성패는 더 많은 사업을 추가하는 데 있지 않고, 이미 축적된 자산과 공약을 하나의 비전 아래 선택하고 연결하며 완성도 있게 실행하는 데 달려 있음.

제8장 공약 및 중점 추진 사업

제8장 분야별 공약 및 정책과제

7-1. 분야별 공약과제 검토

1) 기획·조정분야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 결과	인수위 공약검토 결과
1	(재)임실미래발전 기획단 설립 운영	기획감사실 (기획정책팀)	- 추진가능(조건부) - 검토결과: 기존 행정조직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 필요	- 수정추진 - 연구원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를 통합 후 미래 기획단 별도 설치 - 단기 계획으로 전북연구원 내 조직 활용
2	기본사회 추진 특구 지정	기획감사실 (기획정책팀)	- 중장기검토 - 검토결과: 조직부재, 예산규모 등 검토 필요	- 추진불가 - 기본사회 특구는 군청 내 기본사회팀 신설로 충분 - 전국적으로 많은 특구가 있으나 실제 실익이 없는 유명무실 제도
3	농업예산 30% 수준 확대	기획감사실 (예산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농업예산 현황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추진을 통한 농업예산 비율 단계적 확대(19%→30%) 및 농업보조사업 보조율(40%→50%) 상향 추진	- 추진(임기내) - 농업예산 25% 수준 확대로 공약명 변경 - 현 18.6%에서 매년 1~2%정도 상향조정 - 군정 방향으로 풍요로운 농업경제 실현
4	관계인구 10만형 임실 공동체 구성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 수정추진(신규) - 검토결과: '관계인구'는 산정·공표되는 단일 기준이 부존재하여 '관계인구 10만형'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부서별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생활인구 300만 시대 실현'으로 수정 추진	- 추진(임기내) - 생활인구 300만 시대 실현으로 공약명 변경 - 객관적인 지표가 있고, 측정 가능한 공약으로 수정 필요
5	전국 이·통장 연수원 건립	행정지원실 (행정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전북특별자치도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전국 이·통장 전문교육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가사업 반영 및 국비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	- 추진(임기내) - 선제적으로 道 공약에 반영하고, 자체 용역 등을 통해 공약 선점 및 비용산정 등을 통해 치밀한 전략 수립 필요. 특히 옥정호 등 자연환경과 연계한 분석과 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 복원
6	임실형 진로진학센터 설립 및 원스톱 컨설팅 (대입지원 입시 전략팀 운영 포함)	행정지원실 (인재육성팀)	- 수정추진(신규) - 검토결과: 현재 추진 중인 봉황인재학당 시설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공간 및 기능을 확충하고 진로진학센터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운영 및 입시 전문 컨설턴트 협력을 통해 원스톱 컨설팅시스템 구축	- 추진(1년내) - 임실형 진로진학 컨설팅 운영으로 공약명 변경 - 기존 봉황인재학당의 프로그램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교육청과 연계사업 검토 필요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 결과	인수위 공약검토 결과
7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임실캠퍼스 설립	협약체결: 행정지원실 (인재육성팀) 실무부서: 추후 지정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임실군의 핵심 경제원인 농업·축산·치즈·식품가공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 교육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하여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 산학협력단과 협력. 산업 전략육성, 전문인재 양성 연계 교육과정 운영 - 교육환경 조성(강의실, 학과사무실, 교육기자재)을 위한 추경 2억 원 배정 필요	- 추진(1년내) - 선진 운영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추진하되 임실군 상황에 맞는 과목 개설운영(농업, 축산, 치즈, 식품가공 등)
8	농촌유학·전입형 교육모델 시행	행정지원실 (인재육성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농촌유학 운영학교와 협력하여 추진	- 추진 - 도, 교육청, 군청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업 시스템 구축
9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확대	행정지원실 (인재육성팀)	- 수정추진(계속) - 검토결과: 대학생 애향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9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계획	- 중장기검토(임기내) - 기 공약의 10% 정도 확대 추진 사항으로 공약의 의미 재검토
10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금 신설	행정지원실 (인재육성팀)	- 수정추진(신규) - 검토결과: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30세 이하의 대학생에게 최대 12학기까지(의약대) 학기별 1백만원씩 주거안정 지원금 명목의 등록금 지원	- 추진(임기내) - 공약 9번과 10번을 하나의 공약으로 추진 검토 - 대학생 장학금 확대 지원으로 공약명 변경
11	원스톱 통합허가팀 신설 (인허가 제도 혁신)	행정지원실 (인사팀)	- 추진가능(신규/비예산) - 검토결과: 조직개편 시 복합민원처리에 대해, 손쉽게 접근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허가팀 신설	- 추진(1년내) - 조직개편시 군수-부군수 직속으로 소통민원실을 하되, 실내 원스톱 통합허가팀 신설
12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행정지원실 (인사팀)	- 추진가능(계속/비예산) - 검토결과: 정부인사 정책에 따라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기준을 마련하되, 공약취지에 맞도록 투명성·공정성·예측가능성을 강화	- 추진(1년내) - 읍·면장실 1층 사무실 이전 공약 변경 검토
13	봉황인재학당, 미래인재육성 교육지원확대	행정지원실 (인재육성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①대입지원 수능전문 학원의 부재로 고등반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금, 토 2일을 활용하여 고등반 개설운영 추진. ②예체능 희망 초등학생들에게 수강비 지급 형태로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 수요에 맞춘 자유로운 강습 선택 기회 부여	- 추진(임기내) - 공약 6번과의 차별성 검토
14	찾아가는 현장 군수실 운영	행정지원실 (행정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군수가 직접 주민과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현장 군수실을 운영하여 군민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 체감형 소통행정을 강화	- 추진(1년내) - 실제 추진은 군수가 월 1회 명예 읍·면장을 하면서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시행 12개 읍·면을 정례적으로 확정하여 고정화 필요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 결과	인수위 공약검토 결과
15	공공발주 지역 우선 구매제 도입 (지역경제 순환)	재무과 (경리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및 관내 입찰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관외 업체 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건설중기·자재, 지역 상권 이용 하도록 적극 권장	- 추진(1년내) - 지역 참여업체 이행 서약서 및 지역상권 이용 계획서 등 권고 제도의 정착화 유도
16	공공갈등예방·주 민수용성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종합민원과 (민원팀)	- 추진 중(완료) - 검토결과: 『임실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23.1.4.)』 제정 조치 완료	- 추진불가 - 기 조례 제정으로 폐지
17	생활민원 one-stop 서비스 시스템 운영	종합민원과 (민원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생활불편 민원의 분산 처리로 인한 속도·만족도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전화·현장 통합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추진	- 추진(1년내) -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임실군 상황에 맞는(고령화, 외국인 등) 시스템 구축
18	생활환경 (협오시설) 관리	종합민원과 (주택정책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추진 가능	- 추진(1년내) - 아름다운 주거 환경정비로 공약명 변경 - 기존 빈집 정비사업으로 확대 추진 필요
19	청년·신혼부부 월세 1만원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공급	종합민원과 (주택정책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군에서 신규 민간임대주택 임차한 뒤, 이를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 추진	- 추진(임기내) - 관내 신규 민간임대주택이 공급 예정으로 추진 가능. 다만, 신혼부부 임을 감안 가능한 신규주택 공급 등 정밀한 설계 필요
20	신혼부부·청년 주택대출이자지원및 전세보증금 보조	종합민원과 (주택정책팀)	- 추진가능(계속/신규) - 검토결과: 현재 시행 중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하며,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로 추진	- 추진(1년내) -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으로 공약명 변경 - 기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제도는 운영 중으로 신규 구입시 신규 지원 추진 ※ 공약 40번과 정밀 분석 필요
21	임실군 고령자복지주택 '임실우리타운'조성	종합민원과 (주택정책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특화주택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	- 추진(임기내) - 국토부 공모 사업과, 관내 주택 공급상황 모니터링 필요. 순창군의 사례 면밀한 분석 검토
22	AI 민원행정 피드백 시스템 도입 (실시간 민원 처리상황 알림 시스템 구축)	종합민원과 (민원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AI 기반 민원처리 알림 시스템 신규 구축 추진(AI 자동 발송으로 실시간 알림+만족도 자동수집 → 민원행정 피드백 환류체계 구축)	- 추진불가 - 공약 38번에서 AI 민원행정 시스템도 동시 추진 필요
23	산림 기반의 자산 배당형 기본 소득 체계구축	산림녹지과	- 추진불가(신규) - 검토결과: 산림탄소 흡수량 거래 수익을 통한 산림 기반의 자산배당형 기본소득 구축은 경제적 한계가 있어 추진이 어려움	- 추진불가 - 임실군은 산림이 69%이나,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수익이 저조함 - 특히,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가격 저조와 변동성이 큰 상황이며, 국내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임. 다만, 시범 사업은 추진 필요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 결과	인수위 공약검토 결과
24	임실형 ‘山地자원 순환경제 모델’ 구축	산림녹지과	• 중장기검토(신규) • 검토결과: 집단화된 사유림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을 통하여 산림자원 순환경제 모델 구축	• 추진(임기내) • 시범사업으로 산림청 등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경제성 확보 후 추진 검토
25	농촌주민수당 (나무연금 12만원)	산림녹지과	• 수정추진(신규) • 검토결과: 나무연금 재원은 제도 및 여건상 확보가 어려워, 사유림을 집단화하여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으로 수정추진	• 추진(임기내) • 농촌주민 나무연금 지급으로 공약명 변경 • 산림청 등 공모사업으로 추진 검토
26	임실형 농촌기본소득 농촌주민수당 1인 60만원/년 지급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가능	• 추진(임기내) • 현재 농민수당(연60만원)지급과, 향후 기본소득 공모 선정시 (1인당 연 180만원) 중복 지급과 막대한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어 우선 공약대로 추진하되 기본 소득 공모 선정시 공약 수정 제안
27	임실군 1억 농가소득, 1,000농가 육성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 중장기검토(신규) • 검토결과: 공약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후 추진가능	• 추진(임기내) • 전체 농가수가 약 3,500여호에 불과하여 고추, 복숭아 등 확실한 고소득 작물 선정과 더불어 유통과 마케팅의 선제적 조직 필요성 검토. 필요시 매년 농가소득 1억 원 이상 100호 달성 수정
28	KTX 임실치즈역 정차 추진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국가철도공단과 철도 현안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완료하여 '26-'27년 KTX정차를 위한 임실역 개량 사업 추진	• 추진(임기내) • 상당부분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26 하반기 타당성 검증과 실증을 통과시 가능. 다만 전액 군비로 추진보다는 특고세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 필요
29	임실군 버스 터미널 복합 다기능 플랫폼 조성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 중장기검토(신규) • 검토결과: 임실 터미널은 개인 사업자가 농협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이며, 터미널뿐만 아니라 식당, 한의원이 운영 중으로 플랫폼 구축을 위해 부지매입 및 기존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한 막대한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개인이 운영 하는 터미널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으며, 관촌·강진 터미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함	• 중장기 검토(임기내) • 지역소멸과 더불어 교통수단의 다변화, 인근 지자체의 실패사례 등을 고려 시 중장기 검토
30	임실형 고유가 대응 생활안정자금 (20만원) 지원사업	경제교통과 (민생경제팀)	• 수정추진 • 검토결과: 임실형 농촌기본소득 농촌주민수당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함	• 추진불가 • 임실형 농촌주민소득으로 대처. 공약 71번 연계 필요
31	방위산업체 기업 유치	경제교통과 (기업에너지팀)	• 중장기검토 • 검토결과: 방산기업 유치는 기업투자 의사에 따라 추진되는 구조로, 지자체 주도의 단기 성과 창출에 어려움이 있음. 先 제도적 기반(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마련 後 중장기적 기업유치 추진 검토	• 추진(임기내) • 방산기업은 무기뿐만 아니라 의류 및 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이 있으므로 군에서 사전적으로 조례 개정 등 기업 유인책 마련 후 기업 유치 추진 검토
32	지역상생형 평생교육센터 운영	행정지원실 (인재육성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관내 대학교 등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 추진(임기내) • 관내 평생학습센터의 부재로 지역 주민의 배움의 기회 상실과 인근 대학의 우수한 교육인프라의 활용 가능 • 예원예술대학교의 시설과 우수한 강사진을 활용 군민의 교육수준 향상 기대

2) 농업·농촌·축산 분야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결과	인수위 공약검토결과
1	직불금 확대 개편에 따른 농가소득보전 추가 지원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현재 지급하고 있는 군비 직불금을 개편하여 소규모 농가 지원 추진	- 추진(1년내) -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군비 직불금을 m²당 30원으로 개편시 소요예산 다시 산정 - 소요예산 산정시 합목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산출해 주기 바람
2	가축분퇴비 100만포 무상공급 및 살포지원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 중장기검토(신규) - 검토결과: 퇴비무상공급은 기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국비)사업에 군비 추가하여 사업 추진 가능하며, 퇴비 살포는 축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 추진불가 - 연간 소요예산 과다(약 27억 원)
3	조사료 생산 협동 조합 지원	농업축산과 (축산경영팀)	- 수정추진(사업명변경) - 검토결과: 신규 협동조합 설립보다는 기존 작업대행단, 조사료 경영체, 축협 유통조직을 활용한 생산·수확·유통체계 강화 방향으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함	- 추진(1년내) - 검토결과: 신규 조사료 협동조합 설립 - 임실군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축산과가 나서 농가를 설득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해 추진해야 할 것임
4	지역특화/청년농업인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	- 수정추진(신규) - 검토결과: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10ha 이상의 집단화된 부지확보필수, 부지 확보 이후 대규모 단지 조성까지 최소 4-5년 소요, 이미 고도화된 인프라를 갖춘 전북 타 지자체에 비해 운영 시기가 늦어 청년 인력 유치 경쟁력 약화 - 맞춤형 스마트팜 정착 패키지 지원(스마트팜 신축 지원) 추진	- 중장기검토(임기내) - 검토결과: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추진 - 타 지자체에서 교육받은 청년농이 임실군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음. 임실군 자체에서 임대형 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을 유치하여야 함. -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실군의 미래농업을 위해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5	농촌인력지원센터 설립 운영	농업축산과 (농촌인력팀)	- 중장기검토(신규) - 검토결과: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있어 통합적인 운영·관리 기능의 필요성이 있으나 지역 여건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필요	- 중장기검토(임기내) - 진안군/장수군의 농촌일손지원센터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임실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필요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결과	인수위 공약검토결과
6	청년농 임대농지 · 창업농지 지원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예산편성 시 재원확보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하며 농지은행 등을 통해 농지 임대 지원 가능	- 중장기검토(임기내) -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지원은 타 시군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임 - 임실군 특화형으로 낮은 산지 개발 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함
7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군비 보조율 단계 별 상향하여 지원규모 확대 추진	- 추진(1년내)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군비 보조율을 임기내 단계 적 상향(25%→29%)하여 농가 자부담률 하향(10%→6%)
8	권역별 축분퇴비장 건립 지원사업	농업축산과 (축산경영팀)	- 중장기검토 - 검토결과: 단순 퇴비화는 현 정부정책 상 국비 확보가 어렵고 법적 규제와 극심한 민원으로 임기 내 착공이 불가능한 바 대형 시설은 중장기 과제로 이원화하되, 단기적으로는 부지·민원 우려가 없는 개별 농가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여 실리 중심의 공약 이행률을 확보함이 타당함	- 중장기검토(임기내)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저탄소 축산형 신지구 시범사업을 통해 가축분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고 자원화하는 모델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있음. - 필요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 상기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의 합목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해야 함
9	전북대학교 내 임실군 친환경농산물 유통판매장 설립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팀)	- 중장기검토 - 검토결과: 대학내 판매장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품목 공급이 가능한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판매장 건립에 앞서 계약재배 확대 및 생산농가 조직화 등 종합적으로 중장기 검토 필요	- 중장기검토(임기내) - 우선적으로 임실군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추진한 다음 다품목이 확보된 후 추진 - 전북대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판매를 위한 안테나숍 설립은 문제 없음
10	임실군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팀)	- 수정추진(계속) - 검토결과: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지역 농특산물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브랜드를 재정비하고, 통합적인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추진(1년내) - 임실N햇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인지도 낮음. 기존 브랜드를 재정비하고 통합적인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필요 '26 당해사업으로 인지도 높은 대행사를 통해 통합 브랜드 개발해야 함 '26 예산 1억 원 투입
11	농축산물 학교급식· 공공급식·직매장 판로 확대	농촌활력과 (먹거리정책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추진가능	- 추진(1년내) - 농축산물 학교급식·공공급식·직매장 활로 확대의 경우 임실군농촌농업식품계획에 맞춰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타 지자체의 기반 사업 분석이 필요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결과	인수위 공약검토결과
12	농산물 안정기금 300억 원 조성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팀)	- 수정추진(계속) - 검토결과: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금조성 필요하나, 4년 임기내 300억 원 기금조성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비 조정하여 추진	추진(임기내)
13	주거+영농+커뮤니티 클러스터형 정주모델 10개소 조성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	- 중장기검토(신규) - 검토결과: 지원대상이 청년으로 특정되어 있는 만큼 사업신청 전 명확한 수요 확보된 상황에서 추진 가능하며, 사업 신청 전 준비로 사업부지 확보 완료 필수. 임실군 인구 대비 청년수요 확보가 어려움	- 추진불가 - 유사사업과 중복
14	주거+영농+커뮤니티 클러스터형 정주모델 10개소 조성 (귀농귀촌 입사거주시설 조성)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부지확보 선행 후 '27 공모사업(도) 신청 및 예산반영 추진 부지확보(지자체 부담)가 선행되어야 공모신청 가능	- 추진불가 - 유사사업과 중복
15	빈집, 폐교, 유휴 농가를 마을호텔, 위케이션센터로 조성 (농촌채류형 복합단지 조성 연계)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수요조사 및 부지확보 완료 후 '28 공모사업(농식품부) 신청 및 예산반영 추진. 부지확보(지자체 부담)가 선행되어야 공모신청 가능	추진(임기내)
16	주민참여형 마을재생협의체 운영	농촌활력과 (농촌정책팀)	- 추진가능(수정) - 검토결과: 주민참여형 마을협의체 구성·운영은 기존 시군역량강화사업 연계를 통해 추진가능 - 마을재생협의체의 경우 관련 조례가 도시재생조례로 구성되어 있어, 건설과에서 임실, 오수, 관촌 지역이 시행중임, 기타 지역에 대해서 수정 추진	- 추진(1년내) - 기본사회 정책에 맞춰 사업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민선 제9기 기본사회 영역과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검토 필요
17	농촌채류형 복합단지 조성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수요조사 및 부지 확보 완료 후 '28 공모사업(농식품부) 신청 및 예산반영 추진. 부지확보(지자체 부담)가 선행되어야 공모신청 가능	- 중장기검토(임기내)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추진해야 함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결과	인수위 공약검토결과
18	의료·통합돌봄 (임실형 Agro-medical complex 조성)	농촌지원과 (생활자원팀)	- 수정 검토 필요(신규) - 검토결과: 웰니스 치유관광 거점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농촌진흥청 연계하여 공모사업 대응 및 예산확보가 어려움 - 치유농업센터구축 사업과 연계 하여 치유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R&D 구축 공모대응하고자 함	- 중장기검토(임기내) - Agro-medical complex 조성사업의 취지를 보다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담당부서) - 순창군 쉼랜드와는 전혀 다른 개념임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이후 정부부처 사업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한 전략 마련 필요
19	임실 지역맞춤형 신소득작목 발굴	기술보급과 (소득작목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소비 기호성이 높은 체리, 블루베리와 전복도 특화작목인 수박을 3년간 시범사업으로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가능성 확인 시 신소득작목으로 선정, 집중 육성	- 추진(1년내) - 전북도 특화작목이 수박. 임실 특화작목은 수박이 아님. 체리, 블루베리, 토마토, 딸기는 이미 타 시군에서 광범위하게 재배하고 있음. - 농업분야 전문가를 통해 향후 10년 내지 20년을 고려해서 임실형 신소득작목을 개발하여야 함. 필요시 외부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함 '26 예산: 학술연구용역 1억 원
20	아열대 과수 기후 적응성 실증단지 조성	기술보급과 (소득작목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기존 연동 및 단동하우스 활용 애플망고, 레드향 등 아열대 과수 단지조성 실증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 추진(1년내) - 아열대 과수 뿐만 아니라 아열대 채소류에 대한 실증 실험도 병행해야 함 - 애플망고, 레드향을 넘어 임실군 특화가 가능한 다양한 아열대 과수/채소 연구 필요 - 농가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포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21	365 안정 소득 보장 농한기 소득 작목 개발	기술보급과 (소득작목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유희 단동 활용 농한기 재배 가능 작목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재배 기술 확립 후 관내 지원사업으로 확대 전환	- 추진(1년내) '임실 지역맞춤형 신소득작목 발굴'과 연계하여 농업분야 전문가를 통해 향후 10년 내지 20년을 고려해서 임실형 농한기 소득작목을 개발하여야 함.
22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기술보급과 (소득작목팀)	- 수정추진(신규) - 검토결과: 북부 권역을 중심으로 고추를 대체할 특용작물 발굴 시범사업 추진	- 추진(1년내) '임실 지역맞춤형 신소득작목 발굴'과 연계하여 농업분야 전문가를 통해 향후 10년 내지 20년을 고려해서 임실형 특용작물을 개발하여야 함. - 임실농업기술센터내 '팀' 단위 구성 운영
23	친환경 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	농업축산과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축사내 파리, 모기 등 유해해충 친환경적인 방제사업 추진	추진(1년내)

3) 지역개발·도시·주거·교통 분야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결과	인수위 공약검토 결과
1	에너지·산림 기반의 자산배당형 기본 소득 체계 구축	경제교통과 (햇빛소득TF팀)	• 중장기검토(신규) • 검토결과: 군 소유 공공건축물 주차장 부지 활용 주차장 태양광 시범 조성으로 지자체 재생에너지 모델 구축 • 다만, 태양광 공사와 함께 '30년까지 계통 연계 불가로 ESS설치 추가 비용 발생 등 투자 대비 사업 수익성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	• 중장기검토(임가내) • '2030년까지 계통연계 불가지역. ESS 추가설치 비용 발생으로 단기 추진 어려움 • 공유재산 용도변경 없이 기존 부지 그대로 활용 가능한 공공건축물 주차장 부지 이외, 군 소유 유휴면적 조사 필요
2	햇빛농사 마을 공동체 20개소 조성	경제교통과 (햇빛소득TF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공모 사업과 연계 마을별 적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지원으로 재생에너지 보편적 복지 실현 • '27부터 연도별 5개마을 총 20개소 조성 목표 시설자금(이차보전), ESS설치비 지원 추진	• 추진(임가내) •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추진 • 햇빛소득 희망마을 수요조사와 함께 유휴부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ESS 설치 비용은 군비로 지원 필요
3	택시 공영제 도입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 수정추진(계속) • 검토결과: 공공형택시(행복콜택시) 운영사업 지원 확대로 사업 추진	• 추진(1년내)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복콜택시 운영사업 확대하여 실시
4	권역별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경제교통과 (민생경제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침체된 관촌시장, 강진시장은 먹거리특화 시장으로 전환하고, 권역별 일반 상점가는 '골목형 상점가 조례' 제정 후 골목형 상점가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및 맞춤형 공모사업 추진	• 중장기검토(임가내) •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 정책과의 연계성 분석 후 국가공모가 필요한 상황임
5	오수전통시장 재건축	경제교통과 (민생경제팀)	• 중장기검토(계속) • 검토결과: 주민들이 희망하는 점포 20개소, 20평으로 구성할 시 약 6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전통시장법에 따른 인정시장 요건인 점포 50개소를 충족하지 못하여 전액 군비로 추진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 상가와 기존 상점가를 하나로 상인회를 구성하여 공약인 '권역별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포함하거나, 기존 시장부지에 임시시장을 운영 추진	• 중장기검토(임가내) • 국가공모사업 대응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결과	인수위 공약검토 결과
6	전원마을 200호 조성	건설과 (도시재생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신규 마을조성 개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검토	- 중장기검토(임기내) - 국가공모사업 대응 -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사업 등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7	임실읍, 오수면 소도읍 육성	건설과 (도시재생팀)	- 추진불가(대체추진) - 검토결과: 소도읍 육성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국고보조사업을 추진중으로 대체사업 지속 추진	추진불가
8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건설과 (도시토목팀)	- 추진가능(중장기-신규) - 검토결과: ① 기존 지방도 717호선의 국지도 승격을 통해 국비 확보를 통한 도로개설을 추진해 왔으나 섬진강댐(옥정호) 관리주체의 변경(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으로 댐 주변 지역 교통망 확충 관련 국지도 승격과 순환도로 개설 필요성 연계논리 약화. ② 옥정호 순환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 기능보다는 지역관광 활성화 및 주민생활권 연결기능이 강하여 국지도 승격 심사과정에서 우선순위 확보가 어려운 실정. ③ 단기적으로는 현재 수립 중인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기존 임도 및 도로망을 활용한 순환도로 노선을 반영하고, 농어촌도로 지정(변경)절차를 통해 단계적 사업추진. ④ 장기적으로 지방도 717호선 국지도 승격 및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은 국토부에, 하운암의 운암 급기 미개설구간은 지방도 관리청인 전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 및 시공되어 완전한 순환도로망 구축될수 있도록 위해 병행추진	- 중장기검토(임기내) - 국가공모사업 대응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결과	인수위 공약검토 결과
9	주거+영농+커뮤니티 클러스터형 정주모델 10개소 조성	건설과 (도시재생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중장기 검토 필요.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기존 도심과 연계된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 공모 검토	- 중장기검토(임기내) - 국토교통부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 공모사업추진
10	임실군 고령자복지주택 ‘임실우리타운’ 조성	건설과 (도시재생팀)	- 추진가능(중장기-신규) - 검토결과: 신규 마을조성 개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검토	- 중장기검토(임기내) ‘임실우리타운’ 조성 국가공모사업 추진
11	섬진강라이더 하우스 마을 조성	건설과 (개발행위팀)	- 수정추진(계속) - 검토결과: 수정추진. 대규모 시설 투자 대신 자전거길 주변에 운영되는 숙박시설 및 캠핑장과의 상생을 통한 자전거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이를 통한 라이더들의 체류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1년내)
12	오수 원동산 개발	건설과 (도시재생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22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오수지구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으로 계속 추진중이며, 원동산 공원 주변지역에 반려스쿨, 반려하우스, 특화거리 조성 계획임	- 추진(1년내) - 현재 오수지구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동산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계 추진
13	전 읍·면 생활안전 IoT 망 구축	안전관리과 통합관제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추진가능	- 추진(임기내) ‘28년 스마트빌리지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

4) 복지·환경 분야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결과	인수위 공약검토결과
1	임실군 고령자복지주택 “임실우리타운” 조성	종합민원과 (주택정책팀)	- 추진가능(신규) / 중장기검토 - 검토결과: 국토부 특화주택(고령자복지주택)공모사업 추진	- 국토부 ‘특화주택 공모 사업’ 으로 진행 -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임실군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외에 전주권이라는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이나 타 지자체의 고령층의 귀촌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 고려 요청 - 노인복지 타운으로서 부대시설이나 경관, 의료와 복지의 통합이 주거 지역에서 포함되는 설계 필요
2	노인안전 통합센터(웨어러블·IoT 기반 24시간 안전망)설립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추진가능(신규) / 중장기검토 - 검토결과: 통합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단계적 사업을 추진하고, 응급안전센터 설립을 통한 독자적 운영체계 및 사업모델 구축	- 추진가능 / 중장기 - 고령층과 홀로 어르신인 많은 지역으로 안전망 확충은 생명과 안전 보장의 중요 기능임 - 치매 어르신, 중증장애인, 기타 주민의 응급 상황과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망과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중요함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 하기 바람
3	경로당 신선 농산물 정기배송 지원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경로당 공동급식, 로컬푸드, 먹거리통합지원 센터 사업과 연계 추진	- 추진 재검토 - 농산물을 임실군 지역 전체에 배달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 있음 - 경로당은 농촌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마을에서 재배한 농산물 이용이 가능하며, 그것이 오히려 신선할 것임. 농산물 배달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을 분석해 보면 불합리함 - 특히 100% 군비 사업으로 지속적인 예산 부담이 예상됨
4	장애인 복지시설 현대화 사업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장애인시설 지원사업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시설 건립사업과 연계	- 추진가능 / 단기 - 기능보강을 통해 시설 현대화 필요함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의 경우 2027년 준공 예정인 ‘장애인지원센터’ 사용가능 성과 연계하여 예산 조정 및 계획 수립 필요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결과	인수위 공약검토결과
5	장애인 수당 군비 100% 상향 지원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로 가능 여부 결정/ 유사, 중복사업, 국비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원칙적 협의 불수용	- 추진 재검토 - 기존 예산에 추가하여 상향 될 경우 449,224천원의 추가 예산 소요 - 유사 사업이나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보건복지부에 확인 절차를 마친 후 추진 계획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매칭 통합플랫폼 구축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자체온라인 플랫폼 조성보다 기존 플랫폼 활성화 되도록 여건마련 및 양질의 노인일자리 개발	- 추진가능/ 현실성 검토 필요 - 노인일자리 매칭 통합 플랫폼 조성 필요성은 인정 됨. 다만 어르신들의 디지털리터러시 능력이 매우 낮고, 실제 일자리 오프라인 신청률이 99.9% 임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 됨 - 온라인 사용능력에 대한 전체 조사, 교육 실시 방안 후 시행 등 현실적인 평가가 필요함
7	임실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주민복지과 (통합돌봄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통합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임실군장애인연합회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 추진가능(계속)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 잘 운영되어 ‘여럿이 함께 익숙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임실형 모델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함
8	임실형 특화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청소년육성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 추진가능/ 계속 -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방학 및 주말에 서비스 체크 필요 - 취약한 가정의 아동으로 학대, 방임, 범죄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관 및 유관 기관과 사례관리 체계 구축 점검 바람
9	청소년 교육문화활동 바우처 20만원 지원	여성가족과 (청소년육성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후 진행, 에듀페이, 문화누리카드 등 중복지원 검토	- 추진가능(신규) - 신규 사업의 경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운영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보완책 점검 - 단순히 청소년에게 바우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역량 강화와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 방법, 이용률 등의 모니터링 필요 - 실행 후 효과성과 만족도 체크 제안함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결과	인수위 공약검토결과
10	어린이 의료비 무상화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후 시행, 전면 무상화보다는 본인부담금 지원형이 재정 예측에 유리	- 추진하되 내용 수정 - 어린이 의료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와 질병 예방 등 장점 있음 - 다만 소아과 진료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서 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어떻게 대응할지 우려됨 - 예산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모두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 보다 필수 의료로 중심으로 시행하는 방안 검토 바람 - 구체적으로 건강검진, 응급의료, 희귀질환과 중증질환 등에 대해 우선 무상 의료지원체계로 운영하고 평가 후 단계 별 시행 방안 모색 제안
11	첫돌 입학 축하 패키지 시행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후 시행	- 추진가능 (사업명 수정검토) - 내용은 입학 축하 패키지인데, “첫돌” 이라는 표현으로 돌을 맞은 영아에 대한 지원으로 오해 할 소지 있음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우선 협의 바람
12	어린이(8세이하) 행복수당 년 30만원 지급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후 시행	- 추진 불가 - 이미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있으므로 행복 수당은 비슷한 성격의 중복 지원이 될 수 있음 - 예산 부담을 고려해야 함. 이 사업은 100%군비 사업임. 군비 예산 사업인 무상 의료 지원 + 입학 축하 패키지 + 교육 문화 바우처 사업을 고려할 때 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중단을 검토 요청함
13	다문화가정 쉼터 현대화 사업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현재 다문화가족 소통·교류공간, 영유아놀이터 및 소통·교류 공간을 2023년 개관하여 운영중으로 시설 노후화가 심하지 않아 기존 시설을 보강하여 진행 예정임	- 수정 및 재검토 -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족 N 카페’ ‘임실 N 치즈 카페’ 를 활용할 수 있어 별도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낮음 - 일반가정과 다문화 가정을 구분하지 않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한 것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정만을 위한 사업 확장은 재고할 필요 있음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결과	인수위 공약검토결과
14	다문화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임실군가족센터 프로그램 강사 및 멘토단 지속 운영, 가족N카페 및 임실N키즈카페 다문화여성 일자리 지속 운영(근무조건 개선 주3일 1일3시간→주5일1일3시간)	- 수정 및 재검토 - 현재 가족센터의 이중 언어, 멘토단, 북카페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중복 됨 - 오히려 다문화 가정의 부모 자녀의 소통의 문제, 부부 갈등, 역량 강화를 위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취소하길 제안함
15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및 가족초청 지원 확대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기존 추진중에 있으며, 신청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량 확대 필요	- 추진 가능. 계속사업 - 수요증가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행
16	생활안전망 IOT 구축	안전관리과 (통합관계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2028년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추진	- 추진가능/ 중장기 사업 - 추진가능하나 46번 공약과 중복내용 검토 하고 효율성 증진을 위해 통합해서 실행 계획 세우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 - 스마트 빌리지 공모 사업으로 실행하는 것은 긍정적임
17	옥정호 비점오염원 확산 방지시설 조성	옥정호힐링과		- 추진가능(신규) - 옥정호의 지속적인 부영양화 및 녹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오염원 관리를 넘어 비점오염원 관리에 집중해야 함
18	임실형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환경보호과		- 추진가능(임기내) - 각 지자체별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임실군 환경보호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환경 보호과 업무과다로 계획 수립 및 관리가 잘 이행되고 있지 못함. 환경보호과에 전문가를 배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던지,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19	생활환경 (협오시설) 관리	환경보호과		- 공약 불필요 -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음. 별도 공약으로 개발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임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결과	인수위 공약검토결과
20	쾌적한 가로환경 (생활환경/협오시설) 관리	청소위생과		- 공약 불필요 -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음. 별도 공약으로 개발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임
21	산모 생활지원금 지급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 후 진행	- 추진 - 저출산극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위해 필요한 신규복지정책으로 안정적이고 확실한 사업수행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 협의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복지제도를 신설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요망 사업
22	임산의료원 입원실 신설 및 전문 재활 요양시스템 도입	의료지원과 (원무팀)	- 추진가능(계속) / 단기사업 - 검토결과: 입원실 운영 및 전문 재활 요양시스템 도입	- 추진 - 당초 임실군 보건의료원 입원실 장기휴업 상태로 2026년 5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상간 이격거리 이산 화탄소 환기시설 등 현행의료 법상 시설기준을 완벽히 충족하도록 시설보수 진행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에 일반급성기 병상뿐 아니라 군의 특성에 맞는 고령층을 위한 전문재활 및 요양보호를 취행 요양보호사 연계 등 채용을 하고 보건사업과 재활 치료실과 의료지원과 물리치료실을 연계 운영하도록 해야함
23	의료·통합돌봄 (임실형 Agro-medical complex 조성)	농촌지원과 (생활자원팀)	- 수정검토필요 - 검토결과: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공모사업 대응과 여러 부서 협업을 통해 사업추진	- 중장기사업 등 타부서 연계사업 - 농업지원과 의료지원과 보건사업과 지역경제과 농촌활력과 농촌정책과 건설과 토목과 재난안전과 등 연계를 통한 치유농업을 기반한 사업인 만큼 보건의료원 사업기술 - 취약계층에 대한 정서 신체활동이 결합된 선진형으로 통합돌봄을 해야 가능한 사업으로 대상자 발굴에서 치유까지 방문·보건·건강관리등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후 대상자를 스트레스 지수 인지가능 검사, 혈압, 당뇨, 만성 질환 수치변화를 측정 분석하여 의료적 효과를 입증해야 하므로 중장기 사업으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인내심과 연속성 반복성 사업이 필요한 사업임

5) 문화·관광 분야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 결과	인수위 공약검토 결과
1	이성계 전승 기념 트레일러닝 (trail running) 대회 신설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가능	- 추진가능(계속) - 검토 의견 : 기존 산림휴양 인프라 기반의 트레일러닝 사업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음. - 향후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브랜드 통합, 숙박 연계 콘텐츠 개발, 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2	옥정호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권역 간 체육 인프라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운암 파크골프장 조성 필요	- 추진가능(신규) - 검토 의견: 운암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은 체육 인프라 균형 발전과 스포츠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음. - 이용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대회를 유치하고,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필요함.
3	테마형 도서관 권역별 건립 (도서관 여행 도시)	문화체육과 (임실도서관팀, 오수도서관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관촌도서관을 시작으로 권역별 특화 도서관을 조성해 차별화된 도서관 관광벨트를 구축	- 추진가능(계속) - 검토 의견 : 관촌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권역별 특화도서관 조성 방향은 타당하나, 이에 앞서 군민 중심의 콘텐츠 확보와 시설 활용도 제고가 선행되어야 함. - 관촌도서관 시범 운영을 통해 성과와 수요를 면밀히 검증 후, 도서관 여행 등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것을 권고함.
4	신평 암각화 박물관 건립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	- 추진가능(신규/수정) - 검토결과: 임실의 역사·문화 자원 보존과 전시를 위한 임실역사박물관으로 수정 추진	- 추진가능(조건부/신규) - 검토의견 : 임실 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여건에서는 단일 박물관 건립보다 지역 대표 문화 유산을 활용한 특화 전시·체험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함. - 지정환 신평 유품전시관, 성가리 3·1운동 기념관, 임실을 역사문화벨트 조성 등을 우선 추진하여 관광객 유입과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하가구석기유적의 국가사적 지정 및 유물 확보 등 여건이 성숙될 경우, 역사박물관 또는 구석기 생태문화관 건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 결과	인수위 공약검토 결과
5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증·개축 및 스포츠이벤트 유치	문화체육과 (사격장운영팀)	- 추진가능(조건부) - 검토결과: 종합사격장은 전북도 소유 시설로 군 단독 증·개축에는 한계가 있음. 전북도의 문체부 공모 추진에 맞춰 사업이 확정될 경우 군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	- 추진가능(조건부)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주도의 행정 협조 체계로 전환하여 추진함. - 종합사격장은 도 주도의 시설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국·도비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향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주변 관광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6	오수 파크골프장 확대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 추진가능(증설) - 검토결과: 오수파크골프장 9홀 증설에 따른 인도교 설치 필요, 사업비는 균형발전특별회계(군특) 예산 지원 가능	- 추진가능(신규/수정) - 검토의견 : 36홀 확충을 통해 전국대회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스포츠 관광을 활성화해야 함. - 실효성 있는 대회 운영계획 수립과 더불어, 지역 관광 및 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병행 마련하여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7	임실 3색 테마 힐링 캠핑벨트 조성	관광치즈과 (관광개발TF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옥정호,오수·임실권역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 기존 성수산 왕의 숲 캠핑장과 치즈테마파크 플레이캠프를 연계한 테마형 캠핑벨트를 구축	- 조건부 추진가능(신규) - 검토의견 : 권역별 특성을 살린 캠핑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시설 확충보다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해야 함. - 방문 수요 분석을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거점 캠핑장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캠핑장과 주변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해야 함.
8	명품 숙박시설 건립	관광치즈과 (관광개발TF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기 확정된 「임실 치유관광 기반조성사업」 「민관상생 협약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반영 추진	- 추진가능(계속) - 검토의견 :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리미엄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하며, 관련 기반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함. - 숙박시설의 최적 입지 선정과 치유관광 기반조성 계획을 구체화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차별화된 체류형 콘텐츠를 병행 마련할 필요가 있음.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 결과	인수위 공약검토 결과
9	사선대 오감정원 조성	관광치즈과 (관광개발TF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제8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27~ '31)」 반영을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26 사업확정 예정), 사계절 정원, 인공폭포, 야간경관 등	- 추진가능(신규) - 검토의견 : 사선대 관광지 재생은 시급과제이며, 도비 확보를 통해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야 함. - 단순한 외형적 경관 개선을 넘어, 사선대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체험 요소를 병행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	치즈테마파크-임실읍 상생 관광벨트 구축	관광치즈과 (관광산업팀) (치즈기획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스탬프 투어·모객지원 확대, 각종 축제 개막식 임실읍 일원 개최 검토	- 추진가능(계속) - 검토의견 : 치즈테마파크의 관광수요를 임실읍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설 관광 콘텐츠 및 차별화된 치즈 문화 상품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 - 이를 기반으로 테마파크와 임실읍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동선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상권으로의 실질적인 낙수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11	펫푸드 산업 육성	반려산업과 (반려정책팀)	- 추진가능(신규) - 검토결과: 지역 농특산물 활용 펫푸드 상품 개발 및 홍보 지원, 펫푸드 개발 상품을 대상으로 시식·체험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펫푸드산업 관련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지식산업센터 구축, 지역농산물 활용 펫 간식 상품개발 및 기업유치, 관광 체험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조건부 추진가능(신규) - 검토의견 : 대기업 중심의 펫푸드 시장 구조상 단순 제조시설만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사업 추진 시 차별화 전략 수립이 필수적임. - 임실 치즈·사과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펫푸드 개발과 반려동물 체험관광을 연계하고, 전북 농생명산업지구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산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실제 입주 수요와 기업 유치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옥정호 웰니스 치유복합공간 조성	옥정호힐링과 (경관관리팀)	- 수정추진(계속) - 검토결과: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추진가능한 도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지정 '21.11.22/ 도비 미확보(도비 부족 미지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은 관광치즈과 '힐링 캠핑벨트 조성' 공약 사업으로 추진, 수상레포츠 기반 구축은 옥정호 생태탐방선 운행 사업과 중복되어 제외	- 조건부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캠핑장 및 수상레포츠 사업은 제외하고,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생태숲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신규 시설 확충보다는 기존 옥정호 관광 자원과 연계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치유·휴양 콘텐츠를 강화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 결과	인수위 공약검토 결과
13	옥정호 수면 관광 및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 옥정호 순환형 물안개길 조성	옥정호힐링과 (생태개발팀)	- 수정추진(계속) - 검토결과: 탐방선 사업은 중복성과 협의 지연으로 임기 내 추진이 어려움. 국비를 확보해 기존 물안개길을 연결하는 순환형 물안개길 조성으로 변경 추진.	- 조건부 추진가능(계속) - 검토의견 : 수면(수변) 관광사업은 부처 협의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이미 국비가 확보된 국가생태탐방로와 순환형 물안개길 조성에 역량을 집중함이 바람직함. - 기존 물안개길, 국가생태탐방로, 생태공원을 하나의 순환형 탐방체계와 단일 브랜드로 통합함으로써 체류형 생태관광 기반을 견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14	옥정호 하늘바우 생태공원 조성사업	옥정호힐링과 (섬진담지원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친환경 수변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옥정호의 경관 가치를 높이고 군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약 취지에 부합하며 사업 타당성이 높음.	- 조건부 추진가능(계속) - 검토의견 : 옥정호의 수질 보전, 생태환경 복원, 경관 개선 및 군민 휴식 공간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추진 타당성이 매우 높음. - 향후 생태공원 조성과 더불어, 물안개길 등 기존 자원과 연계한 차별화된 체류형 생태관광 콘텐츠를 구축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15	옥정호 수상레포츠 체험시설 조성	옥정호힐링과 (생태개발팀)	- 수정추진(계속) - 검토결과: 정읍시와의 사전 협의 및 도비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선박 도입 및 선착장 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조건부 추진가능(계속) - 검토의견 : 수면(수변) 관광사업은 정읍시와의 협의 불확실성과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독자 추진보다는 수상레포츠 체험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 규모와 유형은 옥정호 고유의 생태·치유 브랜드를 훼손하지 않도록 친환경 체험 콘텐츠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16	옥정호 케이블카 민자유치	옥정호힐링과 (생태개발팀)	- 수정추진(계속) - 검토결과: 민간투자 유치와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추진에 한계가 있음. 모노레일은 사업성·유지관리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조건부 추진가능(계속) · 폐지 - 검토의견 : 모노레일을 제외하고 케이블카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방향은 사업성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타당함. - 단, 케이블카 도입은 철저한 타당성 분석 및 사업성 검토를 전제로 민간투자(민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옥정호 권역의 연계사업과의 통합성 및 시너지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17	국립임실호국원 보훈힐링공원 조성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중장기 검토(신규) - 검토결과: 국립임실호국원은 국가시설로 호국원 내 사업 추진은 국가보훈부의 승인 등 행정절차와 사업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중장기검토 사업으로 추진	- 중장기 검토(신규) - 국가사업과 연계되는 만큼 국가보훈부·전북도와의 협력 및 재원 확보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단순 전시시설보다 임실의 전쟁사와 평화·교육 콘텐츠를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역사·교육 자원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함.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당부서 공약검토 결과	인수위 공약검토 결과
18	옥정호·성수산 연계 경관형 자작나무 숲 조성	산림녹지과 (산림조성팀)	- 수정추진(신규) - 검토결과: 임실 대표관광지 주변 산림에 지역특화조림 사업 추진으로 관광자원 확충(지역에 적합한 수종검토)	- 조건부 추진가능(신규) - 검토의견 : 식생 및 생육 환경 검토 선행 조항을 추가 함. 경관숲 조성은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나, 자작나무의 경우 국내 기후 및 토양 여건을 감안할 때 생육 적합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며, 가급적 지역 적응형 수종을 우선 선정해야 함. - 기존 산림휴양 자원과 연계한 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되, 안정적인 생육이 검증된 수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19	탄소흡수형 가로수 수종갱신	산림녹지과 (녹지경관팀)	- 수정추진(계속) - 검토결과: 불량·고사목 중심의 단계적 수종갱신 및 대체 숲 조성 추진. 법적 제한 및 재원 확보 한계로 가로수 전면 제거는 불가, 생육 불량목 위주의 연차별 교체 및 유흥지 활용 신규 도시숲 조성으로 수정 추진	- 조건부 추진가능(계속) - 검토의견 : 가로수의 전면적 일괄 교체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법적 절차적 한계가 따르므로, 생육 상태가 불량하거나 노후된 수목을 중심으로 '연차별 순차적 갱신'을 추진하는 것이 재정 현실성에 부합함. - 신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가로수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선행하고, 도심 내 공공 유흥지를 적극 발굴하여 탄소흡수형 도시숲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 대비 효율적인 생활권 녹지 기능을 확보해야 함.
20	4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경관 조성 (정원 도시)	산림녹지과 (녹지경관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4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경관조성 사업은 임실군 이미지 제고 및 체류형 관광 구축을 위해 사업 지속 및 확대 추진이 타당하나, 이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증액 부담 발생	- 조건부 추진가능(계속) - 검토의견 :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 사업으로서 추진 타당성은 인정됨. - 매년 반복되는 소모성 초화류 식재를 지양하고, 임실만의 '시그니처 경관 조성'과 '주민 참여형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21	성수산 왕의 숲 테마파크 조성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 추진가능(계속) - 검토결과: 성수산의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여 숲치유와 레포츠를 결합한 산림휴양 거점 조성추진	- 조건부 추진가능(계속) - 검토의견 : 성수산 테마파크는 대규모 하드웨어 신설보다는 기존 산림휴양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고도화하고, 야간경관 및 이색 체험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트레일러닝, 캠핑, 산림치유 등을 통합한 '성수산 왕의 숲' 단일 브랜드를 정립하고, 전문 운영체계와 일원화된 관리조직 구축을 통해 체류형 산림관광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6) 신규 공약 제안(안)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인수위 신규공약 제안 의견
신규1	임실군청 청사 광장 '군민 환원' 및 스마트 생활정원 조성	미정	- 추진가능(신규) - 공급자 중심의 권위적인 군청 광장을 군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바꾸는 민선 제9기 핵심 가치 공약사업 - 전면 철거나 대규모 토목공사를 지양하고, 기존의 12개 석주와 보도블록 등을 '업사이클링' 하는 저예산·고효율 기법을 제안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군민 체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으로 판단
신규2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 제도 정비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 추진가능(신규) -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기초해 조례를 제·개정하여 임실 예술생태계를 활성화 할 제도적 근거 구비 - 비예산사업으로 행정부문의 검토 이후 군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과 변경 가능
신규3	축제와 관광 전문성 확보 조직 구축	관광치즈과 (치즈기획팀)	- 추진가능(신규) - 출연기관 제)임실치즈테마파크의 축제 및 관광 전문성을 대내외적으로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축제 운영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재단명 변경과 조직 개편 필수 - 전문인력 충원 전에는 비예산 조직명 변경으로 재단 및 행정, 군의회의 의사결정과 협의를 거쳐 조례 변경으로 이행 가능 - 축제 전문가를 계약직 센터장(감독), 팀원으로 1~2인 충원 시 인건비 계상
신규4	지정환 정신과 독립정신을 잇는 임실 역사문화벨트 조성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	- 조건부 추진 검토(계속) - 지정환 정신을 계승하고 임실 치즈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사문화 거점 조성 - 치즈테마파크와 임실읍 원도심을 연결하는 역사·문화·치즈 관광벨트 구축 - 지역 문화유산과 독립운동 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 원도심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임실읍 관광자원의 연계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단계별 추진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신규5	맛으로 머무는 임실 프로젝트	미정	- 조건부 추진 검토(신규) - 치즈와 지역 먹거리를 연계한 임실 대표 식문화 관광브랜드 구축 - 역사·문화·치즈 관광벨트와 연계한 체류형 미식관광 활성화 - 지역 음식점·전통시장·농축산물과 연계한 관광 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상생 기반 마련 - 먹거리와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생태계 조성 - 치즈테마파크와 임실읍 관광벨트를 연계한 미식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참여업체 발굴이 선행되어야 함.

7) 기타 인수위 제안과제 검토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인수위 문화관광분과 검토 의견
신규1	달빛따라 길따라 (섬진강 장천선 관광거리 조성)	산림녹지과 (녹지경관팀)	• 조건부 추진 가능(신규) • 섬진강의 독보적인 생태·인문 자원을 활용하는 우수 공약이나, 신촌마을 앞 대규모 사유지 매입에 따른 군 재정 부담과 행정 지연 리스크가 큼. • 재정 부담이 적고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꽃길 조성 및 생태 축제]를 1단계로 선제 추진하고, [주말농장 및 주차장 조성]은 중장기 과제로 유보하는 등 보완책을 전제로 계속 추진함이 타당함. • 청정 생태자원과 문학·역사 콘텐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섬진강 문화관광벨트 조성이 가능 • 장천선 거리 조성을 시작으로 하가 구석기유적, 김용택 문학자원 등과 연계한 '섬진강 역사·문화·생태 관광벨트'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필요
신규2	임실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	관광치즈과 (관광개발TF팀)	• 조건부 추진 가능(신규) • 차별화된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하나, 수요와 사업성,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보다 기존 산림휴양 인프라와 연계한 서바이벌·생존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ICT 기반 첨단 시스템과 캠핑·체류형 콘텐츠를 접목하고, 향후 전국 단위 대회 유치 등을 통해 스포츠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7-2. 분야별 공약과제 우선 추진 항목

1) 기획·조정 분야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추진시기
1	(재)임실미래발전 기획단 설립 운영	기획감사실	추진 (1년내)
2	임실형진로진학센터 설립 및 원스톱 컨설팅	행정지원실	
3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임실캠퍼스 설립	행정지원실	
4	원스톱 통합허가팀 신설(인허가 제도 혁신)	행정지원실	
5	찾아가는 현장군수실 운영	행정지원실	
6	공공발주 지역우선 구매제 도입	재무과	
7	생활민원 one-stop 서비스 시스템 운영	종합민원과	
8	생활환경(협오시설) 관리	종합민원과	
9	신혼부부·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및 전세보증금 보조	종합민원과	
10	농촌유학·전입형 교육모델 시행	행정지원실	추진 (임기내)
11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확대	행정지원실	
12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금 신설	행정지원실	
13	임실형농촌기본소득 농촌주민수당 1인 60만원/년 지급	농업축산과	
14	지역상생형평생교육센터 운영	행정지원과	
15	농업예산 30% 수준 확대	기획감사실	
16	관계인구 10만형임실 공동체 구성	기획감사실	
17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금 신설	행정지원실	
18	봉황인재학당, 미래인재육성 교육지원확대	행정지원실	
19	청년·신혼부부 월세 1만원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공급	종합민원과	
20	임실군 1억 농가소득, 1,000농가 육성	농업축산과	
21	KTX 임실치즈역 정차 추진	경제교통과	
22	전국 이통장연수원 건립	행정지원실	
23	임실군 고령자복지주택 ‘임실우리타운’ 조성	종합민원과	
24	임실형 ‘山地자원순환경제 모델’ 구축	산림녹지과	
25	농촌주민수당(나무연금 12만원)	산림녹지과	
26	방위산업체기업 유치	경제교통과	증장기검토 (임기내)
27	임실군 버스터미널 복합 다기능 플랫폼 조성	경제교통과	
28	기본사회 추진 특구 지정	기획감사실	추진불가
29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행정지원실	
30	공공갈등예방·주민수용성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종합민원과	
31	AI 민원행정 피드백 시스템 도입	종합민원과	
32	산림 기반의 자산배당형 기본 소득체계구축	산림녹지과	
33	임실형 고유가 대응 생활안정자금(20만원) 지원사업	경제교통과	

2) 농업·농촌·축산 분야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추진시기
1	임실형 농촌기본소득 1인 60만원/년 지급	농업축산과	추진 (1년내)
2	직불금 확대 개편에 따른 농가소득보전 추가 지원	농업축산과	
3	조사료 생산 협동조합 지원	농업축산과	
4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	농업축산과	
5	친환경 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	농업축산과	
6	임실군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농촌활력과	
7	농축산물 학교급식·공공급식·직매장 활로 확대	농촌활력과	
8	주민참여형 마을재생협의체 운영	농촌활력과	
9	임실 지역맞춤형 신소득작목 발굴	기술보급과	
10	아열대 과수 기후 적응성 실증단지 조성	기술보급과	
11	친환경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	농업축산과	
12	365 안정 소득보장 농한기 소득 작목 개발	기술보급과	
13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기술보급과	
14	농촌인력지원센터 설립 운영	농업축산과	중장기검토 (임기내)
15	임실군 1억 농가소득, 1,000농가 육성	농업축산과	
16	지역특화/청년농업인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농업축산과	
17	청년농 임대농지·창업농지 지원	농업축산과	
18	권역별 축분퇴비장 건립 지원사업	농업축산과	
19	전북대학교내 임실군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설립	농촌활력과	
20	농산물 안정기금 300억 원 조성	농촌활력과	
21	빈집, 유휴 농가를 마을호텔, 위케이션센터 조성	농촌활력과	
22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농촌활력과	
23	의료·통합돌봄(Agro-medical complex 조성)	농촌지원과	
24	가축분퇴비 100만 포 무상공급 및 살포지원	농업축산과	추진불가
25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농촌활력과	
26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농촌활력과	

3) 지역개발·도시·주거·교통 분야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추진시기
1	택시 공영제 도입	경제교통과	추진 (1년내)
2	오수 원동산 개발	건설과	
3	섬진강라이더 하우스 마을 조성	건설과	
4	전 읍·면 생활안전 IoT 망 구축	안전관리과	추진 (임기내)
5	KTX 임실치즈역 정차 추진	경제교통과	
6	햇빛농사 마을공동체 20개소 조성	경제교통과	
7	오수전통시장 재건축	경제교통과	증장기검토 (임기내)
8	전원마을 200호 조성	건설과	
9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건설과	
10	주거+영농+커뮤니티 정주모델 10개소 조성	건설과	
11	임실군 고택자복지주택 ‘임실우리타운’ 조성	건설과	
12	권역별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경제교통과	
13	에너지·산림 기반의 자산배당형 기본 소득 체계 구축	경제교통과	추진불가
14	임실형 고유가 대응 생활안정자금(20만원) 지원사업	경제교통과	
15	임실읍, 오수면 소도읍 육성	건설과	

4) 복지·환경 분야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추진시기
1	경로당 신선 농산물 정기배송 지원	주민복지과	추진 (1년내)
2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매칭 통합플랫폼 구축	주민복지과	
3	임실형 특화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과	
4	다문화가정 쉼터 현대화 사업	여성가족과	
5	다문화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	여성가족과	
6	다문화가정 고향 방문 및 가족 초청 지원 확대	여성가족과	
7	옥정호 비점오염원 확산 방지 시설 조성	옥정호힐링과	추진 (임기내)
8	노인안전 통합센터(웨어러블·IoT기반 24 안전망)설립	주민복지과	
9	장애인 복지시설 현대화 사업	주민복지과	
10	임실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주민복지과	
11	임실형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환경보호과	
12	임실의료원 입원실 신설 및 전문 재활 요양시스템 도입	의료지원과	중장기검토
13	임실군 고령자복지주택 “임실우리타운” 조성	종합민원과	
14	생활안전망 IOT망 구축	안전관리과	
15	의료·통합돌봄(임실형 Agro-medical complex 조성)	농촌지원과	조건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이행必)
16	장애인 수당 군비 100% 상향 지원	주민복지과	
17	청소년 교육문화활동 바우처 20만원 지원	여성가족과	
18	어린이 의료비 무상화	여성가족과	
19	첫돌 입학 축하 패키지 시행	여성가족과	
20	어린이(8세이하) 행복수당 년 30만원 지급	여성가족과	
21	산모 생활지원금 지급(중장기/ 임기 내)	보건사업과	

5) 문화·관광 분야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추진시기
1	이성계 전승 기념 트레일러닝 대회 신설	문화체육과	추진 (1년 내)
2	오수 파크골프장 확대	문화체육과	
3	치즈테마파크- 임실읍 상생 관광벨트 구축	관광치즈과	
4	4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경관(정원도시) 조성	산림녹지과	
5	탄소흡수형 가로수 수종갱신	산림녹지과	
6	테마형 도서관 권역별 건립	문화체육과	추진 (임기내)
7	임실 3색 테마 힐링 캠핑벨트 조성	관광치즈과	
8	신평 암각화 박물관 건립	문화체육과	
9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증·개축 및 스포츠이벤트 유치	문화체육과	
10	명품 숙박시설 건립	관광치즈과	
11	사선대 오감정원 조성	관광치즈과	
12	팻푸드 산업 육성	반려산업과	
13	옥정호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	문화체육과	
14	옥정호 웰니스 치유복합공간 조성	옥정호힐링과	
15	옥정호 순환형 물안개길 조성	옥정호힐링과	
16	옥정호 하늘바우 생태공원 조성사업	옥정호힐링과	
17	옥정호·성수산 연계 경관형 자작나무 숲 조성	산림녹지과	
18	성수산 왕의 숲 테마파크 조성	산림녹지과	
19	옥정호 수상레포츠 체험시설 조성	옥정호힐링과	
20	옥정호 케이블카 민자유치	옥정호힐링과	중장기검토 (임기내)
21	국립임실호국원 보훈힐링공원 조성	주민복지과	
신규1	임실군청 청사 광장 ‘군민 환원’ 및 스마트 생활정원 조성	미정	추진 (1년 내)
신규2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 제도 정비	문화체육과	
신규3	축제와 관광 전문성 확보 조직 구축	관광치즈과	
신규4	지정환 정신과 독립정신을 잇는 임실 역사문화벨트 조성	미정	추진 (임기내)
신규5	맛으로 머무는 임실 프로젝트	미정	
신규6	달빛따라 꽃길따라(섬진강 장천선 관광거리 조성)	옥정호힐링과	
신규7	임실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	미정	

제9장 자문위원회 의견

제9장 자문위원회 의견

8-1. 재정·예산 구조 개편

구분	주요내용
본예산 중심 편성 원칙 확립	▪ 매년 반복된 추경 분할 편성·선심성 예산 관행 차단 ▪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회복
민간보조금 구조조정 (연 200억 원 규모)	▪ 관행적 복지·문화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기본소득·주민수당 등 민선 제9기 핵심재원 확보
일몰제 강화 및 소모성 사업 정비	▪ 성과 미진 사업을 단계적 폐지하여 재정 여력 마련 ▪ 정책 지속성보다 성과 중심으로 예산 체질 개선
국·도비 확보 전담팀 신설	▪ SOC·교육·청년·도시재생 등 공모 대응 상시화 ▪ 외부 자원 확보로 군 자체 부담 완화
부서 책임예산제 도입	▪ 부서장에게 예산·사업 책임 부여하여 집행 효율성 강화 ▪ 성과 기반 예산 운영으로 전환

8-2. 조직·행정 혁신

구분	주요내용
칸막이행정 해소 및 협업행정 시스템 구축	▪ 중복·유사 사업을 기획감사실 중심으로 통합 관리 ▪ 부서 간 연계성 강화 및 조직 효율성 상승
3국 체제 재검토 및 실무 중심 팀 재편	▪ 결재 라인 과다(역삼각형) 구조 개선 ▪ 실무자 중심의 평면적 구조로 전환
관광·홍보 직제 조정	▪ 관광치즈과→관광산업과, 힐링과→생태관광과 등 기능 중심 개편 ▪ 홍보담당관 축소 검토로 인력·예산 효율성 확보
중간지원조직 설립	▪ 청년·농업·교육·복지 현장을 연결하는 민관 플랫폼 구축 ▪ 정부 통합돌봄·기본사회 정책 대응 기반 확보
BSC 성과평가 개편	▪ 지원부서 편중 완화, 읍·면 현장 공무원 우대 ▪ 조직 사기·현장 중심 행정력 강화

구분	주요내용
협업마일리지 제도 도입	- 부서 간 협업 실적을 인사·평정에 연동 - 칸막이 제거를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시스템
발탁승진제 도입	성과 중심 인사로 조직 활력 제고
원스톱 현장확인제	- 민원 처리를 현장에서 확인·피드백 의무화 - 민원 만족도·행정 신뢰도 제고

8-3. 청년·인구정책

구분	주요내용
임실 청년군청 신설	- 정주활력센터를 청년 일자리·주거·농업 지원 통합기구로 운영 - 청년 인구 유입의 핵심 인프라 구축
임대형 스마트팜 대규모 개선	- 현 시설 노후·소규모로 소득 창출 불가 → 청년 이탈 - 실질적 경영 규모(천평 이상) 확대해 '청년 자립형 농업' 실현
드론 3차 공동방제·배터리 지원	-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해소 - 청년 농업인의 기술 기반 일자리 강화
고령농-청년농 상생모델	- 청년이 퇴비장·살포·방제를 대행하고 고령농 부담 경감 - 세대 갈등 해소 및 농촌 내 협력 구조 구축
농촌유학 정주환경 강화	가족 동반 유학 구조로 전환하여 실거주 인구 확보
인구 3만 목표 2030 마스터플랜	연령·지역별 인구 구조 기반의 실질적 유입 전략 수립
귀농·귀촌 중심 지방 소멸기금 재배치	효과가 낮았던 기존 사업 대비 높은 인구 정착 성과 기대
교육특구 (관촌·임실) 구축	인구 유입의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교육 투자 최우선 배치

8-4. 교육·평생학습

구분	주요내용
글로벌IB 명품 교육도시	- 초·중·고 일관 IB 시스템 도입으로 차별화된 공교육 제공 - 전주권·수도권 교육 인구 유입 가능
교육특구 대응 (교육 소프트웨어 확보)	- 민관학 네트워크, 마을교육공동체, 온마을 배움체계 구축 - 국비 확보 가능성과 교육경쟁력 동시 강화
평생교육센터 신설	유휴시설 활용, 지역 교육·문화 인프라를 군민 중심으로 재조정
청소년시설 분리 운영	문화/상담 기능 분리, 전문상담 기능 보장 및 이용자 안전 강화
봉황인재학당 편중 해소	대학입시 중심에서 직업·진로·기초학력 등 다각도 지원으로 개편

8-5. 농업·축산·농촌활력

구분	주요내용
공공급식관내 농산물 우선공급 조례화	- 현재 군산·전주산 공급의 구조적 문제 해결 - 지역 농가 소득·지속성 확보
로컬푸드 수수료 (30~38%) 인하	농가 부담 완화 및 소비자 가격 안정
가공센터·유통허브 구 축	계절 편중 생산 문제 해결 및 연중 공급 체계 마련
돈사 악취 근본 해결 (폐업보상·부지매입)	행정조치로 해결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 근본적 접근
퇴비장 지원 확대	악취 민원·환경 규제 강화에 선제 대응
농기계 보조금 상향	고가 장비 부담 완화, 영농 공백 해소
드론 방제 시스템 개편	이장단 분쟁구조 개선 및 농가 중심 제도로 전환
청년단체 집수리 위탁	관외 용역 의존을 줄이고 지역 청년 경제 활성화

8-6. 관광·문화·체육

구분	주요내용
핵심관광벨트 구축	- 옥정호-치즈-오수-사선대 연계 점 단위 관광을 선·면 단위 관광으로 확장 -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경제 확산
관광투어버스+지역상품권 결합	체계적 소비 유도 시스템 구축
이성계 역사 브랜딩	산악마라톤·국궁대회 등 전국 단위 행사 유치
밀리터리 서바이벌 테마파크	제35사단·사격장 연계 가능 전국 유일 수준 관광자원
사선대 생태길·임실 미술창고	지역 소외 해소 및 문화·생태 기반 확충
오수 전통시장 '민속촌형' 복원	- 주민 반대가 강한 아파트형 재개발안 폐기 - 관광·지역상권을 동시에 살리는 모델
체류형 숙박 (찜질방 재생)	국제양궁장 방문객 외부 유출 차단
파크골프 확장	- 오수 36홀 정규 확장(1순위) - 강진 서부권 72홀 구장 - 기타 지역의 중복 요청 억제 → 갈등 방지
문화예술보조금	- 정산 투명성 확보와 주민 상생 프로그램 강화 - 주민 상생 및 문화 향유 기여 여부 모니터링 강화

8-7. 경제·지역상권·민생

구분	주요내용
로컬푸드상설 판매부스	안정적 외부 판로 확보
상점가 신년하례회+문화행사 통합	지자체 행사와 지역상권 연결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유통 재정비	각 면 시장의 폐쇄·공실 문제 해결
경찰서 구내식당 설차시니어 일자리 연계	기관 복지 향상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축사거리 규제 완화 TMR 사료비 보조	축산농가 비용 부담 완화

8-8.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I

임기 전반기 내에 304.4억 원의 채무를 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채무 비율 관리 가이드라인' 확정 및 이행 방안

1) [1단계] - 임실군 '채무 시계' 발령 및 경고선(가이드라인) 설정

- (예산 대비 채무비율 상한선 확정) 현재 임실군의 예산 규모(약 5~6천억 원 안팎) 대비 채무잔액(304.4억 원)의 비율을 계산하여, 정량적 상한선을 조레나 방침으로 확정.
- (신규 지방채 발행 전면 금지) 임기 전반기 2년 동안은 긴급한 재해·재난 대응을 제외하고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선언을 정무적으로 단행.

2) [2단계] - '채무상환 전용 기금(감채기금)' 설치 및 재원 매칭

- (순세계잉여금 자동 적립 제도화) 매년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이 중 최소 30% 이상을 다른 사업에 쓰지 않고 채무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임실군 감채기금 설정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 (지출 구조조정 연동) 행사성 경비 감축, 보조금 일몰제를 통해 아낀 재원(연간 약 30~50억 원 규모)을 일반 회계로 다시 편성하지 않고, 즉시 이 감채기금에 납입하여 채무 조기 상환 재원으로 격리.

3) [3단계] - 가용재원 분석 기반의 연차별 상환 스케줄(로드맵) 확정

- ➡ 백서의 '가용재원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연도별 상환 목표를 세분화
- (26년 하반기 - 초년도) 채무 현황 정밀 진단 및 상환 기금 설치, 추가 발행 동결.
- (27년 - 2년 차) 구조조정 재원 +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최소 70억 원 조기 상환.
- (28년 상반기 - 3년 차/임기 전반기 완료) 추가로 70억 원을 상환하여 임기 전반기 내에 총 채무의 약 45%(약 140억 원)를 감축, 채무잔액을 160억 원대로 축소.

4) [4단계] - '지방재정공시'를 통한 주민 공개 및 의회 협치

- (투명한 통제 체계 구축) 매년 군민들에게 임실군의 채무 감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채무 신호등' 제도 도입.
- ⇒ 군수가 바뀌면서 채무가 증가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고통스러운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해 군민과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재정 건전화 성과'를 핵심 지표(KPI)로 연동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

II '1111 관광 프로젝트'의 재정적 현실성과 실현 경로 보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 ◇ 자체수입 비중이 7.8%에 불과하고 부채가 3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수반하는 '1111 관광 프로젝트(1천만 명 유치, 1조 원 매출)'를 성공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 ◇ 핵심은 '대규모 군비 투입 자제', '외부 자원 활용', 그리고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가성비 높은 소프트웨어 전략임.

1) 초기 인프라 투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자본'으로 전액 대체

- (지방소멸대응기금 패키지 투자) 군비(일반회계)를 투입하는 대신, 매년 임실군에 배정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광을 통한 인구 활력' 테마로 집중 편성.
- ⇒ 야간 경관 조성이나 체류형 숙박시설 확충의 초기 마중물 비용은 이 기금으로 해결하여 군비 부담을 제로화.
- (민간 자본(PF) 유치를 위한 '규제 프리존' 도입) 옥정호나 치즈테마파크 주변에 부족한 민간 숙박시설(리조트, 글램핑장 등) 유치를 위해, 임실군이 부지를 제공하거나 인허가를 파격적으로 단축해 주는 대신 민간이 100% 자본을 투자 개발하도록 유도.

2) 가성비 높은 '야간·체류형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 전환

- ➡ 백서 초안에서 목표로 잡은 '체류시간 3.5시간 → 24시간(숙박)' 변환을 위해 돈이 많이 드는 건물을 짓기보다 프로그램에 투자.
- (미디어 파사드 및 야간 축제 상설화) 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출렁다리 일대에 야간 조명 및 미디어 아트(파사드)를 도입하여, 낮에 온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저녁까지 머물며 소비하도록 유도.
- ('임실 한 달 살기' 및 위케이션(Workation) 프로그램) 빈집이나 기존 한옥, 휴양림을 리모델링하여 관계인구(생활인구)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지역 소비 쿠폰을 지급하여 1인당 소비액 10만 원 목표를 달성.

3) 관광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강제 환류하는 '지역화폐 연계 시스템'

- ➡ 관광객이 임실에서 돈을 쓰게 만들어 '관광 매출 1조 원'의 낙수효과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가도록 만드는 장치.
- (임실N치즈 매칭 입장권 제도) 옥정호 출렁다리나 치즈테마파크 주요 시설의 입장료(예, 5,000원)를 받은 뒤, 이를 100% '임실사랑상품권'이나 '치즈 교환권'으로 당일 현장에서 돌려주어, 관광객은 공짜로 입장한 기분을 느끼고, 관내 식당과 전통시장, 카페에서 강제로 소비하게 만들어 지역 상권 매출을 견인.
- ('관광-농특산물' 결합형 드라이브스루 및 배송 서비스) 임실을 방문한 관광객이 복귀할 때 임실N치즈, 고추 등 지역 특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나들목(IC 등) 인근에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활성화하고, 멤버십을 도입해 귀가 후에도 온라인(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으로 재구매가 일어나도록 유통망을 연결.

Ⅲ

군수 직속의 '군정혁신 및 재정건전화 담당 기구' 신설하는 경우 기능과 역할, 구성 및 운영방안

- ◇ 제9기 임실군정의 핵심 과제인 300억 원 대 채무 감축과 '1111 관광 프로젝트' 등 융합 공약의 성공을 뒷받침할 군수 직속의 '군정혁신 및 재정건전화 추진단(가칭)'의 구체적 신설 방안.
- ◇ 이 기구는 기존 예산 부서나 기획 부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군수의 개혁 의지를 강력하게 집행하는 '행정·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 ◇ 실례로, 민선 초기 유종근 지사의 경우 '전북을 보라'팀을 신설하여 정책 아이디어뱅크 역할로 큰 성과를 거둠.

1) 주요 기능과 역할

- ➡ 기존 부서 간의 힘겨루기로 무산되기 쉬운 고강도 구조조정과 융합 과제를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조율.

(1)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 및 채무 관리(재정 혁신)

- (예산 일몰제 총괄) 3년 이상 지속된 보조금 사업, 행사성 경비, 소모성 자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여 과감히 삭감·폐지.
- (지방채 상환 관리) 감채기금 조례 제정 및 순세계잉여금 적립을 관리하여, 임기 전반기 내 14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스케줄을 통제.
- (투자 심사 강화) 대규모 SOC 및 신규 건축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전담하여 미래 운영비 부담을 사전 차단.

(2) 핵심 공약 및 초부서적 융합 과제 조정(조직 혁신)

- '3중 인구 전략'과 '1111 관광 프로젝트'처럼 인구·관광·경제·농정이 얹혀 있는 복합 과제의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업무를 총괄 조정.
- 부서별 핵심 성과지표(KPI)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즉각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
- 국비 공모사업 및 외부 재원을 스크리닝하여 군비 부담(매칭비)이 과도하거나 완공 후 유지관리비 폭탄이 예상되는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 거부권(Veto)'을 행사.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공약 사업 재원과 매칭하는 기획을 주도.

2) 인력 구조 및 조직 구성 방안

- ➡ 총액인건비제 규제를 고려하여 별도의 대규모 증원 없이, 기존 정원의 효율적 재배치(TF 형식)와 민간 전문가 채용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최소 정예요원 10~12명 내외로 기동성을 극대화)

(1) (조직 편제) 군수 직속의 ‘단(團)’ 또는 ‘담당관’ 체제로 편제하여 행정 서열상의 제약을 뛰어넘는 독립성을 부여.(부군수가 실질적인 총괄 운영을 맡아 행정적 실행력을 뒷받침)

(2) 내부 인력 배치(팀 구조 안)

총괄기획팀 (3 명)	• (역할)핵심 공약 추진 상황 점검, 부서 간 업무 조정,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KPI) 및 조직 진단 • (구성)기획·인사 유경험자로서 추진력이 강한 에이스급 공무원 배치
재정건전화팀 (4 명)	• (역할)보조금 일몰제 집행, 채무 상환 로드맵 실행, 지방재정공시 및 가용재원 정밀 분석, 예산 삭감 심의 • (구성)예산·감사·회계 부서 출신의 베테랑 공무원 중심 배치
대외재원전략팀 (3 명)	• (역할)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운용, 고향사랑기부금 전략 마케팅, 민간자본 유치(PF) 투자 가이드라인 수립 • (구성)공모사업 및 투자 유치 경험자 배치

(3) 민간 전문가 수혈(개방형 직위 및 자문단)

- (추진단장) 군수의 개혁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는 개방형 직위(지방임기제 공무원) 또는 재정·경영 전문가를 민간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민간 자문위원회) 대학 교수, 공인회계사, 관광·마케팅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군정혁신자문위’를 설치하여, 보조금 일몰제 심사나 대규모 투자 심사 시 외부의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시각을 반영함으로써 내부 공무원들의 반발을 차단하는 방패막이이자 브레인으로 활용.

3)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권한 부여

- ➡ 이 기구가 단순히 '제안'만 하는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도적 마스터키(Master Key)가 주어져야 함.
 - (예산 편성 사전 심의권) 추진단이 승인하지 않은 사업(일몰 대상 사업, 선심성 예산 등)은 예산 부서에서 아예 편성할 수 없도록 강제.
 - (인력 재배치 요구권) 핵심 공약 추진 및 조직 정비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각 부서에서 강제로 차출하거나 기능을 축소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 진단 권한을 부여.

IV '지역 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임실형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및 역량 강화 방안'

- ◇ 임실군의 청년 인구 급감과 외부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이 보유한 핵심 문화관광 자원(임실N치즈, 옥정호, 로컬 푸드 등)을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로 연결.
- ◇ 청년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외부의 '생활인구'를 끌어들이고 지역 재화를 유통하는 '경제 주체'로 육성하는 데 중점.

1) 임실 특화형 '로컬 크리에이터' 3대 전문 트랙 양성

- ➡ 임실의 자원을 기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르치고 창업으로 연결.
- (식음료(F&B)·푸드테크 크리에이터) '임실N치즈'와 고추, 낙농 자원을 활용하여 단순 1차 생산에 머물지 않고, 청년들의 감각으로 디저트, 밀키트, 유기농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크리에이터를 양성.
- (관광·콘텐츠 크리에이터) 옥정호 출렁다리, 치즈테마파크, 붕어섬 등을 무대로 야간 관광 콘텐츠, 미디어 아트, 로컬 굿즈(상품),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문화 기획자를 양성.
- (디지털 마케팅·커머스 크리에이터) 임실의 영세 농가 및 소상공인 제품을 라이브 커머스, SNS 숏폼(Tik-Tok, Reels) 콘텐츠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유통을 대행하는 청년 마케터 조직을 육성.

2) 단계별 역량 강화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인큐베이팅)

- ➡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역량을 빌드업(Build-up)
- (1단계 : 지역 탐색 및 아이디어 발굴) 외부 청년과 지역 청년이 함께 팀을 이루어 임실의 문화관광 자원을 탐색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는 '로컬 창업 캠프'나 '임실 살이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
- (2단계 : 실전 창업 교육 및 고도화) 브랜드 기획, 세무·회계, 클라우드 펀딩, 유통망 확보 등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엑셀러레이터(AC)를 매칭하여 1:1 밀착 멘토링을 제공.
- (3단계 : 팝업 스토어 및 실전 테스트) 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즈테마파크나 옥정호 인근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개발한 메뉴나 상품을 관광객에게 먼저 선보이는 '팝업 스토어' 공간과 재료비를 지원.

3) 지역 내 순환경제 정착을 위한 구조적 연계 방안(가장 중요)

- ➡ 청년들의 활동이 임실 안에서 돌고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듦.
- (원재료 로컬 소싱(Local Sourcing) 의무화 및 매칭) 청년 크리에이터가 제품을 만들 때 임실 농가에서 생산한 원재료(치즈, 고추, 유제품 등) 사용을 의무화하는 대신, 군에서 원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농가와 청년을 직접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농가 소득 증대와 청년 제조원가 절감의 윈-윈).
- ('관광객 입장권 보상'과 청년 점포 연계) 앞서 제시한 관광지 입장료 환급용 '임실 사랑상품권'을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운영하는 점포, 공방, 게스트하우스에서 적극 소비할 수 있도록 모바일 맵과 연계한 패키지 쿠폰을 발행.
- ⇒ 1천만 관광객의 소비가 청년들의 실질 매출로 직결되도록 강제 유입 경로를 짜는 것.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우선 선정 및 공공 조달) 청년 크리에이터가 생산한 로컬 굿즈와 치즈 디저트 등을 임실군 고향사랑기부금의 대표 답례품으로 우선 등록하여 안정적인 초기 판로를 보장.

4) 재원 및 공간 확보 전략

- (재원 조달) 자체 재원(7.8%)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 전체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분야 및 3중 인구 전략(관계인구 유입) 과제로 지정하여 기금을 집중 매칭.
- (청년 로컬 거점 공간 조성) 임실군 내의 빈집, 유휴 농협 창고, 혹은 쇠퇴한 상권의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크리에이터들의 공동 작업실, 공유 오피스, 로컬 편집숍이 결합된 '임실 청년 크리에이터 허브(가칭)'를 구축하고 주거까지 결합 지원하여 정착을 유도.

민선 제9기 인수위원회 백서

제10장 종합 결론

제10장 종합 결론

9-1. 종합 평가

○ 민선 제9기 임실군정은 단순한 행정권 인수 차원을 넘어, 지역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군정 전환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본 백서의 종합 분석 결과, 임실군은 다음과 같은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심화	✓ 청년층 유출 및 지역재생산 기반 약화
✓ 농업 수익성 정체와 농정 전환 지연	✓ 산업기반 협소 및 지역 내 소비고용 순환구조 취약
✓ 관광자원의 체류형 산업화 미흡	✓ 복지·보건·의료·돌봄 수요의 구조적 확대
✓ 정주여건과 생활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 재정제약 심화 및 조직운영의 비효율 누적

○ 이러한 문제는 개별 부서 단위의 현안이 아니라, 인구-산업-관광-복지-정주-재정이 서로 연결된 구조적 전환 과제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함.

○ 반면 임실군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발전 잠재력을 함께 보유하고 있음.

✓ 임실N치즈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 브랜드 자산	✓ 옥정호붕어섬성수산 왕의숲사선대 등 생태경관 자원
✓ 농생명·낙농·축산 중심의 지역산업 기반	✓ 생활밀착형 복지 전달 경험과 현장 행정 기반
✓ 관광축제농촌체험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가능성	

○ 따라서 민선 제9기 군정의 핵심은 위기를 단순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구조전환의 동력으로 재조직하는 전략행정에 있음.

기존	→	전환
사업 나열형 군정	→	구조 전환형 군정
분산형 대응	→	통합 전략형 대응
단기 실적 중심	→	중장기 성과 중심
공급자 중심 행정	→	군민 체감형 행정

9-2. 구조적 진단에 대한 종합 결론

1)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는 군정 전반을 규정하는 최상위 구조문제

구분	내용
진단	임실군의 인구감소는 단순한 주민 수 감소가 아니라, 지역의 생산·소비·정주·교육·복지·재정 기반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구조문제임
한계	- 보건·의료·돌봄 재정수요 증가 - 응급의료·만성질환·치매 대응 부담 확대 - 이동약자 증가에 따른 교통복지 수요 확대 - 농업인력 고령화 심화 - 고독사·고립가구·돌봄사각지대 위험 확대
정책방향	인구문제는 특정 부서의 개별사업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군정 전체를 관통하는 최상위 정책 프레임으로 재정립해야 함
정책설계	-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가 -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가 - 생활인구가 관계인구·정주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기준 아래 설계될 필요가 있음

2) 청년유출은 지역재생산 기반 약화와 직결되는 핵심 문제

구분	내용
진단	청년층 유출은 단순 전출입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세대 기반 약화 문제
한계	- 출산가능 인구 감소 -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 감소 - 청년창업 및 혁신주체 부족 - 지역 리더층 세대교체 지연 - 소비기반 약화 및 공동체 지속성 저하
정책방향	청년정책은 장려금·단기지원 중심이 아니라, 주거-일자리-창업-문화-보육-교육이 결합된 정착 생태계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정책설계	임실군은 농업, 관광, 로컬브랜드, 귀농귀촌 정책과 연계한 임실형 청년정착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농업은 보호대상이 아니라 전략산업으로 재정립

구분	내용
진단	임실군 농업은 지역경제의 기반산업이나, 생산 중심 정책만으로는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한계	- 고령농 중심 구조 심화 - 영세경영체 비중 지속 - 유통·가공·브랜드 연계 부족 - 특화작목 차별화 미흡 - 기후변화 대응형 품목전환 부족 - 노동력 부족 및 생산비 부담 확대
정책방향	- 생산량 중심→ 농가소득 중심 - 개별 보조사업 중심→ 품목·가공·유통 통합전략 - 고령농 유지 중심→ 청년농 유입 및 세대교체 병행 - 단순 1차산업 중심→ 치즈·낙농·가공·관광 연계 복합산업화
정책설계	임실형 특화작목 발굴, 스마트농업 확산, 공공급식·로컬푸드 연계, 가공·유통 허브 구축이 민선 제9기 농정 전환의 핵심 과제임

4) 관광은 방문형이 아니라 감동형·체류형·소비형 경제구조로 전환

구분	내용
진단	임실군은 치즈테마파크, 옥정호, 축제, 반려문화, 농촌체험 등 다양한 관광자산 보유
한계	- 방문객 체류시간이 짧음 - 숙박 및 야간경제 연계가 약함 - 관광소비가 지역상권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않음 - 재방문율과 관계인구화 전략이 미흡함
정책방향 (성과지표)	- 체류시간, 숙박률 - 소비지출, 지역상권 환류효과 - 재방문율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정책설계	- 민선 제9기 관광정책은 옥정호-치즈-오수-사선대-읍내상권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벨트 전략으로 고도화되어야 함 - 관광은 단순 홍보정책이 아니라,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순환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정책으로 접근해야 함

9-3. 군민 삶의 질과 정주기반에 대한 종합 결론

1) 복지정책은 지원사업 확대보다 통합성과 현장성 중요

구분	내용
진단	- 임실군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에서 일정 수준의 기반을 축적해 왔음 - 특히 초고령 농촌지역에서 복지는 단순 취약계층 지원이 아니라, 군민이 계속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핵심 정주 기반임
한계	현재 복지체계는 여전히 개별사업 병렬 나열형 성격이 강하며, 군민이 통합된 복지전략으로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정책방향	- 부서별·대상별 분절 지원→ 생활권 단위 통합지원 - 사후 급여 중심→ 예방·위기조기개입 중심 - 군청 중심 전달→ 읍·면 현장 중심 전달 - 시설 중심 접근→ 재가·방문형·생활밀착형 접근
정책설계	통합돌봄은 민선 제9기에서 가장 전략성이 높은 복지정책이며, 보건·의료·복지·이동·주거안전이 결합된 임실형 통합돌봄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2) 보건의료는 예방 중심·접근성 중심으로 강화

구분	내용
진단	임실군 보건정책은 건강생활실천, 방문건강관리, 모자보건, 정신건강,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계	- 면 단위 의료접근성 제약 - 응급대응 체계 취약 - 대상자 발굴 어려움 - 사업 간 연계 부족 - 정신건강·재택의료 분야 확장 필요
정책방향	- 진료 중심 보건행정에서 예방 중심 건강관리체계로 - 단일사업 운영에서 생애주기형 건강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함
정책설계	특히 거점의료 기능 강화, 방문건강관리 확대, 정신건강·치매 대응 강화, 이동지원 연계, 복지와의 통합운영이 중요함

3) 여성·가족·아동·청소년 정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임신' 전략으로 통합

구분	내용
진단	▪ 저출생과 청년가족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분야는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라 정주정책의 핵심 축으로 재설정되어야 함
한계	▪ 가족·아동·청소년 분야는 현재 개별 지원사업은 존재하나, 정주전략 차원의 통합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약함
정책방향	▪ 보육, 방과후, 청소년활동, 가족지원, 여성사회참여를 통합적으로 설계 ▪ 돌봄 공백 최소화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 ▪ 청년가족이 생활·교육·문화 측면에서 머물 수 있는 기반 강화
정책설계	▪ '복지 확대'보다 청년가족 정착 기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4) 정주여건과 생활 SOC는 '시설 공급'보다 '생활권 품질' 중심으로 전환

구분	내용
진단	▪ 임신군의 정주문제는 단순히 주거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 생활 전반의 질과 접근성 문제임
한계 (주요과제)	▪ 읍·면 간 생활서비스 편차 ▪ 교통취약지역 존재 ▪ 문화·교육·체육 접근성 차이 ▪ 청년·가족의 생활편의 부족 ▪ 돌봄·의료·생활안전의 생활권 격차
정책방향	▪ 주거, 교통, 보육, 교육, 문화, 체육, 복지, 의료를 통합한 생활권 정책 ▪ 양적 시설 확충보다 운영 품질과 접근성 개선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정책설계	▪ 정주정책의 본질은 '사는 공간'의 공급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의 완성에 있음을 유의

9-4. 재정과 조직운영에 대한 종합 결론

1) 재정운영은 확대보다 전략적 재배분

구분	내용
재정구조	- 자체재원 비중이 낮고, 의존재원 비중이 높으며 - 복지비·경직성 경비·유지관리비 부담이 확대되는 구조에 있음
공약사업 부담	공약사업을 일괄 추진할 경우 실가용재원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며, 국·도비 확보 역시 지방비 매칭과 운영비 부담을 수반함
핵심 관점	민선 제9기 재정운영은 “얼마를 더 확보할 것인가” 보다 “무엇에 우선 배분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어야 함
기본원칙	-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전략재정 - 저성과·분산형 사업 구조조정 - 공약사업의 단계적 이행 - 국·도비 확보 논리의 전략화 - 성과 중심 예산편성과 사후평가 강화 - 생활밀착형 투자 우선 - 예산은 단순한 편성기술이 아니라, 군정 목표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실행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2) 조직운영은 확대보다 기능 재설계 우선

구분	내용
구조적 한계	- 기능 누적형 조직운영 - 유사·중복 기능 분산 - 과소팀 구조 지속 - 상위직 비율 부담 - TF의 상시화 - 공약이행과 조직설계 간 불일치
운영 방향	민선 제9기 조직운영은 신규조직·인력 확대 중심이 아니라, 핵심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구조 재설계에 중점을 두어야 함
주요 방향	- 기능 중심 조직 재설계 - 유사·중복 기능 통합 - 과소팀 정비 및 실무집행단위 강화 - 특히 기획기능은 단순 문서총괄이 아니라, 공약·예산·성과관리·국·도비 논리를 통합하는 정책조정 기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 TF의 제도화 또는 종료 원칙 확립 - 읍·면 전달체계 재정비 - 공약관리와 조직운영의 일체화

9-5. 민선 제9기 군정의 핵심 정책 방향

핵심 정책 방향	주요 내용
인구정책의 군정 최상위 전략화	- 인구문제를 별도 정책영역이 아닌 군정 전체의 최상위 전략설정 - 정주인구 유지, 생활인구 확대, 관계인구 축적, 정주전환을 연결하는 입체적 인구전략 마련 - 모든 핵심사업에 인구유지·정착기여도 평가기준 적용
농업·관광의 지역순환경제화	- 농업은 생산 중심에서 소득·유통·가공·브랜드 중심으로 전환 - 관광은 방문형에서 체류형·소비형 구조로 고도화 - 농업, 관광, 먹거리, 상권, 청년창업, 로컬브랜드가 연결되는 지역순환경제 체계 구축
생활권 중심 복지·보건·돌봄 통합	- 읍·면 단위 현장밀착형 복지·보건·돌봄 체계를 재설계 필요 - 예방 중심 건강관리, 재가돌봄, 이동지원, 응급연계 기능 통합 강화 - 노인·장애인·아동·가족을 포괄하는 전 생애 생활안전망 구축
청년·가족 정착형 정주기반 조성	- 주거, 보육, 교육, 문화, 일자리, 공동체를 결합한 정주 패키지 정책 마련 ‘아이 키우기 좋은 임실’, ‘청년가족이 머무는 임실’을 명확한 군정 전략 설정 - 생활 SOC는 양적 확충보다 운영 품질과 접근성 개선 중심으로 전환
선택과 집종의 책임행정 구현	- 핵심사업 중심 재정배분과 단계적 공약이행 원칙 확립 - 조직 확대보다 기능 통합과 실행체계 우선 정비 - 성과지표 기반 예산·사업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군민 체감 성과 향상

9-6. 향후 군정 운영에 대한 제언

구분	제언
첫째	10대 핵심 현안과 10대 우선 과제를 기준으로 군정 최우선 전략과제를 등급화할 필요가 있음 ⇒ 즉시 추진과제 ⇒ 단계적 추진과제 ⇒ 중장기 검토과제로 구분하여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해야 함
둘째	공약은 단순 이행률 관리보다 재정현실성과 정책효과를 고려한 단계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되어야 함
셋째	청년·정주·농업·복지·관광을 연계한 부서 간 통합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넷째	민선 제9기 첫 본예산은 새로운 군정철학을 반영하는 전략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다섯째	군민 소통은 단순 홍보가 아니라 군정 참여와 체감성과 확산의 기반으로 재설계되어야 함
여섯째	읍·면 현장을 군민 체감성과의 최종 실현 거점으로 보고, 생활민원·돌봄·복지·이동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9-7. 맺음말

- 민선 제9기 임실군정은 위기의 시대에 출범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전환의 가능성을 품고 힘찬 첫걸음을 내딛고 있음.
- 임실군은 강력한 지역 브랜드와 우수한 생태·경관 자원, 탄탄한 농업 기반, 공동체의 잠재력과 생활인구 확대 가능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전략적인 군정 전환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한 도약 가능성을 지닌 지역임.
- 이제 민선 제9기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함.
 - 지역의 인구활력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군정
 - 개별적 지원을 반복하는 군정이 아니라, 지역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군정
 - 시설 확충에 머무르는 군정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군정
 - 형식적인 사업 집행을 넘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책임행정
- 민선 제9기 임실군정은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미래상을 지향해야 함.
 - 작지만 강한 농촌
 - 청년과 가족이 머무는 정주도시
 - 농업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산업도시
 - 사람이 머물고 다시 찾는 체류도시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 결국 군정의 성패는 다음의 변화와 성과를 통해 평가될 것임.
 - 군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졌는가
 - 청년이 지역으로 돌아오고 머물 수 있는 이유가 마련되었는가
 - 농업과 지역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는가
 - 재정이 책임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 행정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었는가
- 본 백서에서 제시한 진단과 과제가 향후 민선 제9기 군정 운영의 주요 기준이 되어, 임실군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어 농산촌 지역의 새로운 미래모델로 도약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함.

9-8.<참고> 취임 6개월 골든타임 확보와 임기내 역점과제 추진 전략

< 임기 4년 성공을 위한 한득수 군수의 군정 핵심 기조 >

- ▶ 군정의 핵심 성공 방정식은 “재정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돈을, 복지·농업·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소득·체류 중심)에 집중 투자하여, 궁극적으로 임실의 생활인구와 정주 여건을 혁신하는 것”
- ▶ 4개년 로드맵을 바탕으로 매년 철저한 KPI 성과 측정을 병행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선 제9기 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음.

I 초기 6개월('26년도)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1 행정 분야

- (전략기획형 행정 체제 및 조직 재설계) 부서별 분절적·나열식 사업 추진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산업~정주~복지~관광’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형 군정 전략. 기획 체계 구축 * 공약 이행 및 구조 전환을 뒷받침할 민선 제9기 조직개편안 마련 등
- (정책 KPI 기반 성과관리체계 도입) 투입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청년정착률, 농가소득 증가율, 관광객 체류시간 등 핵심 정책지표(KPI)를 설정하고 사후평가 조례 및 시스템 정비.

2 기획·조정 분야

- (지방소멸 대응 종합전략 및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인구감소 문제를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닌 군정 최상위 과제로 격상.
* ‘정주인구 유지+생활인구 확대+관계인구 축적’의 3중 전략을 반영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고도화
- (국·도비 패키지 로드맵 수립) 부서별 산발적 공모 대응을 지양하고, 군 차원의 통합 재원 전략을 상시 운영하여 인구정주형 국비 비중 확대를 위한 중앙부처 선제 대응 논리를 개발.

③ 재정 분야

- (임실형 재정구조조정 및 책임재정 확립)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기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
 -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중이 7.8%로 매우 취약하고 채무가 304억 원까지 급증
 - ** 관행적 반복 사업 점검 및 '저효율 사업 일몰제(목표 도입률 25%)' 강행
- (재정투자의 지역환류 효과 극대화) 분산형 투자를 지양하고 군정 핵심 과제에 재원을 집중하며, 공공발주 시 관내 재화·서비스를 우선 소비하는 지역 순환 재정 모델 검토.

④ 복지·의료 분야

- (수요자 중심 생애주기형 복지 전달체계 개편) 보건·복지·의료·이동·주거가 분절화된 기존 사후지원형 구조를 개선.
 - * 접근성·현장성·연계성·예방성을 강화한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보건 부서 간 협업 협의체 신설
- (사회안전망 및 주민밀착형 복지 품질 제고) 독거·고립가구 안부 확인 시스템,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아동 돌봄·보호 체계 확충 등을 통해 주민밀착형 사회안전망을 강화.
- (농촌형 보건의료 안전망 인프라 고도화) 면 단위 지역의 의료 접근성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 의료기관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동약자를 위한 보건소~마을 간 이동지원 시스템(보건의료 셔틀 등) 구축을 기획.
- (예방 중심 만성질환·치매 관리 강화) 초고령사회 진입(복지비 2배 증가)에 대응하여 사후 치료보다 치매 조기 검진, 만성질환 예방 등 '읍·면별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⑤ 농정 분야

- (생산 중심에서 소득·산업 고도화 농정으로 대전환) 단순 생산량 증대 지원을 지양하고 가공·유통·브랜드 다각화를 결합한 농가소득 중심 성과지표(연 2.5% 성장 목표)로 전환.
 - * 농정부서의 농업기술센터 내 통합 배치 및 정책 기획력 보강

- (미래농업 인프라 구축 및 청년농 육성) 기후변화 적응형 신소득 특화작목 개발에 착수하고 대단위 스마트팜 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농·후계농 세대교체 패키지 프로그램 수립.

⑥ 경제·산업 분야

- (지역완결형 산업생태계 및 로컬경제 구축) 대규모 외부 제조업 유치 경쟁의 한계를 인정하고, 임실의 강점인 치즈·낙농·농식품 가공·웰니스 등 특화 자원 기반의 중소규모 고부가가치 산업 사슬을 육성.
-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고령 자영업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소비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로컬푸드~공공급식~지역 상권을 연계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 계획 마련.

⑦ 문화·관광 분야

- (숫자 중심에서 지역경제 환류형 체류형 관광(1111 프로젝트)으로의 전환) 단순 방문객 수 집계에서 벗어나 체류시간(3.5시간 → 48시간 목표)과 관광객 1인당 소비액(2.5만 원 → 10만 원 목표)을 높이는 질적 전환 추진.
- (관광 거점 벨트화 및 콘텐츠 연계) 치즈테마파크, 옥정호·붕어섬, 오수 반려산업 등 핵심 자원에 야간 관광 콘텐츠와 사계절 축제를 보강하고, 관광객 소비가 읍내 상권 및 숙박, 농촌체험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동선 재설계.

⑧ 건설·안전·교통 분야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읍면 생활 SOC 접근성 향상) 농촌 지역의 생활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보건·복지·문화) 중심의 생활권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등 이동 서비스 정비.
- (기후위기 대응 선제적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이상기후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위험지구 및 하천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농업 재해와 정주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재난 대응 모니터링 체계 강화.

II 월별 추진상황 점검 핵심 체크리스트(Action Items)

기간별	분야별	핵심 점검 사항
1·2월차 (7~8월)	공통/기획	- 민선 제9기 군정 비전 및 10대 핵심 현안·우선과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민선 제9기 조직개편안 초안 작성 * 농정부서 통합 등 구조 전환 반영
	재정	- 채무(304억 원) 원인 분석 및 긴급 재정건전성 진단 착수 - 예산 구조조정을 위한 비효율·관행적 반복 사업 전수조사 지시
	안전	하절기 집중호우 대비 하천재해 위험지역 및 풍수해 취약지 현장 안전점검
	행정	민선 제9기 조직개편안 의회 제출 및 정책 KPI(성과지표) 개발 착수
	기획·조정	차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생활인구 연계 사업 발굴 워크숍
	농정	농가소득 중심 농정 전환을 위한 지역 농어업인 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관광	체류형 관광 전환을 위한 옥정호·치즈테마파크 숙박 및 야간 콘텐츠 실태 조사
3월차 (9월)	재정	- 저효율 사업 '일몰제' 대상 사업 확정 및 내년도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시달 - 고향사랑기금 활성화 및 외연 확대를 위한 특화 답례품·기금사업 재편
	복지·의료	복지~보건의료~이동수단 통합을 위한 부서 간 연계 돌봄 협의체 구성
	경제·산업	임실N치즈 및 로컬푸드의 공공급식·관내 상권 연계성 강화 방안 보고회
4월차 (10월)	기획·조정	국·도비 패키지 다년도 로드맵 수립 및 중앙부처 공모 상시 대응체계 가동
	농정	스마트농업 도입 가속화 및 기후대응 신소득 특화작목 발굴 용역 착수
	관광	'1111 관광 프로젝트'(연 관광객 1천만, 매출 1조)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5월차 (11월)	재정	구조조정이 반영된 책임재정 중심의 차년도 본예산(안) 편성 및 의회 제출
	복지·의료	읍·면 단위 찾아가는 원스톱 돌봄·만성질환 예방 관리 현장 전달체계 점검
	교통	읍·면 격차 완화를 위한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이동수단 개편안 확정
6월차 (12월)	행정	새 조직 체계 안착 점검 및 전 부서 민선 제9기 정책 KPI 달성 원년 선포
	경제·산업	청년·신혼부부 정착 패키지 주거·창업 지원 조례 제·개정 완료
	종합	초기 6개월 성과 분석: 채무 감축 구조 확립, 자체 수입 확충 구조 유무, 체류형 관광 전략 시범 운영 결과 및 인구 정책 지표 등 한특수 군수 공약 이행 1차 점검

III 1년 단위(4년간) '구조전환형 전략 군정' 분야별 역점 추진계획

① [1년차] 군정 혁신 및 재정 건전화 기반 구축

◆ 핵심 목표 : 관행적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책임재정 기틀 확립 및 핵심 성장동력 설계

부문별	실 천 목 표
행정·기획	- 민선 제9기 통합형 조직개편 완성(농정~기술센터 통합 등) - 청년 정착률, 관광객 체류시간 등 핵심 정책지표(KPI)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본격 가동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전면 재정비
재 정	300억 원대 급증 채무 감축을 위한 중기지출구조조정 계획 수립 '저효율 사업 일몰제(목표 도입률 25%)'를 즉시 단행하여 재정 누수 차단 - 고향사랑기금 활성화를 위한 매력적인 특화 답례품 및 기금 사업 전면 개편
복지·의료	- 분절화된 보건·복지·이동 전달체계를 통합할 '읍·면 단위 통합돌봄 민관협의회' 구성 - 면 단위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 지원(셔틀 등) 인프라 설계
농 정 경 제·산 업	- 단순 생산량 증대 위주 농정에서 '농가소득 중심 성과지표(연 2.5% 성장 목표)'로 농정 전환 가이드라인 확정 - 임실N치즈와 로컬푸드를 관내 상권 및 공공급식과 연계하는 지역순환 경제 기본 모델 설계
문 화·관 광	단순 방문객 숫자 집계 중심에서 '체류형 관광(체류 48시간, 인당 소비 10만 원 목표)'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1111 프로젝트 추진 기반) 수립
건 설·안 전 교 통	풍수해 위험지구 및 하천 재해 취약 지역 전수 점검 및 기후위기 대응 선제적 재난대응 시스템 보강

② [2년차] 핵심 과제 본격 추진 및 인프라 고도화

◆ 핵심 목표 : 재정 건전성 성과 가시화, 부문별 거점 인프라 착공 및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부문별	실 천 목 표
행정·기획	- 다년도 국·도비 패키지 로드맵에 따른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 - 관계인구 축적을 위한 디지털 군민 제도 등 인구정책 패러다임 본격 다각화
재 정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채무 감축 가시화 - 공공발주 시 관내 재화·서비스를 우선 소비하도록 유도하여 재정투자의 지역 환류 효과 본격 발생 유도
복지·의료	- 접근성·현장성·예방성을 결합한 '임실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시범 운영 - 보건소 중심의 독거·고립가구 안부 확인 시스템 디지털화 및 만성질환·치매 조기검진 예방 프로그램 확대
농 정 경 제·산 업	- 기후변화 적응형 신소득 특화작목 농가 보급 및 대단위 스마트팜 기반 조성 시작 - 후계농 세대교체를 위한 청년농 육성 패키지 프로그램 본격 가동 - 중소규모 고부가가치 낙농·식품가공 밸류체인 확장
문 화·관 광	- 옥정호·붕어섬, 치즈테마파크, 오수 반려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야간 관광 콘텐츠 도입 및 사계절 축제 고도화 - 관광객 동선을 읍내 상권 및 농촌체험마을로 직접 연계하는 순환형 셔틀 및 연계 상품 활성화.
건 설·안 전 교 통	읍·면 생활 SOC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거점 연계형 수요응답형 버스(DRT)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 확대

③ [3년차] 융·복합 성과 확산 및 정주 여건 대전환

◆ 핵심 목표 : 농정·관광·복지 비즈니스 모델 완성, 청년·정주인구 유입의 실질적 성과 창출

부문별	실 천 목 표
행 정 · 기 획	1~2년차 정책 KPI 평가 결과를 반영한 환류 체계 정착 및 저성과 사업 상시 일몰제 제도화 -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최고 등급 획득을 통한 자원 극대화
재 정	건전재정 기조 안정화 및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 주거·복지·정주 여건 개선 등 미래 성장 과제에 집중 투자
복 지 · 의 료	- 읍·면 전체로 '보건~복지~의료~이동 원스톱 전달체계' 전면 확대 -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거점별 장애인 자립 및 가족 돌봄 기반 시설 안착
농 경 제 · 산 업	- 가공유통브랜드 다각화 성공으로 농가소득 증가율 가시적 달성 * 목표치 도달 점검 등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모델 확산으로 지역완결형 로컬경제 생태계 정착
문 화 · 관 광	'1111 프로젝트' 핵심 성과 도출 (* 연 관광객 1천만 명 수준 진입 체류 숙박 수요 다각화 등) - 대형 관광 거점 성공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직결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건 설 · 안 전 통 교	- 생활권 중심의 스마트 교통·안전 SOC 인프라 완성 단계 진입 - 기후 재해로부터 안전한 정주 환경 확립

④ [4년차] 민선 제9기 군정의 완성 및 미래 비전 제시

◆ 핵심 목표 : 4대 역점 성과 지표 달성 확인, 구조 전환 안착 및 지속 가능한 임실 완성

부문별	실 천 목 표
행 정 · 기 획	- 민선 제9기 공약이행률 최종 점검 및 군정 전반의 성과 백서 발간 '지속 가능한 전략군정' 체계를 차기 군정으로 이어갈 제도적 자산화
재 정	- 채무 조기 상환 및 재정 자립·자주도 향상 성과 최종 확인 - 예산 낭비 없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책임재정 구조 최종 안착
복 지 · 의 료	- 농촌형 통합돌봄 및 예방 의료의 전국 선도 모델화 - 고령층과 취약계층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완료
농 경 제 · 산 업	- 미래형 농업 인프라(스마트팜, 특화작목) 안정적 정착 확인 및 청년농 중심의 성공적인 세대교체 기반 구축 - 로컬 중심의 탄탄한 중소규모 산업 생태계 완비
문 화 · 관 광	- 체류형 관광 구조(연간 관광 매출 목표 달성)의 완벽한 정착 - 임실N치즈, 옥정호, 오수 반려산업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성과 확인
건 설 · 안 전 통 교	읍·면 간 소외 없는 촘촘한 생활 안전망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 체계 구축 완결

민선 제9기 인수위원회 백서

부 록

부 록

11-1.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활동 보도자료

민선 제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출범

전주일보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010면



민선 9기 임실군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할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마침내 달을 올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임실군수직 인수위, 힘찬 첫걸음

공식 출범식 갖고 제1차 전체회의서 운영방안 논의 위원장 송기춘 씨… 전문가 총 14명 위원진 구성

민선 9기 임실군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할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마침내 달을 올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15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향후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인수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독수 임실군수 당선인을 비롯해 송기춘 인수위원장, 신대용 자문위원장, 박현숙 부군수와 인수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민선 9기 임실군정의 힘찬 첫걸음을 축하하고, 새로운 임실의 성공적인 도약을 다짐했다.

행사는 현판식과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위원 위촉식, 인수위원장 인사말, 당선인 당부 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기간과 분과 구성, 부서별 업무보고 일정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인수위는 민선9기 임실군정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주요 군정 현안과 공약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새로운 군정 운영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농업·농촌, 복지, 문화관광, 지역개발, 행정혁신 등 전 분야에 걸쳐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위원장에는 임실군 성수면 왕방리가 고향인, 송기춘 대통령소속 군사탐사교 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위촉됐으며, 부위원장에는 이원섭 전 임실군 산업건설국장이 선임됐다.

이밖에도 행정, 농업, 복지, 문화관광 등 각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해 총 14명의 위원진을 완성했다.

위원회는 △기획·조정, △환경·복지, △산업·건설, △문화·관광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과별 전문위원들이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선9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앞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현안 사업과 재정 여건, 공약 이행 가능성, 법제·행정적 검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군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는 우선순위를 정해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군민주권 지방정부'를 군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통합과 실행의 행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군정 인수와 임실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송기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회는 군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군정 비전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각 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민선9기 임실군정의 믿고감을 충실하게 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대배 기자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출범.. "농촌기본소득 확대"

[조수영]



12년 만에 단체장이 바뀌는 민선 9기 임실군정의 밑그림을 그릴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한특수 당선인은 오늘(15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인수위 출범식에서 '사람이 모이는 임실, 희망이 샘솟는 임실'을 군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임실형 농촌기본소득과 지역화폐 확대 등 공약 이행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인수위원장으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된 가운데, 행정·농업·복지·문화관광 등 각 분야 전문가 14명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수영 jaws0@naver.com

아이뉴스24

2026-06-17 15:13

한독수 인수위, 민선9기 임실군정 밑그림 구체화

17일부터 업무보고 청취 시작...새 군정운영 방향 마련 속도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민선 9기 전북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출범한 데 이어 1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시작, 새로운 군정 운영 방향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임실군 각 실·과·소·담당관 25개 부서 및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실군수직 인수위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재정·인사 등 군정 전반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요 현안사업과 공약 이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독수 임실군수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농촌 기본소득 지급과,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향후 군정 비전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독수 당선인은 “이번 업무보고는 임실군의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군정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취임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군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현안을 인수위원과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현장행정과 군민 민원 청취, 사회·직능단체 간담 등 다양한 의견 과정을 거쳐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활동 결과를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임실군민 목소리 중심 군정 설계 속도”

군수직 인수위 37개 조직 점검

민선 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 파악에 들어가며 향후 군정 운영 방향 설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17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군청 25개 부서와 12개 읍·면 등 총 37개 조직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보고는 조직·재정·인사 등

군정 전반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현안사업과 공약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특히 한득수 임실군수 당선인이 제시한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해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군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를 토대로 민선 9기 군정 비전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한다

는 구상이다.

한득수 당선인은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현안을 면밀히 점검해 취입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군정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훈 인수위원장은 “각 분야 현안을 세밀하게 점검해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의 출발 기반을 다지겠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북언합신문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008면

첫 단추 펜 한득수 호, 군정 진단 속도전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부서 업무보고 청취군정 전반 파악 농촌기본소득 등 중점 점검

민선 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출범한 데 이어 1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군정 운영 방향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임실군 각 실·과·소·담당관 25개 부서 및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재정·인사 등 군정 전반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요 현안사업과 공약 이행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득수 임실군수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농촌 기본소득 지급과,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향후 군정 비전에 반영할 방



민선 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출범한 데 이어 1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군정 운영 방향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다.

한득수 당선인은 “이번 업무보고는 임실군의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군정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취입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군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훈 인수위원장은 “당선인을 세심히 보좌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현안을 인수위원과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현장 행정과 군민 민원 청취, 사회·직능 단체 간담 등 다양한 의견 과정을 거쳐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활동 결과를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임실 이기주 기자
bhy0104@daum.net

임순남 주최 **타임즈**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003면

[illegible]

임실군수직 인수위 본격 가동... 한독수 당선인 군정 구상 구체화

“행정혁신으로 군민 체감 변화 만들겠다”

[illegible]

“행정도 혁신해야 한다
시스템 중심 균형 강조”

행정혁신·행정군정·미래전략 군민 체감형 군정 성과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축, 교육·복지·환경 정책 점검

[illegible]

이 책에서는 그 원리를 소개하고, 교육자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도 설명한다.

* 资料来源:根据《中国统计年鉴》整理。

[illegible]

“한글날을 맞아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쓰는 일에 힘써주시길 바란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신념을

과 사색할 필요가 없다”며 단언했다. 또 이 공약이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교육 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깨는 한강에서 익을 것이다’

[illegible][illegible]

전 12월에는 '94년경부터 10월경에 걸쳐 4000여 명(1000여 명)이



“군민 중심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축할 것”

한득수 임실군수 당선인 인수위
부서별 업무보고 정책 등 논의

한득수 임실군수 당선인은 민선 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부서별 업무 보고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혁신과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축, 현장중심 정책,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이번 업무보고가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기존 정책과 행정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책은 한번 수립되면 별다른 점검 없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행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선인은 1일차 업무보고에서 기존의 군정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면서 균형 있는 발전이 다소 미흡했던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군



민 삶 전반을 살피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원행정 분야는 군민 중심의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구축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한 당선인은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하는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복합 인허가 민원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원스톱체계를 구축해 군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 당선인은 “다문화가정을 만나보니 자녀들의 언어 적응과 학교 생활, 진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실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살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당선인은 “이·미용권이나 체육권 같은 사업도 일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실제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

다”며 “지원 자체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확실적인 지원보다 군민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수질오염총량은 군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질오염총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지역 개발과 각종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부서별 업무보고를 이어가며 민선 9기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 조직 운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임실=박영기 기자

세만금일보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011면

한득수 임실군수 당선인, 군 장기발전 로드맵 발표

민원행정·복지·환경 등 전 분야
“군민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각오”

민선 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득수 임실군수 당선인(사진)이 행정혁신과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축, 현장중심 정책,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이번 업무보고가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기존 정책과 행정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책은 한번 수립되면 별다른 점검 없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행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선인은 1일차 업무보고에서 “기존 군정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면서 균형있는 발전이 다소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군민 삶 전반을 살피는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



직사회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직원들의 고충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군민중심의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구축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한 당선인은 “복합 인허가 민원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원스톱체계를 구축해 군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정착은 직접 행정생각”며 행정절차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복지 분야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어르신 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 접근을 주문했다.

한 당선인은 “다문화가정을 만나 보니 자녀들의 언어 적응과 학교 생활, 진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세밀하게 살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르신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이·미용권이나 체육

권 같은 사업도 일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실제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지원 자체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수질오염총량은 군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현재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위생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교육과 현장 안전관리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선 중심의 소통을 주문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교육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 분야에서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과 지역 자원 활용 방안을 강조했다.

/김철 기자



민선 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주요 사업장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임실군

임실군수직 인수위, 현장방문 핵심정책 구체화

25개 부서 업무보고 마치고 현안·공약 점검

민선 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부서별 업무보고와 주요 사업장 현장을 점검, 군정 운영 방향과 핵심정책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25개 부서 및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와 주요 현안 및 공약 연계사업을 종합 점검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자원확보 방안을 비롯 조직운영과 인사시스템 등 분야별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사업별 정책효과와 추진과정의 문제점, 현장수요 및 예산투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26일에는 사선대와 성수산 왕의숲 자연휴양림, 오수외견공원 등 주요 사업장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과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인수위는 이번 업무보고와 현장 확인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군정 비전과 공약 실행계획을 군민이 체감토록 우선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송기춘 인수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와 현장 확인은 민선 9기 군정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전주 MBC

2026-06-29 11:36

임실군수직 인수위 "민선9기 당선인에게 바란다" 운영

[조인영]



[임실군 제공]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민선9기 군정의 밑그림을 군민과 함께 그리기 위해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 '민선9기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개설했습니다.

군민들은 군정 발전 방안과 생활 불편 개선,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오는 7월 10일까지 임실군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제언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민선9기 군정 운영 방향과 공약 실행계획, 신규 정책 과제 발굴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인영 jylove@jmbc.co.kr

전북도민일보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012면

“임실 작은의견까지 경청...군민체감 정책 꼼꼼히 검토”

군수직 인수위, 제안창구 운영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군민과 함께하는 민선9기 군정 실현을 위해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인 '민선9기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군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민선9기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군정 발전 방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생활 불편 개선 사항, 미래 비전 제언 등을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이다.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행정 인수인계에 머무르지 않고 민선9기 군정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 농업, 복지,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해 주요 현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군민이 제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은 인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민선9기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 공약의 실행계획 수립, 신규정책 과제 발굴 등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송기춘 인수위원장은 “군정의 주인은 군민이며, 군민의 목소리가 곧 민선9기 군정의 출발점이다”며 “현장의 작은 의견 하나까지도 소중히 경청해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은 인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민선9기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 공약의 실행계획 수립, 신규정책 과제발굴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민선9기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임실군 홈페이지(www.imsil.go.kr) 내 별도 게시판에 통해 운영되며, 임실군민은 물론 임실군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임실=박영기 기자**

전주 MBC

2026-07-01 20:01

'새로운 전북을 향한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조수영]



◀앵커▶

민선 9기가 오늘(1일)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각 지역 단체장들은 취임식을 통해 주어진 4년 임기동안 지역 발전과 민생 회복을 약속하고, 공약 이행을 다짐하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선 9기 첫날 표정,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민주권정부를 표방한 민선 9기 이원택 전북도정이 도민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원택 / 신임 전북도지사]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도민이 묻고 도지사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취임식,

이원택 지사의 첫 메시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맞춰졌습니다.

이른바 '내발적 발전'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원택 / 신임 전북도지사]

"세계 온라인 쇼핑몰에도 '대한민국 전북관'을 만들겠습니다. 쿠팡에서 이미 저희한테 제안이 왔습

니다. 앞으로 우리 소기업, 중기업들이 판로개척을 해가는 데 우리 전북도가 같이, 함께 하겠다."

세 번째 도전 끝에 전주시정을 맡게 된 조지훈 시장은 별도의 취임식 대신 직원들과 시청 과제를 공유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시 재정을 위기 상황으로 진단한 조 시장은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첫 결재 안건으로 처리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지훈 / 신임 전주시장]

"전주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존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조 시장처럼 첫 임기를 시작한 최정호 익산시장은 취임식을 통해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현대차의 9조 원 투자를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연결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고, 시민 참여형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중모 남원시장은 청렴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고,



한독수 임실군수는 읍·면장실을 1층으로 이전하는 등 군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약속하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사업을 결재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독수 임실군수 "군민이 주인"...첫 결재 농어촌 기본소득

전북CBS 남승현 기자 매일보내기 2026-07-01 15:29

1일 임실군민회관에서 취임식



민선 9기 한독수 임실군수. 임실군 제공

한독수 제48대 전북 임실군수가 1일 임실군민회관에서 군민과 기관·사회단체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민선 9기 임실군정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한 군수는 취임사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성장동력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민이 주인이고 군수는 머슴"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행정 혁신과 군민 중심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필수 공공의료 강화, 고소득 농업 기반 확대 및 농업예산 25% 증액, 교육·문화·관광 분야 혁신 정책 등이 제시됐다. 또한 '소통광장' 운영과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 구축 등 행정서비스 혁신을 약속했다. 아울러 '예산 1조 원 시대' 달성을 목표로 국비 확보와 KTX 임실역 정차, 옥정호 순환도로 사업 등 지역 핵심 현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첫 결재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처리하며 본격적인 군정 운영에 들어갔다. 한 군수는 "민선 9기 임실 군정은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군민의 삶을 바꾸는 변화와 혁신의 여정이 될 것"이라며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군민이 주인이고 군수는 머슴”

한독수 임실군수 취임
주민 지원금 1호 결재

제48대 한독수 임실군수는 1일 취임 첫 인사로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군민 주권의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군민회관에서 가진 이날 취임식에는 심민과 김진영, 강원목 등 전직 군수와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 군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한 군수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변화와 혁신을 염원하는 군민의 위대한 선택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취임을 통해 1호 결재 내용으로 군민 1인당 30만원의 주민지원금을 추진할 것”이라며 “군민이 주인이고 군수는 머슴이라는 자세로 군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수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임기 내에 농업 예산 비중을 25%까지 확대하고 지역 인적 육성



과 복지를 비롯해 문화·예술과 체육 기반 확충 등에도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민선 9기 핵심인 ‘예산 1조원 시대’로 이봉장 연수원 건립과 KTX 임실역 정차, 옥정호 순환도로 연결 및 피지컬 AI산업 핵심 태후도시 육성 등을 실현하겠다고 피력했다.

한 군수는 “민선 9기 임실군정은 군민의 삶을 바꾸는 변화와 혁신의 여정이 될 것”이라며 “군민과 끊임 없는 소통으로 행복이 자라는 임실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점우 기자

전북도민일보

2026년 7월 2일 목요일 005면

“변화·혁신바탕 지역발전 견인”

한 독수 임실군수

한독수 임실군수가 1일 임실군민회관에서 각급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제48대 임실군수로 공식 취임했다.

한 군수는 취임식에서 “변화와 혁신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위대한 선택에 감사드린다”며 “연구개발과 고령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극복하고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선 9기 핵심 표표인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국 규모의 리·통장 연수원 건립 사업 및 KTX 임실역 정차를 위한 시설 개량 사업비, 옥정호 순환도로 연결 등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강조했다.

또한 한 군수는 “군민의 뜻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 가겠다”며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임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서비스 개선, 농업 혁신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 인



재 육성과 문화·관광 활성화, 군민 주권·군민 우선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군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피력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여당 이점 활용 국비 확보”

한득수 임실군수 취임 지역소멸위기 극복 등 굵직한 현안 해결 포부



1일 민선 9기 취임식을 앞둔 한득수 신임 군수가 군정 출범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앞세워 ‘꼭심 군정’ 추진을 강하게 아꼈다.

축산농업인으로서는 임실축협 조합장에 재선에 성공한 그는 ‘한 번의 도전으로 성공한 임실군수’라는 군민의 선택을 받아 입성한 인물이다.

그는 “임실군은 무소속 군수가 12년간 재임하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 간의 유기적인 소통 부족으로 독자적인 생존노선을 외롭게 걸어왔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한득수 신임군수의 비전은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얹은 군수로서, 비약적인 국가예산 확보와 열린 임실행정, 그리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최대 공약으로 추

창했다.

이를 위해 한 신임 군수는 지난 26일 박희승 국회의원(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을 만나 임실군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통해 농촌기본소득 지급과 KTX 임실 역 정차, 지역 소멸위기 극복 등 굵직한 현안 문제 해결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임실군도 함께 참여한다

는 다양한 방책도 수립했다.

이는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가 피지컬 AI 대한민국 메카 구축과 현대그를 9조원 전북 투자, 새만금 투자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한데서 비롯됐다.

군은 현재 조성된 농공단지 부지에 관련 기업들과 세일즈 행정으로 다각적인 기업유치를 추진, 인구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신임 군수는 아울러 ‘임실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농촌기본소득 30만원 전 군민에 지급’을 취임 1호 결재로 진행, 군민에 희망을 심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득수 신임 군수는 인수위에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를 늘리는 것과 교육에 대한 투자”라며 “이를 통해 3만명 임실시대의 새로운 초석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전북도민일보

2026년 7월 1일 수요일 012면

땀 올린 한득수號 “3만 임실시대 초석”

12년 만 ‘여당 프리미엄’ 확보 중앙·전북도와 소통 행정 KTX 정차·산단 기업유치 총력… 교육 투자로 소멸 극복



1일 민선 9기 한득수 임실군수가 출범하면서 한 군수의 ‘꼭심 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축산 농업인으로 출발해 재선 축협 조합장을 거쳐 단 한 번의 도전으로 군민의 선택을 받은 한 군수의 강한 추진력과 현장 중심 리더십이 임실 발전으로 이끌어 이어갈지 정치권은 물론 군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임실군은 무소속 군수가 2014년부터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중앙정부 및 전북도와 유기적 소통없이 독자적인 생존 노선을 걸은 바 있다.

이러한 과거 무소속 임실군정의 단편 행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한 군수의 비전은 크게 집권 여당 군수로 비약적인 국가 예산 확보, 대한민국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행정,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으로 함축되고 있다.

한득수 군정 출범의 가장 큰 의미는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득수 군수는 선거기간 동안 “특히 여당 군수로서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군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한 군수는 지난 26일 박희승 국회의원(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을 만나 임실군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그는 박 의원과 공동 대응을 통해 농촌 기본소득 지급, KTX 임실 정차,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등 굵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한득수 군수 취임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임실군도 함께 참여해 ‘임실’을 단단히 붙여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당원인의 취임은 전북특별자치도 민선 12대 원정의 마지막 파장이 덧칠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임실군만 무소속 군수로 남아 있어서 집권여당과 소통하지 못하고 불리된 처지에 고립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전북자치도 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에 민주당 원정으로 구성되면서 중앙정부의 대규모 발전계획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됐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육에 대한 투자”면서 “교육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인구 늘리고, 이를 통해서 ‘3만 임실 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11-2.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활동 사진

민선 제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회의





민선 제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현장방문 및 간담 등

